서교연 2025-75

고교교육과 대입의 선순환 체제 구축을 위한 미래형 대학입시제도 방안 연구

| 연구책임자 : 김유리(서울교육정책연구소 연구위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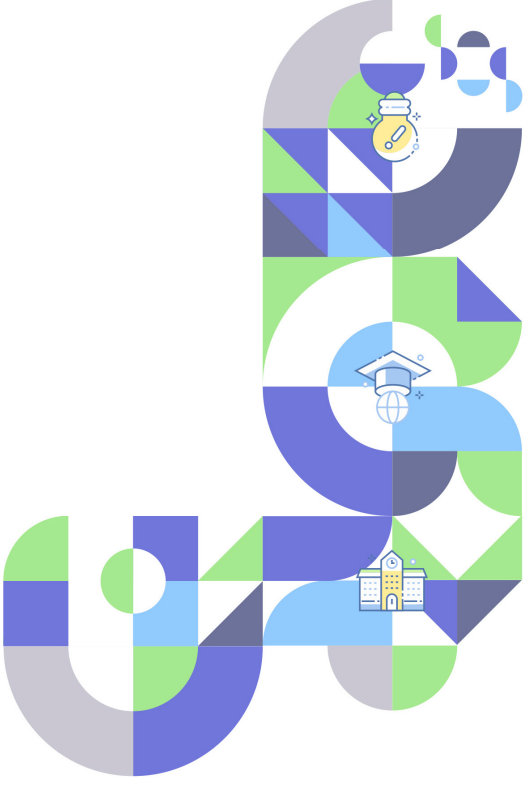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
SEOUL EDUCATION RESEARCH & INFORMATION INSTITUTE

서교연 2025-75

고교교육과 대입의 선순환 체제 구축을 위한 미래형 대학입시제도 방안 연구

| 연구책임자: 김유리(서울교육정책연구소 연구위원) |

연구책임자 김유리 (서울교육정책연구소)
공동연구원 배현순 (한국외국어대학교)
장나영 (숙명여자대학교)
이인수 (용화여자고등학교)
연구협력관 김은주 (서울특별시교육청)
하선주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
SEOUL EDUCATION RESEARCH & INFORMATION INSTITUTE

이 연구는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 연구지원비로 수행되었으나, 연구에서 제시된 정책대안이나 의견 등은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 공식 의견이 아니라 본 연구팀의 견해임을 밝혀둡니다.

연구 요약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이 연구의 목적은 고교 교육과 대학 입시가 단절된 구조에서 벗어나, 고교-대학 간 선순환 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 미래형 대입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데 있다. 현재의 대입제도는 내신, 수능, 전형 구조, 대학 선발 방식이 서로 분절적으로 운영되면서, 학교 교육이 입시 대비용으로 종속되고 학생의 성장과 학습 과정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를 지니고 있다.

또한 학령인구 감소,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 디지털·AI 기반 사회로의 전환 등 급격한 교육환경 변화 속에서 기존의 점수 중심·서열 중심 대입제도는 학생의 실제 학습 역량과 성장을 적절히 평가하기 어려운 단계에 이르렀다. 특히 2028 대입제도 시행과 2040년대 학령인구 급감이 예고된 상황에서, 대입제도의 구조적 전환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정책 과제로 인식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대입제도를 단순한 선발 장치가 아닌, 고교 학습 경험과 대학 교육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성장 기반 제도로 재구조화하고자 하였다.

2. 연구 방법

이 연구는 국내 대입제도 변천 과정 분석, 교육정책 변화에 따른 대입제도 구조 분석, 해외 주요 국가의 입시제도 및 고교-대학 연계 구조에 대한 문헌 분석을 병행하였다. 아울러 교원 설문조사, 전문가 TF, 정책포럼, 심층 협의회를 통해 학교 현장과 대학, 정책 전문가의 인식을 종합적으로 수렴하였다. 교원 인식 분석은 제도의 현장 수용성과 실행 가능성을 점검하는 데 활용되었으며, 전문가 논의는 중장기 제도 설계 방향과 정책 대안을 구체화하는 근거로 활용되었다.

이러한 연구 과정을 바탕으로 미래형 대입제도의 철학과 설계 원칙을 도출하고, 내신 평가, 대학입학소양시험, 대입 전형 구조, 대학 평가체계, 평가 인프라 구축, 고교체제 개편 등 핵심 영역별 제도 개선안을 종합적으로 설계하였다.

3. 연구 내용

본 연구는 고교학점제를 전제로 한 2022 개정 교육과정 도입이라는 교육환경 변화 속에서, 고교 교육과 대학입시제도가 어떠한 구조로 재정립되어야 하는지를 단계적으로 분석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제도 분석, 교육관계자 인식 분석, 해외 사례 분석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미래형 대학입시제도 개선 방향을 도출하였다.

첫째, 고교학점제를 중심으로 한 고교 교육환경 변화와 이에 따른 대학입시제도의 과제를 분석하였다. 사회·교육 환경 변화와 고교 교육의 구조적 전환을 검토하고, 대학입시제도의 역사적 변천 과정과 현행 제도, 2028학년도 대입 개편안을 분석하여 고교 교육과정과의 정합성 측면에서 한계를 진단하였다.

둘째, 고등학교 교원 설문조사와 교육관계자(입학사정관, 정책담당자, 연구자 등) 전문가 TF 분석을 통해, 현장에서 인식하는 대학입시제도의 문제점과 미래형 대학입시제도가 지향해야 할 가치와 방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셋째, 미국, 독일, 핀란드, 프랑스, 싱가포르, 일본의 대학입시제도 개혁 사례를 분석하여, 고교 교육과정과 대학입시가 정합적으로 연계되는 제도 설계의 공통적 특징과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넷째, 이러한 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2028학년도 대입 개편안을 출발점으로 삼은 단계적 개선 로드맵을 제시하고, 고교 교육과 대학입시의 선순환 구조 구축을 위한 미래형 대학입시제도 개선 방향과 제도 안착 방안을 제안하였다.

4. 연구 결과

이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입시제도 분석 결과, 현행 대입제도는 내신·수능·전형 구조가 분절적으로 운영되면서 고교 교육을 입시 대비 중심으로 종속시키는 구조적 한계를 지니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특히 점수·서열 중심 선발 방식은 학생의 실제 학습 성취와 성장 과정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를 드러냈다.

둘째, 교육관계자 인식 분석 결과, 교원과 교육관계자들은 현행 대입제도가 고교 교육과정 운영을 제약하고 있으며, 평가 구조와 전형 방식이 변화하지 않는 한 고교 교육의 질적 전환은 어렵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었다. 다만 절대평가 확대, 서·논술형 평가 도입, 전형

구조 단순화에 대해서는 현장의 수용성을 고려한 단계적이고 관리된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우세하였다.

셋째, 전문가 인식 분석 결과, 전문가들은 미래형 대입제도의 핵심을 단순한 선발 방식 조정이 아니라, 고교 학습 성취를 대학 선발 과정에서 정당하게 해석하고 인정하는 구조로의 전환으로 규정하였다. 특히 내신 평가의 질 관리, 수능 기능 전환, 대학 평가체계 고도화가 상호 연계되지 않을 경우 제도 개편의 실효성이 제한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넷째, 해외 입시제도 개혁 동향 분석 결과, 주요 국가는 고교 성취 중심 평가, 절대평가 기반 학업 인증, 다경로 진학 구조를 통해 고교-대학 간 연계를 제도적으로 강화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는 단일 시험 중심 선발에서 벗어나, 학습 과정과 성취를 누적·해석하는 방향으로 대입제도가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본 연구는 대입제도를 점수·서열 중심 선발 체제에서 고교 학습 성취와 성장 과정을 정당하게 해석·연결하는 구조로 전환하는 미래형 대입제도 개선 방안을 도출하였다. 내신 평가 체제 개편, 수능 기능 전환, 전형 구조 통합, 대학 평가체계 고도화, 평가 인프라 구축, 고교체제 개편을 상호 연동된 정책 패키지로 설계함으로써, 고교-대학 간 선순환 체계 구축을 핵심 목표로 제시하였다.

5. 제언

첫째, 단계적 실행을 위한 정책 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둘째, 평가 신뢰도 제고를 위한 질 관리와 전문성 지원 체계를 정교화해야 한다.

셋째, 다경로 학업 연계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

넷째, 미래형 대입과 정합적인 국가 교육과정 기반을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다섯째, 이해관계자 소통과 사회적 합의 체계를 공고히 해야 한다.

여섯째, 지역·학교 여건 격차 완화를 위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일곱째, 미래형 평가 인프라와 기술 기반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해야 한다.

여덟째, 국가 통합 대입·진학정보 플랫폼(Parcoursup형)을 구축해야 한다.

차 례

Ⅰ. 서론 ····· 1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 3
2. 선행연구 고찰 ····· 5
3. 연구 내용 ····· 8
4. 연구 방법 ····· 11

Ⅱ. 교육정책 변화에 따른 대입제도 분석 ····· 17

1. 사회변화에 따른 교육기대의 변화 ····· 19
2. 고교 교육환경의 변화 ····· 20
3. 대학입시제도의 변천 및 쟁점: 고교교육과의 선순환 관점에서 ····· 23
   가. 대학입시제도의 변천 ····· 23
   나. 현 대입제도의 적용 시기와 구조적 한계: 고교-대입 연계 관점에서의 비판적 검토 ····· 27
   다. 2028 대학입시제도의 주요내용 및 구조적 쟁점 ····· 29
4. 시사점 ····· 35

Ⅲ. 대학입시제도에 관한 교육관계자 인식 분석 ····· 37

1. 조사 개요 ····· 39
2. 분석 결과 ····· 41
   가. 2028학년도 대입 개편안에 관한 인식 ····· 41
   나. 대입제도에 관한 인식 ····· 54
   다. 미래형 대입제도에 관한 인식 ····· 66
   라. 정책적 · 제도적 조건 ····· 87
3. 시사점 ····· 91

Ⅳ. 대학입시제도에 관한 전문가 인식 분석 ····· 95
1. 분석 개요 ····· 97
2. 분석 방법 ····· 100
3. 분석 결과 1: 쟁점 도출과 방향 모색 단계 ····· 101
가. 현행 대학입시제도의 문제점 ····· 101
나. 대학입시 개선을 위해 지켜야 할 원칙 ····· 110
다. 대학입시제도의 개선 방향 ····· 115
4. 분석 결과 2: 개선안 구체화 및 검토 단계 ····· 141
가. 내신 및 수능의 절대평가 전환 ····· 143
나. 수능 자격고사화 ····· 146
다. 수능 서·논술형 평가 전환 ····· 146
라. 수능 응시 시기 및 횟수 ····· 147
마. 대학 입시 전형 요소 ····· 148
5. 시사점 ····· 150

Ⅴ. 해외 대학입시 개혁 동향 분석 ····· 153
1. 사례 국가 선정 및 분석 방법 ····· 156
가. 사례 국가 선정 기준 ····· 156
나. 질적 사례비교(Qualitative Comparative Analysis, QCA) ····· 157
2. 국가별 사례 ····· 159
가. 일본 ····· 159
나. 싱가포르 ····· 166
다. 미국 ····· 175
라. 독일 ····· 187
마. 핀란드 ····· 196
바. 프랑스 ····· 205
3. 질적 사례비교 분석(QCA)에 기반한 결과 ····· 214
가. 질적 사례비교 분석의 이해 ····· 214
나. 분석 결과 ····· 214
4. 시사점 ····· 219

Ⅵ. 고교교육-대학 선순환을 위한 미래형 대입제도 개선안 ····· 223
1. 개선안 도출의 원칙 ····· 225
가. 철학과 가치 ····· 225
나. 설계 원칙 ····· 227
2. 미래형 대입제도 제안 개요 ····· 228
3. 핵심 영역별 제도 개선안 ····· 230
가. 연구결과 종합과 개선 방향 도출 과정 ····· 230
나. 내신 평가 체제 개선 ····· 233
다. 대학입학소양시험(현행 수능) 개편 및 단계적 기능 전환 ····· 242
라. 대입전형 구조 개편 ····· 252
마. 대학 평가체계 고도화 및 고교-대학 연계 원칙 정립 ····· 260
바. 미래형 평가 인프라 구축 ····· 267
사. 고교체제 개편 및 학업경로 연속성 강화 ····· 270

Ⅶ. 결론 및 제언 ····· 275
1. 결론 ····· 277
2. 제언 ····· 279
가. 국가 차원의 제도 이행을 위한 정책 과제 ····· 279
나. 시·도교육청 차원의 실천 과제 ····· 283
다. 후속 연구 과제 ····· 284

[참고문헌] ····· 287
[부록] 대입제도에 관한 학교 교원 인식조사 문항 ····· 294

표 차 례

〈표 Ⅰ-1〉 설문조사 문항 개요 ····· 13
〈표 Ⅰ-2〉 TF 운영 개요 ····· 14
〈표 Ⅰ-3〉 전문가협의회 운영 개요 ····· 15
〈표 Ⅱ-1〉 과목별 성적 산출 및 대학 제공 방식(확정) ····· 23
〈표 Ⅱ-2〉 대입제도 변천 과정(1945년~2025년) ····· 26
〈표 Ⅱ-3〉 과목별 성적 산출 및 대학 제공 방식, 대입전형자료 ····· 30
〈표 Ⅱ-4〉 2028학년도 수능 개편 확정안(요약) ····· 31
〈표 Ⅲ-1〉 2028학년도 대입 개편안이 고교 교육과정 운영에 끼치는 영향에 대한 선택형 문항 응답 결과 ····· 41
〈표 Ⅲ-1-1〉 2028학년도 대입 개편안이 고교 교육과정 운영에 끼치는 영향에 대한 추가 의견 결과 ··· 42
〈표 Ⅲ-2〉 2028학년도 대입 개편안이 고교학점제 운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선택형 문항 응답 결과 ····· 44
〈표 Ⅲ-2-1〉 2028학년도 대입 개편안이 고교학점제 운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추가 의견 결과 ··· 45
〈표 Ⅲ-3〉 2028학년도 대입에서의 수능 영향력에 대한 선택형 응답 결과 ····· 47
〈표 Ⅲ-3-1〉 2028학년도 대입에서의 수능 영향력에 대한 추가 의견 결과 ····· 48
〈표 Ⅲ-4〉 2028학년도 대입 이후의 대입제도 개편 필요성에 대한 선택형 응답 결과 ····· 50
〈표 Ⅲ-4-1〉 2028학년도 대입 이후의 대입제도 개편 필요성에 대한 추가 의견 결과 ····· 51
〈표 Ⅲ-5〉 2028학년도 대입에 관한 추가 의견 결과 ····· 54
〈표 Ⅲ-6〉 대입이 추구해야 될 가치에 관한 선택형 문항 결과(1순위) ····· 55
〈표 Ⅲ-7〉 대입이 추구해야 될 가치에 관한 선택형 문항 결과(2순위) ····· 56
〈표 Ⅲ-8〉 대입이 추구해야 될 가치에 관한 선택형 문항 결과(3순위) ····· 56
〈표 Ⅲ-9〉 대입에서의 수능 영향력에 관한 선택형 문항 응답 결과 ····· 58
〈표 Ⅲ-9-1〉 대입에서의 수능 영향력에 관한 추가 의견 결과 ····· 59
〈표 Ⅲ-10〉 수·정시통합 및 시기조정에 관한 선택형 응답 결과 ····· 61
〈표 Ⅲ-10-1〉 수·정시통합 및 시기조정에 관한 추가 의견 결과 ····· 62
〈표 Ⅲ-11〉 대입제도에 관한 추가 의견 결과 ····· 65

〈표 Ⅲ-12〉 수능을 자격시험으로 전환에 관한 선택형 응답 결과 ····· 66
〈표 Ⅲ-13〉 수능을 서논술평가로 전환에 관한 선택형 응답 결과 ····· 67
〈표 Ⅲ-14〉 수능을 절태평가로 전환에 관한 선택형 응답 결과 ····· 68
〈표 Ⅲ-15〉 내신 절대평가로 전환에 관한 선택형 응답 결과 ····· 69
〈표 Ⅲ-16〉 내신 서논술형평가 확대에 관한 선택형 응답 결과 ····· 70
〈표 Ⅲ-17〉 수·정시통합(고3-2학기 종료 후)에 관한 선택형 응답 결과 ····· 71
〈표 Ⅲ-18〉 내신 비교과 폐지, 교과 정성평가 보완에 관한 선택형 응답 결과 ····· 72
〈표 Ⅲ-19〉 대입은 절대평가화된 수능과 내신, 면접을 통해 진행에 관한 선택형 응답 결과 ·· 73
〈표 Ⅲ-20〉 서논술형 수능을 전제할 경우의 수능 시행 방안에 관한 선택형 응답 결과 ····· 74
〈표 Ⅲ-20-1〉 서논술형 수능을 전제할 경우의 수능 시행 방안에 관한 추가의견 결과 ····· 75
〈표 Ⅲ-21〉 2032년 이후 대입과 내신의 변화(안)에 관한 추가 의견 결과 ····· 77
〈표 Ⅲ-22〉 수능을 자격시험으로 전환에 관한 선택형 응답 결과 ····· 78
〈표 Ⅲ-23〉 수능을 서논술평가로 전환에 관한 선택형 응답 결과 ····· 79
〈표 Ⅲ-24〉 수능을 절대평가로 전환에 관한 선택형 응답 결과 ····· 80
〈표 Ⅲ-25〉 내신을 절대평가로 전환에 관한 선택형 응답 결과 ····· 81
〈표 Ⅲ-26〉 내신 서논술평가 확대에 관한 선택형 응답 결과 ····· 82
〈표 Ⅲ-27〉 수·정시통합(고3-2학기 종료 후)에 관한 선택형 응답 결과 ····· 82
〈표 Ⅲ-28〉 내신 비교과 폐지, 교과 정성평가 보완에 관한 선택형 응답 결과 ····· 83
〈표 Ⅲ-29〉 대입은 절대평가화된 수능과 내신, 면접을 통해 진행에 관한 선택형 응답 결과 ·· 84
〈표 Ⅲ-30〉 2039 이후 대입과 내신의 변화(안)에 관한 추가의견 결과 ····· 86
〈표 Ⅲ-31〉 정책·제도 개선에 관한 선택형 응답 결과(1순위) ····· 87
〈표 Ⅲ-32〉 정책·제도 개선에 관한 선택형 응답 결과(2순위) ····· 88
〈표 Ⅲ-33〉 정책·제도 개선에 관한 선택형 응답 결과(3순위) ····· 89
〈표 Ⅲ-34〉 정책·제도 개선에 관한 추가의견 결과 ····· 90
〈표 Ⅳ-1〉 대학입시제도 인식 및 개선안 도출 과정 ····· 98
〈표 Ⅳ-2〉 참여자 개요 ····· 99
〈표 Ⅳ-3〉 현행 대학입시 제도의 문제점과 한계 ····· 109
〈표 Ⅳ-4〉 절대평가 전환에 대한 쟁점 및 대응 방안 ····· 123
〈표 Ⅳ-5〉 서·논술형 평가 전환에 대한 쟁점 및 대응 방안 ····· 132
〈표 Ⅳ-6〉 수·정시 통합에 대한 쟁점 및 대응 방안 ····· 141

〈표 Ⅳ-7〉 개선안 검토 의견 집단별 요약 ····· 149
〈표 Ⅴ-1〉 사례 국가 선정 이유 ····· 156
〈표 Ⅴ-2〉 조건 및 결과 변수의 정의 ····· 158
〈표 Ⅴ-3〉 일본 대학입시 평가구조 ····· 161
〈표 Ⅴ-4〉 전형 유형별 개요 ····· 163
〈표 Ⅴ-5〉 주요 전형 요소 ····· 163
〈표 Ⅴ-6〉 전형 시기 ····· 163
〈표 Ⅴ-7〉 싱가포르 대학입시 평가구조 분석 틀 ····· 169
〈표 Ⅴ-8〉 전형 유형별 개요 ····· 170
〈표 Ⅴ-9〉 주요 전형 요소 ····· 171
〈표 Ⅴ-10〉 전형 시기 ····· 171
〈표 Ⅴ-11〉 Integrated Programme(IP) 현황(2025년 기준) ····· 174
〈표 Ⅴ-12〉 미국 대학입시 평가구조 분석 틀 ····· 178
〈표 Ⅴ-13〉 전형 유형별 개요 ····· 180
〈표 Ⅴ-14〉 주요 전형 요소 ····· 181
〈표 Ⅴ-15〉 전형 시기 ····· 181
〈표 Ⅴ-16〉 독일 대학입시 평가구조 분석 틀 ····· 191
〈표 Ⅴ-17〉 전형 시기 ····· 192
〈표 Ⅴ-18〉 대학입시 평가구조 분석 틀 ····· 199
〈표 Ⅴ-19〉 주요 전형 요소 ····· 201
〈표 Ⅴ-20〉 이중자격 취득제도 ····· 203
〈표 Ⅴ-21〉 대학입시 평가구조 분석 틀 ····· 208
〈표 Ⅴ-22〉 국가별 대학입시 관련 비교 ····· 213
〈표 Ⅴ-23〉 조작적 정의서(조건 변수와 결과 변수 정의) ····· 215
〈표 Ⅴ-24〉 코딩 신뢰도 검증 결과 ····· 217
〈표 Ⅴ-25〉 진리표 구성 ····· 218
〈표 Ⅵ-1〉 미래형 단계별 대입제도 개요 ····· 230
〈표 Ⅵ-2〉 기존 5등급 절대평가 vs 5단계 질적 성취수준 절대평가 비교 ····· 235
〈표 Ⅵ-3〉 내신 평가 체제 개선안 ····· 241
〈표 Ⅵ-4〉 대학입학소양시험 개요 ····· 245

〈표 Ⅵ-5〉 미래형 대입평가체제 전환 단계 및 과도기 운영 개요 ····· 251
〈표 Ⅵ-6〉 통합형 대입전형 운영 시 예상 소요 기간(예시) ····· 254
〈표 Ⅵ-7〉 대입전형 구조 개편 방안 ····· 259
〈표 Ⅵ-8〉 재구조화된 대학 자율형 평가요소(안) ····· 263
〈표 Ⅵ-9〉 2033학년도 전형 예시(안) ····· 265
〈표 Ⅵ-10〉 대학별 평가 및 연계 강화 ····· 266
〈표 Ⅵ-11〉 미래형 평가 인프라 구축 ····· 270
〈표 Ⅵ-12〉 고교체제 개편 및 고교-대학 연계 강화 ····· 274

| 그림 차례 |

[그림 Ⅰ-1] 연구분석 체계 ····· 16
[그림 Ⅱ-1] 교과 재구조화 방안, 교육부(2021) ····· 21
[그림 Ⅳ-1] 분석 절차 ····· 100
[그림 Ⅳ-2] 대학입시제도 1차 개선안 ····· 142

I

서 론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2. 선행연구 고찰
3. 연구 내용
4. 연구 방법

Ⅰ 서 론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최근 사회 변화의 속도가 빨라지고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디지털 환경이 일상화되면서, 학교 교육에 요구되는 역할 역시 크게 달라지고 있다. 이제 교육은 지식을 많이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배운 내용을 비판적으로 활용하고 새로운 문제를 해결하며 가치를 만들어내는 역량을 기르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김재희, 배식한, 2023; 김지은, 김경아, 2023). 특히 인공지능을 포함한 첨단 기술의 발전은 학생 개개인이 창의적으로 사고하고, 다른 사람과 협력하며 자신의 생각을 효과적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의 중요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

여기에 더해, 학령인구 감소로 학생 수가 급격히 줄어드는 현실은 교육의 방향을 다시 한 번 점검하게 만든다. 이제는 소수의 학생을 대상으로 하더라도, 한 명의 학생도 소외되지 않도록 개별 학생의 상황과 필요를 세심하게 고려하는 맞춤형 교육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이혜진, 2024).

이러한 사회적·교육적 변화에 대응하여, 고등학교 교육은 학생의 진로와 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고 학점 단위로 학습을 이수하는 방식으로 점차 전환되어 왔다. 고교학점제를 전제로 설계된 2022 개정 교육과정은 선택과목의 다양화와 융합형 과목 운영을 통해, 학생들이 자신의 학습 과정을 스스로 계획하고 책임질 수 있도록 마련되었다(교육부, 2022). 고교학점제는 이 교육과정을 학교 현장에서 구현하기 위한 핵심 운영 체계로서, 고등학교 교육을 '정해진 경로를 따라가는 교육'에서 벗어나 학생 각자의 성장 경로를 존중하는 교육으로 전환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취지와 달리, 현행 대학입시제도는 고교학점제와 교육과정 혁신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 데 중요한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대학수학능력시험과 상대평가 중심의 내신 체계는 여전히 학생을 획일적인 기준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그 결과 학생들은 자신의 흥미나 진로보다는 입시에 유리한 과목을 선택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특정 과목으로의 쏠림 현상이 발생하고, 다양한 과목 선택을 전제로 한 교육과정 운영은 현실적으로 어려워지고 있다. 결국 학교 역시 교육과정의 취지에 따라 수업을 운영하기보다, 입시에 도움이 되는 과목과 평가 방식을 우선 고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는 학교 현장에서 여러 구체적인 현상으로 나타난다. 수능 이후 교외체험학습 신청이 급증하면서 교실이 비는 '공동화 현상'이 발생하고, 교사별 평가 기준 차이로 인해 학생부 기록의 신뢰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또한 내신 작성 기준일이 학교마다 달라 고3 2학기 교육과정이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문제도 반복되고 있다(주영효, 김상철, 2017; 박제남, 2008). 여기에 전형자료를 간소화하겠다는 정책 방향과 전형 유형을 다양화하려는 요구가 동시에 추진되면서, 학교와 학생이 입시에 맞추기 위해 교육과정을 축소하거나 왜곡하는 사례도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임진택 외, 2024).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본 연구는 대학입시제도가 고등학교 교육과정과 보다 긴밀하게 연계되어야 한다는 점에 주목한다. 학생의 학습 과정과 성장 경험이 학교 안에서 충실히 이루어지고, 그 결과가 대학입시에서도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는 구조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대학입시제도는 고교 교육과정의 목표와 충분히 부합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 결과 공교육의 본질적 가치가 훼손되고 학교 교육이 입시 준비에 종속되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고교 교육과정의 교육적 기능을 회복하고, 학생 중심의 학습 경험이 대학입시에서 제도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전환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교육정책 변화에 따른 고교 교육환경의 재편 양상, 현행 대학입시제도와 2028학년도 대입 개편안의 구조적 한계, 교육 이해관계자 인식, 해외 주요국 사례 분석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분석 틀을 설정하였다.

본 연구가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최근 교육정책 변화 속에서 대학입시제도는 어떻게 변천해 왔으며, 그 과정에서 고교교육과의 연계라는 관점에서 나타난 주요 제도적 쟁점은 무엇인가?

둘째, 교원, 대학 관계자, 정책담당자 등 교육 이해관계자들은 현행 대학입시제도와 2028 대입 개편안의 한계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고교교육과 연계된 미래형 대학

입시제도에 대해 어떠한 개선 요구를 제시하고 있는가?

셋째, 해외 주요국은 고교교육과 대학입시 간 연계를 어떤 원리와 방식으로 설계하고 있으며, 이들 사례는 한국의 미래형 대학입시제도 설계에 어떠한 시사점을 제공하는가?

넷째, 고교교육과 대학입시의 선순환을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미래형 대학입시제도는 어떠한 제도적 구조를 가져야 하며, 단계적 이행과 현장 안착을 위해 요구되는 정책적 조건은 무엇인가?

2 선행연구 고찰

본 연구는 현행 및 2028학년도 대입 개편안을 포함한 대학입시제도 개선과 관련하여 선행연구를 폭넓게 검토하였다. 선행연구는 크게 전형 요소와 전형 체제의 측면에서 대학입시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제안하고 있었다.

먼저 전형 요소 측면에서는 내신 절대평가, 서·논술형 평가 확대, 수능 자격고사화, 학교생활기록부 내실화 등에 대한 다양한 접근이 시도되었다. 내신 절대평가와 관련하여 김진훈(2024)은 상대평가 체제가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을 심각하게 제약하고 교사의 수업 및 평가 방식을 왜곡시킨다고 분석하였다. 그는 학생과 학교 현장이 상대평가 체제에서 우수한 등급 확보에 집중하게 되면서, 학생의 진로와 적성에 맞는 과목 선택이 어려워지고 교사는 변별력 있는 시험 문항을 제작하기 위해 수업을 획일적으로 운영하게 되는 부작용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내신을 절대평가로 개정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김경태(2024)도 고교학점제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기 위해 모든 고교 과목을 성취평가제로 운영하고 이를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그는 절대평가 체제가 학생 개별 학습 성취를 드러낼 수 있으며, 학점제의 선택형 교육과정과 연계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반면 김용(2024)은 내신 절대평가 체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정성 문제를 지적하였다. 그는 서로 다른 학교에서 동일한 성취 수준(A)을 받은 학생이라도, A를 부여한 교사나 학교의 평가 관행에 따라 학급 내 A 학점 비율이 다를 수 있으므로, 이를 동일하게 취급하면 불합리하다는 문제를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 고영빈과 지은림(2022)은 성취평가제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교사의 평가 전문성 강화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며, 교육과정 성취기준에 기반한 표준화된 평가 시스템 구축, 교사 대상의 평가 컨설팅 체계 마련 등 다각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은 내신 평가 체제의 전환과 함께 평가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중요함을 공통적으로 시사하고 있다.

서·논술형 평가 확대에 대한 연구로는 김진훈(2024)의 분석이 주목된다. 그는 현재 통합사회·통합과학 교과목의 성취기준과 교과서가 오지선다형을 전제로 하고 있지 않음을 지적하면서, 해당 과목의 평가 방식은 논술형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는 학생이 암기 위주의 객관식 문제풀이에 몰두하기보다 교과의 본질적 성취기준에 맞춰 비판적 사고와 논리적 서술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한편, 신승한(2025)은 대입 자격시험으로 프랑스의 바칼로레아(Baccalauréat) 논술 방식을 도입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그는 프랑스의 중등교육과정이 고전 독서, 토론, 글쓰기를 중심으로 운영되며, 표준화된 평가 기준과 다수 평가자의 교차 채점 시스템(각 답안은 최소 2명의 채점자가 평가하고 점수 차이가 큰 경우 제3의 평가자가 개입)으로 평가 공정성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을 예로 들었다. 임진택 외(2024)도 2028학년도 대입제도 확정안이 고교에서 서·논술형 교육 강화를 강조하고 있는 만큼, 이에 부합하는 평가 체계로 서·논술형 평가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수능 자격고사화에 대한 논의에서 김경태(2024)는 수능의 공통과목 범위 내 절대평가 전환을 전제로, 수능을 자격고사 형태로 운영하고 성적 유효기간을 23학년 여름에 두 차례 응시 기회를 부여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는 학생들이 고교 교육과정 중 수능 준비에 몰입하는 시간을 줄이고, 고교학점제에서 다양한 과목 선택을 통한 개별 학습 경험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확보하자는 취지로 해석된다.

학교생활기록부 내실화에 관한 연구에서는 김재훈(2023)이 공정성, 비교육성, 학생 변별력 측면에서 현행 학교생활기록부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였다. 그는 교육과정-수업-평가가 상호 분절되어 기록되는 현재 시스템을 비판하며, 이를 일체화해 학생의 성장과 학업 성취가 의미 있게 담길 수 있는 학교생활기록부 제작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전형 체제 측면에서 김현수(2020)는 한국 사회의 대입 결과가 개인의 생애소득과 사회적 안정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현실을 들어, 단기적으로는 수능 정시 확대를 통해 비례성에 기반한 공정함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김경태(2024)는 학생의 성취와 진로에 부합하는 다양한 평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수시와 정시를 통합하고, 고교 3학년 2학기까지 반영할 수 있도록 전형 시기를 조정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특히 선택과목에서의 성취를 심화수학 방식으로 대체하기보다, 대학·계열·학과별로 평가할 수 있는 체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임진택 외(2024)는 수시·정시 통합 논의와 함께 지원 횟수, 충원 방식, 전형 기간 등 현실적 세부사항에 대한 충분한 합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현행 체제를 유지하면서도 수능 시행일을 앞당겨 전형 일정을 11월 이후로 조정함으로써 고3 2학기 교육과정의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대학별 전형 자율화와 학교의 전형자료 생산 독립을 주장한 연구도 있다. 신승한(2025)은 대학별 전형 자율화를 통해 각 대학과 학과가 자율적으로 표준화된 시험 성적, 교과 성적, 비교과 활동, 심층면접 등을 활용해 학업역량, 전공적합성, 잠재력 등을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대학이 추구하는 인재상에 맞춰 다양한 전형 방식을 설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반면, 강태중(2024)은 학교가 학생 선발 자료를 생산하는 역할에서 독립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교사가 교육과정 목표를 중심으로 학생의 학습과 성장을 지도할 수 있도록, 내신 성적 산출을 강제하는 학생부 제도를 폐기하고, 수능 연계 방침 또한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종합하면 선행연구는 고교교육과 연계한 대학입시제도 개선 필요성과 구체적 방안을 다양하게 제시하였다. 그러나 고교교육과 대학입시제도가 상호 선순환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체계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본 연구는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방안을 토대로, 고교교육과 대학입시제도의 선순환적 연계를 저해하는 문제와 쟁점을 심층 분석하고, 미래형 대학입시제도와 이를 뒷받침할 정책적 과제를 단계적으로 제안하고자 한다.

3 연구 내용

가. 고교 교육환경 변화와 대학입시제도의 과제

본 장에서는 최근 사회 변화와 교육정책 변화 속에서 고교 교육환경이 어떻게 재편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이러한 변화가 대학입시제도에 어떤 과제를 제기하고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특히 고교학점제를 전제로 설계된 2022 개정 교육과정이 고등학교 교육 전반에 미친 영향을 중심으로, 고교 교육의 구조적 전환과 이에 상응하는 대학입시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검토하였다.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디지털 전환, 학령인구 급감, 그리고 미래사회에 필요한 역량 중심 교육에 대한 요구가 확대되면서, 고등학교 교육은 점차 학습자 중심·역량 기반·과정 중심 교육으로 전환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고교학점제를 운영 체계로 하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을 통해 제도화되었으며, 학생의 진로와 적성에 따른 과목 선택, 학습 경로의 다양화, 자기주도적 학습을 핵심 특징으로 한다. 고교학점제는 별도의 제도가 아니라, 2022 개정 교육과정을 학교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핵심 운영 체계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고교학점제를 전제로 한 2022 개정 교육과정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하는 대학입시제도의 구조적 정합성이 필수적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고교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대학입시제도가 고교교육과 선순환 구조를 형성할 수 있는지를 진단하였다. 이를 위해 역대 대학입시제도의 변천 과정(전형 유형, 전형 요소, 전형 시기)을 검토하고, 현행 제도와 2028학년도 대입 개편안의 구조와 특징을 분석하였다. 특히 이러한 제도들이 고교 교육과정의 목표와 운영 방식에 얼마나 부합하는지를 중심으로 문제점과 한계를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대학입시제도는 그동안 '공정성'과 '변별력'을 핵심 가치로 유지해 왔으나, 2022 개정 교육과정이 강조하는 핵심역량, 자기주도성, 과정 중심 평가와는 일정한 괴리가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본 장에서는 향후 대학입시제도가 단순한 선발 기능을 넘어, 학생의 성장 과정과 학습 경험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라는 관점에서 어떤 가치를 중심에 두고 재구조화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나. 대학입시제도에 관한 교육관계자 인식 분석

앞선 장에서 제도적 구조와 한계를 분석한 데 이어, 본 장에서는 대학입시제도가 실제 교육 현장에서 어떻게 인식되고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제도 분석만으로는 고교교육과 대학입시 간의 괴리를 충분히 설명하기 어렵기 때문에, 본 연구는 교원과 대학, 정책 담당자 등 교육 이해관계자들의 인식을 함께 분석함으로써 미래형 대학입시제도의 가치와 방향을 보다 입체적으로 탐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고등학교 교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현장 교사들이 체감하는 현행 대학입시제도와 2028학년도 대입 개편안의 한계와 개선 요구를 파악하였다. 설문은 제도의 수용 가능성뿐만 아니라, 향후 대학입시제도가 어떤 가치와 방향을 지향해야 하는지에 대한 인식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특히 교사들이 생각하는 미래형 대학입시제도의 평가 방식과 고교 교육과정과의 연계 방식에 대한 의견을 정책 대안 형성에 반영하고자 하였다.

아울러 대학 입학사정관, 정책담당자, 대학 교수, 연구자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 TF를 통해 심층 면담과 토론을 진행하였다. 이 과정에서는 대입전형의 구조, 전형 요소 간 관계, 수능의 위상 변화, 고교학점제와의 연계 방안 등 대학입시제도 전반에 대해 보다 전문적이고 현실적인 관점에서 논의하였다.

이와 같이 본 연구는 대학입시제도에 대한 단순한 현장 반응을 넘어, 고교교육과 연계된 미래형 대학입시제도가 어떤 원리와 방향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인식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정책 수립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다층적 관점을 정리하고, 고교교육과 대학입시 간 선순환 구조 구축을 위한 실천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다. 해외 대학입시제도 개혁 동향 분석

국내 제도 분석과 교육관계자 인식 분석을 바탕으로, 본 장에서는 고교교육과 대학입시제도의 선순환을 제도적으로 구현하고 있는 해외 주요 국가들의 대학입시제도 개혁 동향을 분석하였다. 해외 사례 분석은 우리나라 대학입시제도의 개선 방향을 직접적으로 모방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고교 교육과정과 대학입시가 어떻게 정합성을 갖고 설

계·운영될 수 있는지를 비교·검토하기 위한 참고 틀로 활용되었다.

해외 사례 분석은 세 가지 기준에 따라 이루어졌다. 첫째, 각 국가의 대학입시제도 개혁이 공정성, 정의, 핵심역량 강화 등 어떠한 사회적 가치를 중심으로 추진되었는지를 살펴보았다. 둘째, 전형 유형, 전형 요소, 전형 시기 등 대학입시제도의 구조가 고교교육과정과 어떻게 연계되어 있는지를 비교 분석하였다. 셋째, 고교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대학입시제도 차원에서 어떤 정책적 장치와 역할 분담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검토하였다.

사례국으로는 미국, 독일, 핀란드, 프랑스, 싱가포르, 일본을 선정하였다. 미국은 고교학점제를 기반으로 다양한 전형 요소를 활용하여 학생의 학업 이력과 성장 과정을 다각적으로 평가하는 체제를 운영하고 있다. 독일은 아비투어를 통해 고교 졸업 자격과 대학 진학 자격을 제도적으로 연계하고 있으며, 핀란드는 졸업시험과 대학별 시험을 병행하여 고교 교육의 자율성과 과정 중심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프랑스는 바칼로레아를 중심으로 고교 졸업 자격과 대학 진학 자격을 연계해 온 대표적인 국가로, 최근에는 진학 플랫폼(Parcoursup)을 통해 고교 학습 이력과 진로 희망을 종합적으로 반영하는 구조를 강화하고 있다. 싱가포르와 일본은 경쟁적 입시 환경 속에서도 교육과 입시의 정합성을 높이기 위한 점진적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해외 사례 분석을 통해 본 연구는 대학입시제도가 고교교육의 성취와 학생의 성장 과정을 제도적으로 인정하고 지원하는 방향으로 설계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미래형 대학입시제도 설계에 있어 중요한 비교 기준과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라. 미래형 대학입시제도 개선안 도출 및 안착 방안 마련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앞선 제도 분석, 교육관계자 인식 분석, 해외 사례 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고교교육과 대학입시제도가 상호 선순환할 수 있는 미래형 대학입시제도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특히 고교학점제를 전제로 한 2022 개정 교육과정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기 위해 대학입시제도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를 중심으로 개선 방향을 도출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2028 대입 개편안을 하나의 출발점으로 삼아, 대학입시제도가 점진적으로 발전해 갈 수 있는 단계적 개선 방향을 설정하였다. 또한 제도 설계 자체뿐

아니라, 이러한 변화가 학교 현장에 안정적으로 안착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적 조건과 실행 전략을 함께 검토하였다. 아울러 고교 교육의 내실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중·장기 과제도 함께 제안함으로써, 실현 가능한 고교-대입 연계 체계 구축의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4 연구 방법

본 연구는 고교 교육환경 변화와 대학입시제도의 구조적 과제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고교교육과 대학입시가 선순환하는 미래형 대학입시제도의 방향을 도출하기 위해 문헌분석, 설문조사, 전문가 협의회, 전문가 TF 운영을 병행하는 혼합 연구 방법을 활용하였다. 각 연구방법은 연구내용의 각 장과 유기적으로 대응하도록 설계되었다.

가. 문헌분석

문헌분석은 본 연구의 이론적·정책적 기초를 마련하기 위한 방법으로 활용되었다. 본 연구는 사회 변화와 교육환경 변화, 고교 교육과정 및 대학입시제도의 구조적 변화를 종합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관련 문헌과 정책 자료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4차 산업혁명, 학령인구 감소, 미래역량 중심 교육 담론 등 사회 변화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검토하였으며, 고교학점제를 전제로 설계된 2022 개정 교육과정과 고교 평가체제 관련 정책 문서를 분석하였다. 아울러 대학입시제도의 변천 과정(이전 제도, 현행 제도, 2028학년도 대입 개편안)을 중심으로 관련 선행연구와 정책 자료를 검토하여, 고교 교육과정과 대학입시제도 간의 연계성과 구조적 한계를 분석하였다.

또한 해외 사례 분석을 위해 주요 국가의 고교 교육과정, 평가 제도, 대학입시제도 및 관련 정책 자료를 함께 분석함으로써, 고교교육과 대학입시 간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적 접근 방식을 비교·검토하였다. 이러한 문헌분석 결과는 이후 설문조사 문항 구성, 전문가 협의회 및 TF 논의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었다.

나. 설문조사

설문조사는 고등학교 교원을 대상으로 대학입시제도에 대한 현장 인식을 파악하고, 미래형 대학입시제도 개편 방향 설정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설문조사는 2025년 6월 9일(월)부터 6월 13일(금)까지 진행되었다.

설문 문항은 총 4개 영역, 30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선다형과 서술형 문항을 병행하였다. 설문 내용은 단순한 제도 찬반을 묻는 데 그치지 않고, 현행 대학입시제도와 2028학년도 대입 개편안의 한계 인식, 대학입시가 지향해야 할 가치, 그리고 고교교육과 연계된 미래형 대학입시제도의 방향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문항 구성은 문헌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초안을 마련한 뒤, 2025년 5월 29일(목)부터 6월 5일(목)까지 진행된 전문가 자문(대입제도 및 고교 교육과정 전문성을 지닌 현장 교원, 교육행정가, 교육과정 전문가 참여)을 통해 수정·보완되었다. 최종 설문은 온라인 설문 시스템(서울시교육청 유레카)을 통해 배포 및 응답이 이루어졌다.

〈표 Ⅰ-1〉 설문조사 문항 개요

구분	영역		문항 구성	응답
1	2028 대입제도에 관한 인식		1-1. 2028 대입 확정안이 고교교육의 정상적 운영에 끼치는 영향	선다형
			1-2. 2028 대입 확정안이 고교학점제에 끼치는 영향	
			1-3. 2028 대입 확정안에서의 수능 영향력	
			1-4. 2028 이후 대입제도 개편의 필요성	
			1-5. 2028 대입에 관한 추가 의견	서술형
2	대입제도에 관한 인식		2-1. 대입이 추구해야 할 가치	선다형
			2-2. 대입에서의 수능 영향력	
			2-3. 수 · 정시통합 및 시기조정	순위
			2-4. 대입제도에 관한 추가 의견	서술형
3	미래형 대입제도에 관한 인식	2032 이후 대입과 내신의 변화(안)	3-1. 수능을 자격시험으로 전환	선다형
			3-2. 수능을 서논술평가로 전환	
			3-3. 수능을 절대평가로 전환	
			3-4. 내신을 절대평가로 전환	
			3-5. 내신 서논술평가 확대	
			3-6. 수 · 정시통합(고3-2학기 종료 후)	
			3-7. 내신 비교과 폐지, 교과 정성평가 보완	
			3-8. 대입은 절대평가화된 수능과 내신, 면접을 통해 진행	
			3-9. 서논술형 수능을 전제할 경우의 시행 방안	
			3-10. 2032 이후 대입가 내신의 변화(안)에 대한 추가 의견	서술형
		2039 이후 대입과 내신의 변화(안)	3-11 수능을 자격시험으로 전환	선다형
			3-12. 수능을 서논술평가로 전환	
			3-13. 수능을 절대평가로 전환	
			3-14. 내신을 절대평가로 전환	
			3-15. 내신 서논술평가 확대	
			3-16. 수 · 정시통합(고3-2학기 종료 후)	
			3-17. 내신 비교과 폐지, 교과 정성평가 평가 보완	
			3-18. 대입은 절대평가화된 수능과 내신, 면접을 통해 진행	
			3-19. 2039 이후 대입과 내신의 변화(안)에 대한 추가 의견	서술형
4	정책적 제도적 조건		4-1. 교육 선순환을 위한 초중등 및 대학의 정책 · 제도 개선	선다형
			4-2. 정책 · 제도 개선에 대한 추가 의견	서술행

다. 전문가 TF

전문가 TF는 본 연구의 핵심 연구조직으로서, 미래형 대학입시제도 개편안과 이를 뒷받침하는 고교 평가체제 및 중·장기 정책 과제(로드맵)를 도출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TF는 교수, 연구원, 대학 입학사정관, 고등학교 교원, 교육청 장학관·연구사 등 총 12명으로 구성되었다.

TF는 연구 전 과정에 걸쳐 지속적으로 운영되었으며, 연구 방향 설정, 주요 쟁점 분석, 제도 설계 검토, 개선안 구체화 등 단계별 역할을 수행하였다. 각 회기에서는 미래형 대학입시제도의 철학과 원리, 제도 설계의 실현 가능성, 고교교육과의 연계 방식, 평가 혁신 방향 등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루어졌다.

특히 TF는 문헌분석, 설문조사, 전문가 협의회에서 도출된 결과를 종합·검토하는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본 연구가 제안하는 미래형 대학입시제도 개선안의 정합성과 현실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였다. TF 운영 일정과 주요 논의 내용은 〈표 Ⅰ-2〉와 같다.

〈표 Ⅰ-2〉 TF 운영 개요

구분	목적	논의 사항	일정
1차(대면)	연구 취지 및 TF 일정 공유	미래형 대입제도 개선 연구 추진 배경	4. 28.
2차(온라인)	대입제도 개선(1)	대입 제도의 교육적 본질 회복과 평가 방향성, 현실적 부작용	5. 15.
3차(서면)	대입제도 개선(2)	미래형 대입제도 쟁점 분석	5.30.
4차(온라인)	대입제도 개선(3)	미래형 대입제도 쟁점 검토, 실현 가능 제도 설계	6.17.
5차(대면)	대입 제도 개선(4)	미래형 대입제도 실현을 위한 평가혁신 및 고교-대학 연계체계	8.11.
6차(대면)	대입제도 개선(5)	미래형 대입제도 개선 구체화, 중·장기적 추진 로드맵	8.20.
7차(서면)	대입제도 개선(6)	미래형 대입제도 개선(안) 검토	8.27.~8.28.
8차(온라인)	대입제도 개선(7)	미래형 대입제도 개선(안) 검토	9.11.
9차(대면)	대입제도 개선(8)	미래형 대입제도 개선(안) 검토	10.13.

라. 전문가 협의회

전문가 협의회는 대학입시제도 개편과 관련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심층적으로 수렴하고, 연구 결과의 정책적 타당성과 현장 적합성을 검토하기 위해 운영되었다. 협의회에는 학교 현장의 교원, 교육청 담당자, 대학 관계자 등 실제 제도 운영에 참여하는 주체들이 참여하였다.

전문가 협의회는 연구 진행 단계에 따라 여러 차례에 걸쳐 운영되었으며, 각 회기별로 논의 주제를 달리하여 논의의 깊이와 폭을 동시에 확보하고자 하였다.

〈표 Ⅰ-3〉 전문가협의회 운영 개요

구분	형식	내용	대상	일정
1차	정책포럼	미래 사회를 위한 교육, 대입 정책 포럼	학교, 교육청 및 대학입시 관계자	7.1.
2차	세미나	미래형 대입제도 실현을 위한 평가혁신 및 고교-대학 연계체계	학교, 교육청 및 대학입시 관계자	7.30.
3차	FGI	미래형 대입제도 개선 방안 논의	고등학교 교원	8.22.
4차	FGI	미래형 대입제도 개선 방안 논의	입학사정관	8.27.
5차	정책토론	고교교육의 내실화 및 미래형 대입제도의 중장기적 방안	학교, 교육청, 대학 관계자	12.1.

1차 정책포럼(7월 1일)에서는 미래 사회 변화와 미래 인재상, 고교 교육의 변화 방향을 중심으로 대학입시제도가 지향해야 할 기본 철학과 정책 방향을 논의하였다.

2차 세미나(7월 30일)에서는 성장 중심 평가체제와 고교-대학 연계 구조의 실현 가능성을 중심으로, 서·논술형 평가 확대, 평가 지원 체계, 학생부 활용의 질적 고도화 등 구체적 실행 방안을 검토하였다.

이후 3차 FGI(8월 22일)에서는 서울 소재 고등학교 교원을 대상으로 학교 현장에서의 적용 가능성과 운영상 쟁점을 논의하였고, 4차 FGI(8월 27일)에서는 대학 입학사정관을 대상으로 대학의 평가 책임과 자율성, 학생부 기반 평가의 신뢰성 확보 방안을 중심으로 논의하였다.

마지막 정책토론(12월 1일)에서는 앞선 논의를 종합하여 고교 교육의 내실화와 미래형 대학입시제도의 최종 방향을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선안을 정리하였다.



2장. 대학입시제도 분석
→ 문헌분석



3장. 대학입시제도에 관한 교육관계자 인식 분석
→ 문헌분석
→ 설문조사



4장. 전문가 인식 분석
→전문가 TF
→ 전문가 협의회 (정책포럼, 세미나)



5장. 해외 입시제도 개혁 동향 분석
→ 문헌분석
→ 면담



6장. 미래형 대학입시제도 개선 방안 제안
→ 전문가 TF
→ 전문가 협의회 (정책포럼, 세미나)

[그림 Ⅰ-1] 연구분석 체계

Ⅱ

교육정책 변화에 따른 대입제도 분석

1. 사회변화에 따른 교육기대의 변화
2. 고교 교육환경의 변화
3. 대학입시제도의 변천 및 쟁점: 고교교육과의 선순환 관점에서
4. 시사점

Ⅱ 교육정책 변화에 따른 대입제도 분석

1 사회 변화에 따른 교육 기대의 변화

4차 산업혁명으로 대표되는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직업 세계의 변화는, 학생들이 살아갈 미래 사회의 불확실성을 크게 높이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학교 교육이 단순한 지식 전달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학생들이 새로운 문제에 대응하고 스스로 사고하며 협력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함을 분명히 보여준다. 즉, 최근의 사회 변화는 창의적 문제해결력과 융합적 사고력을 핵심으로 하는 미래역량 중심 교육 체계로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실제로 호주, 미국, 캐나다, 뉴질랜드, 독일, 싱가포르 등 주요 국가들은 암기와 지식 습득 위주의 수동적 학습에서 벗어나, 다양한 역량을 기르는 능동적 학습을 교육혁신의 중심에 두고 교육과정을 재구성해 왔다. 이들 국가는 협력, 비판적 사고, 문제해결 역량을 갖춘 인재 양성을 목표로 역량 기반 교육을 강화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Kelly, McCain, & Jukes, 2009; 윤종혁, 2014; 임종헌 외, 2017).

이와 함께, 저출생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는 우리 교육이 직면한 또 다른 중대한 과제로 작용하고 있다(이정림 외, 2024). 특히 우리나라는 학령인구 감소 속도가 매우 빠르다는 점에서, 교육환경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통계청 인구 추계(KOSIS)에 따르면(국가통계포털, 2025), 고등학생 연령대인 15~17세 인구는 2000년 216만 명에서 2025년 136만 명, 2040년에는 68만 명 수준으로 급감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학 진학 대상이 되는 18세 인구 역시 2000년 약 82만 7천 명에서 2025년 약 45만 7천 명, 2040년에는 약 26만 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측된다. 이는 2026학년도 대학 전체 모집인원 51만 5천 명과 비교할 때(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24.5.2.;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2024.5.30.), 이미 상당한 규모의 입학 정원 미충족이 구조적으로 발생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학령인구 감소는 단순히 학생 수가 줄어드는 문제에 그치지 않고, 지역 소멸 위험과 학교 운영의 근본적 변화를 동반한다. 더 이상 교육은 일정 수준 이상의 성취를

달성할 수 있는 일부 학생만을 전제로 설계될 수 없으며, 단 한 명의 학생도 소외되지 않도록 각자의 특성과 잠재력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으로 전환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는 교육과정이 '평균적인 학생'을 기준으로 운영되는 구조에서 벗어나, 모든 학생의 성장 가능성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재구조화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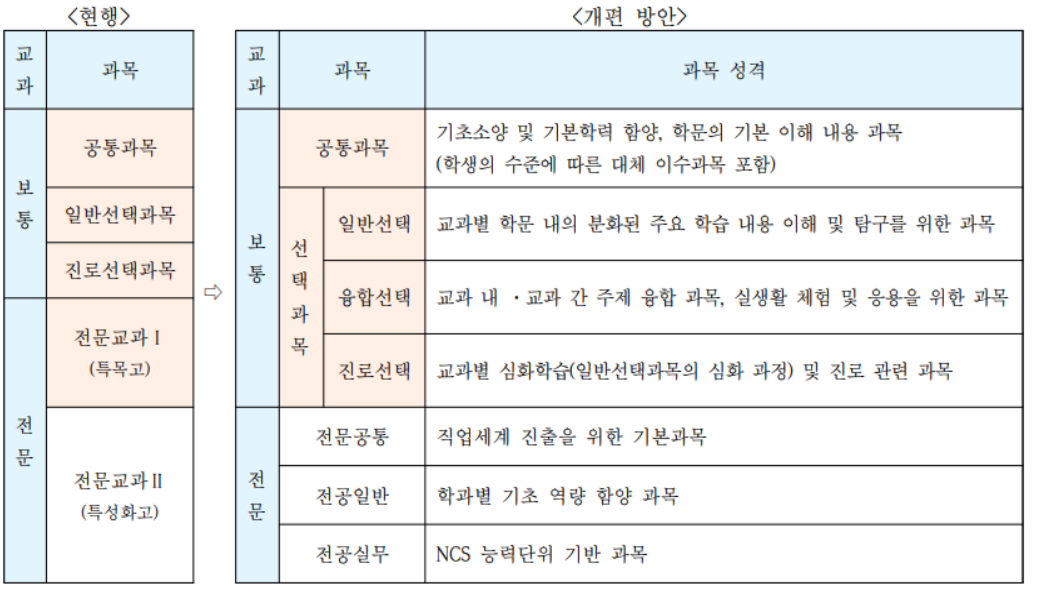
이러한 문제의식은 최근 교육개혁 논의에서도 확인된다. 서울대학교 교수회(2024.8.1.)는 「대한민국 교육개혁 제안」을 통해, 현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정책이 의료 분야를 넘어 교육과 입시, 나아가 사회 전반에 예측하기 어려운 파급효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경고하였다. 특정 학과로의 쏠림 현상은 학문 생태계의 균형을 훼손하고, 이공계 및 첨단 산업 분야 인력 양성 기반을 약화시킬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이에 교수회는 단기적·부분적 처방이 아니라, 유·청소년 교육에서부터 대학입시, 고등교육, 산업 인력 양성까지를 포괄하는 종합적 교육개혁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특히 획일적 서열 구조를 완화하고, 다양성과 전문성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교육체계를 재구성함으로써, 공감·공정·공유·공존의 가치에 기반한 네트워크형 지식국가로의 전환을 모색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2 고교 교육환경의 변화

최근 고교 교육환경의 변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고교학점제를 전제로 설계된 2022 개정 교육과정이 어떻게 마련되고 적용되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추진 배경은 2021년 4월 교육부가 발표한 「국민과 함께하는 미래형 교육과정 추진 계획」에서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다(황규호, 2021). 당시 정부는 첫째, 대전환의 시대를 맞아 장기적 관점에서 미래 교육의 비전을 새롭게 정립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둘째, 고교학점제 등 이미 추진 중인 교육정책 변화와 교육과정이 서로 어긋나지 않도록 교육과정 개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셋째, 교원·학부모·학생 등 정책 수요자의 참여를 확대하여, 학교 현장의 요구가 반영되는 교육과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제기하였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마련된 2022 개정 교육과정의 핵심 과제 중 하나는 교육과정 혁신을 통한 학습자 맞춤형 교육 강화이며, 특히 고등학교 단계에서는 고교학점제

기반 교육과정의 구현이 핵심 과제로 설정되었다(교육부, 2022). 변경된 내용은 다음 [그림 Ⅱ-1]과 같다.



[그림 Ⅱ-1] 교과 재구조화 방안, 교육부(2021)

이에 따라 고등학교 교육과정은 한 학기 단위로 과목을 이수하고 학점을 취득할 수 있도록 재구조화되었으며, 학생의 진로와 적성에 맞춘 과목 선택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었다. 또한 주제 중심의 융합 수업을 통해 비판적 사고력, 실생활 문제 해결력, 탐구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다양한 진로 선택 과목과 융합 선택 과목이 신설·재구성되었다. 아울러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특수목적고 중심으로 운영되던 전문교과 I 을 일반고에서도 선택·이수할 수 있도록 보통교과로 통합함으로써, 학생들의 학습 선택 폭을 확대하고 교육 기회의 다양성을 강화하였다(교육부, 2022).

이처럼 고교학점제는 2022 개정 교육과정과 분리된 별도의 정책이 아니라, 해당 교육과정을 고등학교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핵심 운영 체계로 자리 잡고 있다. 고교학점제는 획일적인 고교 교육에서 벗어나 학생의 진로 설계와 성장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학생의 과목 선택권을 보장하고 교육과정을 다양화함으로써 진로와 적성에 기반한 맞춤형 책임교육을 실현하고자 하는 데 교육적 의의가 있다(고영빈, 지

은림, 2022). 이는 대학입시와 수능 중심의 획일적 교육과정, 국·영·수 위주의 암기식 수업, 줄 세우기식 상대평가로 인해 초·중등 교육 전반이 왜곡되고 사교육 의존이 심화되어 온 현실에 대한 비판적 성찰에서 출발한 정책적 전환으로 볼 수 있다(김지혜, 2020).

고교학점제는 단순히 이수 기준을 기존의 '단위'에서 '학점'으로 바꾸는 제도에 그치지 않는다. 학생의 선택을 교육과정 운영의 중심에 두는 동시에, 그 선택에 대한 학교의 책임을 강화하는 정책으로서 고등학교 운영 전반에 구조적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교사의 수업과 평가 방식, 교육과정 편성, 학습 공간 구성, 학점제 운영을 위한 학교 환경 조성 등 학교 운영의 여러 영역에서 실질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우선영, 2021; 우선영, 민윤경, 2022). 이러한 변화는 교원 수급, 교육 인프라 확충, 수업 및 평가 혁신, 그리고 대학입시제도 개선과도 긴밀히 연결되어 있으며, 단편적인 제도 도입이 아니라 종합적이고 단계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함을 시사한다(우원재, 2019; 유동훈·김은수·모영민, 2020; 홍원표·이광우·임유나, 2022; 홍후조, 2018).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적용에 따라, 현재 고1 학생들은 학점제 기반 교육과정을 이수하게 되며, 이들이 치르게 될 2028학년도 대학입시에서는 기존의 내신 9등급제 대신 5등급제가 적용된다(교육부, 2023). 그동안 9등급제는 고등학교 입학 직후부터 과도한 내신 경쟁과 선행 사교육을 유발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미국, 일본, 프랑스, 호주, 홍콩 등과 같이 상대적으로 완화된 등급 체계를 도입함으로써, 학령인구 감소라는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학교 간·과목 간 선택에 따른 불이익을 완화하고자 하였다.

한편, 내신 성적에는 전 과목 절대평가(Achievement Evaluation)를 병기하도록 하여, 학년별로 평가 방식이 달라지면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줄이고 일관된 평가 체계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는 학생의 성취 수준을 보다 명확하게 제시함과 동시에, 대학에 다양한 성적 정보를 제공하여 대학이 전형 과정에서 평가 자율성을 보다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취지를 포함하고 있다. 다음에서는 이러한 취지를 반영하여, 과목별 성적 산출 방식과 대학 제공 방식에 대해 다음 표로 정리하여 제시한다.

〈표 Ⅱ-1〉 과목별 성적 산출 및 대학 제공 방식(확정)

구 분	절대평가		상대평가	통계정보		
	원점수	성취도	석차등급	성취도별 분포비율	과목평균	수강자수
보통교과	○	A·B·C·D·E	5등급	○	○	○
사회·과학 융합선택	○	A·B·C·D·E	-	○	○	○
체육·예술/과학탐구실험	-	A·B·C	-	-	-	-
교양	-	P	-	-	-	-
전문교과	○	A·B·C·D·E	5등급	○	○	○

출처: 교육부(2023.12.27.)

3 대학입시제도의 변천 및 쟁점: 고교교육과의 선순환 관점에서

가. 대학입시제도의 변천

우리나라 대학입시제도는 해방 이후 고등교육의 문을 여는 핵심 통로이자 사회적 이동의 주요 수단으로 기능해 왔다. 동시에 대학입시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운영 방향과 수업의 실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요인으로 작동해 왔다. 즉, 대학입시는 단순한 선발 장치에 그치지 않고, 고교에서 무엇을 가르치고 어떻게 가르칠 것인지를 규정하는 실질적인 '학습 유도 장치'로 기능해 온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대학입시제도의 변화는 곧 고교 교육과정의 변화와 맞물려 왔으며, 고교-대학 간 연계 구조를 강화하거나 약화시키는 핵심 변수로 작용해 왔다.

본고사에서 학력고사, 수능 도입과 수시 확대, 학생부 중심 전형, 그리고 2028학년도 대입 개편으로 이어지는 대학입시제도의 변천은 단순한 평가 방식의 변화가 아니라, 고교 교육의 성격과 구조, 학생들의 학습 경험 전반에 영향을 미쳐 왔다. 특히 입시제도 개편은 사교육 과열, 교육 불평등, 공정성 논란과 같은 사회적 쟁점과 반복적으로 맞물리며 추진되어 왔고, 그 과정에서 고교교육과 대학입시 간의 구조적 정합성과 균형은 항상 핵심 과제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본 절에서는 고교교육과 대학입시의 상호작용이라는 관점에서 대학입시제도의 역사적 변천 과정을 다섯 시기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1) 본고사 중심 시기(1980년 7.30 조치 이전)

해방 이후부터 1980년대 초반까지 우리나라 대학입시는 대학별 본고사 중심 체제로 운영되었다. 이 시기 대학은 자체 출제한 시험을 통해 학생을 선발하였으며, 1969학년도부터는 대입예비고사를 도입하여 일정 성적 기준을 충족한 학생에게만 본고사 응시 자격을 부여하였다. 이는 대학의 선발 자율성을 보장하면서도 최소한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려는 시도였다.

그러나 본고사 중심 체제는 고교 교육과정과의 연계성이 낮았고, 학교 수업보다는 대학 입시 대비를 위한 사교육 의존을 강화하는 구조로 작동하였다. 그 결과 고교 교육은 대학 입시에 종속되고, 교육 불평등과 사교육 과열이 심화되었다. 고교에서의 학습이 대학 진학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외부 시험 준비가 교육의 중심이 되는 구조가 고착되었다는 점에서 한계를 지닌 시기였다.

2) 학력고사 중심 시기(1995년 5.31 개혁 이전)

1980년 '7·30 교육조치'는 본고사를 전면 폐지하고, 국가 단위 시험인 대입학력고사를 중심으로 한 선발 체제를 도입하였다. 이는 과열된 입시 경쟁과 사교육을 완화하고 고교 교육을 정상화하겠다는 정책적 목표에서 추진되었다. 1982학년도부터 학력고사는 대학입시의 핵심 요소로 자리 잡았고, 고교 내신 성적도 전형 요소로 포함되었다.

이 시기는 평가 기준의 일원화를 통해 입시의 예측 가능성과 형평성을 일정 부분 높였으나, 상대평가와 지식 암기 중심 평가라는 한계를 극복하지는 못했다. 고교 수업은 여전히 학력고사 대비 중심으로 운영되었고, 서술형·탐구형 수업보다는 객관식 문제 풀이 중심의 전달식 수업이 주를 이루었다. 그 결과 고교 교육과정의 질적 내실화와 자율성 확보에는 한계가 있었다.

3) 수능 도입 및 수시 확대 시기(1994년 ~ 2007년)

1995년 5·31 교육개혁은 우리나라 대학입시제도의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이 개혁은 '학교교육 정상화'와 '전형 요소의 다양화'를 핵심 기조로 하였으며, 1994학년도부터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도입되었다. 수능은 학력고사를 대체하는 전국 단위 평가로서, 고교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대학 학업 수행에 필요한 기초 역량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이 시기에는 수능, 내신, 논술이 결합된 이른바 '3각 체제'가 형성되었고, 점차 수시모집 전형이 확대되기 시작하였다. 이는 수능 중심 선발의 한계를 보완하고 학생의 다양한 잠재력을 평가하려는 시도였다. 그러나 수능의 영향력이 여전히 컸고, 출제 난이도와 변별력에 대한 논란이 반복되면서 사교육 의존 문제는 완전히 해소되지 못했다. 결과적으로 고교 현장은 수능 대비와 함께 늘어나는 수시 전형 준비라는 이중 부담을 안게 되었다.

4) 학생부 중심 전형 도입 및 확산 시기(2008년 ~ 2027년)

2008학년도 이후에는 고교 교육과정과의 연계를 강화하려는 정책적 시도가 본격화되었다. 내신 9등급제 도입, 학교 외 스펙 배제, 그리고 2015학년도 이후 학생부종합전형의 확대는 학교 교육 중심 평가를 강화하려는 흐름을 반영한 것이다. 특히 입학사정관제 도입은 학생의 학교생활 전반을 평가하려는 새로운 시도로, 이후 학생부종합전형의 기반이 되었다.

이 시기에는 교과 성적뿐 아니라 비교과 활동, 진로 활동 등 고교 내 다양한 교육활동이 평가 대상으로 포함되면서, 고교 교육은 일정 부분 변화와 확장을 경험하였다. 그러나 동시에 학생부 기재의 신뢰성 문제, 학종의 공정성 논란, 수능 중심 정시 확대 요구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특히 학종에 대한 사회적 불신이 확대되면서 고교 교육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확대하려는 정책 기조는 다시 제약을 받는 양상을 보였다.

5) 2028학년도 대입 개편 준비 시기(2028년 이후)

2028학년도 대입 개편은 고교학점제를 전제로 한 교육과정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조정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통합형 수능 체계와 고교 내신 5등급제 도입은 학생의 과목 선택과 학습 경험을 보다 폭넓게 반영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이는 고교학점제 환경에서 학생의 진로와 적성에 따른 학업 설계를 존중하고, 다양한 학습 경로를 평가하려는 방향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다만, 선택 과목 간 유불리 문제, 내신 5등급제의 변별력 논란, 교원 수급과 학교 시설 등 운영 여건의 문제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따라서 2028 대입 개편은 단순한 제도 변경이 아니라, 고교 교육과정과 평가, 대학 선발 방식 전반을 함께 고려한 종합적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6) 종합

종합하면, 우리나라 대학입시제도의 변천은 공정성과 예측 가능성 확보라는 요구와 고교 교육의 정상화라는 교육적 목표 사이의 긴장 속에서 이루어져 왔다. 입시제도는 고교 교육과정 운영과 수업 방식, 평가 형태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쳐 왔으나, 고교-대입 간 선순환 구조를 일관되게 구축하는 데에는 한계를 반복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입시제도의 변화는 단순한 선발 방식의 변화가 아니라, 국가 교육정책과 고교 교육과정의 상호작용을 반영해 온 과정이었다. 특히 학생부 중심 전형의 도입과 확대는 고교 교육의 역할과 평가 방식에 중요한 전환점을 마련한 사례로 평가할 수 있다. 향후 대학입시제도는 이러한 역사적 경험을 바탕으로, 단기적 논란을 넘어 중·장기적 관점에서 신뢰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 이상의 대학입시제도 변천 과정을 정리하면 다음 〈표 Ⅱ-2〉와 같다(이인영, 2022).

〈표 Ⅱ-2〉 대입제도 변천 과정(1945년~2025년)

학년도	시행 횟수	시기별 대입제도 유형 (학년도 기준)	특징
1945-1953	9	대학별 단독시험제	- 정부: 대입자격고사 등 일부 대입전형요소 시행 및 폐지 - 대학: 대학별고사
1954	1	대학입학 국가연합고사, 대학별고사	
1955-1961	7	대학별 단독시험제	
1962-1963	2	대학입학자격 국가고사제	
1964-1968	5	대학별 단독시험제	
1969-1980	12	대학입학 예비고사, 대학별 고사	- 정부: 대입 예비고사제 신설 *고교교육 정상화목표 - 대학: 대학별 고사
1981	1	대학입학 예비고사	- 대학 본고사 폐지 및 과외 금지 (1980.7.30. 교육 조치)
1982-1985	4	대학입학학력고사, 고교내신제	- 정부: 대학입학학력고사로 개편 - 대학: 논술(대학별고사) 신설 *입시 자율성, 사고력 제고
1986-1993	8	대학입학학력고사, 고교내신제, 논술고사	
1994-1996	3	대학수학능력시험, 고교 내신, 대학별 고사	- 정부: 대학수학능력시험 도입(대학입학학력고사 폐지)

학년도	시행 횟수	시기별 대입제도 유형 (학년도 기준)	특징
1997-2001	5	대학수학능력시험, 학교생활기록부, 대학별 고사(본고사 금지, 학교생활기록부 도입)	- 대학: 대입별 전형 *수능 성적, 논술, 학생부 내신 등 활용
2002-2007	6	대학수학능력시험(선택형 수능 도입), 학교생활기록부, 대학별 고사	
2008-2013	6	• 대학수학능력시험, 학교생활기록부, 대학별고사 〈2008 대입제도 개선안(2004.10.28.)〉 - 학생부 신뢰도 제고: 원점수 + 평균 + 표준편차 + 9등급제 - 수능 개편: 9등급제(2008학년도: 등급만 제공) - 입학사정관전형 도입, 사회배려자전형 활성화 * 대입전형 기본사항 수립 권한 : 대교협으로 이관	
2014-2027	8	• 대학수학능력시험, 학교생활기록부, 대학별고사 〈대입전형 간소화 방안(2013.10.25.)〉 - 대입전형 간소화: 수시(학생부종합, 학생부교과, 논술, 실기 위주 4개 전형)/ 정시(수능, 실기 위주 2개 전형) - 학생부종합전형 도입: 2015학년도부터 입학사정관전형 개편 - 수능 개편: 수준별 수능 폐지, 2017학년도부터 한국사 필수 - 학생부 기재 개선 - 사전예고제: 대입정책 3년 3개월전 발표, 대학별 입시계획 발표 법제화	
2028-		• 대학수학능력시험, 학교생활기록부, 대학별고사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 확정안(2023.12.27.)〉 - 통합형, 융합형 수능 과목체계 : 심화수학(미적분Ⅱ, 기하)은 수능에 미포함 - 고교 내신 체제 개편(기존 9등급제 → 5등급제)	

출처: 교육부(2018.4.11.), 교육부(2023.12.27.), 대학입시제도 국가교육회의 이송안, pp.40-42, 이인영(2022) 자료를 바탕으로 필자가 개편 내용을 재구성함.

나. 현 대입제도의 적용 시기와 구조적 한계: 고교-대입 연계 관점에서의 비판적 검토

2025년 현재 고교 3학년에게는 2026학년도 대입제도가, 고교 2학년에게는 2027학년도 대입제도가 적용된다. 이들 제도는 통합형(선택형) 수능을 축으로 한 기존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반면, 현 고교 1학년부터는 2028학년도 대입 개편안이 적용된다. 이처럼 재학생들이 학년에 따라 서로 다른 입시 체계를 경험하는 구조는 교육과정과 입시제도의 일관성을 약화시키고, 학교 현장에는 교육 운영의 불확실성과 행정적 혼선을 발생

시킨다. 특히 같은 학교 안에서 학년별로 '유리한 과목 선택'과 '대응 전략'이 달라지면, 학생의 학습 동기와 진로 설계에도 혼란이 생기고,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 자율성 역시 제약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는 고교학점제를 전제로 설계된 2022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되는 상황에서 더 분명하게 드러난다. 2026·2027학년도 수능은 여전히 선택형 구조를 유지하여 국어·수학·탐구 영역에서 과목을 선택해 응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선택형 수능은 과목별 난이도 차이와 표준점수 산출 방식의 특성 때문에, 과목 선택에 따른 점수 유불리가 구조적으로 발생한다. 이로 인해 학생들은 흥미와 적성보다 점수 전략을 우선하게 되고, 이른바 '문과 침공'이나 '과탐Ⅱ 로또'와 같은 현상이 나타나 사회적 논쟁으로도 이어져 왔다. 문제의 핵심은 단순한 점수 계산의 공정성만이 아니라, 입시의 선택 구조가 고교 교육과정의 선택을 왜곡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는 점이다. 즉, 교육과정이 요구하는 진로 기반 선택과 입시가 요구하는 전략적 선택이 충돌하면서, 고교학점제의 취지가 현장에서 충분히 실현되기 어려운 조건이 형성되고 있다.

현행 대입제도의 구조적 한계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더욱 분명히 확인된다.

첫째, 수능 중심 평가의 비교육성 문제이다. 수능은 여전히 객관식 선다형 중심으로 운영되어, 학생들이 정해진 답을 빠르고 정확히 찾는 능력에 학습을 집중하게 만든다. 그 결과 암기와 문제풀이 중심 학습이 강화되고, 창의적 사고, 탐구 역량, 비판적 분석력과 같은 고차적 인지 역량을 수업 속에서 충분히 기르기 어렵다. 특히 수시 전형에서도 수능 최저학력기준이 유지되면서, 수능은 여전히 고교 수업 운영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이 때문에 학교 수업은 교육과정의 목표보다 평가 기준에 종속되기 쉽고, 교육과정을 교육과정답게 운영하려는 시도는 현실적으로 제약을 받는다.

둘째, 수시 전형의 과도한 복잡성과 정보 비대칭이다. 현재 수시는 학생부교과, 학생부종합, 논술, 특기자 전형 등 다양한 유형으로 운영되며, 대학별로 전형이 세분화되어 있다. 일부 대학은 전형 수가 15개 이상에 이르기도 하는데, 이는 학생과 학부모에게 정보 접근의 어려움과 준비 부담을 크게 만든다. 학생부종합전형 내부에서도 사회공헌자, 지역인재, 학교생활우수자 등 세부 전형이 다층화되면서, 학교 현장에서는 진로지도와 진학지도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가 더욱 어렵다. 결국 정보와 자원이 풍부한 지역·학교가 상대적으로 유리해질 가능성이 커지고, 이는 공교육의 책무성과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를 낳는다.

셋째, 선택과목 유불리 구조의 고착이다. 선택형 수능은 형식적으로는 학생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난이도 조절과 표준점수 산출 방식 때문에 '유리한 선택'을 찾게 만드는 구조로 작동한다. 이로 인해 학생들은 진로와 흥미에 따른 선택보다 점수 유불리를 고려한 선택을 하게 되고, 교육과정이 강조하는 자율적 과목 선택과 책임 있는 학습 설계는 약화된다. 교육과정의 철학과 평가 체계가 어긋나면, 학교 교육의 방향은 왜곡되고 학생의 주체적 학습권도 충분히 보장되기 어렵다.

넷째, 내신 9등급제의 경쟁 유발과 형평성 문제이다. 현행 상대평가 방식의 9등급제는 1등급을 상위 4% 이내 학생에게만 부여하도록 되어 있어 교실 내 경쟁을 과도하게 유발한다. 특히 수강 인원이 적은 소규모 학교나 과목에서는 높은 점수를 받아도 1등급을 받기 어려운 사례가 발생하여 평가의 형평성을 흔든다. 또한 학교 간 교육 여건 차이가 성적에 그대로 반영될 수 있어 교육격차를 재생산하는 요인이 되며, 결과적으로 고교 교육과정의 다양화와 선택권 보장을 어렵게 만든다.

종합하면, 현행 대학입시제도는 수능과 내신 중심의 변별 구조, 전형의 복잡성, 선택과목 유불리 구조로 인해 고교 교육의 다양성과 자율성을 실질적으로 제약하고 있다. 교육과정은 진로 기반 선택과 통합적 사고 함양을 강조하지만, 입시는 여전히 점수 중심 경쟁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괴리는 고교-대입 간 선순환 구조 형성의 핵심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과 구조적 개선이 요구된다.

다. 2028학년도 대학입시제도의 주요내용 및 구조적 쟁점

1) 2028학년도 대학입시제도의 주요 개편 내용

2028학년도 대학입시제도 개편안은 고교학점제를 전제로 한 교육과정 변화에 대응하여, 대학입시의 핵심 구성 요소인 내신평가 체계와 대학수학능력시험 체계를 중심으로 구조적 조정을 시도한 것이 특징이다. 개편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이 제도 구성 요소별로 정리할 수 있다.

가) 내신평가 체계의 개편

먼저, 고교 내신평가 체계의 변화이다. 기존의 내신 9등급제는 5등급제로 전환되며,

대부분의 과목에서 성취수준에 따른 절대평가와 상대평가가 병기된다. 고교학점제를 전제로 설계된 2022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되는 2025학년도부터는 모든 학년과 과목에 대해 학생의 성취 수준을 A~E의 5단계 절대평가로 제시한다. 동시에 성취평가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로서, 대학 전형 활용을 위해 상대평가 등급(1~5등급)을 함께 제공하도록 하였다.

다만 사회·과학 교과의 융합선택과목, 체육·예술·교양 교과군, 과학탐구실험 과목의 경우에는 성취도만 기재하며, 상대평가 등급과 표준편차는 제공하지 않는다. 또한 과목 개설 유형, 출결 상황, 학적 변동 등 교육과정 운영 정보와 함께, 지필·수행평가 비중, 수행평가 영역, 성취도 분할 점수 등 과목별 평가 정보도 대학에 제공된다. 이는 학생부 위주 전형에서 학생의 학습 맥락과 성취 수준을 보다 입체적으로 해석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로, 학생부 평가의 질적 내실화를 목표로 한다. 구체적인 성적 산출 및 제공 방식은 〈표 Ⅱ-3〉에 제시하였다.

〈표 Ⅱ-3〉 과목별 성적 산출 및 대학 제공 방식, 대입전형자료

구 분	절대평가		상대평가	통계정보			비고 (교육과정 운영상 특이사항)	추가 자료
	원점수	성취도	석차등급	성취도별 분포비율	과목 평균	수강자 수		
보통교과	○	A·B·C·D·E	5등급	○	○	○	○	*교육과정 편성 현황 *과목별 평가 정보
사회·과학 융합선택	○	A·B·C·D·E	-	○	○	○	○	
체육·예술/ 과학탐구실험	○	A·B·C	-	-	-	-	○	
교양	○	P	-	-	-	-	○	
전문교과	○	A·B·C·D·E	5등급	○	○	○	○	

출처: 교육부(2025), 임진택 외(2024).

나) 대학수학능력시험 체계의 개편

다음으로, 수능 체계의 개편이다. 2022학년도부터 2027학년도까지 유지되던 선택형 수능 구조는 2028학년도부터 전면 개편되어, 모든 영역에서 선택과목이 폐지된다. 국어 영역은 '화법과 언어', '독서와 작문', '문학'으로 공통화되어 모든 수험생이 동일한 시험을 치르게 되며, 수학 영역 역시 '수학Ⅰ', '수학Ⅱ', '확률과 통계'를 중심으로 한 공통 출제 체계로 전환된다.

사회·과학탐구 영역은 기존처럼 여러 과목 중 선택하는 방식이 아니라, 모든 수험생이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을 응시하도록 통합 출제된다. 다만 사회와 과학은 각각 별도의 시험 시간과 점수를 부여하여, 대학이 전형 설계 과정에서 이를 탄력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국사, 영어, 제2외국어/한문 영역은 기존과 동일하게 절대평가 체제를 유지하며, 직업탐구 영역 역시 현행 방식이 유지된다.

아울러 2028학년도 대입 개편안 시안 단계에서 논란이 되었던 미적분Ⅱ와 기하 등 심화수학 과목은 수능 출제 범위에서 제외되었다. 이에 따라 심화수학 과목은 대학입시와 직접 연계되지 않고, 고교 교육과정 내에서 학생의 진로와 적성에 따라 선택·이수하는 과목으로 운영된다.

다) 평가 운영 방향 및 안정화 조치

마지막으로, 평가 운영의 방향과 제도 안정화 조치이다. 2028학년도 대입 개편안에는 사고력과 문제해결력을 보다 충실히 평가하기 위해 서·논술형 평가의 비중을 확대하겠다는 중·장기적 방향이 제시되어 있다. 이는 객관식 선다형 중심 평가의 한계를 보완하려는 정책적 의도를 반영한 것이다.

한편 EBS 연계 방식, 영어·한국사 절대평가 유지 등 일부 평가 운영 요소는 현행 체제를 유지함으로써, 제도 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최소화하고 학교 현장과 수험생의 적응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였다.

〈표 Ⅱ-4〉 2028학년도 수능 개편 확정안(요약)

적용 / 영역	현행 (2022학년도 ~ 2027학년도 수능)	개편안 (2028학년도 수능 ~)
국어	〈공통 + 2과목 중 택 1〉 • 공통: 독서, 문학 • 선택: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공통〉 • 화법과 언어, 독서와 작문, 문학
수학	〈공통 + 3과목 중 택 1〉 • 공통: 수학 Ⅰ, 수학 Ⅱ • 선택: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공통〉 • 대수, 미적분 Ⅰ, 확률과 통계
영어	〈공통〉 • 영어 Ⅰ, 영어Ⅱ	〈공통〉 • 영어 Ⅰ, 영어Ⅱ
한국사	〈공통〉 • 한국사	〈공통〉 • 한국사

영역 \ 적용		현행 (2022학년도 ~ 2027학년도 수능)	개편안 (2028학년도 수능 ~)
탐구	사회 · 과학	〈17과목 중 최대 택 2〉 • 사회(9과목): 한국지리, 세계지리, 세계사, 동아시아사, 정치와 법, 사회·문화,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 • 과학(8과목): 물리학Ⅰ, 화학Ⅰ, 생명과학Ⅰ, 지구과학Ⅰ, 물리학Ⅱ, 화학Ⅱ, 생명과학Ⅱ, 지구과학Ⅱ	〈사회: 공통〉 • 통합사회 〈과학: 공통〉 • 통합과학
	직업	〈1과목: 5과목 중 택 1 2과목: 공통 + [1과목]〉 • 공통: 성공적인 직업생활 • 선택: 농업 기초 기술, 공업 일반, 상업 경제, 수산·해운 산업 기초, 인간 발달	〈직업: 공통〉 • 성공적인 직업생활
제2외국어/ 한문		〈9과목 중 택 1〉 • 제2외국어/한문(9과목): 독일어Ⅰ, 프랑스어Ⅰ, 스페인어Ⅰ, 중국어Ⅰ, 일본어Ⅰ, 러시아어Ⅰ, 아랍어Ⅰ, 베트남어Ⅰ, 한문Ⅰ	〈9과목 중 택 1〉 • 제2외국어/한문(9과목): 독일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중국어, 일본어, 러시아어, 아랍어, 베트남어, 한문

※영어, 한국사, 제2외국어/한문 영역 절대평가

이와 같은 2028학년도 대학입시제도 개편은 내신과 수능이라는 핵심 제도 구조를 중심으로, 고교학점제 하에서의 성취 중심 교육과 학생 선택권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동시에 과목 간 유불리 완화와 대입 공정성 제고라는 정책적 목표도 함께 담고 있다. 다만 이러한 구조 개편이 실제 학교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할 것인지는 여전히 검토가 필요한 과제로 남아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다음 절에서 보다 비판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2) 현행 대학입시제도의 구조적 한계

2028학년도 대입 개편안의 의미와 한계를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이전부터 누적되어 온 현행 대학입시제도의 구조적 한계를 먼저 진단할 필요가 있다. 2025년 현재 고교 3학년과 2학년에게 적용되는 2026·2027학년도 대입제도는 선택형 수능과 상대평가 중심 내신 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는 고교 교육과정과의 정합성 측면에서 지속적인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첫째, 고교 교육과정과 대입전형 간 연계 부족이다. 고교 교육은 2022 개정 교육과정과 고교학점제를 통해 학생의 진로·적성에 따른 선택과 자기주도적 학습을 강조하고 있으나, 대학입시는 여전히 점수 중심, 변별 중심 평가 구조에 머물러 있다. 이로 인해 학교 현장에서는 교육과정이 지향하는 심화 학습과 탐구 중심 수업이 입시 준비에 밀려 충분히 구현되지 못하고 있으며, 고교 교육이 다시금 입시에 종속되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

둘째, 수능과 고교 교육과정 간의 불일치이다. 현행 수능은 객관식 5지 선다형 문항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정해진 시간 안에 단일한 정답을 빠르게 도출하는 능력을 중시한다. 이러한 평가 방식은 비판적 사고, 탐구, 협력적 문제해결 등 고교 교육과정이 강조하는 핵심 역량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 그 결과, 학교 수업은 교육과정의 목표보다 수능 대비에 맞춰 운영되는 경향이 지속되고 있으며, 이는 고교 교육 정상화를 가로막는 구조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셋째, 수시·정시 이원화 구조에 따른 학사 운영의 왜곡이다. 수시와 정시로 분리된 모집 구조는 고3 2학기 수업의 무력화, 학생 참여 저하, 출결 관리의 어려움 등 교육 현장의 파행을 반복적으로 초래해 왔다. 이러한 구조는 학생의 학습 경험을 단절시키고, 고교 교육과정의 연속적 운영을 어렵게 만드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된다.

이처럼 현행 대입제도는 고교 교육과정의 변화 방향과 구조적으로 어긋나 있으며, 이러한 한계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2028학년도 대입 개편안이 도입될 경우, 제도의 취지가 충분히 구현되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한다.

3)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안의 추가적 쟁점과 과제

현행 대입제도의 구조적 한계 위에서 추진되는 2028학년도 대입 개편안은 일정 부분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 있으나, 제도 설계와 실행 과정에서 새롭게 제기되는 쟁점 또한 적지 않다.

첫째, 내신 5등급제 병기 체계의 실제 작동 가능성이다. 절대평가와 상대평가를 병기하는 방식은 성취 중심 평가와 변별력 확보를 동시에 추구하려는 시도이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평가 부담 증가와 성적 해석의 혼란이 우려되고 있다. 특히 과목 수강 인원이 적은 학교나 선택과목 중심 교육과정에서는 등급의 신뢰성과 활용 방식에 대한 추가적

기준이 요구된다.

둘째, 통합형 수능의 변별력과 대학 활용 문제이다. 선택과목을 폐지한 통합형 수능은 과목 간 유불리를 완화할 수 있으나, 대학 입장에서는 전공 적합성 판단과 변별력 확보에 한계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대학별 평가 요소 확대, 서·논술형 평가 강화 등 보완 장치가 요구되지만, 이는 다시 대학과 학교 현장의 부담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셋째, 서·논술형 평가 확대의 실행 여건이다. 사고력 중심 평가로의 전환은 교육과정의 방향성과 부합하지만, 교사의 평가 전문성, 채점 신뢰도, 평가 시간과 행정 부담 문제를 동반한다. 충분한 연수와 지원 체계 없이 평가 방식만 전환될 경우, 현장 수용성이 낮아질 위험이 있다.

넷째, 제도 안착을 위한 준비 기간과 지원 체계의 부족이다. 고교와 대학 모두 새로운 평가 체계에 적응해야 하는 상황에서, 제도 변화의 속도에 비해 현장 지원과 인프라 구축이 충분한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

정리하면, 2028학년도 대학입시제도 개편안은 고교학점제와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취지를 반영하려는 방향성을 담고 있으나, 현행 대입제도의 구조적 한계를 완전히 해소하지 못한 채 새로운 쟁점을 추가로 안고 있다. 따라서 향후 대입제도 개편은 개별 요소의 조정에 그치기보다, 고교 교육과정과 대학입시가 상호 정합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평가 방식, 전형 구조, 일정 체계 전반을 포괄적으로 재설계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확장될 필요가 있다.

4 시사점

본 연구는 급격한 사회 변화와 교육 환경의 전환, 그리고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이라는 제도적 변화 속에서 대학입시제도가 고교 교육과정과 어떻게 관계 맺고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특히 2028학년도 대학입시제도 개편안을 중심으로 현행 대입 구조의 한계와 개편안의 추가적 쟁점을 검토한 결과, 고교학점제가 지향하는 학생 선택 중심·성장 중심 교육의 철학이 입시 체제 전반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고교교육과 대학입시가 상호 선순환하는 구조로 전환되기 위해 다음

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대학입시제도는 단순한 학생 선발 절차가 아니라, 고교 교육의 방향과 학생 학습 경험을 실질적으로 규정하는 핵심 제도라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지금까지의 대입제도는 공정성과 변별력 확보에 지나치게 초점을 맞추면서, 고교 교육과정의 취지와 수업의 실제를 제약해 온 측면이 있다. 앞으로의 대학입시는 점수 중심의 선별 장치를 넘어, 학생의 학업 과정과 성장 가능성을 정당하게 평가하는 성장 지향적 평가 체제로 재구조화될 필요가 있다.

둘째, 고교 교육과정-수업-평가-대학입시가 단절되지 않고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구조를 제도적으로 확립해야 한다. 이를 위해 대입 전형 요소와 평가 방식이 고교 교육과정의 목표와 내용에 정합적으로 연동되도록 재정렬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제도 전환 과정에서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기적 제도 변경이 아닌 중·장기 이행 원칙을 명확히 설정하고, 고교-대학-교육당국 간 협력 거버넌스를 통해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의견 수렴을 제도화해야 한다.

셋째, 수능 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재설계가 요구된다. 고교학점제 시행으로 학생의 과목 선택과 학습 경로가 다양해지는 만큼, 수능은 고교 교육과정의 성취를 왜곡하지 않는 방식으로 기능해야 한다. 단순한 점수 경쟁과 미세한 서열화를 완화하고, 고교 교육과정과의 정합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수능의 역할과 기능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이는 공통성과 기본 학업 역량을 확인하는 평가로서의 기능 강화, 또는 대학 진학을 위한 최소 학업 역량 검증 장치로의 전환 가능성까지 포함하여 검토될 수 있다.

넷째, 내신 및 학생부 평가체계는 학생의 학습 과정과 성장 경험을 드러내는 기록으로 질적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 절대평가 확대와 함께 평가 기준의 명확화, 교사 평가 전문성 지원, 학교 간 평가 신뢰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병행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내신과 학생부가 단순한 선발 자료가 아니라, 고교 교육과정 운영의 결과를 충실히 반영하는 교육적 기록으로 기능하도록 해야 한다.

다섯째, 대입 전형 운영의 단순화와 예측 가능성 제고가 필요하다. 수시·정시로 이원화된 현행 구조는 고교 학사 운영을 왜곡하고 학생과 학교에 과도한 부담을 주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모집 시기와 전형 구조의 통합을 지향하되, 전형 요소의 복잡성을 완화하고 대학의 자율성과 공공성이 균형을 이루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이는 고교 교육이 입시에 종속되지 않고 교육과정 본연의 기능을 회복하는 데 중요한 전제 조건이 된다.

종합하면, 미래형 대학입시제도는 고교교육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제한하는 장치가 아니라, 이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확장하는 교육적 플랫폼으로 기능해야 한다. 고교 교육과정의 변화가 대학입시에서 정당하게 반영될 때, 학교 교육은 비로소 입시 준비를 넘어 학생 성장 중심의 교육으로 전환될 수 있을 것이다.

Ⅲ

대학입시제도에 관한 현장 교원 인식 분석

1. 조사 개요
2. 분석 결과
3. 시사점

Ⅲ 대학입시제도에 관한 현장 교원 인식 분석

1 조사 개요

최근 고교학점제가 본격적으로 도입되면서, 고등학교 교육과정과 대학입시제도 간의 정합성과 연계성 확보가 중요한 교육정책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학생의 진로와 적성에 따른 과목 선택, 학습 경로의 다양화를 핵심으로 하는 고교학점제가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대학입시제도의 구조와 평가 방식이 함께 재설계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행 대학입시제도는 여전히 지필 중심의 단선적 평가 구조, 고교 교육과정과의 괴리, 사교육 유발, 공정성 논란 등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으며, 이는 고교 교육의 내실화와 학생의 성장 경험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2028학년도 대학입시제도는 이미 확정되어 시행을 앞두고 있는 만큼, 제도 자체의 방향성뿐 아니라 그로 인해 예상되는 학교 현장의 변화와 우려를 면밀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 2028 대입제도는 고교학점제가 전면 적용되는 시기의 입시제도라는 점에서, 교육과정 운영, 과목 선택, 평가 방식 전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현장 교원들이 인식하는 2028 대입제도의 문제점과 기대를 분석하는 것은, 제도 시행 이후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최소화하고 향후 보완 방향을 모색하는 데 중요한 출발점이 된다.

동시에 최근의 급격한 학령인구 감소와 사회 구조 변화는, 단기적 제도 대응을 넘어 2030년대 이후를 내다보는 중·장기적 관점의 대학입시제도 논의 필요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 학생 수의 지속적인 감소는 대학의 선발 방식과 역할, 대입제도의 기능 자체에 대한 재정의를 요구하고 있으며, 2028 대입제도 이후의 제도 개편 방향을 선제적으로 검토하지 않을 경우 또 다른 구조적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2033년, 2040년 이후를 상정한 미래형 대학입시제도에 대해 현장 교원들이 어떤 인식을 갖고 있으며, 어떤 변화와 지원을 요구하고 있는지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현장 교원들이 인식하는 2028학년도 대학입시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그리고 학령인구 감소 시대를 고려한 미래형 대학입시제도에 대한 수요와 기대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고자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 문항은 앞선 문헌 분석과 정책 분석, 정성적 검토를 통해 도출된 핵심 쟁점을 바탕으로 구성하였으며, 총 4개 영역(① 2028 대입제도에 대한 인식, ② 현행 대입제도 전반에 대한 인식, ③ 2033년·2040년 이후를 염두에 둔 미래형 대입제도에 대한 인식, ④ 제도 전환을 위한 정책·제도적 조건)으로 구분하여 30문항으로 설계하였다. 문항 유형은 선다형과 서술형을 병행하여, 정량적 경향과 함께 현장의 맥락적 인식을 함께 분석할 수 있도록 하였다.

조사 대상은 서울 지역 고등학교 교원으로, 온라인 설문 방식으로 진행하여 참여자의 익명성과 자발성을 보장하였다. 설문조사는 2025년 6월 9일(월)부터 6월 13일(금)까지 실시되었으며, 총 294명이 응답하였다. 본 장에서는 수집된 설문 결과를 토대로 통계 분석과 함께 주요 쟁점에 대한 해석을 제시하고, 이를 향후 대학입시제도 개선 논의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다만 이러한 분석 결과를 해석하는 과정에서는, 설문조사 설계의 특성과 범위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의 설문조사 결과를 해석함에 있어 몇 가지 한계를 함께 짚고자 한다. 우선, 본 설문조사는 교원의 성별, 연령, 교직 경력, 학교 유형(일반고·특목고·자사고 등), 담당 교과 등 개별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별도로 수집하지 않았다. 이는 조사 설계 단계에서 본 연구의 목적이 특정 교원 집단 간 인식 차이를 비교·분석하는 데 있기보다, 고교 현장 교원 전반이 인식하는 대학입시제도와 미래형 대입제도에 대한 공통적 문제의식과 방향성을 파악하는 데 초점을 두었음을 고려한 판단에 따른 것이다.

특히 본 연구는 대학입시제도가 고교 교육과정 운영 전반에 미치는 구조적 영향과 제도 개선에 대한 현장의 총체적 인식을 탐색하는 데 초점을 두었기 때문에, 응답자의 배경 변인에 따른 세분화 분석보다는 제도에 대한 인식의 경향과 쟁점 도출을 우선하였다. 이 과정에서 응답자의 익명성과 응답 부담을 최소화하고, 정책 쟁점에 대한 솔직한 의견 수렴을 확보하고자 인적 배경 정보 수집을 제한하였다.

다만 이러한 설계 선택으로 인해, 설문 결과를 교원 집단 내 세부 특성별 차이(예: 교과별, 경력별, 학교 유형별 인식 차이)로 일반화하거나 비교 분석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장의 분석 결과는 '서울 지역 고등학교 교원 집단의 전반적 인식 경향'을 중심으로 해석되어야 하며, 향후 후속 연구에서는 응답자 특성을 포함한 보다 정교한 설계와 분석을 통해 인식 차이를 심층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2 분석 결과

가. 2028학년도 대입 개편안에 관한 인식

1) 2028학년도 대입 개편안이 고교 교육과정 운영에 끼치는 영향

2028학년도 대학입시제도 개편안이 수업 운영과 학사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묻는 질문에 대해, 응답 교원들은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인식이 우세한 경향을 보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체 응답자 294명 중 '크게 저해할 것이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40.48%(119명)로 가장 높았으며, 여기에 '약간 저해할 것이다'(23.13%, 68명)를 포함할 경우, 전체의 63.61%가 2028 대입 개편안이 고교 교육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할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약간은 도움이 될 것이다'(13.95%, 41명)와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2.72%, 8명)를 합한 긍정 응답은 16.67%에 그쳤으며, '별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는 응답은 19.73%(58명)로 나타났다.

이러한 응답 분포는 2028 대입 개편안이 고교학점제와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취지를 일정 부분 반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현장에서는 제도 변화가 교육과정 운영의 안정성이나 수업의 질 개선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보다, 오히려 혼란과 부담을 초래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더 크게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 Ⅲ-1〉 2028학년도 대입 개편안이 고교 교육과정 운영에 끼치는 영향에 대한 선택형 문항 응답 결과

응답내용	빈도(명)	비율(%)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8	2.72
약간은 도움이 될 것이다	41	13.95
별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58	19.73
약간은 저해할 것이다	68	23.13
크게 저해할 것이다	119	40.48
전체	294	100

추가 의견 분석 결과, 2028학년도 대입 개편안에 대해 일부 교원들은 제한적인 긍정 효과를 기대하고 있으나, 전반적으로는 부정적 인식이 우세하게 나타났다. 긍정 응답의 경우, 내신 성적 외에 교과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등 다양한 요소가 반영되면서 학생들이 수업에 보다 집중하고 학습 내용을 깊이 이해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또한 학령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수능 상위 4% 기준을 유지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과도하다는 인식도 일부 확인되었다.

반면, 부정 응답에서는 공교육 약화와 수업 동기 저하에 대한 우려가 가장 두드러졌다. 수능 선택과목 폐지와 5등급제 병기로 인해 특히 2·3학년에서 수업 집중도가 떨어질 수 있으며, 수능과 직접 연계되지 않는 과목에 대한 학습 의욕이 약화될 가능성이 지적되었다. 아울러 상대평가 5등급제 자체는 일정 부분 수용 가능하나, 이를 둘러싼 평가제도 전반에 대해서는 실효성과 공정성에 대한 불신이 강하게 나타났다.

또한 변별력 약화로 인해 새로운 형태의 입시제도나 본고사 부활 가능성을 우려하는 시각도 확인되었으며, 이는 제도 개편이 오히려 입시 구조를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다는 인식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와 함께 5등급 병기 체계가 학생의 과목 선택 자유를 제한하고, 교사의 평가 부담과 행정 업무를 가중시킬 수 있다는 점 역시 주요한 문제로 제기되었다.

종합하면, 교원들은 2028 대입 개편안이 일부 학습 방식의 변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제도 설계와 실행 과정에서 고교학점제의 취지와 충돌하고 공교육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보다 강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표 Ⅲ-1-1〉 2028학년도 대입 개편안이 고교 교육과정 운영에 끼치는 영향에 대한 추가 의견 결과

(긍정) 약간은 도움이 될 것이다		
유형	핵심 내용	해당 문장
대입전형 요소 변화에 따른 학습 방식	내신 외 세특 등 다양한 요소 반영으로 수업에 더 집중하고 깊이 이해하게 됨	내신 성적 위주보다 교과 세특 사항 등 기타 요소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므로 수업을 보다 깊이 이해하고 공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임
정책 수용성 및 현실성	학생수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수능 4% 정원 제한은 과도함	학생 수가 줄어드는데 4%는 가혹함

(부정) 약간은 저해할 것이다 / 크게 저해할 것이다		
유형	핵심 내용	해당 문장
공교육 약화 및 수업 동기 저하	수능 선택과목 폐지 및 5등급제 병기로 인해 학생 수업 집중도 저하 및 공교육 약화 우려	수능 선택과목 폐지로 인해 2, 3학년 수업 집중도 하락 우려
평가제도에 대한 반감 및 불신	상대평가 5등급제는 괜찮지만, 나머지는 도움이 안 된다는 인식	상대평가 5등급제는 괜찮지만 나머지는 도움이 안 됨
학생의 과목 선택권 및 다양성 저해	변별력 약화로 새로운 입시제도 또는 본고사 부활 우려	변별력이 떨어지면 다른 방식의 입시가 등장할 것
정책 설계 및 실행상의 문제	수능과 무관한 과목에 대한 학습 의욕 저하	수능과목이 아니라면 수업을 듣고자 하는 의도가 약함
교사의 평가부담 및 행정 과잉	5등급 병기 시 학생의 과목 선택 자유가 제한될 수 있음	5등급 병기로 학생 선택권 제한 우려

2) 2028학년도 대입 개편안이 고교학점제 운영에 끼치는 영향

2028학년도 대학입시제도 개편안이 2022 개정 교육과정, 특히 고교학점제 운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묻는 질문에서도, 교원들의 인식은 전반적으로 부정적 응답이 우세한 양상을 보였다. 전체 응답자 294명 가운데 '크게 저해할 것이다'라는 응답이 40.14%(118명)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여기에 '약간 저해할 것이다'(21.77%, 64명)를 포함할 경우, 전체의 61.91%가 2028 대입 개편안이 고교학점제 운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약간은 도움이 될 것이다'(11.56%, 34명)와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2.38%, 7명)를 합한 긍정 응답은 13.94%에 그쳤으며, '별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라는 중립적 응답은 24.15%(71명)로 나타났다. 이는 고교학점제의 취지와 구조가 대입제도 변화와 직접적으로 충돌하거나 긴장 관계에 놓여 있다고 인식하는 교원이 다수임을 보여준다.

〈표 Ⅲ-2〉 2028학년도 대입 개편안이 고교학점제 운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선택형 문항 응답 결과

응답내용	빈도(명)	비율(%)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7	2.38
약간은 도움이 될 것이다	34	11.56
별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71	24.15
약간은 저해할 것이다	64	21.77
크게 저해할 것이다	118	40.14
전체	294	100

2028학년도 대입 개편안이 고교학점제 운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추가 의견을 분석한 결과, 긍정·중립·부정 인식이 혼재되어 있으나, 전반적으로는 제도 간 구조적 충돌에 대한 우려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긍정적 응답에서는 공통과목 중심의 수능 체계가 문·이과 구분을 완화하고 과목별 중요성을 높임으로써, 고교학점제 하에서 각 교과 수업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과 집중도를 제고할 수 있다는 기대가 일부 확인되었다. 또한 수능과 직접 연계되지 않는 과목 선택이 가능해지면서, 형식적으로나마 과목 선택의 자유가 확대될 수 있다는 인식도 나타났다.

반면, 중립 응답에서는 대학입시와 고교학점제가 사실상 별개의 체계로 운영되고 있다는 인식이 확인되었다. 이들은 수능과 대입 구조가 고교학점제의 실제 운영 방식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보았으며, 특히 일반고 현장에서는 수시 중심 대응이 지속되는 한 대입 개편의 파급력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현실 인식을 드러냈다.

부정적 응답에서는 고교학점제의 핵심 취지인 선택권과 다양성이 대입 구조와 충돌하고 있다는 비판이 집중적으로 제기되었다. 수능 중심의 대입 체계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사회·과학 탐구 선택과목이 폐지되거나 축소될 경우, 고교학점제가 지향하는 과목 선택의 의미가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특히 5등급제 병기 체계 하에서 학생들이 석차등급보다 수강자 수와 성적 분포가 유리한 과목으로 몰리게 되면서, 과목 선택이 교육적 관심이 아닌 전략적 판단에 의해 왜곡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아울러 절대평가와 상대평가를 병용하는 현행 설계가 고교학점제와 구조적으로 충돌한다는 인식도 강하게 나타났다. 이는 평가체계에 대한 현장의 혼란과 불신으로 이어지

고 있으며, 학교별 교육 여건 차이에 따라 고교학점제 적응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교육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되었다. 일부 교원들은 고교학점제가 제도적으로는 선택과 다양성을 강조하지만, 실제 운영에서는 수능 과목 중심으로 회귀할 가능성이 높다고 인식하며, 정책 전반에 대한 신뢰 부족을 드러냈다.

종합하면, 교원들은 2028 대입 개편안이 고교학점제 운영에 일정한 긍정적 가능성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대입과 학점제가 각기 다른 논리로 운영되는 구조가 유지될 경우 고교학점제의 교육적 취지가 실질적으로 구현되기 어렵다는 점에 대해 강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표 Ⅲ-2-1〉 2028학년도 대입 개편안이 고교학점제 운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추가 의견 결과

(긍정)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 약간은 도움이 될 것이다		
유형	핵심 내용	해당 문장
고교학점제 운영 변화에 대한 기대	공통과목 중심 체계로 과목별 중요성이 강화되어 수업 집중도 제고 기대	“문, 이과 구분없는 공통 과목 이수로 각 과목별 중요성이 높아 고교학점제 운영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됨”
과목 선택의 자율성 확대	수능과 무관한 과목 선택으로 형식적 자유 확대 인식	“무엇을 선택하든 수능에 안나오므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을 것 같음”
(중립) 별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유형	핵심 내용	해당 문장
대입과 고교학점제의 분리 인식	수능·대입이 고교학점제 운영에 실질적 영향 미미	“수능과 내신은 거의 따로 움직인다고 생각합니다.”
(부정) 고교학점제 운영을 저해할 것이다		
유형	핵심 내용	해당 문장
수능 중심 대입 구조와의 충돌	선택권·다양성 취지 약화	“수능과 내신은 거의 따로 움직인다고 생각합니다.” “일반고에서는 정시보다는 수시에 총력을 다하기 때문에 대입확정안이 고교학점제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할 것으로 예상” “고교학점제의 선택권 강조와 사회/과학탐구 선택과목 폐지는 상충함”

(부정) 고교학점제 운영을 저해할 것이다		
유형	핵심 내용	해당 문장
과목 선택의 왜곡	수강자 수 중심 전략적 선택	“5등급제가 되면서 각 과목별 석차등급보다 수강자수, 과목평균, 성취비율, 세특이 훨씬 중요해지니 수강자수 많은 과목으로 몰림”
평가체계 설계의 구조적 충돌	절대·상대평가 병용에 대한 혼란	“고교 학점제와 상대평가는 상극인 최악의 조합임”
교육 불평등 구조 심화	교육여건 차이에 따른 제도 적응 격차	“교육과정 상에서 다양화가 불가능한 학교는 제외한, 일반계고 및 자사고 등만 적응 가능”
제도 전반에 대한 불신	대입·학점제의 이원 운영	“선택을 많이 하는 것이 고교학점제 목적인데 그림만 그렇게 그려놓고 실제 운영은 수능 과목 위주가 될 것이다”

3) 2028학년도 대입에서의 수능 영향력

2028학년도 대학입시 개편 확정안에 따라 향후 대입에서 수능의 영향력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에 대한 교원 인식을 분석한 결과, 수능 영향력의 증가와 감소에 대한 전망이 비교적 팽팽하게 엇갈리는 양상을 보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현재보다 약간은 감소할 것’이라는 응답이 76명(25.85%)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현재보다 크게 증가할 것’이 69명(23.47%), ‘현재와 비슷할 것’이 63명(21.43%), ‘현재보다 약간은 증가할 것’이 57명(19.39%), ‘현재보다 크게 감소할 것’이 29명(9.86%)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종합하면, 수능 영향력이 증가할 것이라는 응답(42.86%)과 감소할 것이라는 응답(35.71%)이 모두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현행과 유사할 것이라는 인식도 일정 수준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다.

〈표 Ⅲ-3〉 2028학년도 대입에서의 수능 영향력에 대한 선택형 응답 결과

응답내용	빈도(명)	비율(%)
현재보다 크게 증가할 것이다	69	23.47
현재보다 약간은 증가할 것이다	57	19.39
현재와 비슷할 것이다	63	21.43
현재보다 약간은 감소할 것이다	76	25.85
현재보다 크게 감소할 것이다	29	9.86
전체	294	100

추가 의견을 통해 그 이유를 살펴본 결과, 먼저 수능 영향력이 증가할 것이라고 인식한 교원들은 내신 평가 체계 변화에 주목하고 있었다. 내신이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단순화되면서 변별력이 약화될 경우, 이를 보완하기 위해 수능이 상대적으로 더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작동할 수밖에 없다는 인식이 다수 제기되었다. 특히 “내신의 의미가 약해지니 수능의 영향력이 커질 수밖에 없다”, “내신 5등급제로는 변별이 어려워 수능이 다시 중요해질 것”과 같은 응답은, 평가 구조 변화가 수능 의존도를 오히려 강화할 수 있다는 현장의 우려를 반영한다. 또한 대학별로 학생부 중심 선발을 강화하려는 흐름과 수능 중심 선발을 유지하려는 흐름이 병존하면서, 결과적으로 수능의 영향력이 다시 확대될 가능성도 함께 언급되었다.

반면, 수능 영향력이 현재와 비슷할 것이라고 응답한 교원들은 대입 구조 전반에 대한 불신과 회의적 인식을 드러냈다. 이들은 “어차피 대입은 대학 자율에 따라 운영되기 때문에 제도 변화의 실질적 의미가 크지 않다”고 보았으며, 제도 개편에도 불구하고 대학별 전형 운영 방식에 따라 수능의 위상이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인식하였다. 또한 정시에서 학생부 반영이 확대되더라도, 내신 5등급제의 낮은 변별력을 보완하는 수단으로 수능 점수가 일정 수준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결과적으로 수능의 영향력이 현재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는 견해도 제시되었다.

수능 영향력이 감소할 것이라고 응답한 교원들은 수능 자체의 변별력 약화 가능성에 주목하였다. 통합사회·통합과학 등 공통 과목 중심의 출제 체계는 우수 학생을 효과적으로 변별하기 어렵고, 특히 이공계 계열에서 요구되는 심화 수학 역량을 평가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대학이 수능 성적을 신뢰하지 않게 될 것이라는 의견이 다수 제기되었

다. 이에 따라 정시 전형에서도 학생부 교과 성적이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과 같은 정성적 요소의 반영 비중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으며, 수능은 점차 최소 학업역량 확인 수단으로 기능이 축소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타났다. 일부 응답에서는 탐구 영역이 1학년 수준 과목으로 제한될 경우, 대입에서 수능의 실질적 영향력이 구조적으로 약화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제기되었다.

종합하면, 교원들은 2028학년도 대입 개편 이후 수능의 영향력에 대해 일관된 전망을 공유하고 있지 않으며, 내신 평가 체계 변화, 대학의 선발 전략, 수능의 변별력 유지 여부에 따라 수능의 위상이 강화될 수도, 약화될 수도 있는 불확실한 국면에 놓여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이는 수능의 역할과 기능이 명확하게 재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도 개편이 추진될 경우, 현장에서는 오히려 수능 영향력에 대한 혼란과 상반된 대응 전략이 나타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표 Ⅲ-3-1〉 2028학년도 대입에서의 수능 영향력에 대한 추가 의견 결과

(긍정) 현재보다 크게 증가할 것이다 / 현재보다 약간은 증가할 것이다		
유형	핵심 내용	해당 문장
수능 영향력 증가	- 내신의 의미 약화로 인해 수능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음 - 내신 등급 체계가 5등급으로 단순화됨에 따라 수능의 영향력이 커질 수 있음	- 내신의 의미가 약해지니 수능의 영향력이 더 커짐 - 내신 등급 개정과 등급 간 조정이 완화되어 변별력 판단이 어려운 점을 감안한다면 수능영향력은 증가할 것으로 보임 - 내신이 5등급이니 수능의 영향력이 커진다고 봄
수능/내신 간 학교별 불균형	생활기록부 중심 평가를 원하는 학교와 수능 중심 운영을 원하는 학교가 병존할 가능성	생기부를 더욱 중시하겠지만 학교별 격차로 수능을 보고자 하는 학교도 많을 것으로 예상됨
(중립) 현재와 비슷할 것이다		
유형	핵심 내용	해당 문장
대학 중심의 대입 구조 비판	대학 자율성이 너무 커 대입 제도 변화의 실질적 의미가 없다는 불신	어차피 대입은 대학에서 마음대로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미 없음
수능 영향력 회복 가능성	정시에서 학생부를 반영하더라도, 내신 5등급 체계의 낮은 변별력을 보완하기 위해 수능 점수가 실질적 변별 도구가 될 것	정시에서 학생부를 반영함으로서 수능의 영향력은 줄어들겠지만 내신등급이 5등급으로 바뀌면서 떨어진 변별력이 수능 점수로 변별될 것 같음

(부정) 현재보다 약간은 감소할 것이다 / 현재보다 크게 감소할 것이다		
유형	핵심 내용	해당 문장
정시에서 학생부 반영 확대 가능성	수능의 변별력 하락으로 인해 정시에서도 학생부 교과 반영 비중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 정시에서 학생부 교과 영역 평가 비중 확대 예상 실질 반영율을 높여야 함 - 변별력 하락으로 정시 학생부 반영 대학 증가 예측
수능의 변별력 약화	통합사회·통합과학 등 공통 과목 중심 체계로 변별력이 약화되어 우수 학생 선별에 어려움 발생 현행 수능 체계로는 대학이 학생 우수성을 판단하기 어려움	- 통합사회 과학은 유의미한 변별력을 갖추기 어려움 - 변별력이 떨어짐 - 현 수능대로라면 대학 입장에서 학생의 우수성을 판단할 근거가 희박해질 것임
수능 평가에 대한 대학의 불신	선택과목 폐지로 인해 이공계 등 특정 계열에서 수능으로 역량을 판단하기 어려워지고 신뢰도 저하	수학 영역 선택과목 폐지로 실질적으로 이공계 수학을 평가할 수 없게 되어서, 이공계에서는 수능을 믿지 않을 것임
학생부 요소의 중요성 확대	수능만으로 학생 우수성 파악이 어려워져, 세특 등 정성적 요소가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	수능 성적도 물론 중요하지만, 생활기록부 성적과 세특 내용도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됨
수능 영향력의 구조적 약화	탐구 과목 범위 축소로 수능의 실질적 영향력 하락	수능 탐구영역도 1학년 과목으로만 제한하여, 대입에서 영향력이 없어질 것임

4) 2028학년도 대입 이후의 대입제도 개편 필요성

고교 교육 환경의 변화와 중·장기적 미래 전망을 고려할 때, 2028학년도 대입 시행 이후에도 추가적인 대입제도 개편이 필요한지에 대한 교원 인식을 분석한 결과, 대다수 교원이 추가 개편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택형 문항 분석 결과, '매우 필요하다'는 응답이 147명(50.00%)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필요하다'는 응답도 119명(40.48%)에 달했다. 즉, 전체 응답자의 90.48%가 2028 대입 이후에도 대입제도의 추가 개편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반면, '현행 유지'는 18명(6.12%)에 그쳤으며, '필요하지 않다' 또는 '전혀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각각 5명(1.70%)으로 극히 소수에 불과하였다. 이는 2028학년도 대입 개편안이 하나의 종착점이 아니라, 추가 논의와 조정이 불가피한 과도기적 제도로 인식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표 Ⅲ-4〉 2028학년도 대입 이후의 대입제도 개편 필요성에 대한 선택형 응답 결과

응답내용	빈도(명)	비율(%)
전혀 필요하지 않음	5	1.70
필요하지 않음	5	1.70
현행 유지	18	6.12
필요함	119	40.48
매우 필요함	147	50.00
전체	294	100

추가 의견을 통해 이러한 인식의 배경을 살펴본 결과, 먼저 '현행 유지'를 선택한 교원들은 제도 자체에 대한 적극적 지지라기보다, 유보적 태도와 불확실성 인식을 드러냈다. 이들은 "실제로 시행해 보기 전에는 효과를 판단하기 어렵다", "해봐야 알 수 있다"는 표현을 통해, 제도 평가를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즉, 현행 유지 응답은 제도에 대한 신뢰보다는 조기 개편에 대한 신중론에 가까운 성격을 지닌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 '필요하다' 또는 '매우 필요하다'고 응답한 교원들의 서술형 의견에서는 보다 분명한 문제의식과 개편 요구가 확인되었다. 첫째, 2028 대입제도 자체에 대한 전면적 비판이 다수 제기되었다. 일부 교원들은 현 개편안을 "퇴행적", "실패작", "부작용이 예상되는 제도"로 평가하며, 즉각적인 수정 또는 재설계를 요구하였다. 특히 고교 1학년부터 적용되는 제도의 파급력에 비해 충분한 검증과 사회적 합의가 부족하다는 점이 반복적으로 언급되었다.

둘째, 2022 개정 교육과정 및 고교학점제와 대입제도 간의 구조적 불일치에 대한 문제 제기가 두드러졌다. 교원들은 교육과정은 선택과 다양성, 학생 주도 학습을 강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입제도는 여전히 정시·수시 이원 구조, 탐구과목 설계 문제, 과목 간 불균형 등으로 교육과정 운영을 제약하고 있다고 인식하였다. 이에 따라 교육과정-수업-평가-입시가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대입 구조 전반의 재정렬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제기되었다.

셋째, 학교와 대학의 자율성 확대를 강조하는 의견도 다수 나타났다. 일부 교원들은

중앙정부 주도의 획일적 제도 설계보다는, 고교의 교육과정 운영 자율성과 대학의 선발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보았다. 이는 단일한 제도 해법보다는, 학교와 대학이 각자의 여건과 교육 목표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구조적 여지를 확대해야 한다는 인식으로 해석된다.

넷째, 수능과 내신의 기능 재조정 및 공정성 문제에 대한 요구가 뚜렷했다. 수능의 자격고사화, 내신의 신뢰 회복, 5등급 체제에서의 변별력 문제,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의 활용 방식 등 평가체계 전반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이 반복적으로 언급되었다. 이는 단순한 전형 방식 조정보다는, 평가의 목적과 기능을 근본적으로 재정의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으로 연결된다.

마지막으로, 일부 교원들은 제도 개편 이전에 사회적 인식과 학교 현장의 수용성 확보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문화가 먼저”,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현장 여건과 교사 피로도가 고려되어야 한다”는 응답은, 잦은 제도 변경이 오히려 교육현장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다.

종합하면, 교원들은 2028학년도 대입 개편 이후에도 대입제도에 대한 추가 개편이 필요하다는 데 강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으며, 그 요구는 단기적 미세 조정이 아니라 교육과정과의 정합성, 평가체계의 재설계, 자율성과 공정성의 균형이라는 구조적 수준의 개편을 지향하고 있다. 이는 향후 대입제도 논의가 2028 체제의 안정적 운영을 넘어, 2033년·2040년 이후 학령인구 감소와 교육환경 변화를 고려한 장기적 관점에서 재구성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표 Ⅲ-4-1〉 2028학년도 대입 이후의 대입제도 개편 필요성에 대한 추가 의견 결과

(중립) 현행 유지		
유형	핵심 내용	해당 문장
유보적 입장 / 제도 효과 불확실성 인식	제도의 효과나 문제점은 실제 시행 이후에야 판단 가능하므로 현재로선 섣불리 개편 필요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태도	해봐야 알 것
(긍정) 필요함 / 매우 필요함		
유형	핵심 내용	대표 키워드 및 해당 문장
제도 전면 개편 요구	2028 대입제도에 대한 전면적 비판, 즉각적 수정 또는 폐기 주장	‘퇴행, 실패작, 고쳐야 함, 부작용 예상, 현 고1부터 적용 등

(긍정) 필요함 / 매우 필요함		
유형	핵심 내용	대표 키워드 및 해당 문장
교육과정-대입 연계 개선	2022 개정 교육과정과 2028 대입제도의 정합성 부족 지적 및 구조적 개편 요구	엇박자, 불일치, 정시/수시 통합, 탐구과목 문제, 과목 간 불균형 등
학교·대학 자율성 확대	제도보다는 고교와 대학의 자율성 강화 및 운영권 이양 강조	자율성, 학교 재량, 대학 선발권, 중앙 통제 축소 등
수능·내신 기능 조정 및 공정성 문제	수능의 자격고사화, 내신의 신뢰 회복, 변별력 문제 등 평가방식에 대한 개선 요구	절대평가, 자격시험, 세특, 변별력 부족, 5등급 체제 우려 등
문화·인식·현장 기반 개혁	제도 변경보다 사회적 인식, 문화, 현장 수용성 확보가 먼저라는 관점	“문화가 먼저”, “인식 전환”, “해봐야 안다”, “현장 여건”, “교사 피로도” 등

5) 2028학년도 대입에 관한 추가 의견

2028학년도 대학입시제도의 정책적 타당성과 고교 교육과정과의 연계성에 대해 자유 서술형 응답을 분석한 결과, 교원들은 제도의 세부 설계뿐 아니라 대입과 고교교육 전반의 구조적 정합성에 대해 폭넓은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응답 내용은 크게 계열 간 형평성, 제도 간 불일치, 평가체계에 대한 불신, 현장 적용의 현실성, 그리고 교육정책 전반에 대한 신뢰 문제로 범주화될 수 있다.

첫째, 통합형 수능 구조가 이과 중심으로 설계되었다는 인식이 강하게 나타났다. 다수의 교원들은 통합 수능이 수학·과학 역량을 상대적으로 강조하는 방식으로 구성될 경우, 문과 계열 학생의 학습 동기 저하와 참여 축소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하였다. 이는 단순한 계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계열 간 위계가 재생산되고 문과 계열의 교육적 위상이 약화될 수 있다는 문제의식으로 이어지고 있다.

둘째, 고교학점제와 수능·대입제도 간의 방향성 불일치에 대한 지적이 반복적으로 제기되었다. 고교학점제가 학생의 선택과 다양성을 핵심 가치로 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능 선택과목 폐지와 대입 중심 운영 구조는 오히려 학교 교육과 입시 준비 간의 단절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인식이 확인되었다. 이로 인해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이 제한되고, 교실 수업이 다시 입시 대응 중심으로 회귀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나타났다.

셋째, 평가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 요구가 두드러졌다. 교원들은 절대평가 도입 확대, 내신 평가 구조 개선, 성취 중심 평가로의 전환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하였다. 특히 현행 상대평가와 절대평가의 혼재 구조가 학생과 교사 모두에게 혼란을 초래하고 있으며, 공정성과 실효성을 동시에 확보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공유되고 있었다.

넷째, 선택과목 제도의 실질적 제약 문제도 중요한 쟁점으로 나타났다. 제도적으로는 과목 선택이 확대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수능 포함 여부와 평가 방식에 따라 특정 과목으로 수강이 집중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는 학생들이 자신의 흥미와 진로보다는 유리한 평가 조건을 기준으로 과목을 선택하게 만들며, 고교학점제가 지향하는 선택의 의미를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다섯째, 통합사회·통합과학 등 통합 과목에 대한 신뢰 부족도 확인되었다. 교원들은 통합 과목의 난이도 조절, 출제 기준의 명확성, 평가의 신뢰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였으며, 이러한 불확실성이 누적될 경우 수능 자체에 대한 신뢰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여섯째, 고교 유형과 지역별 여건에 따른 적용 현실의 격차가 반복적으로 언급되었다. 일반계고, 자사고와 달리 특성화고 등 일부 학교 유형에서는 교육과정 다양화 자체가 어려워 고교학점제의 실질적 운영이 제한된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이는 제도 설계가 모든 학교 현장의 조건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교육 격차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로 연결된다.

마지막으로, 잦은 제도 변경과 현장 의견 반영 부족으로 인해 교육정책 전반에 대한 신뢰가 저하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정권이나 정책 기조 변화에 따라 대입제도가 반복적으로 수정되는 현실 속에서, 학생과 학교가 감당해야 하는 불확실성과 피로도가 누적되고 있다는 인식이 확인되었다. 일부 교원들은 제도 개선의 방향성보다도 정책의 일관성과 안정성이 먼저 확보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종합하면, 2028학년도 대입제도에 대한 추가 의견은 개별 전형 요소에 대한 평가를 넘어, 고교학점제와 대입제도가 동일한 교육 철학과 방향성을 공유하고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 질문으로 수렴된다. 교원들은 고교학점제의 실질적 안착을 위해 수능의 자격고사화, 대입 구조의 단순화, 학교·대학의 자율성 확대 등 보다 구조적인 개편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으며, 동시에 정책 설계 과정에서 현장과의 신뢰 회복이 필수적임을 시사하고 있다.

〈표 Ⅲ-5〉 2028학년도 대입에 관한 추가 의견 결과

유형	핵심 내용	해당 문장(요약)
계열 불균형 우려	통합 수능이 이과 중심으로 설계되어 문과 계열 학생의 학습 동기와 참여를 저해할 수 있음	통합 수능이 이과 강세를 부추겨 문과 하락 가속 우려
제도 간 불일치	고교학점제의 취지와 수능·대입 제도의 방향이 상충되어 혼란을 초래함	고교학점제 자체가 문제가 많은 정책임. 수능 선택과목 폐지까지 하면 문제가 있음
평가방식 개선 요구	절대평가 도입, 내신 평가 구조 개선 등 평가 방식 전반에 대한 개선 요구	모두 절대평가를 해야 함
선택권 제약	선택과목 제도의 본래 취지와 달리, 실질적으로 수능 중심 운영으로 인해 선택권이 제한됨	모든 과목에서 상대평가를 하며 자유롭게 선택하지 못하게 하였음
교육과정-입시 괴리	교육과정과 입시 제도 간의 연계 부족으로 학교 수업과 입시 준비의 단절 발생	교육과정의 취지와 수능이 전혀 맞지 않음
통합과목 불신	통합사회·통합과학 등 통합 과목의 난이도, 명확성, 출제 기준에 대한 신뢰 부족	통합사회 통합과학, 수학 영역은 재고하면 좋겠음
과목 간 위계 발생	수능 포함 여부에 따라 특정 과목으로 수강 집중 현상이 나타남	- 수강자 수가 많은 과목으로 몰림 - 더 좋은 석차·등급을 위한 것이 많음
적용 현실 격차	고교 유형, 지역, 학교 여건에 따라 고교학점제 운영 가능성에 차이가 큼	특성화고 등은 교육과정 다양화 어려워 고교학점제 실질 적용이 불가함
입시제도 개편 요구	고교학점제 실현을 위해 수능 자격고사화, 대입 제도 전면 개편 필요 주장	수능은 자격고사화 되어야 하며, 대학 자율 선발권 확대 필요
교육정책 신뢰 하락	제도 변경의 일관성 부족, 현장 의견 반영 부족 등으로 정책에 대한 불신 확산	정권 바뀔 때마다 제도 바뀌면 아이들이 불쌍함

나. 대입제도에 관한 인식

1) 대입이 추구해야 될 가치

대입이 추구해야 할 핵심 가치에 대한 교원 인식을 1·2·3순위 응답을 종합하여 분석한 결과, 교원들은 공정성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인식하면서도, 단편적 성적 중심 선발

을 넘어 역량과 성장 가능성을 평가하는 방향으로 대입제도가 전환될 필요성을 동시에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1순위 응답에서 교원들은 '선발의 공정성'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꼽았다(39.12%). 이는 대입제도가 사회적으로 신뢰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여전히 강함을 보여준다. 그 다음으로는 '단편적인 성적이 아닌 역량의 평가 또는 성장 가능성의 평가'가 24.15%로 나타나, 공정성 다음으로 대입 평가의 질적 전환에 대한 요구가 높게 나타났다. 이어 '대학교육의 적격자 선발'(18.03%)이 뒤를 이었으며, 이는 대입이 단순한 서열화가 아니라 대학 수학 능력에 적합한 학생을 선발하는 제도로 기능해야 한다는 인식을 반영한다.

〈표 Ⅲ-6〉 대입이 추구해야 될 가치에 관한 선택형 문항 결과(1순위)

응답내용	빈도(명)	비율(%)
선발의 공정성	115	39.12
변별	13	4.42
대학교육의 적격자 선발	53	18.03
단편적인 성적이 아닌 역량의 평가, 또는 성장 가능성의 평가	71	24.15
학생 각자의 경험과 진로 존중	14	4.76
초중고 교육과정 이수 및 성취도 확인	25	8.50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통합	3	1.02
전체	294	100

2순위 응답에서는 '역량 및 성장 가능성의 평가'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21.09%). 이는 1순위에서 공정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되, 그 다음 단계에서는 대입 평가의 내용과 방식이 변화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강하게 드러난 결과로 해석된다. 그 다음으로는 '대학교육의 적격자 선발'(18.37%), '선발의 공정성'과 '변별'(각 15.31%)이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공정성과 변별 기능을 완전히 배제하기보다는 일정 수준 유지해야 한다는 현실적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Ⅲ-7〉 대입이 추구해야 될 가치에 관한 선택형 문항 결과(2순위)

응답내용	빈도(명)	비율(%)
선발의 공정성	45	15.31
변별	45	15.31
대학교육의 적격자 선발	54	18.37
단편적인 성적이 아닌 역량의 평가, 또는 성장 가능성의 평가	62	21.09
학생 각자의 경험과 진로 존중	36	12.24
초중고 교육과정 이수 및 성취도 확인	42	14.29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통합	10	3.40
전체	294	100.01

3순위 응답에서는 '대학교육의 적격자 선발'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19.73%), 이어 '역량 및 성장 가능성의 평가'(17.01%), '학생 각자의 경험과 진로 존중'(15.99%)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입제도가 고교 교육과정에서의 다양한 학습 경험과 학생 개별의 진로를 보다 폭넓게 반영해야 한다는 요구가 중·하위 순위로 갈수록 점차 강화되는 양상을 보여준다.

〈표 Ⅲ-8〉 대입이 추구해야 될 가치에 관한 선택형 문항 결과(3순위)

응답내용	빈도(명)	비율(%)
선발의 공정성	44	14.97
변별	30	10.20
대학교육의 적격자 선발	58	19.73
단편적인 성적이 아닌 역량의 평가, 또는 성장 가능성의 평가	50	17.01
학생 각자의 경험과 진로 존중	47	15.99
초중고 교육과정 이수 및 성취도 확인	33	11.22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통합	32	10.88
전체	294	100

한편, ‘초중고 교육과정 이수 및 성취도 확인’은 모든 순위에서 일정 비율로 선택되었으나 핵심 가치로까지 인식되지는 않았으며,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통합’은 전 순위에서 가장 낮은 응답 비율을 보였다. 이는 교원들이 대입제도의 사회적 책무를 부정한다기보다는, 현재의 입시 논의 국면에서 공정성·역량 평가·대학 적합성과 같은 제도 핵심 기능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종합하면, 교원들은 대입제도가 공정성을 최우선 가치로 유지하되, 단순한 점수 경쟁이나 서열화를 넘어 학생의 역량과 성장 가능성, 대학 수학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방향으로 재구조화되어야 한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향후 대입제도 개편 논의에서 공정성과 성장 중심 평가를 이분법적으로 대립시키기보다는, 공정성을 기반으로 한 질적 평가 체계의 설계가 핵심 과제가 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2) 대입에서의 수능 영향력

대입에서 수능의 영향력이 현재에 비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교원 인식을 분석한 결과, 수능의 영향력을 현 수준에서 유지하거나 점진적으로 축소해야 한다는 응답이 다수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시에 일부 교원들은 공정성과 예측 가능성 확보 차원에서 수능 영향력의 일정 수준 유지를 요구하는 등, 수능의 역할을 둘러싼 인식이 단일하지 않게 나타났다.

선택형 응답을 보면, ‘현재와 비슷해야 한다’는 응답이 26.5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현재보다 약간은 감소해야 한다’(25.17%)와 ‘현재보다 크게 감소해야 한다’(20.41%)를 합산하면 전체 응답자의 약 46%가 수능 영향력의 축소를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반면, ‘현재보다 약간은 증가해야 한다’(17.01%)와 ‘현재보다 크게 증가해야 한다’(10.88%)를 합산한 응답은 약 28%로, 상대적으로 소수에 해당한다. 이는 교원 다수가 수능의 영향력을 확대하기보다는 현행 수준을 상한선으로 인식하거나, 중·장기적으로는 축소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음을 시사한다.

〈표 Ⅲ-9〉 대입에서의 수능 영향력에 관한 선택형 문항 응답 결과

응답내용	빈도(명)	비율(%)
현재보다 크게 증가해야 한다	32	10.88
현재보다 약간은 증가해야 한다	50	17.01
현재와 비슷해야 한다	78	26.53
현재보다 약간은 감소해야 한다	74	25.17
현재보다 크게 감소해야 한다	60	20.41
전체	294	100

추가의견을 통해 그 이유를 살펴보면, 수능 영향력 확대 또는 유지를 주장한 교원들은 주로 대입제도 전반의 균형과 공정성을 강조하였다. 이들은 수시와 정시가 모두 의미 있는 제도이지만 현재는 수시 비중이 과도하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수능이 학생 개인의 노력과 성취를 비교적 예측 가능하고 공정하게 반영하는 도구로 기능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또한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일정 수준 유지하거나 확대함으로써 대입에서 최소한의 공정성과 변별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반면, 수능 영향력의 축소를 주장한 교원들은 고교학점제 도입 취지와의 충돌을 핵심 문제로 지적하였다. 이들은 학생의 과목 선택과 학습 과정, 학교생활 전반을 중시하는 고교학점제 하에서는 획일적인 전국 단위 시험인 수능이 중심이 되기 어렵다고 보았으며, 수능은 대학 진학을 위한 자격시험 또는 기초학력 확인 수준으로 기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인식을 드러냈다. 특히 공통 과목 중심의 통합 수능 체제에서는 실질적인 변별력이 제한될 수밖에 없으며, 이로 인해 수능이 고교 교육과정의 다양성과 자율성을 오히려 저해할 수 있다는 비판이 반복적으로 제기되었다. 더불어 수능 중심 구조가 사교육을 조장한다는 문제의식도 다수 확인되었다.

'현재와 비슷해야 한다'는 중립적 입장을 보인 응답자들은 수능을 대학 수학 가능성을 확인하는 최소한의 장치로 인식하면서도, 수시·정시 비율 조정 등 제도 운영 방식의 개선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조건부 인식을 보였다. 이들은 수능의 영향력이 과도하게 커지거나 급격히 축소되는 것 모두 현장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보았으며, 내신 5등급 체제 도입 이후 중위권 학생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함께 제기하였다.

종합하면, 교원들은 수능을 대입의 유일하거나 지배적인 선발 도구로 유지하는 데에

는 대체로 부정적이었으며, 고교학점제와의 정합성을 고려할 때 수능의 역할과 영향력을 재정의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수능이 갖는 공정성·예측 가능성의 장점 또한 완전히 부정되지는 않았으며, 향후 대입제도 개편 논의에서는 수능의 기능을 '변별 중심 평가'에서 '자격·보조적 평가'로 어떻게 전환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표 Ⅲ-9-1〉 대입에서의 수능 영향력에 관한 추가 의견 결과

(긍정) 현재보다 크게 증가해야 한다 / 현재보다 약간은 증가해야 한다		
유형	핵심 내용	해당 문장
대입 제도 구성의 균형과 조정 필요성	수시와 정시 모두 의미 있지만 현재는 수시 쏠림이 문제이며, 균형 조정이 필요함	수시든 정시든 의미가 있는 제도이지만, 비율이 문제임. 현재는 수시 비중이 너무 높음
평가의 공정성 및 노력에 대한 정당한 보상	학생 개인의 노력에 대한 보상이 예측 가능하고 공정하게 반영되어야 함	노력의 댓가가 변수없이 정당하게 반영되어야 함
학생 선택권 확대 및 통합형 구조 요구	내신과 수능 중 하나를 포기하는 이분법적 구조에서 벗어나야 함	수시의 틀 내에서 내신(교과 활동 포함), 수능 성적 향상 중 하나를 선택하고 나머지는 포기하는 방식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현재의 제도보다는 영향력은 조금이라도 증가해야 한다
수능 최저 기준의 현실적 확대	수능의 변별력 확보를 위한 최저 기준 확대 필요	최저등급 확대 적용
(중립) 현재와 비슷해야 한다		
유형	핵심 내용	해당 문장
수시·정시 비율 조정에 대한 요구	수시와 정시를 절반 정도로 조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	수시 정시 비율 반반 정도가 적당함
수능의 역할에 대한 인식	수능은 대학 수학 가능성을 판별하는 수준이면 충분함	이름처럼 대학수학능력이 가능한지 정도를 판별하는 정도면 된다고 생각함
내신의 활용 가능성과 형평성 우려	최저 기준이 높아지면 대학이 중위권 내신을 반영하기 어려워질 수 있고, 2등급대 학생들이 불리할 수 있음	최저의 비율이 높아질까 걱정됨. 대학은 5등급 내신을 고려하기 쉽지 않을 것임. 2등급대의 학생들이 걱정됨

(부정) 현재보다 약간은 감소해야 한다 / 현재보다 크게 감소해야 한다		
유형	핵심 내용	해당 문장
고교학점제 취지 존중 및 학생부 중심 평가 필요	- 고교학점제의 도입 취지를 살리기 위해 수시 중심의 평가 확대 필요 - 학교생활을 성실히 수행한 학생이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필요 - 학교생활의 비중을 늘려야 하며, 학생부 중심의 정성적 평가 강화 필요	- 고교학점제 취지에 맞는 대학별 수시 모집 강화 필요 - 학교 생활을 잘하는 학생이 대학을 잘 가는 시스템을 만들어야하고 대학이 뽑을 것이면 대학 학과의 특성에 맞는 면접, 필기 등 본고사를 대학이 준비해서 보아야 함 - 학교생활의 비중을 늘려야 한다
수능은 자격시험 역할에 국한	- 수능은 변별보다는 기초학력 확인의 자격시험 역할로 충분함 - 수능은 절대평가로 운영되어야 하며, 학생부를 중심으로 판단해야 함	- 학생의 기초학력, 기초교육과정 이수 충실도를 확인하는 자격시험 정도로 작용하는 것은 긍정적임 - 대입에서 수능은 절대평가로 자격고사가 되어야함
수능-학점제 병행의 비현실성	수능의 획일적 기준은 고교학점제의 다양성과 맞지 않음	학점제와 수능은 공존하기에는 불가함
수능의 공정성과 변별력에 대한 회의	- 공통 수능 체제 하에서 실질적 변별력 확보에 한계 - 수능은 정형적 시험으로, 미래 인재 육성 방식으로 부적합	공통 수능으로 대체 학생을 어떻게 변별하고 평가한다는 건지 모르겠음 수능은 미래 인재를 육성하는 평가방식이 아님
사교육 조장에 대한 비판	수능이 아닌 학교 내신 중심의 대학 진학 제도 필요	수능은 사교육을 조장하므로 학교 내신을 충실히 하면 대학을 갈 수 있게 제도 마련

3) 수·정시통합 및 시기조정

고교 교육과정의 정상적 운영을 위한 수시·정시 통합 및 대입 시기 조정에 대한 교원 인식을 분석한 결과, 통합과 시기 조정이 필요하다는 데 대체로 공감하는 인식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통합의 방향과 구체적 설계가 제시되지 않을 경우 현장 혼란이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신중한 의견도 함께 확인되었다.

선택형 응답 결과를 보면, '적합함'(34.35%)과 '매우 적합함'(25.85%)을 합한 긍정 응답이 전체의 약 60%에 달해, 교원 다수가 수시·정시 통합 및 시기 조정이 고교 교육 정상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반면 '적합하지 않음'(12.93%)과 '전혀 적합하지 않음'(4.42%)을 합한 부정 응답은 약 17% 수준에 머물렀으며, '보

통'이라는 응답도 22.45%로 적지 않게 나타났다. 이는 통합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구체적 실행 방식에 따라 판단을 유보하고 있는 교원이 상당수 존재함을 시사한다.

〈표 Ⅲ-10〉 수·정시통합 및 시기조정에 관한 선택형 응답 결과

응답내용	빈도(명)	비율(%)
전혀 적합하지 않음	13	4.42
적합하지 않음	38	12.93
보통	66	22.45
적합함	101	34.35
매우 적합함	76	25.85
전체	294	100

추가의견을 통해 긍정적 인식의 이유를 살펴보면, 교원들은 무엇보다 고교 교육과정, 특히 고3 2학기의 정상적 운영을 가장 중요한 근거로 제시하였다. 수시와 정시가 분리된 현행 구조에서는 수능 이후 고3 2학기 수업이 사실상 무력화되고, 학생들의 결석·체험학습 증가와 학업 몰입 저하가 반복된다는 문제의식이 강하게 나타났다. 이에 따라 수시·정시를 통합하고 대입 일정을 조정함으로써 학업 공백을 최소화하고, 학교 수업이 끝까지 유지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 제시되었다. 일부 교원들은 수능 시기를 12월로 조정하고, 이후 1~3차에 걸친 통합형 전형을 운영하는 방식 등 비교적 구체적인 대안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또한 긍정 응답자들은 수시·정시 통합이 2022 개정 교육과정과 고교학점제의 취지와도 비교적 잘 부합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교육과정 중심 수업과 평가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대입 일정과 구조 역시 교육과정 운영 흐름에 맞게 재설계되어야 하며, 수시·정시 이원화 구조는 이를 가로막는 요인이라는 인식이 확인되었다. 다만 통합 과정에서 학생의 지원 기회나 선택권이 과도하게 축소되어서는 안 되며, 횟수나 단계 설계에서 일정 수준의 유연성이 필요하다는 조건부 의견도 함께 제시되었다.

반면, 부정적 인식을 보인 교원들은 사교육 확대 가능성을 가장 큰 우려로 지적하였다. 수시·정시가 통합될 경우 입시 준비 시점이 앞당겨지거나 경쟁이 한 시기에 집중되어 사교육 의존이 오히려 심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일정 통합 자체보다는, 통합

이 가져올 수 있는 시장 왜곡과 부담 증가에 대해 경계하는 태도를 보였다.

'보통'이라고 응답한 교원들은 통합의 방향성 자체에는 일정 부분 공감하면서도, 현재 논의가 구체적 설계 없이 원론적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점을 문제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들은 명확한 전형 구조, 일정 설계, 평가 방식에 대한 청사진 없이 통합을 논의하는 것은 또 다른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종합하면, 교원들은 수시·정시 통합 및 시기 조정이 고교 교육 정상화를 위한 중요한 제도적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에는 대체로 동의하고 있다. 그러나 통합의 성공 여부는 단순한 일정 조정에 그치지 않고, 수능의 역할 재정립, 학생부 평가 방식, 지원 기회 설계 등 대입 구조 전반과 함께 정합적으로 설계될 수 있는지에 달려 있다는 인식 또한 분명히 확인된다. 따라서 향후 정책 논의에서는 통합의 당위성 제시를 넘어, 교육과정 운영 개선으로 실제 이어질 수 있는 구체적이고 단계적인 실행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핵심 과제가 될 것이다.

〈표 Ⅲ-10-1〉 수·정시통합 및 시기조정에 관한 추가 의견 결과

(부정) 전혀 적합하지 않음 / 적합하지 않음		
유형	핵심 내용	해당 문장
사교육 문제	사교육 시장 확대 우려	사교육 시장이 더 커질 수도 있음
(중립) 보통		
유형	핵심 내용	해당 문장
방향성 필요	구체적 방향성 제시	구체적 방향성도 없으면서 바꾸면 어떨까는 아닌 것 같음
(긍정) 매우 적합함 / 적합함		
유형	핵심 내용	해당 문장
수시·정시 통합 운영 필요성	- 입시 일정 분산으로 인한 학업 공백 해소와 교육과정 정상 운영을 위해 수시·정시 통합 필요 - 고교 교육 정상화를 위해 수시·정시 통합이 필요하다는 입장	- 학업의 공백기를 낮추고 입시 일정의 편중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하다 생각됨 - 정상적인 학교교육을 위해서라도 통합이 필요함 - 정상적인 3학년 2학기를 위해서 필요함

(긍정) 매우 적합함 / 적합함		
유형	핵심 내용	해당 문장
교육과정과의 정합성 강조	2022 개정 교육과정과의 연계성을 고려할 때 수시·정시 통합이 제도적 타당성을 가짐	2022 개정교육과정상 수시정시 통합이 적합함
일정 통합 + 선택 기회 보장	시기를 통합하되, 학생의 지원 기회나 횟수는 유연하게 설계할 필요가 있음	학생의 선택 횟수는 보장하되 시기는 통합하는 게 필요
고3 2학기 수업 정상화를 위한 시기 조정 필요	- 수능을 12월로 옮기고 1~3차 통합형 전형 운영 등 구체적 대안 제시 - 수능 시기를 미뤄 고3 2학기 수업 참여 유도 및 교육 정상화 필요	- 12월부터 수시정시 구분 않고 대신, 1차, 2차, 3차까지로. 수시와 정시를 통합하여 12월에 실시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함 - 반드시 통합해서 수능을 12월에 보고, 고3 2학기 출결도 반드시 대입에 반영해야 학교가 살아남 - 고3 2학기는 학교를 안나오고 학원을 감

4) 대입제도에 관한 추가 의견

교사들의 자유 서술 응답을 분석한 결과, 대입제도에 대해서는 개별 전형 요소의 조정 차원을 넘어 제도 철학과 구조 전반에 대한 근본적 재검토 요구가 광범위하게 제기되었다. 이는 앞서 확인한 수능 영향력, 수·정시 구조, 고교학점제와의 정합성 논의가 기술적 문제를 넘어 보다 근본적인 문제의식과 맞닿아 있음을 보여준다.

첫째, 대학입시는 단순한 선발 장치를 넘어 공동체 역량과 민주 시민성, 학문적 성장을 반영하는 제도로 재정립되어야 한다는 요구가 나타났다. 다수의 교원들은 현재의 대입제도가 취업 경쟁과 성과 중심 논리에 과도하게 종속되어 있으며, 대학 역시 학문 중심 기관으로서의 본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대입제도 역시 대학의 교육·연구 기능을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철학적 전환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이 제기되었다.

둘째, 수능·정시 중심의 줄세우기식 선발 구조에 대한 비판과 함께, 학교생활 기반 평가의 신뢰 회복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두드러졌다. 교원들은 획일적인 점수 중심 선발이

학생의 다양한 역량과 성장 과정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수능은 변별 중심 시험이 아니라 최소한의 학업 수행 가능성을 확인하는 자격적 성격으로 재구조화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와 함께 학생부종합전형이 본래의 취지를 회복할 수 있도록 평가의 공정성과 신뢰도를 높이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인식도 확인되었다.

셋째, 공정성 개념에 대한 재정의 요구가 나타났다. 형식적 동일 기준에 따른 경쟁이 오히려 교육 불평등과 과도한 경쟁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문제의식 속에서, 교원들은 단일 잣대의 공정성보다 실질적인 형평성과 기회 보장을 중시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는 공정성을 '줄 세우기의 정당화 논리'가 아니라, 학생 각자의 출발 조건과 교육 기회를 고려하는 방향으로 재구성해야 한다는 요구로 이어진다.

넷째, 대학의 자율적 선발권 확대와 대입 구조의 단순화를 동시에 요구하는 의견이 병행되었다. 교원들은 수시·정시 이원 구조가 제도의 복잡성을 키우고 학교 교육을 입시 일정에 종속시키고 있다고 보았으며, 이를 완화하기 위한 통합 또는 간소화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동시에 대학이 학과 특성과 교육 목표에 맞는 방식으로 학생을 선발하고, 졸업 기준과 교육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권한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함께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고교-대학 간 연계 구조의 정상화가 핵심 과제로 제시되었다. 교원들은 고등학교가 대학입시 준비를 위한 하위 기관처럼 기능하는 현재의 구조에 대해 강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었으며, 고교는 고교 교육과정에 충실한 독립적 교육 기관으로, 대학은 그 성과를 존중하는 선발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는 대입제도 개편이 고교 교육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회복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종합하면, 교원들이 제기한 추가 의견은 대입제도 개편을 부분적 조정이나 기술적 개선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의 목적과 역할에 대한 철학적 재설계의 과제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향후 대입제도 논의가 수능 비중, 전형 방식, 일정 조정과 같은 개별 쟁점을 넘어서, 고교 교육과 대학 교육이 어떠한 관계 속에서 작동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조적 논의로 확장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표 Ⅲ-11〉 대입제도에 관한 추가 의견 결과

유형	핵심 내용	해당 문장(요약)
제도 철학 재정립 요구	대학입시가 공동체 역량과 민주 시민 양성을 반영해야 하며, 대학은 학문 중심이어야 한다는 주장	대학은 취업이 아닌 학문을 위한 공간이 되어야 하며, 입시 제도는 이를 반영해야 함
수능·정시 중심 비판	수능 줄세우기식 입시에 대한 비판과 정시·수능 영향력 축소 요구	수능은 자격고사로 바뀌어야 하며, 정시는 축소되어야 함
학생부 종합전형 신뢰 강화	학교생활기록부 중심 평가 확대 및 종합전형 개선 필요	학생의 학교생활과 세특을 중심으로 평가해야 하며, 학생부종합전형이 중심이 되어야 함
평가 다변화 및 과정 중심 요구	단편적 수능보다 역량 기반 서술형, 면접, 자기주도성 등을 평가하자는 주장	정성 평가 확대와 과정 중심 평가 강화 필요
공정성 재정의 및 형평성 확보	과도한 공정성 강조가 경쟁 강화로 이어지며, 실질적 형평성과 기회 보장 강조	단일 잣대에 의한 공정성보다 다양성과 통합이 강조되어야 함
대학 자율성 확대	대학별 자체 선발과 졸업 난이도 조정 등 대학의 권한 확대 필요	대학이 직접 선발하고 졸업 기준을 강화하는 구조 필요
입시제도 단순화 및 통합	수시·정시 이원화 비효율 지적 및 통합 필요 주장	수시 정시 통합 또는 간소화 요구 다수
다양성 기반 학생 선발	획일적 선발 대신 잠재력, 성장 가능성, 적성 기반의 다양한 전형 도입 주장	단일한 성적 위주가 아닌 다양한 방식의 학생 선발 필요
사회통합·책임교육 강조	교육의 계층 사다리 기능 회복과 사회적 약자 배려 필요성 제기	입시가 사회통합과 연계되어야 하며, 교육은 계급을 넘는 통로가 되어야 함
고교-대학 연계 정상화	고등학교는 대학입시 심부름 기관이 아니라 독립적 교육 기관이어야 함	고교 교육은 고교답게 운영되어야 하며, 대입에 종속되지 않아야 함

다. 미래형 대입제도에 관한 인식

1) 2032 이후 대입과 내신의 변화(안)

가) 수능을 자격시험으로 전환

고교 교육과정의 변화와 2032년 이후 학령인구 급감 전망을 고려할 때, 대입제도의 기능 재설계에 대한 현장의 문제의식은 수능의 역할 재정립 논의로 구체화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2032년 이후 대입 및 내신 체제 변화 방안 중 하나로 제시되는 '수능의 자격시험 전환'에 대해 교원 인식을 조사하였다. 여기서 자격시험은 초·중·고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수하였는지를 확인하는 최소 학업 기준으로서의 수능을 의미한다.

조사 결과, 수능을 자격시험으로 전환하는 데 대해 '매우 동의함'이 39.12%(115명), '동의함'이 25.51%(75명)로 나타나, 전체 응답자의 64.63%가 찬성 의견을 보였다. 이는 교원 다수가 수능을 현재와 같은 고강도 변별 중심 선발 도구로 유지하기보다, 고교교육과정 이수 여부를 확인하는 기본적 평가 장치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반면, '동의하지 않음'(12.93%, 38명)과 '전혀 동의하지 않음'(12.59%, 37명)을 합한 부정 응답은 25.52%로 나타났으며, '보통' 응답은 9.86%(29명)였다. 이는 수능의 자격시험화에 대해 일정 수준의 우려와 유보적 태도 역시 공존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표 Ⅲ-12〉 수능을 자격시험으로 전환에 관한 선택형 응답 결과

응답내용	빈도(명)	비율(%)
전혀 동의하지 않음	37	12.59
동의하지 않음	38	12.93
보통	29	9.86
동의함	75	25.51
매우 동의함	115	39.12
전체	294	100.01

나) 수능을 서논술평가로 전환

고교 교육과정의 변화와 2032년 이후 학령인구 급감이라는 구조적 환경 변화 속에서, 수능의 평가 방식 자체를 전환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2032년 이후 대입 및 내신 변화 방안 중 하나로 제시되는 '수능의 서·논술형 평가 전환'에 대해 교원 인식을 조사하였다. 이는 기존의 객관식 중심 평가에서 벗어나 사고력과 표현력을 직접적으로 평가하는 방식으로 수능을 재구성하는 방안에 해당한다.

조사 결과, 수능을 서·논술형 평가로 전환하는 데 대해 '전혀 동의하지 않음'이 31.63%(93명), '동의하지 않음'이 29.25%(86명)로 나타나, 전체 응답자의 60.88%가 부정적 인식을 보였다. 반면, '동의함'(13.61%, 40명)과 '매우 동의함'(9.52%, 28명)을 합한 긍정 응답은 23.13%에 그쳤으며, '보통' 응답은 15.99%(47명)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교원 다수가 수능의 기능 전환 필요성 자체에는 공감하면서도, 그 대안으로서 서·논술형 수능을 도입하는 방안에는 상당한 부담과 우려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앞선 조사에서 수능의 자격시험화에 대해서는 과반 이상의 찬성이 나타난 것과 대비될 때, 교원 인식은 '수능의 위상 축소 및 기능 재정립'에는 동의하지만, '수능 자체를 고난도 서·논술형 평가로 재설계하는 방식'에는 신중하거나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표 Ⅲ-13〉 수능을 서논술평가로 전환에 관한 선택형 응답 결과

응답내용	빈도(명)	비율(%)
전혀 동의하지 않음	93	31.63
동의하지 않음	86	29.25
보통	47	15.99
동의함	40	13.61
매우 동의함	28	9.52
전체	294	100

다) 수능을 절대평가로 전환

고교 교육과정의 변화와 2032년 이후 학령인구 급감 전망을 고려할 때, 2032년 이후 대입 및 내신 변화 방안 중 하나로 제시되는 수능의 절대평가 전환에 대한 교원 인식을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수능을 절대평가로 전환하는 데 대해 '매우 동의함'이 30.27%(89명), '동의함'이 22.79%(67명)로 나타나, 전체 응답자의 53.06%가 찬성 의견을 보였다. 반면, '동의하지 않음'(17.01%, 50명)과 '전혀 동의하지 않음'(15.65%, 46명)을 합한 부정 응답은 32.66%였으며, '보통' 응답은 14.29%(42명)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교원 다수가 수능의 절대평가 전환에 대해 비교적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찬성 응답 비율이 과반을 넘는 점은, 학령인구 감소와 고교교육과정 변화에 대응하는 방식으로서 수능의 변별 기능을 완화하고 평가 방식을 조정할 필요성에 대해 일정 수준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다만, 부정 응답 역시 약 3분의 1 수준으로 나타나, 수능 절대평가 전환이 평가 신뢰도, 대학 선발 방식, 후속 전형 구조와 어떻게 연계될 것인지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와 논의가 필요함도 함께 확인된다.

〈표 Ⅲ-14〉 수능을 절태평가로 전환에 관한 선택형 응답 결과

응답내용	빈도(명)	비율(%)
전혀 동의하지 않음	46	15.65
동의하지 않음	50	17.01
보통	42	14.29
동의함	67	22.79
매우 동의함	89	30.27
전체	294	100

라) 내신을 절대평가로 전환

고교 교육과정 변화와 2032년 이후 학령인구 급감 전망을 고려하여, 2032년 이후 대입 및 내신 변화 방안 중 내신을 절대평가로 전환하는 것에 대한 교원 인식을 조사

하였다.

조사 결과, ‘매우 동의함’이 26.87%(79명), ‘동의함’이 20.41%(60명)로 나타나, 내신 절대평가 전환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47.28%가 찬성 의견을 보였다. 반면, ‘동의하지 않음’(20.75%, 61명)과 ‘전혀 동의하지 않음’(15.99%, 47명)을 합한 부정 응답은 36.74%였으며, ‘보통’ 응답은 15.99%(47명)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내신 절대평가 전환에 대해 교원 인식이 찬성 의견이 상대적으로 우세하되, 의견이 비교적 분산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절대평가 전환에 공감하는 응답이 절반에 가까운 반면, 평가 신뢰도와 변별력, 학교 간 여건 차이에 대한 우려 역시 일정 수준 존재함을 시사한다.

이는 내신 절대평가 전환이 고교 교육과정의 성취 중심 평가라는 방향성에서는 긍정적으로 인식되지만, 실제 운영 방식과 대입 연계 구조에 따라 수용도가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Ⅲ-15〉 내신 절대평가로 전환에 관한 선택형 응답 결과

응답내용	빈도(명)	비율(%)
전혀 동의하지 않음	47	15.99
동의하지 않음	61	20.75
보통	47	15.99
동의함	60	20.41
매우 동의함	79	26.87
전체	294	100

마) 내신 서논술평가 확대

고교 교육과정 변화와 2032년 이후 학령인구 급감 전망을 고려하여, 2032년 이후 대입 및 내신 변화 방안 중 내신을 서·논술형 평가로 전환하는 것에 대한 교원 인식을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전혀 동의하지 않음’이 31.63%(93명), ‘동의하지 않음’이 29.25%(86명)

로 나타나, 내신 서·논술형 평가 전환에 대해 부정적 응답이 전체의 60.88%를 차지하였다. 반면, '동의함'(13.61%, 40명)과 '매우 동의함'(9.52%, 28명)을 합한 긍정 응답은 23.13%에 그쳤으며, '보통' 응답은 15.99%(47명)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내신 서·논술형 평가 전환에 대해 교원들이 전반적으로 신중하거나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음을 보여준다. 서·논술형 평가가 교육과정의 취지와는 부합할 수 있으나, 평가 부담, 공정성 확보, 채점의 신뢰도, 학교 현장의 실행 가능성 등에 대한 우려가 크게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내신 평가 방식의 질적 전환이 필요하다는 인식과는 별개로, 서·논술형 평가의 전면적 확대에는 상당한 제도적·현장적 준비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강함을 보여주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Ⅲ-16〉 내신 서논술형평가 확대에 관한 선택형 응답 결과

응답내용	빈도(명)	비율(%)
전혀 동의하지 않음	93	31.63
동의하지 않음	86	29.25
보통	47	15.99
동의함	40	13.61
매우 동의함	28	9.52
전체	294	100

바) 수·정시통합(고3-2학기 종료 후)

고교 교육과정 운영과 2032년 이후 학령인구 급감 전망을 고려하여, 수시·정시를 통합하고 고3 2학기 종료 이후에 대입을 운영하는 방안에 대한 교원 인식을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매우 동의함'이 34.01%(100명), '동의함'이 30.95%(91명)로 나타나, 동의 응답이 전체의 64.96%를 차지하였다. 반면, '동의하지 않음'(11.22%, 33명)과 '전혀 동의하지 않음'(8.50%, 25명)을 합한 부정 응답은 19.72%에 그쳤으며, '보통' 응답은 15.31%(45명)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수·정시 통합과 대입 시기 조정에 대해 교원 다수가 고교 교육과정의 정상적 운영을 위한 필요하고 타당한 방안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고3 2학기 수업의 파행, 학사 운영의 형식화 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 제도적 대안으로서 수·정시 통합에 대한 공감대가 비교적 폭넓게 형성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동시에 일정 부분의 유보적·부정적 응답은 제도 설계 방식, 사교육 영향, 전형 운영의 구체성 등에 대한 추가 논의가 필요함을 보여주며, 수·정시 통합은 방향성에 대한 공감은 높으나 실행 방식의 정교화가 요구되는 과제임을 시사한다.

〈표 Ⅲ-17〉 수·정시통합(고3-2학기 종료 후)에 관한 선택형 응답 결과

응답내용	빈도(명)	비율(%)
전혀 동의하지 않음	25	8.50
동의하지 않음	33	11.22
보통	45	15.31
동의함	91	30.95
매우 동의함	100	34.01
전체	294	100

사) 내신 비교과 폐지, 교과 정성평가 보완

고교 교육과정 운영과 2032년 이후 학령인구 급감 전망을 고려하여, 대입에서 내신 비교과 영역의 반영을 폐지하고, 교과 성취도·교과세부능력특기사항·교육과정 이수 이력 등을 중심으로 질적 평가를 보완하는 방안에 대한 교원 인식을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동의함'이 26.87%(79명), '매우 동의함'이 19.05%(56명)로 나타나, 동의 응답이 전체의 45.92%를 차지하였다. 반면, '동의하지 않음'(19.39%, 57명)과 '전혀 동의하지 않음'(14.63%, 43명)을 합한 부정 응답은 34.02%로 나타났으며, '보통' 응답은 20.07%(59명)였다.

이러한 결과는 내신 비교과 영역 반영 폐지와 교과 중심 정성평가 강화에 대해 교원 사회 내부에서 찬성과 우려가 병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비교과 영역의 부담과 형식화

를 완화하려는 방향에는 일정 수준의 공감이 형성되어 있으나, 동시에 교과 정성평가의 신뢰도, 공정성, 학교 간 여건 차이 문제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인식도 함께 존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향후 대입제도 개편 과정에서 비교과 축소 여부 자체보다, 교과 중심 질적 평가를 어떻게 표준화하고 신뢰성 있게 운영할 것인가가 핵심 쟁점이 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표 Ⅲ-18〉 내신 비교과 폐지, 교과 정성평가 보완에 관한 선택형 응답 결과

응답내용	빈도(명)	비율(%)
전혀 동의하지 않음	43	14.63
동의하지 않음	57	19.39
보통	59	20.07
동의함	79	26.87
매우 동의함	56	19.05
전체	294	100

아) 대입은 절대평가화된 수능과 내신, 면접을 통해 진행

고교 교육과정 운영 여건과 2032년 이후 학령인구 급감 전망을 고려하여, 대입을 절대평가화된 수능과 내신, 그리고 면접을 결합한 방식으로 운영하는 방안에 대한 교원 인식을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동의함'(30.27%, 89명)과 '매우 동의함'(26.19%, 77명)을 합한 동의 응답은 56.46%로 과반을 차지하였다. 반면, '동의하지 않음'(14.29%, 42명)과 '전혀 동의하지 않음'(9.86%, 29명)을 합한 부정 응답은 24.15%로 나타났으며, '보통' 응답은 19.39%(57명)였다.

이러한 결과는 절대평가 체계를 기반으로 한 수능·내신과 면접을 결합한 대입 운영 방식에 대해 교원 사회 전반에서 비교적 높은 수준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상대평가 중심의 변별 경쟁을 완화하면서도, 대학이 면접을 통해 학생의 학업

준비도와 전공 적합성, 학습 태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구조에 대한 기대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일정 비율의 유보 및 부정 응답 역시 존재하는 만큼, 실제 제도 설계 과정에서는 면접의 공정성 확보, 평가 기준의 표준화, 교사·학교의 부담 문제 등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와 보완이 병행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표 Ⅲ-19〉 대입은 절대평가화된 수능과 내신, 면접을 통해 진행에 관한 선택형 응답 결과

응답내용	빈도(명)	비율(%)
전혀 동의하지 않음	29	9.86
동의하지 않음	42	14.29
보통	57	19.39
동의함	89	30.27
매우 동의함	77	26.19
전체	294	100

자) 서논술형 수능을 전제할 경우의 수능 시행 방안

서·논술형 수능으로의 전환을 가정할 경우, 그 시행 방식에 대한 교원 인식을 분석하였다. 조사 결과, '특정 교과만 시행'이 41.84%(123명)로 가장 높은 응답 비율을 보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단일화된 서·논술형 수능'(25.51%, 75명), '이원화 방식(서술형 수능과 논술형 수능 병행)'(17.01%, 50명)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기타 의견도 15.65%(46명)로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서·논술형 수능 도입 자체보다는, 전면적·일괄적 적용에 대한 부담과 우려가 교원 인식 전반에 존재함을 보여준다. 특히 다수의 교원은 채점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상대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일부 교과에 한정한 제한적 도입을 보다 현실적인 대안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표 Ⅲ-20〉 서논술형 수능을 전제할 경우의 수능 시행 방안에 관한 선택형 응답 결과

응답내용	빈도(명)	비율(%)
이원화(서술형 수능, 논술형 수능 등)	50	17.01
단일화	75	25.51
특정 교과만 시행	123	41.84
기타 의견	46	15.65
전체	294	100

서술형 추가 의견을 살펴보면, '특정 교과만 시행'을 선택한 응답자들은 수학·과학 등 상대적으로 채점 기준이 명확하고 주관 개입 가능성이 낮은 과목에 대해서는 서·논술형 평가가 가능하다고 인식한 반면, 국어, 통합사회, 통합과학 등은 평가 기준의 모호성과 주관성 개입 가능성으로 인해 서·논술형 수능 적용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한편, 기타 의견에서는 서·논술형 수능 전환 자체에 대해 시기상조 또는 현실적 실행의 어려움을 지적하는 부정적 인식이 다수 확인되었다. 이들은 공정한 채점 기준 설정의 어려움, 루브릭 개발의 한계, 채점 과정에서의 공정성 시비 가능성 등을 주요 우려 요인으로 제시하였다. 동시에 일부 응답자들은 서·논술형 평가가 필요하다면 수능이 아닌 대학별 고사나 자격고사 형태로 제한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이 보다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종합하면, 교원들은 서·논술형 수능에 대해 전면 도입보다는 제한적·부분적 적용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이는 공정성, 채점 신뢰도, 사교육 유발 가능성 등 제도 실행 단계에서의 현실적 부담을 강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향후 서·논술형 평가 확대 논의는 도입 여부 자체보다, 적용 범위·방식·단계적 이행 전략을 중심으로 한 정교한 설계 논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

〈표 Ⅲ-20-1〉 서논술형 수능을 전제할 경우의 수능 시행 방안에 관한 추가의견 결과

특정 교과만 시행		
유형	**핵심 내용**	**해당 문장**
객관적 채점 가능 과목 선호	채점자의 주관이 개입되지 않는 과목(예: 수학, 과학 등)의 평가 신뢰도를 높게 봄	수학, 과학 등 채점자의 개인적 주관과 가치관이 혼용되지 않는 과목
상대적 채점 신뢰도 낮은 과목	국어, 통합사회, 통합과학 등은 주관적 요소가 개입될 수 있는 과목으로 평가 신뢰도가 낮다고 인식	국어, 통합사회, 통합 과학
기타 의견		
유형	**핵심 내용**	**대표 키워드 및 해당 문장**
전면 반대 및 현실성 부족	서논술형 수능 도입 자체에 부정적이며, 시기상조 또는 실행 불가능하다는 의견	- 서논술형 수능 전환에 동의하지 않음 - 현실적으로 어려움 - 시기상조
공정성·채점 신뢰 우려	평가 기준 불명확, 주관성 개입, 공정성 시비 등 채점과 관련된 우려	- 공정하게 채점할 수 있을지 모르겠음 - 루브릭 설정이 어려움 - 공정성 시비 우려
다른 형태로의 제한적 도입	수능보다는 대학별고사, 자격고사 등 다른 방식에서 도입 가능성 인정	- 대학별 고사로 하면 좋겠음 - 자격고사라면 가능 - 약논술형이라면 해볼만함
부작용 및 신중론	사교육 유발, 비용 부담, 성급한 제도 변경에 대한 우려	- 사교육 가능성 - 비용 소모 - 섣부른 변화 반대

차) 2032년 이후 대입과 내신의 변화(안)에 대해 추가 의견

2032년 이후 대입과 내신의 변화(안)에 대한 서술형 추가 의견을 분석한 결과, 교원들은 개별 제도 요소의 조정 여부를 넘어 대입제도 전반의 구조적 정합성과 운영 현실을 동시에 고려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공통적으로 제기하였다. 특히 수능, 내신, 학생부, 대학전형 요소 간의 연계성 부족과 평가 체계의 일관성 결여가 현장의 혼란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문제의식이 두드러졌다.

첫째, 내신-수능-대학전형 간의 정합성 확보 요구가 강하게 나타났다. 교원들은 내신과 수능이 서로 다른 평가 논리와 기준으로 운영될 경우, 고교 교육과정과 대입전형 간 괴리가 불가피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내신과 수능을 동일한 평가 체계 안에서 정렬하거나, 최소한 상호 연계된 구조로 재설계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또한 고3 2학기 이후 수시·정시 통합 운영이 정상적인 학사 운영을 회복하는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함께 제시되었다.

둘째, 생활기록부 운영의 실효성과 교사 업무 부담에 대한 구조적 개선 요구가 확인되었다.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과 비교과 영역이 대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비해, 실제 기록의 신뢰성과 공정성에 대한 불신이 누적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교사의 행정·평가 부담이 과도하다는 인식이 확산되어 있었다. 이에 따라 서술식 기록의 축소, 체크리스트 방식 도입, 특정 항목의 선택적 기재 등 생활기록부 운영 방식 전반에 대한 현실적 재검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셋째, 수능의 기능 재정립을 둘러싼 긴장 관계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한편에서는 수능을 기초 학력 이수 여부를 확인하는 자격고사로 전환하고, 학생 선발은 대학이 주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수능과 내신이 절대평가화될 경우 변별력 상실로 인해 대학 선발의 어려움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병존하였다. 이는 수능의 역할을 단순히 축소하거나 유지하는 문제를 넘어, 자격검증 기능과 선발 기능 간의 균형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라는 구조적 쟁점을 드러낸다.

넷째, 대학의 선발 자율성 확대와 서열 완화에 대한 요구도 주요한 흐름으로 확인되었다. 교원들은 중앙집중적 전형 구조보다는, 대학이 교육 목표와 특성에 맞는 학생을 자율적으로 선발할 수 있는 권한을 확대해야 입시 경쟁 구조 자체가 완화될 수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동시에 대학 서열화가 지속되는 한, 대입제도 개편이 근본적인 경쟁 완화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문제의식도 함께 제기되었다.

마지막으로, 교육정책의 일관성과 현장 혼란 최소화에 대한 요구가 반복적으로 나타났다. 2022 개정 교육과정, 고교학점제, 2028 대입개편안 등 주요 정책들이 충분한 정합성을 갖추지 못한 채 추진되면서, 학교 현장에서는 제도 변화 자체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새로운 제도를 추가하기보다는, 기존 제도를 점진적으로 보완·조정하는 방식의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공유되었다.

종합하면, 교원들은 2032년 이후 대입과 내신의 변화 논의가 개별 제도의 찬반이나

단편적 조정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평가 체계 간 정합성, 운영 주체의 현실, 그리고 정책의 지속성과 예측 가능성을 함께 고려한 체계적이고 중장기적인 설계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는 향후 대입제도 개편 논의가 기술적 설계 이전에, 제도의 역할과 구조에 대한 근본적 재검토를 필요로 함을 시사한다.

〈표 Ⅲ-21〉 2032년 이후 대입과 내신의 변화(안)에 관한 추가 의견 결과

유형	핵심 내용	해당 문장(요약)
내신·수능·대학 전형 운영의 정합성 필요	내신과 수능, 대학 전형 요소 간의 일관성과 연계성 확보 필요. 내신은 절대평가이면서도 학교 간 차이를 반영하지 않도록 하고, 수능과 내신 간의 시스템적 일치를 요구함	- 어떤 제도이든 내신과 수능을 같은 시스템으로 운영해야 함 - 고교 교육과정과 대입전형의 일치가 필요함 - 고3 2학기 이후로 수시정시의 통합운영도 정상적인 고교 학사 운영에 도움이 될 방안으로 생각함
생활기록부 및 비교과에 대한 불신과 부담 호소	교사의 업무 과중과 공정성 문제로 인한 생활기록부 작성 부담 지적. 세부능력 특기사항 및 비교과 항목의 불신, 체크리스트나 간소화 필요 주장	- 현재 생활기록부는 가짜기록부가 되어가고 있음 - 교사의 서술식 특기사항 기재 대신 체크리스트 형태로 단순화해야 함 - 과세특 입력은 선택으로 바꿔야 한다
수능의 기능 재정립 (자격고사화 vs 변별도 확보)	수능을 자격고사로 전환해 기초학력 여부 판단 도구로 삼자는 의견과, 반대로 변별력 유지를 위한 절대·상대평가 병용에 대한 우려가 병존함	- 수능은 자격고사화하고 대학에서 선별하는 구조로 갈 필요 있음 - 수능 및 내신이 절대평가화 된다면 성적으로 변별이 어려울 것 - 수능 절대평가제 도입, 서논술형 수능은 실시과정에 번거로움 예상됨
대학 자율성 확대 및 서열 완화 요구	대학의 자율적인 학생 선발권을 확대하고, 대학 서열화를 완화해야 입시 경쟁 구조가 바뀐다는 주장	- 대학에서 필요한 인재를 대학이 주도적으로 선발하는 방법 제안 - 대학 서열화를 없앨 방안을 전 국민이 논의해야 할 때임 - 대학이 각자 선발하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고, 서열화 시키는 교육은 지양해야 합니다
제도 혼선과 일관성 결여에 대한 비판	빈번한 대입제도 변화, 고교학점제와 대입의 엇박자, 수시·정시 정책의 반복 변경 등으로 인한 현장 혼란을 우려함	- 자꾸 변하는 대입안으로 현장에 혼란만 가중 - 2028 대입과 2022 교육과정의 엇박자가 심해 부작용이 예상됨 - 새로운 걸 하려고 하지 말고 기존을 조금씩 바꾸려고 노력함

2) 2039년 이후 대입과 내신의 변화(안)

가) 수능을 자격시험으로 전환

2039년 학생 수 급감 전망을 고려할 때, 대입과 내신의 변화(안) 중 수능을 초·중·고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수했는지를 확인하는 자격시험으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한 교원 인식을 분석한 결과, 전반적으로 동의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40.82%(120명)가 '매우 동의함', 25.85%(76명)가 '동의함'이라고 응답하여, 전체의 66.67%가 수능의 자격시험화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반면, '동의하지 않음'은 12.24%(36명), '전혀 동의하지 않음'은 10.88%(32명)로, 부정 응답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수준이었다. '보통' 응답은 10.20%(30명)로 나타났다.

〈표 Ⅲ-22〉 수능을 자격시험으로 전환에 관한 선택형 응답 결과

응답내용	빈도(명)	비율(%)
전혀 동의하지 않음	32	10.88
동의하지 않음	36	12.24
보통	30	10.20
동의함	76	25.85
매우 동의함	120	40.82
전체	294	100

이는 학령인구 급감이 본격화되는 시점 이후를 상정할 경우, 수능의 기능을 고도화된 변별 도구보다는 기초 학업 이수 여부를 확인하는 자격 검증 장치로 재정립할 필요성에 대해 현장 교원 다수가 공감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만 일정 비율의 유보 및 부정 응답 역시 존재하여, 자격시험 전환 시 수능의 역할과 대학 선발 방식 전반에 대한 추가 논의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나) 수능을 서논술평가로 전환

2039년 학생 수 급감 전망을 고려할 때, 대입과 내신의 변화(안) 중 수능을 서·논술

형 평가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한 교원 인식을 분석한 결과, 전반적으로 신중하거나 부정적인 응답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25.17%(74명)가 '전혀 동의하지 않음', 20.75%(61명)가 '동의하지 않음'이라고 응답하여, 부정 의견은 45.92%에 달했다. 반면, '동의함'은 15.99%(47명), '매우 동의함'은 15.31%(45명)로, 긍정 응답은 31.30% 수준에 머물렀다. '보통' 응답은 22.79%(67명)로 나타났다.

이는 학령인구 급감 이후의 대입 환경을 고려하더라도, 수능을 서·논술형 평가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현장 교원 다수가 실현 가능성과 평가의 공정성·신뢰성 측면에서 부담을 느끼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자격시험화에 대한 높은 동의 수준과 비교할 때, 수능의 서·논술형 전환은 제도적 수용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대안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표 Ⅲ-23〉 수능을 서논술평가로 전환에 관한 선택형 응답 결과

응답내용	빈도(명)	비율(%)
전혀 동의하지 않음	74	25.17
동의하지 않음	61	20.75
보통	67	22.79
동의함	47	15.99
매우 동의함	45	15.31
전체	294	100

다) 수능을 절대평가로 전환

039년 학생 수 급감 전망을 고려할 때, 대입과 내신의 변화(안) 중 수능을 절대평가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한 교원 인식을 분석한 결과, 전반적으로 긍정적 응답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우 동의함'이 31.97%(94명), '동의함'이 25.17%(74명)로, 절대평가 전환에 찬성하는 응답은 57.14%에 달했다. 반면, '동의하지 않음'(14.97%, 44명)과 '전혀 동의하지 않음'(11.22%, 33명)을 합한 부정 응답은 26.19%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보통' 응

답은 16.67%(49명)로 나타났다.

이는 학령인구 급감 이후의 대입 환경을 고려할 때, 교원들이 수능의 상대적 변별 기능보다는 기초 학업 성취 확인과 경쟁 완화 측면에서 절대평가 전환을 보다 현실적인 대안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앞선 서·논술형 전환에 대한 인식과 비교할 때, 수능 절대평가는 현장 수용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평가 방식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표 Ⅲ-24〉 수능을 절대평가로 전환에 관한 선택형 응답 결과

응답내용	빈도(명)	비율(%)
전혀 동의하지 않음	33	11.22
동의하지 않음	44	14.97
보통	49	16.67
동의함	74	25.17
매우 동의함	94	31.97
전체	294	100

라) 내신을 절대평가로 전환

2039년 학생 수 급감 전망을 고려할 때, 대입과 내신의 변화(안) 중 내신 성적을 절대평가로만 표기하는 방안에 대한 교원 인식을 분석한 결과, 찬성 의견이 반대 의견보다 다소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우 동의함'은 28.91%(85명), '동의함'은 23.81%(70명)로, 절대평가 단독 표기에 찬성하는 응답은 52.72%에 달했다. 반면, '동의하지 않음'(17.69%, 52명)과 '전혀 동의하지 않음'(12.59%, 37명)을 합한 부정 응답은 30.28%로 나타났다. '보통' 응답은 17.01%(50명)였다.

이 결과는 학령인구 급감 이후의 교육 환경을 전제로 할 때, 교원들이 내신 평가에서 상대적 서열화보다는 성취 수준 중심의 평가 체계로 전환하는 방향에 대해 일정 수준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만 반대 및 유보 응답도 적지 않게 나타나, 내신 절대평가 단독 표기 방식에 대해서는 현장 내 이견과 신중론이 병존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표 Ⅲ-25〉 내신을 절대평가로 전환에 관한 선택형 응답 결과

응답내용	빈도(명)	비율(%)
전혀 동의하지 않음	37	12.59
동의하지 않음	52	17.69
보통	50	17.01
동의함	70	23.81
매우 동의함	85	28.91
전체	294	100

마) 내신 서논술평가 확대

2039년 학생 수 급감 전망을 고려할 때, 대입과 내신의 변화(안) 중 내신을 서·논술형 평가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한 교원 인식을 분석한 결과, 찬성과 반대 의견이 비교적 분산되어 있으며 유보적 태도가 가장 높게 나타난 점이 특징적으로 확인되었다.

‘보통’ 응답은 26.19%(77명)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동의함’(22.79%, 67명)과 ‘매우 동의함’(15.65%, 46명)을 합한 찬성 응답은 38.44%로 나타났다. 반면, ‘동의하지 않음’(20.07%, 59명)과 ‘전혀 동의하지 않음’(15.31%, 45명)을 포함한 부정 응답은 35.38%로, 찬성과 유사한 수준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교원들이 학령인구 급감 이후의 평가 체계 변화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내신 서·논술형 평가의 공정성, 채점 신뢰도, 교사 업무 부담, 학교 간 여건 격차 등 현실적 쟁점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즉, 내신 서·논술형 평가 확대는 원칙적 방향성보다는 실행 가능성과 지원 조건이 함께 제시될 때에만 현장 수용성이 확보될 수 있는 과제로 인식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표 Ⅲ-26〉 내신 서논술평가 확대에 관한 선택형 응답 결과

응답내용	빈도(명)	비율(%)
전혀 동의하지 않음	45	15.31
동의하지 않음	59	20.07
보통	77	26.19
동의함	67	22.79
매우 동의함	46	15.65
전체	294	100

바) 수·정시통합(고3-2학기 종료 후)

2039년 학생 수 급감 전망을 고려할 때, 고3 2학기 종료 이후 수시·정시를 통합하는 방안에 대한 교원 인식을 분석한 결과, 명확한 찬성 의견이 우세하게 나타났다.

'매우 동의함'은 36.73%(108명), '동의함'은 28.91%(85명)로, 수시·정시 통합에 찬성하는 응답은 65.64%에 달했다. 반면, '동의하지 않음'(11.22%, 33명)과 '전혀 동의하지 않음'(7.14%, 21명)을 합한 부정 응답은 18.36%에 그쳤으며, '보통' 응답은 15.99%(47명)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학령인구 급감 이후의 교육 여건을 고려할 때, 교원들이 입시 일정 이원화로 인한 학사 운영의 파행을 해소하고 고교 교육과정의 정상화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적 조정 필요성에 대해 비교적 높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수시·정시 통합은 단순한 모집 방식 변경을 넘어, 고3 2학기 수업 정상화와 고교 교육의 독립성 회복을 위한 핵심 과제로 인식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표 Ⅲ-27〉 수·정시통합(고3-2학기 종료 후)에 관한 선택형 응답 결과

응답내용	빈도(명)	비율(%)
전혀 동의하지 않음	21	7.14
동의하지 않음	33	11.22
보통	47	15.99
동의함	85	28.91
매우 동의함	108	36.73
전체	294	100

사) 내신 비교과 폐지, 교과 정성평가 보완

2039년 학생 수 급감 전망을 고려할 때, 대입에서 내신 비교과 영역 반영을 폐지하고 교과 성취도, 교과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교육과정 이수 이력 등을 중심으로 질적 평가를 보완하는 방안에 대해 교원들은 전반적으로 조건부 긍정에 가까운 인식을 보였다.

'동의함'은 26.87%(79명), '매우 동의함'은 23.13%(68명)로, 찬성 응답은 50.00%에 달했다. 반면, '동의하지 않음'(18.71%, 55명)과 '전혀 동의하지 않음'(12.93%, 38명)을 합한 부정 응답은 31.64%로 나타났으며, '보통' 응답은 18.37%(54명)였다.

이 결과는 교원들이 비교과 중심 평가에 대한 부담과 불신을 일정 부분 공유하면서도, 비교과 전면 폐지가 아닌 교과 중심의 정성적 평가 보완이라는 방향에는 절반 수준의 동의를 형성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학령인구 급감 이후의 대입 환경에서는, 형식적 비교과 항목을 축소하는 대신 수업과 교육과정 이수의 질을 중심으로 평가 체계를 재구조화할 필요성이 점차 설득력을 얻고 있음을 시사한다. 다만 부정 및 유보 응답 역시 적지 않게 나타나, 교사 업무 부담, 평가 신뢰도, 대학의 실제 활용 방식 등에 대한 추가적인 제도 설계와 합의 과정이 필요함을 함께 보여준다.

〈표 Ⅲ-28〉 내신 비교과 폐지, 교과 정성평가 보완에 관한 선택형 응답 결과

응답내용	빈도(명)	비율(%)
전혀 동의하지 않음	38	12.93
동의하지 않음	55	18.71
보통	54	18.37
동의함	79	26.87
매우 동의함	68	23.13
전체	294	100

아) 대입은 절대평가화된 수능과 내신, 면접을 통해 진행

2039년 학생 수 급감 전망을 고려할 때, 대입을 절대평가화된 수능과 내신, 그리고 면접을 결합한 방식으로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 교원들은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인식을 우세하게 보였다.

‘동의함’은 29.93%(88명), ‘매우 동의함’은 28.57%(84명)로, 찬성 응답은 58.50%에 이르렀다. 반면, ‘동의하지 않음’(11.56%, 34명)과 ‘전혀 동의하지 않음’(9.18%, 27명)을 합한 부정 응답은 20.74%로 상대적으로 낮았으며, ‘보통’ 응답은 20.75%(61명)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교원 다수가 학생 수 급감 이후의 대입 환경에서는 상대적 서열 경쟁 중심 구조보다는, 절대평가 기반의 학업 성취 확인과 면접을 통한 질적 판단을 결합한 선발 방식이 보다 현실적이고 타당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수능과 내신을 절대평가로 전환함으로써 과도한 점수 경쟁을 완화하고, 면접을 통해 대학 수학 역량과 전공 적합성, 학습 태도를 보완적으로 평가하려는 방향에 대해 일정 수준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다만 ‘보통’ 응답 역시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면접의 공정성 확보, 대학 간 평가 기준의 차이, 학교 현장의 준비 부담 등과 관련한 우려가 여전히 남아 있음을 함께 보여준다. 이는 해당 방안이 중·장기적으로 검토될 수 있는 방향이지만, 구체적인 운영 원칙과 신뢰 확보 장치가 병행되지 않을 경우 정책 수용성에 한계가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표 Ⅲ-29〉 대입은 절대평가화된 수능과 내신, 면접을 통해 진행에 관한 선택형 응답 결과

응답내용	빈도(명)	비율(%)
전혀 동의하지 않음	27	9.18
동의하지 않음	34	11.56
보통	61	20.75
동의함	88	29.93
매우 동의함	84	28.57
전체	294	100

자) 2039 이후 대입과 내신의 변화(안)에 관한 추가 의견

2039년 이후 대입과 내신의 변화(안)에 관한 추가 의견 분석 결과, 교원들은 제도 개

편의 방향성에는 공감하면서도 공정성·변별력·정합성에 대한 우려를 동시에 제기하였다. 먼저, 지나친 절대평가 전환이나 비교과 축소가 오히려 학업 동기 저하와 상위권 변별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인식이 다수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일정 수준의 상대평가 유지나 서·논술형 평가의 신중한 활용, 내신 평가의 정교한 운영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둘째, 고교학점제와 대입제도 간의 구조적 불일치에 대한 문제 제기가 반복적으로 나타났다. 2022 개정 교육과정과 2028 대입체제의 엇박자로 인해 현장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인식이 공유되었으며, 학점제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대입 구조 역시 이에 부합하도록 재설계되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되었다. 이 과정에서 경쟁 자체를 완전히 배제하기보다는, 과도하지 않은 '적정 경쟁'의 필요성을 언급한 의견도 확인되었다.

셋째, 대학과 고교의 자율성과 역할 강화에 대한 요구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교육부 주도의 획일적 제도 설계보다는, 대학에 선발 자율권을 부여하고 고교 역시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인식이 다수였다. 이는 대입제도 개편을 통해 중앙 통제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려는 현장의 기대를 반영한 결과로 볼 수 있다.

넷째, 평가제도의 단순화와 실효성 제고에 대한 요구도 강하게 제기되었다. 생활기록부,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등 서술 중심 평가가 교사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고 공정성 논란을 낳고 있다는 인식 아래, 체크리스트 방식 도입이나 평가 항목 축소, 출결 반영 기준의 명확화 등 실무 중심의 개선 필요성이 언급되었다.

마지막으로, 대입제도 개편은 단순한 교육 영역의 문제가 아니라 저출산, 노동시장 변화, 지방대 위기 등 사회 구조적 변화와 연계되어 접근되어야 한다는 인식도 확인되었다. 학생 수 급감 국면에서는 입학 경쟁 완화보다 대학의 교육 책임과 졸업 기준 강화, 지역·지방대 육성 전략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함께 제기되었다.

〈표 Ⅲ-30〉 2039 이후 대입과 내신의 변화(안)에 관한 추가의견 결과

유형	핵심 내용	해당 문장(요약)
대학입시의 공정성 및 변별력 유지	지나친 절대평가나 비교과 축소는 공정성과 변별력을 저해하며, 상대평가나 서논술형 확대, 내신의 정교한 운영이 필요하다는 의견	"지나친 절대평가에 대한 의존은 전반적인 학생들의 학업성취의욕을 떨어뜨리고 최상위권 학생들의 발전 가능성에 저해가 된다." • "많은 변화가 있겠지만, 그래도 일정부분 상대평가가 존재해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서논술 평가 및 절대평가 반대함."
고교학점제와 대입제도의 불일치 지적	고교학점제 운영 취지와 현재의 대입 제도(수능, 상대평가, 수시/정시 체계)가 맞지 않으며 제도 간 정합성 필요.	"2028 대입과 2022 교육과정의 엇박자가 심해 부작용이 예상됨. 적어도 둘 중 하나는 개편이 필요함." • "고교학점제 폐지해주세요." • "학생 수가 줄어도 경쟁은 필요하다. 과도한 경쟁이 문제지 적정 경쟁은 필요하다."
대학 및 고교의 자율성과 역할 강화 필요	교육부 주도의 지나친 개입보다 대학과 고교의 자율적 운영 및 선택권 확대가 바람직하다는 의견.	대학에게 선발의 자율권 부여." • "대입은 대학 자율." • "학교별 자율성을 확대하는 것이 방향성에 맞다고 본다."
평가제도의 단순화 및 실효성 제고	지나치게 복잡한 생활기록부,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등의 평가 항목을 간소화하고, 내신 및 수능은 명확한 기준과 객관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의견.	"교사의 서술식 특기사항 기재 대신 체크리스트 형태로 단순화해야 한다." • "과목별 세부능력을 폐지해야 함." • "출결 입시 반영 확대, 인정결석 제도 보완 필요."
사회구조적 변화와 연계된 교육개편 강조	대입제도 변화는 저출산, 노동시장, 지방대 문제 등 사회구조적 변화와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는 의견.	"저출산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대학입학보다는 졸업 기준을 엄격히 해야 한다." • "학생 수 급감하면 지방대 육성방안이 더 시급하다." • "교육은 교육만의 문제가 아니라 고용, 산업과 연계되어야 한다."

라. 정책적·제도적 조건

1) 교육 선순환을 위한 초중등 및 대학의 정책·제도 개선

고교 교육과 대입의 선순환을 위해 전제되어야 할 정책·제도적 조건에 대한 설문 결과, 교원들은 대입 구조 자체의 개선과 학교 교육 여건의 정상화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인식을 공통적으로 보였다.

먼저 1순위 응답에서는 '대학 서열화 완화'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이는 고교 교육이 대입 경쟁 구조에 종속되는 근본 원인으로 대학 간 서열 구조를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음으로는 국가교육과정 개정과 특목고·자사고·영재학교의 일반고 전환이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나, 고교 유형 간 격차와 교육과정 운영의 불균형을 구조적으로 해소해야 한다는 요구가 확인되었다. 이와 함께 내신 절대평가 전환과 대학의 학생선발 자율권 보장 역시 주요 조건으로 제시되었다.

〈표 Ⅲ-31〉 정책·제도 개선에 관한 선택형 응답 결과(1순위)

응답내용	빈도(명)	비율(%)
특목고(과학고, 예체능고 제외), 자사고, 영재학교를 일반고로 전환	53	18.03
국가교육과정 개정	55	18.71
내신 절대평가 전환	41	13.95
서논술형 내신평가로의 중장기적 전환 필요	8	2.72
내신 평가 공정성 확보 방안 마련	31	10.54
내신 평가에 교과 성취도와 교과세부능력 특기사항, 교육과정 이수 이력 등을 포함하여 질적 평가 강화	13	4.42
대학의 학생선발 자율권 보장	32	10.88
대학 서열화 완화	61	20.75
전체	294	100

2순위 응답에서는 '국가교육과정 개정'이 가장 많이 선택되었으며, 내신 절대평가 전환과 내신의 질적 평가 강화가 같은 비중으로 뒤를 이었다. 또한 내신 평가 공정성 확보 방안 마련과 대학의 학생선발 자율권 보장도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나, 평가 방식의 공정성과 대학 자율성에 대한 문제의식이 동시에 존재함을 보여준다. 이 단계에서는 제도 전환의 방향성뿐 아니라 평가의 신뢰도와 운영 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강화된 양상이 나타났다.

〈표 Ⅲ-32〉 정책·제도 개선에 관한 선택형 응답 결과(2순위)

응답내용	빈도(명)	비율(%)
특목고(과학고, 예체능고 제외), 자사고, 영재학교를 일반고로 전환	29	9.86
국가교육과정 개정	43	14.63
내신 절대평가 전환	41	13.95
서논술형 내신평가로의 중장기적 전환 필요	34	11.56
내신 평가 공정성 확보 방안 마련	37	12.59
내신 평가에 교과 성취도와 교과세부능력 특기사항, 교육과정 이수 이력 등을 포함하여 질적 평가 강화	41	13.95
대학의 학생선발 자율권 보장	37	12.59
대학 서열화 완화	32	10.88
전체	294	100.01

3순위 응답에서는 '교과 성취도, 교과세부능력 특기사항, 교육과정 이수 이력 등을 활용한 질적 평가 강화'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이어서 대학의 학생선발 자율권 보장, 국가교육과정 개정, 내신 절대평가 전환과 내신 평가 공정성 확보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상위 순위에서 제기된 구조적 개편 요구를 전제로, 실제 운영 단계에서는 내신 평가의 질과 대학 선발 방식의 정교화가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표 Ⅲ-33〉 정책·제도 개선에 관한 선택형 응답 결과(3순위)

응답내용	빈도(명)	비율(%)
특목고(과학고, 예체능고 제외), 자사고, 영재학교를 일반고로 전환	27	9.18
국가교육과정 개정	39	13.27
내신 절대평가 전환	36	12.24
서논술형 내신평가로의 중장기적 전환 필요	31	10.54
내신 평가 공정성 확보 방안 마련	36	12.24
내신 평가에 교과 성취도와 교과세부능력 특기사항, 교육과정 이수 이력 등을 포함하여 질적 평가 강화	46	15.65
대학의 학생선발 자율권 보장	45	15.31
대학 서열화 완화	34	11.56
전체	294	100

종합하면, 교원들은 고교-대입 선순환을 위해 ① 대학 서열 구조 완화와 고교 유형 체제 개편이라는 구조적 조건, ② 국가교육과정과 내신 평가체제의 동시 개편, ③ 내신 평가의 공정성과 질적 신뢰도 확보, ④ 대학의 자율적 학생 선발권 확대가 단계적으로 결합되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다.

이는 고교 교육 정상화를 위해 단일 제도 개선이 아니라, 대입 구조-교육과정-평가 체계 전반을 포괄하는 종합적 접근이 필요함을 보여주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2) 정책·제도 개선에 대한 추가 의견

추가 의견을 종합하면, 교사들은 현행 대입제도가 고교 교육의 본질과 괴리되어 있으며, 구조적 차원의 재설계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을 강하게 드러내고 있다. 특히 대학 서열 구조가 고교 교육을 왜곡하는 핵심 요인으로 인식되며, 서울 중심의 대학 서열 완화와 지역균형 발전이 대입 개편의 선행 조건이라는 인식이 확인된다.

또한 고등학교는 대입 준비를 위한 하위 단계가 아니라 학생의 기초 소양과 인성을 기르는 교육 공간이어야 한다는 인식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이는 대입이 고교 교육을 종속시키는 현재의 구조에서 벗어나, 고교 교육의 자율성과 본래 기능을 회복해야 한다

는 요구로 해석할 수 있다.

대입제도 자체에 대해서는 부분적 조정보다 전면적 개편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일부 교사들은 추첨제나 지역할당제와 같은 급진적 대안까지 언급하며, 현행 선발 중심 대입이 교육적으로 더 이상 설득력을 갖기 어렵다는 인식을 드러낸다. 특히 수능과 정시 중심 구조에 대해서는 공교육을 약화시키고 사교육을 조장한다는 비판이 반복적으로 제기된다.

아울러 고교학점제와 관련해서는 학생 선택권 확대라는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실제 운영 과정에서 학교와 교사에게 과도한 책임이 전가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타난다. 이는 제도 도입 자체보다 실행 구조와 지원 체계의 미비가 문제라는 인식으로 이어진다.

내신 평가와 생활기록부에 대해서는 공정성과 신뢰성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된다. 학교 간, 교사 간 차이가 평가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인식 속에서, 평가 기준의 명확화와 제도적 보완 필요성이 강조된다.

마지막으로, 잦은 대입제도 변경으로 인한 현장 혼란과 정책 불신이 누적되고 있다는 점이 반복적으로 지적된다. 이는 대입 개편이 단기적·정권 주도적 조정이 아니라, 중장기적 관점에서 일관되게 추진되어야 한다는 요구로 해석된다.

〈표 Ⅲ-34〉 정책·제도 개선에 관한 추가의견 결과

유형	핵심 내용	해당 문장(요약)
대학 서열 완화 및 지역균형 발전 요구	서울대 분산 및 지방거점국립대 육성을 통해 대학서열을 완화하고 지역균형을 이루어야 함	서울대 10개 만들기 등의 지방거점국립대학의 위상을 정립하는 정책은 반드시 실현되어야 함
고교 교육의 본질적 회복	고등학교는 입시가 아닌 기본 소양과 인성을 기르는 교육 공간이어야 하며, 대입과의 연계를 지양해야 함	고교 교육은 대입교육의 준비단계가 아니라 학생에게 필요한 기초 소양을 길러줌
대입 제도 전면 개혁 필요	대학입시는 추첨제 도입, 서울대 지역할당제 등 전면적인 제도 전환이 필요함	차라리 추첨을 하는 편이 더 교육적일 것임
정시 중심 제도 비판	정시는 공교육을 무너뜨리고 사교육을 조장함, 수능 중심의 입시에서 벗어나야 함	고등학교 때 너무 진빠지게 공부해서 대학가서 공부에 손을 놓게 만드는 그런 교육정책은 없어져야 함

유형	핵심 내용	해당 문장(요약)
학생 선택권·성장 기회	고교학점제 도입에 따른 선택권 확대가 필요하지만 현행 제도는 책임을 학교에 전가하고 있어 개선 필요	현행 고교학점제는 미이수 제도를 도입하였으나, 학교에 모든 책임을 전가한 무책임하고 말도 안 되는 정책임
내신 및 생활기록부 공정성	내신 절대평가와 세특 기재 등에서 공정성과 신뢰성 문제가 제기됨	특목고 교사들이 만들어주는 생활기록부 세부능력 특기사항과 수능성적보다 내신성적 반영 비율을 높게할 필요가 있음
교육정책 신뢰 및 일관성	대입 정책의 잦은 변경은 혼란만 가중시킴, 일관된 정책 운영 필요	자꾸 변하는 대입안으로 현장에 혼란만 가중하고 있다. 빈번한 변화가 오히려 독이 됨

3 시사점

이 장에서는 '고교 교육과 대입의 선순환 체제 구축을 위한 미래형 대학입시제도 방안'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을 분석하였다. 설문조사는 2028 대입제도, 현행 대입제도, 미래형 대입제도, 정책적·제도적 과제의 네 영역으로 구성되었으며, 총 30개 문항을 통해 현장 교원의 문제 인식과 개선 방향을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교사들은 현행 대입제도의 실효성과 교육과정과의 연계성에 대해 전반적으로 비판적인 시각을 보이면서도, 단순한 반대가 아닌 현실적인 개선 방향을 함께 제시하고 있었다.

먼저 2028 대입제도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 현장 교원들은 해당 제도가 학교 수업 운영과 고교학점제 실행을 저해할 가능성이 크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특히 수능 선택과목 폐지와 5등급제 도입은 학생들의 수업 집중도를 낮추고,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키며, 특정 과목으로의 쏠림 현상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다수 제기되었다. 수능 영향력에 대해서는 내신 변별력 약화로 인해 다시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과, 정시에서 학생부 반영이 확대되며 상대적으로 약화될 것이라는 인식이 동시에 나타났다. 다만 이러한 견해 차이에도 불구하고, 교원 다수는 2028 대입제도가 교육과정과 충분히 맞물려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행 이후 추가적인 제도 개편이 불가피하다고 보았다.

현행 대입제도 전반에 대한 인식조사에서는, 교사들이 대입이 공정성을 기본으로 하되 학생의 역량과 성장 가능성을 함께 평가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수능의 영향력에 대해서는 현재 수준을 유지하거나 점진적으로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상대적으로 우세했으나, 일부 교원은 여전히 공정성 확보 차원에서 수능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제시하였다. 한편 수시·정시 통합과 전형 시기 조정에 대해서는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가 나타났으며, 이는 고3 학사 운영 정상화와 교육과정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요구로 해석된다. 추가 의견에서는 대학입시가 단순한 선발 장치를 넘어 공동체 역량과 민주 시민성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하며, 대학의 학문적 책무와 자율성 회복이 필요하다는 보다 근본적인 문제의식도 함께 제기되었다.

미래형 대입제도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 교원들은 수능을 변별 중심 시험이 아니라 기초 학업 이수 여부를 확인하는 자격시험으로 전환하고, 평가 방식을 절대평가로 바꾸는 방향에는 비교적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반면 서논술형 수능이나 내신 서논술 평가 확대에 대해서는 채점의 공정성, 현장 부담, 사교육 확대 가능성 등을 이유로 부정적인 인식이 우세하였다. 내신 절대평가 전환과 비교과 축소, 교과 중심의 정성평가 강화에 대해서는 일정 수준의 공감이 나타났으며, 수시·정시 통합을 고3 2학기 종료 이후로 조정하는 방안 역시 다수의 지지를 받았다. 다만 변별력 약화에 대한 우려, 고교학점제와 대입제도 간 엇박자, 생활기록부 작성 부담 문제는 지속적인 쟁점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교원들은 대학과 고교의 자율성 확대, 평가 구조의 단순화, 신뢰할 수 있는 평가 기준 마련이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정책적·제도적 조건에 대한 인식조사에서는, 고교 교육과 대입의 선순환을 위해 대학 서열화 완화와 지방대 육성, 국가교육과정 개정과 같은 구조적 개편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교원들은 내신 절대평가 전환과 수능 자격고사화와 같은 방향에는 공감하면서도, 세부능력 특기사항과 생활기록부 운영의 신뢰성 문제, 교사 업무 부담에 대한 우려를 반복적으로 제기하였다. 또한 고교학점제와 대입제도가 서로 다른 방향으로 작동하면서 교육과정 정상화를 가로막고 있다는 비판도 컸다. 아울러 정시 중심의 대입 구조가 공교육을 약화시키고 사교육을 조장한다는 문제의식과 함께, 학생 선택권과 성장 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요구가 강조되었다. 무엇보다 잦은 정책 변경으로 인한 현장 혼란을 줄이기 위해,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갖춘 장기적 개

편이 필요하다는 점이 공통적으로 확인되었다.

이상의 교원 인식 분석을 토대로 도출된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고교 교육과정과 대입제도가 서로 맞물려 작동할 수 있도록 구조적 연계가 강화되어야 한다.

둘째, 수능과 내신의 평가 방식은 기초 학업 이수 확인과 성장 중심 평가라는 역할에 맞게 재구조화되어야 한다.

셋째, 대입제도는 학생과 교사가 예측 가능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단순하고 안정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넷째, 평가의 중심은 점수가 아니라 학생의 성장과 학습 과정에 두어야 한다.

다섯째, 대학 서열 완화와 지역 균형 발전 없이는 고교 교육 정상화 역시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Ⅳ

대학입시제도에 관한 전문가 인식 분석

1. 분석 개요
2. 분석 방법
3. 분석 결과 1: 쟁점 도출과 방향 모색 단계
4. 분석 결과 2: 개선안 구체화 및 검토 단계
5. 시사점

Ⅳ 대학입시제도에 관한 전문가 인식 분석

본 연구의 목적은 학교, 교육청, 대학 관계자들의 대학입시제도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현행 대학입시제도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이를 바탕으로 미래형 대학입시제도의 요구사항을 도출하는 데 있다. 또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해당 제도의 실효성 있는 구현을 위한 고교교육 내실화의 방향성과 과제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다양한 교육 분야 전문가들의 견해를 전문가 TF, 정책포럼, 세미나 등을 통해 체계적으로 수집·분석하였다.

1 분석 개요

본 연구는 미래형 대학입시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해 교육관계자(전문가, 교원, 입학사정관 등)의 인식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일련의 과정은 크게 두 단계로 구분된다.

첫째, 쟁점 도출과 방향 모색 단계이다. 4월부터 8월 초까지 진행된 전문가 TF 및 정책포럼, 정책세미나에서는 대학입시제도의 핵심 쟁점과 현행 제도의 한계를 검토하고, 개선의 필요성과 중장기적 방향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 시기에는 주로 '왜 변화가 필요한가'와 '어떤 원칙을 지향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둘째, 개선안 구체화 및 검토 단계이다. 8월 중순 이후에는 전문가, 교원, 입학사정관을 대상으로 보다 실질적인 개선안에 대한 의견 수렴이 이루어졌다. 이 과정에서는 구상된 개선안을 검토·보완하고, 현장의 수용 가능성과 실행 방안을 점검하는 데 주력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최종적으로 미래형 대학입시제도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표 Ⅳ-1〉 대학입시제도 인식 및 개선안 도출 과정

구분	일시	방식	주요 참여자	논의 내용
1차 전문가 TF	4.28.	대면	전문가	대학입시제도 쟁점 검토 및 개선 필요성 논의
2차 전문가 TF	5.15.	대면	전문가	현행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 방향성 탐색
3차 전문가 TF	5.30.	서면	전문가	주요 쟁점 정리 및 대안 아이디어 수렴
4차 전문가 TF	6.17.	대면	전문가	쟁점 정리 및 방향 최종 검토
정책포럼	7.1.	대면	교육관계자 다수	대학입시제도 개선 필요성과 방향 공론화
정책세미나	7.30.	대면	교육관계자 다수	대학입시제도 개선 필요성과 방향 공론화
5차 전문가 TF	8.11.	대면	전문가	구체적 개선안 논의 개시
6차 전문가 TF	8.20.	서면	전문가	개선안 초안 서면 검토
교원 면담	8.21.	대면	교원	개선안 현장 수용성 및 실행과제 검토
입학사정관 면담	8.27.	대면	입학사정관	개선안의 타당성과 실행 가능성 점검
7차 전문가 TF	8.27.~8.28.	서면	전문가	개선안의 타당성과 실행 가능성 점검
8차 전문가 TF	9.11.	대면	전문가	개선안의 타당성과 실행 가능성 점검
9차 전문가 TF	10.13.	대면	전문가	개선안의 타당성과 실행 가능성 점검
정책토론	12.1.	대면	교육관계자	최종 개선안 검토

전문가 의견 수렴 과정은 대학입시제도와 관련된 깊이 있는 논의를 위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및 교육관계자를 초청하여 진행되었다. 전문가 TF는 대학교수 3명, 교육기관 전문가 1명, 교원 2명, 입학사정관 2명, 정책담당자 3명으로 구성되었다. 개선안에 대한 교원의 의견 수렴을 위해서는 대학입시 제도가 고등학교 교육과정 및 학교 운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대학입시에 대한 이해와 경험 수준이 높은 고등학교 교사 5명이 참여하였다. 교원 면담에는 정책담당자 1명도 참여하였다. 입학사정관 면담은 대학의 지역적 위치와 학생 모집 구조에 따라 대학입시 제도 변화의 영향이 상이하게 나타난다는 점에서 수도권 대학과 비수도권 대학 입학사정관을 모두 초청하여 면담하였다. 본 연구에 참여한 수도권 대학 입학사정관은 4명, 지방 대학 입학사정관은 2명이었다.

대학입시제도 논의에 참여한 주요 참여자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Ⅳ-2〉 참여자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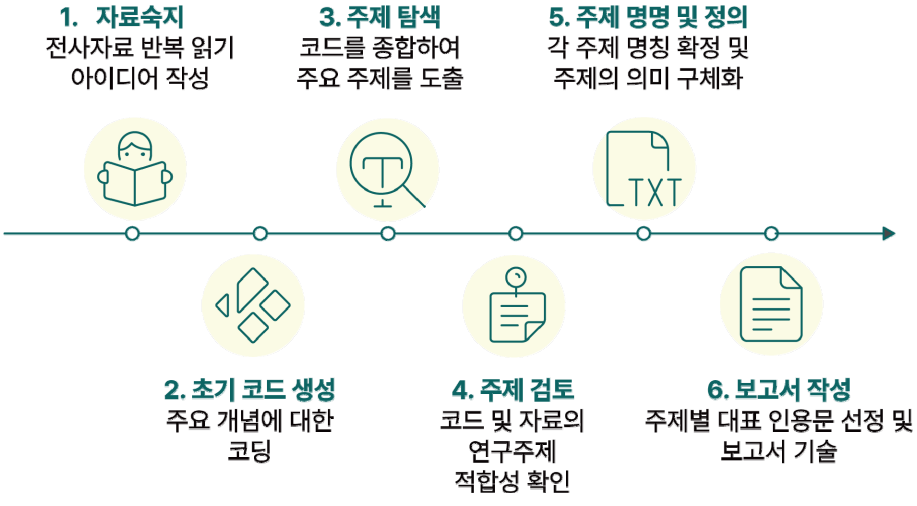
구분	참여자 구성	인원	식별코드
전문가 TF	대학교수	3명	A
			B
			C
	교육기관 전문가	1명	D
	교원	2명	E
			F
	입학사정관	2명	G
			H
	정책담당자	3명	I(연구사)
			J(장학관)
			K(장학관)
교원 면담 (8.21)	고등학교 교원	5명	L
			M
			N
			O
			P
	정책담당자	1명	I(연구사)
입학사정관 면담 (8.27)	수도권 대학 입학사정관	4명	H
			Q
			G
			R
	지방 대학 입학사정관(서면)	2명	S
			T

이상의 과정을 통해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의견을 수렴하였다. 또한, 의견 수렴 과정 중 정책 포럼도 개최되어, 대학입시제도 개선과 관련된 주요 논의가 이루어졌다. 전문가 TF와 정책 포럼, 정책 세미나 및 토론은 본 연구에 핵심적인 자료를 제공하였으며, 향후 대학입시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데 중요한 기초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다. 전문가 의견 수렴을 위한 모든 형태의 면담은 참여자의 동의를 얻어 전 과정을 녹음하였으며, 면담 종료 후 녹음 내용을 전사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2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는 면담을 통해 수집된 전사 자료를 주제 분석(Thematic Analysis) 방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주제 분석은 특정 이론적 틀에 구애받지 않고 질적 자료 속에서 의미 있는 패턴과 주요 주제를 도출하는 방법으로, 다양한 연구 목적과 자료 유형에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 이 방법은 자료 내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개념과 의미를 식별하고 이를 주제별로 구조화함으로써, 참여자의 인식과 경험을 깊이 있게 해석할 수 있도록 한다.

분석에 사용될 주제 분석 방법은 Braun과 Clarke(2006)가 제시한 여섯 단계 절차에 따라 수행되었다. 구체적으로, (1) 자료에 대한 숙지, (2) 초기 코드 생성, (3) 주제 탐색, (4) 주제 검토, (5) 주제 명명 및 정의, (6) 보고서 작성의 과정을 체계적으로 거쳤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자료로부터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핵심 주제를 도출하고, 이를 토대로 대학입시제도 개선과 관련된 전문가들의 인식과 시사점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그림 Ⅳ-1] 분석 절차[1)]

1) 출처: Braun & Clarke(2006), p. 85의 표 내용을 연구자가 재구성함

3 분석 결과 1: 쟁점 도출과 방향 모색 단계

쟁점 도출과 방향 모색 단계에서는 총 5차례의 전문가 TF와 각 1회의 정책포럼 및 정책세미나가 개최되었다. 이 과정에서 현행 대학입시제도의 문제점과 개선의 필요성, 개선을 위한 기본 원칙, 그리고 중장기적 개선 방향이 논의되었다.

현행 대학입시제도의 문제점, 개선 원칙, 개선 방향에 관해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으며, 이에 대한 주제 분석 결과 논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몇 개의 주요 주제로 범주화되었다. 첫째, 현행 대학입시제도의 주요 문제점으로는 상대평가의 문제, 선다형 평가의 한계, 대학입시로 인한 중등 교육과정의 희생이 지적되었다. 둘째, 대학입시제도의 개선을 위해 지켜야 할 원칙으로는 공교육 정상화, 수능 영향력 약화, 학생 성장 지원이 제시되었다. 셋째, 개선 방향으로는 수능과 내신의 절대평가화, 서·논술형 문항 도입, 수능의 소양평가화, 수·정시 통합 방안이 논의되었다.

이상의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한 세부 분석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현행 대학입시제도의 문제점

1) 상대평가의 문제

논의에 참여한 전문가와 교육관계자들은 고등학교 내신과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상대평가가 중심이 되어 있다는 점을 현행 대학입시제도의 주요 문제점 중 하나로 지적하였다. 고등학교의 경우, “2025 고교학점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한 핵심 제도 중 하나로 내신 성취평가제가 도입된 지 10년이 넘었지만, 최근 발표된 2028 대학수학능력시험 개편(안)에서는 대학입시에서의 변별력 유지를 이유로 성취평가에 상대평가를 병기하는 방식이 결정되었다. 이로 인해 대학입시를 위한 시험이 여전히 상대평가 체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 참여자들은 상대평가 체제가 성취평가의 실효성 있는 운영을 저해할 뿐 아니라, 학생의 학업 성취를 타인과의 비교를 통해 판단하기 때문에 고교학점제가 지향하는 “자기맞춤형 성장”과 “개별화 교육”을 중시하는 현 교육의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하였다.

> 현대교육은 학생이 분야별(전공, 교과 등) 콘텐츠를 알고 있는 수준을 동일한 기준에서 평가하고 서로 비교하는 형태가 아니라, 학생 각자가 그 콘텐츠를 자신의 경험과 의미에 맞게 탐구하고 응용함으로써 자기맞춤형 성장을 이어가도록 하는 데(개별화 교육) 중점을 둠.
> 그리하여 학교는 학생 각자가 지식 내용을 자기맞춤형으로 실행하는 과정과 결과를 인정해주어야 하며, 이를 다른 학생과 비교하여 우열을 가리는 상대평가 방식은 현대 교육의 기본 취지에 맞지 않음. (A, 교수, 3차)

상대평가 체제에서는 실제 학습 내용에 대한 이해 수준이 낮더라도, 다른 학생보다 상대적으로 점수가 높으면 높은 성취도로 판단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는 평가 본연의 기능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와 같이 학습 결과를 끊임없이 타인과 비교하는 구조는 학생 간 경쟁을 심화시키고, 학습자에게 심리적 부담과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나아가 역량 기반 교육과정이 중시하는 협력, 소통, 공동체 역량의 함양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 …… (2) 학생이 상대평가로 인해 겪는 심리적 고통이 크다: 내신 상대평가는 나와 같이 수업을 듣는 학생이 경쟁자이다. 내가 잘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고, 옆 친구를 이겨야 하는 구조다. 이 과정에서 겪는 학생의 부담과 고통이 크다. (3) 역량 중심 교육과정 취지와 어긋난다: 교육과정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학생 역량은 소통과 협력이다. 그런데 상대평가는 소통과 협력하기보다는 내가 저 학생보다 잘해야 한다는 비교와 우위가 더 중요하다. (D, 교육기관 전문가, 3차)

> 상대평가 체제에서는 학생들이 고교 3년 동안 내신과 수능시험을 준비하며 학교 안과 밖에서 다른 학생들과 경쟁을 거듭하며 청소년 시기를 보낼 가능성이 커지며, 이는 청소년의 협업 역량, 공동체 역량 증진에 악영향을 줄 수 있음. (C, 교수, 3차)

상대평가 체제는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을 제약한다는 문제도 있다. 특히 고교학점제는 학생이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지만, 상대평가 체제에서는 수강 인원 구성이나 다른 수강생의 성적에 따라 개인의 성적이 달라지기 때문에,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나 흥미보다는 높은 성적을 얻기 유리한 과목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어, 제2외국어 중 아랍어를 정규 교육과정으로 개설한 학교는 전국적으로 극히 소수임에도 불구하고, 낮은 원점수로도 높은 등급을 받을 수 있다는 이유로 아랍어를 선택하는 수험생이 많았던 현상이 있다. 한편, 대학 전공 학습의

기초가 되는 물리나 경제 과목은 높은 등급을 받기 어려워 필요한 학생조차 선택하지 않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 첫 번째는 이제 내신과 같이 평가의 기능에 맞지 않다. 우리가 제2 외국어 상대평가 해가지고 학생들이 배우지도 않는 아랍어에 그렇게 많이 들어갔던 거 우리가 보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방보다 잘 아는 거를 기준으로 한다면 이렇게 계속 왜곡 현상이 벌어진다. …… 우리가 물리Ⅱ라든가 또 사회 탐구에서 경제 같은 부분들이 굉장히 죽고 있는 걸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잘하는 아이들 마니아 같은 아이들이 모이면 내 등급이 안 나오기 때문에 이제 포기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계속 상대평가로 유지했을 때의 문제점이다. (D, 교육기관 전문가, 4차)

또한 전체 수강생 중 정해진 비율에 따라 성적을 부여하는 상대평가 체제에서는, 소수 인원이 수강하는 과목의 경우 작은 점수 차이에도 등급이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상황에서 학생들은 수강 인원이 적은 과목 선택을 꺼리게 되며, 이에 따라 학교가 다양한 과목을 개설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였다.

> 상대평가 하에서는 고교학점제 소수 수강 과목을 운영할 수가 없어 학생 교육과정 선택권을 제약한다. (D, 교육기관 전문가, 3차)

참여자들은 특히 수능의 상대평가 체제가 변별 기제로서 일부 상위권 대학 지원자에게는 필요할 수 있으나, 대다수 공교육 학생에게는 "교육적 고려가 결여된 시스템"이라고 평가하였다. 상대평가 체제가 지속되는 한 학업 성취의 변별을 위해 선다형 중심 평가에서 벗어나기 어려워, 학교 교육의 정상화와 공교육 혁신이 "한낱 구호에 그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하였다.

> (현황) 대학수학능력시험의 고교 교육과정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하며 선다형 상대평가체제로 유지되는 한, 학교 교육정상화, 공교육 혁신은 한낱 구호에 불과. 상대평가는 소수 상위권 대학 지원의 변별 기제(상위20%)로서 작동할 뿐 공교육의 대다수 80% 학생에 대한 교육적 고려가 없는 시스템임 (K, 장학관, 3차)

> …… 수능이 상대평가로 유지되면, 촘촘한 변별을 위한 선다형 위주 평가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이에 따라 고등학교 교육도 정답 찾기 교육을 할 수밖에 없기에 고교교육의 혁신을 위해서도 수능은 절대평가해야 한다. (D, 교육기관 전문가, 3차)

2) 선다형 평가의 한계

현행 대학입시제도의 두 번째 문제는 선다형 중심의 평가 체제이다. 선다형 문항 중심의 수능은 지식의 단순 습득에 치중하는 교육을 강화하며, 학생이 사회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핵심역량을 기르는 것을 목표로 하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취지 및 미래역량 교육의 방향성과도 부합하지 않는다.

또한 대학입시가 중등교육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는 점에서, 선다형 문항 일색의 수능 체제는 학교 교육 역시 선다형 문제 풀이에 초점을 두게 한다. 선다형 평가는 초·중등 학생들로 하여금 정답을 찾고, 오답을 피하는 훈련에 치중하게 하여 깊이 있는 학습이나 창의적이고 비판적인 사고력을 함양하기 어려운 교육 환경을 조성하게 된다.

> 현재 수능의 핵심적인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말하는 이 아주 창의적인 아이들을 못 길러 내거든요. 창의적인 아이들을 바보로 만드는 거잖아요. 그냥 실수 반복을 피하는 연습을 하잖아요. (B, 교수, 4차)

> 객관식 문항의 수능제도가 지닌 문제점: 국가 수준에서 표준화된 시험을 운영하면서 이를 객관식 오지선다형으로 평가하는 것은 대입 효능성이나 교육적 타당성 측면에서 예산과 인력 낭비라고 생각됨. 교육의 핵심 방향은 학습자가 교과별 콘텐츠를 이해하고 여기에 자신의 견해와 관점을 담아 깊이 사고하도록 유도하는 것인데, 국가 교육에 영향력이 큰 수능 시험이 객관식 형태를 취하여 학습자의 사고 범위를 오히려 제한한다면 이러한 평가 방식은 대단히 문제가 많음. 사실 객관식 평가로 얻은 점수만을 활용하여(수능 100%) 대학 입학의 자격을 부여하는 방식은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어려운 케이스임. (A, 교수, 3차)

선다형 평가는 채점 과정에서 채점자의 주관이 개입될 여지가 없기 때문에 공정한 평가가 가능하며, 대학입시에서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변별력을 확보하기 용이하다는 점에서 수능과 내신 평가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교과별 핵심 요소로 제시된 지식·이해, 과정·기능, 가치·태도 중 선다형 평가는 정답 선택의 결과만을 측정하기 때문에, 학생의 문제 해결 과정이나 내면화된 가치와 태도를 평가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선다형 평가로 측정할 수 있는 학업 역량과 교육과정이 요구하는 학습 이해 수준 간에는 불가피하게 괴리가 발생한다.

…… 문제는 저희가 교육과정에서는 지식·이해, 과정·기능, 가치·태도 이렇게 3개를 주면서 수문은 지식·이해만 보고 있다는 거죠. 수능의 문제는 과정을 보지 않아요. 과정에 대한 문제를 출제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육과정의 목표와 관련없는 내용을 계속 지식·이해 심화 부분을 꼬아서 꼬아서 꼬아서 보고 있는 그 점이 문제인 것이지 저희가 대학 수능을 보지 말자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문제 자체가 교육과정과 너무 떨어져 있다 이런 것이 사실 좀 저희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교원, 정책세미나)

선다형 평가가 측정할 수 있는 영역의 한계뿐 아니라, 선다형 평가 중심의 교육이 학생들에게 전달하는 메시지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었다. 정답은 하나뿐이며, 그 외의 답은 모두 오답이라는 메시지는 학습자가 오답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하고, 질문에 대한 심층적 탐구를 저해하여 고차원적 사고를 발달시키기 어렵게 만든다. 모든 학생에게 정답을 요구하는 평가 구조는 사고의 다양성을 약화시키고, 획일화된 사고방식을 형성할 위험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저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선택형으로 그 학생들이 그거를 평가를 그러한 고차원적인 사고력을 평가를 못한다. 이 문제가 아니고 더 큰 문제는 답은 5개 중에 하나로 정해져 있다. 이거를 남겨준다는 게 저는 더 큰 문제라고 봐요. 지금 생각에 지금 제가 봤을 때에는 그러니까 답은 무조건 5개 중에 하나야 답이 없을 수도 없고 이것 이외에는 답이 없어 난 이게 향후에는 더 큰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선택형이 문제를 어떤 것들을 측정할 수도 있다 측정할 수 있다. 이 문제보다는. (J, 장학관, 5차)

3) 대학입시로 인한 중등 교육과정의 희생

현행 대학입시제도의 세 번째 문제점은 대학입시가 중등 교육과정을 구조적으로 지배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대학입시가 고등학교 3학년 2학기 중에 실시된다는 시기적 요인과, 수능을 비롯한 대학입시가 중등 교육과정 운영에 미치는 높은 영향력이 주요한 문제로 지적되었다. 첫째, 시기상 수시모집은 9월부터 시작되고 수능은 11월에 실시되기 때문에, 고등학교 3학년 2학기에는 교육과정 운영보다 입시 준비가 우선되는 분위기가 형성된다. 수시모집과 수능을 마친 학생들이 남은 학기에 학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다는 점도 학교 현장의 어려움으로 지적되었다.

이로 인해 일부 학교에서는 1학기 수업 시수를 늘리고 2학기 수업 시수를 축소하는 방식으로 학사 일정을 조정하기도 한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대학입시 일정을 유지하기

위해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희생하는 현 구조가 과연 타당한지에 대해 근본적인 문제의식을 제기하였다. 이에 따라 논의는 단순히 일정 조정 차원을 넘어, 고등학교 3학년 2학기의 교육적 위상을 국가 교육과정 안에서 어떻게 재정의할 것인지, 그리고 교육과정 정상화를 도모할 수 있는 제도적 대안이 무엇인지를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학교 교육 관점에서 봤을 때에는 이거 국가 교육 과정을 완전히 다 구조적으로 무력화시키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고교 학점제에서 지금 이수해야 될 학점이 이런 거 다 계산하고 과목을 배열할 때는 3학년 2학기가 있는 것처럼 해요. 아무런 다른 학기랑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 교실에서 3학년 2학기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잘 아시잖아요. 그나마 지금 대학이 예전보다 그냥 수능 전에 합격자 발표하는 게 좀 줄어들어서 그렇지 제가 고3 교사 할 때처럼 이게 3학년 2학기에 그 학교 교실은 그냥 개판입니다. 아무런 교육 과정을 구현할 수가 없고 내용조차 할 수가 없어요. …… 그러면은 이 3학년 2학기의 부분들에 혼란이 덜할 수 있는데 저는 근데 6학기 중에 3학년 2학기가 갖는 의미들이 크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만약에 이제 이거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 이유가 이제 한 가지인데 3학년 2학기 교육과정을 다 제대로 배우고 수능을 볼 수 있게 해주고 대학 입시는 수능 이후부터 쭉 진행을 하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대학이 사람을 어떻게 뽑냐라고 하는데 그러면 저는 4월 5월까지 학생 선발 열어주고 계속해서 진행시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고등학교 교육 과정이 다 파행으로 되고 잘려나가는 거는 전 국민이 그냥 옹호하는 상황이고요. 대학의 1학기 1학년 1학기가 몇 달 좀 더 진행되는 거는 절대 안 되는 것처럼 얘기하거든요. 저는 그거 이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가교육과정 온전하게 지켜달라 안 그러면 국가 교육과정을 바꿔달라라는 거고요. (D, 교육기관 전문가, 2차)

그러면 3학년 2학기를 어떻게 좀 우리가 재규정할 거고 그에 따르는 국가 교육 과정을 이제 3학년 2학기 때 배워야 된다고 사실은 국가 교육과정대로 수업하는 학교가 거의 없잖아요. 솔직히 3학년 때 되면은 하지만 우리가 그런 것들을 한번 조정해서 3학년 2학기를 새롭게 규정할 필요는 있을 것 같고 ……. (B, 교수, 2차)

저는 이 관련된 말씀 중에 또 서운한 게 막 이런 게 있어요. 전 학기 전환 학기가 필요하다고 하면 왜 3학년 2학기여야 되느냐 그것도 대학교 1학년 1학기가 돼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이 저는 든다라는 거죠. 왜 이런 것들을 자꾸만 고등학교에 자꾸만 넣어서 고등학교에서 교육과정 시간을 어떻게 여기서 짜낼 수 있을까 이 고민을 진짜 더 이상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너무나 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J, 장학관, 2차)

둘째, 중등 교육과정이 대학입시에 맞춰진다는 문제이다. 이에 대해서는 특히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이 수능 준비에 맞추어져 운영되면서 교육과정의 본래 목적이 왜곡되는 사례들이 공유되었다. 먼저, 교과서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활용하지 않고 수능 대비용 문제집을 중심으로 수업을 운영하는 사례가 있었다. 또한, 수능 대비를 위한 편법적 수업 운영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었다. 표면적으로는 일반 교과 혹은 특별 과목으로 편성했지만, 실제로는 수능 중심의 수업을 진행하고 이를 학생생활기록부에 대학입시에 유리한 방식으로 기록하는 사례도 있었다.

> 고등학교 1학년 딸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교 지금 2학년 된 걔 언니가 제가 둘 키우면서 학부모 관점에서 제일 충격받은 거 고등학교 가니까 교과서로 수업을 안 한다. 고등학교는 전부 문제집으로 수업을 하더라. 그리고 저희 집 아이들은 지들이 원해가지고 외국어 고등학교를 갔거든요. 서울에 있는 외국어 고등학교를 다니는 데 제가 제 큰애가 교과서를 집에 가져오는 게 없어요. 교과서를 가져다가 이렇게 어디 구석에다 처박아 놓고 나중에 한 번도 안 꺼내와요. 너는 교과서로 수업 안 하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교과서로 수업하는 선생님이 없다. ……그래서 제가 사교육계에서 진짜 유명한 분을 개인적으로 알아서 그분한테 물어봤어요. …… 그분의 말에 따르면 그리고 일반고도 지금은 다 그렇게 한다 그렇게 수업 안 하면 안 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교수, 정책세미나)

> 일부 학교 같은 경우는 사실은 가짜 수업이라고 과목의 명칭은 사실은 그 과목이지만 실제 수업은 수능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학교들도 있었고 그리고 비공식 우열반이 사실은 있죠. 일부 학교는 사실은 비공식적으로 우열반을 만들어서 이게 이 우열반을 관리해 주는 집중 관리반을 업무 담당으로 사업을 하고 있고 일부 독립은 하지 말라니까 못하고 있어 그러니까 일부 사실 자사고나 사립 같은 경우는 사실 그런 것들을 더 활용을 하면서 우열반은 아니지만 이거를 생기부에 특화해서 관리해 주고 있고 …….(I, 연구사, 정책세미나)

이처럼 대학입시 전형의 변화는 곧 고등학교 수업 운영 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낳는다. 대학에서 입시 전형이 변경되면, 고등학교는 이에 대응하는 수업을 제공하지 않을 경우 학부모의 불만이 제기되는 등 외부 압력을 받게 된다. 특히 대학 진학률이 높은 한국의 교육 현실에서, '상위권 대학 진학'이 다수 학생과 학부모의 목표로 작용하면서, 고등학교 교육은 대학입시 특히 서울대학교를 중심으로 한 입시 준비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

결국 이러한 입시 중심의 교육 운영은 학생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핵심

역량을 기르는 중등 교육의 본래 목적을 약화시키며, 앞서 언급한 교육과정의 파행적 운영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 그래서 학생들이 학교를 어떻게 지원을 하느냐 이것도 사실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선호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해야 되고 또 그 결과로서 입시에 또 얼마나 충실하게 또 우리 학교가 기여할 수 있느냐 그걸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이상적으로는 정말 사회에 나아가서 살 수 있는 사회인을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지만 실제로는 대학의 전 과정으로서 입시에 집중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얼마 전에 서울대학교에서 발표한 입시에 필요한 지원하기 위한 최소의 이제 교육 과정에서 어떤 방법을 해야 되느냐가 바로 우리의 교육 과정을 검토하는 회의를 해야 하는 중요한 하나의 사례가 될 것이 있는 것이죠. 저희 학교는 OO구에 위치하고는 있지만 서울대학에 위원회에 가는 학생들은 한두 명 재수생까지 3명 정도로 갈 수 있을까 말까 하는 정도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교육과정은 서울대학교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이런 사정이라는 것이죠. (교원, 정책세미나)

대학입시가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논의 과정에서, 참여자들은 수능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참여자들은 수능 준비 과정에서 고등학교 교육과정이 희생될 뿐 아니라, 대학입시에서 수능의 비중이 높아질수록 사교육 의존이 심화되고, 가정의 경제력이 학업 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등 부의 대물림 현상이 강화된다고 지적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수능이 과연 필수적인 제도인지, 그리고 수능의 영향력을 축소하기 위해 그 역할을 어떻게 재정립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가 함께 이루어졌다. 특히, 공교육 정상화라는 목표 아래 수능이 단순한 선발 시험이 아닌 기초 학업 역량을 확인하는 자격 확인의 기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 …… 2) 대입에서 수능의 비중이 증가할 때 나타나는 부작용들 : 다른 차원에서는 객관식이든 논술식이든 수능의 영향력이 커질 때 나타나는 여러 문제점들을 심각하게 인식해야 함. 대입에서 수능같은 국가 수준의 시험을 강화하면, 아무리 변화의 취지가 좋더라도 한국적 상황에서는 사교육 팽창, N수생 증가, 지역 격차 심화, 전국 서열화, 부의 대물림 현상, 학교교육 파행 등 반사회적, 반교육적 현상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날 것임. 이는 공정성 강화의 명목으로 지난번 서울 16개 대학 정시 비중을 40%로 확대한 결과, 수능 N수생 급증, 대학 서열화 심화, 지방대학 여건 악화 등 부정적 변화들이 쏟아진 경험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함. 특히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SES)가 높을수록 N수의 선택과 사교육 참여 비율이 높고 수능을 통한 수도권 대학 및 의약계열 진학 비율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면, 수능이 부의 대물림 현상을 유발하는 결정적 통로가 된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음(참조: KEDI BRIEF : 대입 N수생 증가 실태 및 원인과 완화 방안 2025). (A, 교수, 3차)

그다음 이제 수능 저는 모르겠어요. 계속 지금 오늘날 이런 현대 사회에서 이 수능이라는 게 과연 필요한 건지 …… 이제 지금 현대 사회에 국가가 관리하는 이런 표준화 시험 이게 정말 필요한 건지 이제 거기부터 좀 정체성에 대한 이런 문제가 먼저 자꾸 저는 떠올라가지고 수능이 객관식이든 논술식이든 이게 문제가 아니고 수능 자체가 필요한 건지 그게 수능이 등장하고 그전에 학력고사가 있고 하는 이런 산업사회 기반에서는 이 콘텐츠가 우리 교육의 첫 출발점이다 보니까 그런 걸 확인하는 국가 수준의 표준화 시험이 필요했지만은 주로 이제 2천년대 이후에는 이제 그런 것들하고는 좀 이렇게 정리를 하고 새로운 길을 가고 있는 이런 마당이잖아요. 지금은 학생들도 개별화되어져 가 있고 그런 아이들의 그런 추세에 맞게끔 대학들이 학생을 뽑으려고 그러면은 이제는 전형을 좀 대학들이 자율화해가지고 좀 다양한 방식으로 뽑을 수 있는 걸 대학이 고민을 하고 대학의 어떤 자율성이나 대학이 선택할 수 있고 대학이 이렇게 설계할 수 있는 이런 전행 부분 이런 것들을 우선 우선에 두고 국가가 필요하면은 그걸 수능이든 다른 전행 요소로 지원을 해주는 이제는 이런 체제로 가야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A, 교수, 4차)

현행 대학입시 제도의 문제점과 한계에 대한 전문가들의 논의를 정리하면 다음 〈표 Ⅳ-3〉과 같다.

〈표 Ⅳ-3〉 현행 대학입시 제도의 문제점과 한계

상위 범주	하위 범주	주요 내용
1. 상대평가의 문제	성취평가의 실효성 저해	• 성취기준 충족 여부 기준 중심 평가 취지와의 불일치
	타인과의 비교 중심 평가	• 자기맞춤형 성장 및 개별화 교육 목적과의 부정합 • 평가 본연의 기능과의 불일치 • 경쟁 심화 및 심리적 부담 • 협력·소통·공동체 역량 함양 저해
	과목 선택권 제약	• 고득점 과목 선호 경향 • 소수 수강 과목 운영 어려움

상위 범주	하위 범주	주요 내용
2. 선다형 평가의 한계	정답 찾고 오답 피하는 훈련에 집중	• 깊이 있는 학습과 창의적이고 비판적 사고력 함양 어려움
	역량 중심 교육과정과의 괴리	• 지식·이해, 과정·기능, 가치·태도중 지식·이해만 평가 가능
	정답 외에는 오답이라는 메시지	• 사고의 다양성 약화 • 획일화된 사고방식 형성
3. 대학입시로 인한 중등 교육과정의 희생	고등학교 3-2학기 입시 준비화	• 수능 준비 학기로 변질 및 수능 마친 후 학생 수업 참여 저조
	교육과정의 입시 준비화	• 교과서 대신 문제집 사용 • 파행적 교육과정 운영 • 중등 교육의 본래 목적 약화

나. 대학입시 개선을 위해 지켜야 할 원칙

이상의 논의를 통해, 참여자들은 현행 대학입시제도의 문제점과 한계에 대해 공통적으로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였다. 따라서, 세 가지 주요 사안에 대한 중장기적 개선 방안을 모색하였고, 그 과정에서 대학입시의 주체(대학, 고등학교, 교육당국 등)에 따라 사안별로 상이한 쟁점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인식하였다.

참여자들은 논의 과정에서 드러난 다양한 쟁점에 대응하기 위해 방안을 모색하였고, 논의 내용을 분석한 결과, 대학입시제도 개선을 추진함에 있어서 전제가 될 기본 방향이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본 절에서는 이러한 논의 분석을 바탕으로 도출된 대학입시제도 개선의 기본 원칙을 정리하였다. 전문가 논의 분석 결과, 대학입시제도 개선의 핵심 방향은 공교육 내실화, 수능 영향력 완화, 학생 성장 지원의 세 가지로 나타났다.

1) 공교육 내실화

현행 대학입시의 주요 문제로 자주 지적되는 객관식 평가, 상대평가, 그리고 수능의 과도한 영향력은 모두 중등학교 공교육이 추구하는 교육적 목적과 기능을 왜곡시킨다는 공통점을 지닌다. 따라서 중장기적으로 대학입시 체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내실화를 통해 공교육의 본래 기능을 회복하고 내실화하는 것이 기본적인 방향이 되어야 한다.

> 그러니까 우리가 교사나 교육청의 입장에서는 이 대입 제도는 교육과정에 따른 평가죠. 그래서 교육 과정을 가장 구현하는 형태이고 그리고 우리는 이제 중요한 게 학교 교육의 정상화 부분입니다. 학교 교육이 대입에 휘둘리지 않고 그것들을 지켜 나가는 부분이 맞습니다. (D, 교육기관 전문가, 1차)

특히, 12년의 초중등 교육이 대학의 "전형 요소 몇 개로 판가름"나고, 수능에서 졸업생 응시율이 증가하는 현 상황에서 공교육 정상화의 방향에 맞는 개선안이 마련되기 위해서는 대학에서도 그 취지에 맞게 가능한 변화를 취해야 할 필요가 있다.

> 어려운 여건들 저희도 이 지역 대학과 이제 네트워크를 통해서 많이 알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대학 교육도 중요하지만 중등 교육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12년 동안 그렇게 고생고생해서 선생님들 그 수많은 선생님들이 키워온 아이를 대학이 전형 요소 몇 개로 이렇게 판가름하는 것도 좀 제가 볼 때 효율적이지도 않고 교육적으로 온당하지도 않을뿐더러 대학 교육도 변해야 되는데 여전히 옛날 같은 시선으로 있는 것도 대학이 좀 양보를 해야 될 건 과감하게 양보를 하고요. (교수, 정책세미나)

> 이 대입 정책이 교육적 가치 실현을 어떻게 추구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고민하고 있고 어떻게 대입 정책을 만들어야 고등학교 교육이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고 그들이 고등학교 현장에 남아 있을 수 있는가 지금도 기사에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교육 정책 교육 과정들이 불편하니까 자퇴하겠다 자퇴를 막아야 되는 게 고등학교의 역할이고 교육부의 역할이다. 대학도 그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대입 정책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도 많이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렇습니다. (G, 입학사정관, 정책포럼)

2) 수능 영향력 약화

현재 학교 교육과정이 내실 있게 운영되지 못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수능의 과도한 영향력이다. 따라서, 수능을 개편하는 것이 필수적인데, 수능을 개편하는 방안을 논의하기에 앞서 미래 대학입시에서 수능이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국가 수준의 표준화 시험인 수능의 필요성에 의문을 가지는 전문가도 있었고, 상대평가나 단답형이 아닌 체제의 수능이 도입되었을 때 수능의 역할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 필요성을 언급하는 전문가도 있었다. 수능의 순기능을 언급하며 수능 체제는 유지하면서도 학교 교육과정을 저해하지 않는 운영 방안을 모색하기도 하였다.

> 수능에 대해서 어떤 그동안의 역할이 많이 완화되고 또 수능 자체가 현대 사회의 인재를 제대로 키워내는 데 그 역할을 못한다라고 평가를 일부 하긴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말 그대로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대학에 가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부분들을 국가가 관리해서 그러나 그런 걸 평가를 하겠다는 그런 측면에서 아직 여전히 수능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역할은 아직까지 남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 (F, 입학사정관, 4차)

> 여전히 저는 지금도 이제 제 숙제가 수능이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해야 되는가 수능이 대입 전형 자료로 활용될 때 어느 정도의 변별 학생들을 변별하는 어 역할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아직까지도 그게 숙제가 잘 안 풀립니다. 안 풀리고 그래서 이거를 수능이 어느 정도의 기여를 해야 되는지 학생을 선발할 때 이 부분이 제가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풀리지 않으니까 논서술형은 어느 정도로 개 결합을 시켜야 될지 그리고 절대 평가한다고 했을 때 어떤 분은 9등급도 얘기를 하시고 어떤 분은 아예 자율고사까지도 말씀하시는데 어느 정도로 이거를 그러면 Pass, Fail로 할 거냐 아니면 5등급으로 할 거냐 절대평가를 한다 하더라도 9등급으로 갈 거냐 이 부분들이 이제 풀려야 되는데 여전히 수능이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이 저는 개인적으로 안 풀려 가지고 계속적으로 그 부분들이 고민되고 있습니다. (J, 장학관, 4차)

수능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이라면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학업 성취 수준을 국가 차원에서 평가하고, 대학에서 학업을 수행할 수 있는 학생을 변별하는 기능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국가가 일괄적으로 표준화된 성취도 평가를 실시하는 방식은 개별화와 다양성을 지향하는 교육의 방향과 충돌한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또한 현재의 수능은 고등학교 교육과정 전반에 과도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문제도 함께 제기되었다.

이에 전문가들은 수능 개선안을 마련할 때 현행 체제를 전면 폐지하기보다는 유지하되, 그 영향력을 축소하고 학교 내신과 국가 수준 시험의 역할을 명확히 분담하는 방향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즉, 수능이 지닌 기본적인 대학 수학 능력 평가의 기능을 유지하면서도 공교육 정상화와 학생 중심 교육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 근데 이게 지금처럼 수능을 국가 운영을 하면서 대학에 일괄적으로 당신들 이걸 가지고 정시의 대표 전형 요소로 학생들을 뽑아라 이거는 좀 시대에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능이라는 제도를 둬서 국가적으로 역할을 하게끔 하고 대신 대학이 이제는 그 전형 요소를 활용을 하게끔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지금은 너무 강요를 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맞지 않는 이제 이런

요소들이 많이 생기고요. 그리고 이제 국가가 옛날에는 사실 그렇잖아요. 수능이 등장하고 할 때 이럴 때만 해도 고교 대학 연계 교육이라는 이런 컨셉이 없었기 때문에 대학도 고등학교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하는데 별 관심이 없었거든요. 이제 그럴 때는 국가 수능을 뭐가지고 전체 학력을 한번 전국적으로 이렇게 표준화 해 보고 하는 게 필요한데 요즘은 이제 대학들도 이게 고등학교 교육이 어느 정도 어떻게 진행되고 하고 하는 이런 데 대한 나름대로 연구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는 노하우가 좀 쌓인 것 같아요. 그 일정 부분 이 수능이 하던 그런 역할을 이제 대학도 할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이제 대학마다 거기에 대한 의지나 또 역량이 다르기 때문에 수능도 같이 두면서 어떤 대학은 대학 위주로 좀 판단을 하게 하고 또 어떤 대학은 수능을 활용해 가지고 학생을 뽑게 하기도 하고 이런 걸 좀 이제는 다양화하는 게 이제 답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A, 교수, 4차)

3) 학생 성장 지원

현행 대학입시제도는 여전히 경쟁 중심의 구조와 대학 서열화로 인해 학생들이 학습의 본질적 의미보다는 입시를 위한 학습에 몰두하게 만드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에 면담 참여자들은 학생들이 학교 생활을 충실하게 한 것이 자연스럽게 입시에 반영될 수 있는 구조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학생부종합전형은 단순히 성적 중심의 선발을 넘어 학교에서의 학습과 활동이 곧 학생의 성장을 기록하고 잠재력을 보여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 평가되기도 하였다.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고등학생들이 학교를 즐겁게 다닐 수 있게 그 구조를 만들어 주면서 동시에 그게 이제 입시에도 자연스럽게 반영이 되는 구조가 돼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너무 경쟁이 심하다 보니까 그러지를 못하고 있고 그리고 그게 이제 학생들도 서로 서열화 뭔가를 서열화를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동시에 대학들끼리도 이 입시 결과의 진심인 상황이고 서열화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 하여튼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 결국은 학생부종합전형이 말씀하신 것이 이런 이제 미사여구도 있고 막 이런 것도 있지만 실제로 고교 교육과정의 평가에 있어서 그래도 어느 역할들을 하고 있고 할 수 있다고 대학들은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G, 입학사정관, 1차)

이는 학생이 학교생활을 즐겁게 경험하며 자신의 흥미와 전공 분야를 깊이 있게 탐구하고, 창의적으로 사고하는 과정 자체가 입시 평가에서 의미 있게 반영되는 구조가 바

람직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대학입시 역시 단순히 학업 성적이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는 게 아니라 학생이 스스로 학습 방법을 익히고 자신이 희망하는 진로와 관련된 교과 영역을 이수하고 창의적 사고를 확장해 나갈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관점은 대학입시제도가 기존 선발 중심에서 학생의 성장 중심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학생 성장 기반 원칙의 핵심이다.

> 앞으로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사람은 적응을 잘하는 사람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면 적응을 잘한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 새로운 환경이 올 때마다 필요로 하는 지식이 계속 요구될 거고 그러한 지식을 빨리 배울 수 있는 사람을 결국은 우리는 키워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그냥 실례로 그렇습니다. …… 어떻게 보면 예전 같았으면 고급 기술자가 초급 기술자를 데리고 뭔가 이제 같이 일하면서 이렇게 이제 코웍을 하던 시대였는데 지금은 고급 기술자가 챗gpt를 데리고 일을 하기 시작해요. 이제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죠. 초급 기술자가 필요가 없어지는데 누군가는 언젠가는 고급 기술자가 돼야 되는데 예전에는 초급 기술자들이 고급 기술자와 같이 일을 하면서 뭔가 경험을 쌓아가던 그런 시대였는데 이제는 초급 기술자가 알아서 고급 기술자가 돼야 되는 그런 세상이 되는데 이거 역시도 그럼 학원을 다닐 건가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렇게 할 수 있는 힘을 키워줘야 되는 게 어떻게 보면 고교의 역할이고 대학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식을 가르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은 이 모든 거의 이면 속에는 공부하는 방법을 학생들이 배울 수 있게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개입이 이러한 방향을 의무화할 수 있을지 이게 이제 가장 고민되는 지점이긴 합니다. (G, 입학사정관, 1차)

> 저는 이 대입이 추구해야 될 교육적인 가치 이걸 한 이 3개는 꼭 우리가 지켜줘야 되겠더라 하나는 좀 이게 학문적인 사고라는 걸 우리도 이제는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자기 전공 분야의 지식을 깊게 탐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자기 생각을 넣어서 창의적인 이런 자기만의 공간 사고 공간을 만들어 가는 이게 사실은 대학이 존재하는 이유고 대학 입시가 또 존재하는 이유인데 이제 이런 부분들을 그동안 너무 다루지 않은 이런 게 하나가 있었고요. …… 그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추구해야 될 교육적 가치는 이 학생 개인의 이런 성장을 지원해 주는 게 대학 입시이지 단순히 어느 대학을 고르고 어느 전공을 고르고 하는 그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학생이 초중고 대학 또 직업 세계까지 나아가는 이런 성장의 큰 경로의 거기에서 학생 각자에게 대학 입시가 어떤 역할을 해줘야 되는 것인지 이제 그런 관점에서 한번 논의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합니다. (A, 교수, 2차)

다. 대학입시제도의 개선 방향

1)절에서 언급한 현행 대학입시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 다양한 제안이 논의되었다. 그중에서 여러 참여자들이 공통적으로 제시한 주요 개선안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 세 가지로 정리된다. 첫째, 학생 성장과 역량 함양이라는 교육의 본래 목적을 회복하기 위해 평가 체제를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전환하는 것, 둘째, 객관식 시험의 한계를 극복하고 학생의 역량 함양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내신과 수능을 중장기적으로 서·논술형 평가로 전환하는 것, 셋째,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정상화를 위하여 수시와 정시를 통합하는 것이다. 이러한 개선안이 기존의 대학입시 체제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각 개선안을 실제로 도입할 경우 예상되는 쟁점은 무엇인지, 그러한 쟁점을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은 무엇인지에 대한 전문가 논의의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수능과 내신의 절대평가 전환

전문가 의견 수렴에서 첫 번째로 중장기 대학입시 개선 방안으로 논의된 것은 절대평가로의 전환이었다. 상대평가 체제는 학생 간 성적 경쟁을 심화시키고, 내신 등급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난이도가 높은 교과목이나 소수 인원이 수강하는 교과목을 기피하게 만들 수 있다는 한계가 지적되었다. 이에 따라 내신과 수능을 절대평가로 전환함으로써 학생 간 경쟁을 완화하고, 내신 부담을 줄여 과목 선택의 다양성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절대평가 중심의 평가 체제 전환은 개인의 진로 맞춤형 교육을 지향하는 고교학점제의 취지에도 부합한다.

> 내신 절대평가 부분도 그렇다면 이 교육과정을 제일 구현할 때 고교 학점제의 취지를 살리면서 교육과정을 구현하려고 할 때 상대 평가와 같이 갈 수 없는 구조라는 거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육과정을 가장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내신에 대한 부분이 풀려야 한다 라는 부분들 이제 그래서 절대평가가 가야 된다라는 부분들 ……. (D, 교육기관 전문가, 2차)

> (긍정측면 2) 수능 절대평가화가 학생들의 경쟁 부담 완화를 담보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함. 대입이라는 제도와 그 안에서 학생들의 선발이 존재하고 경쟁을 해야하는 상황이라면 절대적인 경쟁의 부담이 완화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지금과 같이 고교생활 따로 수능 따로의 이중화된 부담에서만큼은 완화될 수 있을 듯 함. 즉, 학교생활을 열심히 하면 이게 대학 입시로도 이어진다는 메시지가 가야 학생들이 고교 생활에 집중할 수 있지 않을까 함. 실제로 수능의 절대평

가화가 아닌 수능중심전형 선발비율 축소만 가지고도 그러한 효과를 볼 수 있음을 과거 학종 확대기에 경험할 수 있었음. (A, 교수, 3차)

가) 변별력 약화에 대한 대응 방안

상대평가의 한계를 극복하고 현행 교육과정의 취지에 부합한다는 점에도 불구하고, 절대평가로의 전환과 관련해서는 여러 쟁점이 논의되었다. 첫째, 평가의 변별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이다. 특히 2028 대학입시 개편안에서도 대학입시에서 내신 평가의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해 상대평가를 병행하기로 결정한 점에서, 절대평가 전환은 변별력 저하에 대한 우려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절대평가의 본래 취지는 변별에 있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절대평가는 상대평가처럼 학생의 성취를 서열화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성취기준 충족 여부를 판단하여 교과목 이수 자격을 부여하는 데 목적이 있다는 것이다(C, 교수, 3차). 특히 수능의 절대평가 전환은 수능의 선발 기능을 완화하고, 대학입학 자격을 확인하는 하나의 전형 요소로서 역할을 재조정한다는 의미를 지닌다. 따라서 수능의 절대평가 전환은 수능의 자격고사화와 병행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미래로 간다면 사실은 지금 현재 내신 절대평가를 갔을 때 그 대안이 수치로 변별하다는 입장보다는 뭔가 다른 대안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지금은 계속 수치로 변별해서 학생들을 줄 세울 수 있도록 대학에서 평가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의견이 자꾸 나오게 되면 사실 미래형 대입 제도라고 볼 수 있는지 저는 그게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지금 사실은 그런 부분은 사실 고민이 되는 부분인데 사실 모든 학교가 다 정성 평가를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모든 전형을 전부 다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갈 수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 그 부분은 사실 누구나 다 고민이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E, 교사, 4차)

다들 아시겠지만 절대평가라는 평가 방식 자체가 변별의 목적을 두고 하는 건 아닙니다. 사실은 변별의 목적을 두고 하는 거는 상대평가일 수밖에 없고 절대평가는 학생들이 최소한의 학업 성취를 이루었느냐 그 문턱 최소한의 문턱에 도달했느냐를 우리가 따져볼 때 이제 하는 거지 그런 의미에서 보면 사실은 이 대입 그러니까 대학 입시의 공정성에 어떤 모든 초점을 맞추고 학교 교육이나 학교 평가를 우리가 개선하려고 하면은 사실 학교 교육이 대입에 종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물론 현실적인 문제도 우리가 고려를 해야겠지만 대학 입시에서의 어떤 공정성 혹은 이 공정성도 사실은 뭐 기계적인 공정성이냐 아니면 실질적인 공정성이냐에 따라

서 생각이 달릴 수 있지만 대학의 학생을 변별하는 거는 사실 대학의 역할에 저는 맡겨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고교에서 선생님들이 이제 생기부의 정성 평가를 하잖아요.
다양한 활동을 기록하고 나름의 선생님들 의견을 어느 정도 이렇게 기록을 해 주시면 그걸 정교하게 이제 판별을 해서 학생에 대한 어떤 평가를 하는 거는 저는 이제 대학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공교육에서는 이제 대학 입시에 초점을 두고 이제 어떤 제도를 개선하기보다는 그냥 공교육의 내실화 그리고 학생들의 어떤 학교 생활에서의 어떤 행복, 자신의 어떤 진로 적성에 맞는 어떤 자신만의 어떤 교육 과정 이런 거에 조금 이제 초점을 두고 우리가 평가 제도를 생각을 하면 좀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 대학도 사실은 이제 수능 성적을 하나의 참고 자료 참고 지표로 활용하고자 하는 경향이 현재 많이 늘어나고 있고 앞으로 더 강해질 것이다. 특히 이제 학생 모집이 이제 대학의 생존과 연결되는 저출생 때문에 미래에는 더욱더 그러한 기조가 강해질 거기 때문에 우리가 수능도 장기적으로는 절대평가로 좀 돌려서 대학에서 어떤 보조 자료 혹은 어떤 참고 지표로 이렇게 활용을 하도록 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C, 교수, 4차)

즉, 절대평가로 전환하되 평가 지표와 자료를 다양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전문가 A(교수, 3차)는 대학들이 학생부종합전형을 10년 이상 운영하며 축적한 평가 경험을 고려할 때, 학생의 석차 등급이 없어도 다양한 추가 정보를 활용한다면 지원자 역량 평가를 충분히 수행할 수 있다고 보았다.

대입 학생부 평가에서의 변별력 약화 : 비록 5등급으로 축소하였지만 이번에 상대평가를 유지한 대표적인 근거는 대입 학생부 평가에서의 변별력 약화에 대한 우려임. 하지만 대학입학사정관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상대평가 석차등급이 없어도 지원자의 학업역량 평가에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 많음. 학생부종합전형의 역사가 10년을 넘으며 대학마다 평가 역량이 꽤 축적되었으며, 등급 외에 ①이수과목의 평균/원점수/수강생수, ②이수과목 구성(전공적합성, 과목 위계), ③이수과목의 내용 수준(기초/심화), ④탐구적 수업 태도(세특 기록) 등의 정보를 종합적으로 확인하면 실제로 충분히 변별이 가능함. 또한 이번에 교육부가 학생부 평가를 위한 추가 정보들, 예를 들면 ①출신고교 교육과정 편성 현황, ②과목별 평가 정보(지필평가와 수행평가 비중, 수행평가 영역) ③과목의 성취도별 분할 점수, ④교과 운영 특이사항(공동교육과정 이수, 대체 이수) 등을 함께 대학에 제공해 주기로 한 만큼, 석차등급이 없어지더라도 지원자의 학업역량 평가에 큰 무리는 없을 것이라 사료됨. (A. 교수. 3차)

대학에서 지원자 간 변별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수능 및 대학입시 체제를 이원화하는 방안도 제시되었다.

첫째, 1단계 대학입시에서는 자격고사화된 수능을 통해 대학에서 수학 능력에 대한 기본 자격을 검증하고, 2단계에서는 공교육의 범위 내에서 지도가 가능한 수준에서 대학별 면접이나 논술 등 자율적인 평가를 허용하는 방식이 제안되었다(I, 연구사, 3차).

둘째, 수능Ⅰ에서는 공통·통합 과목을 중심으로 평가하고, 변별이 필요한 대학에서는 모집 단위와 관련된 선택 과목 중심의 수능Ⅱ를 운영하며, 모집 단위별 관련 과목에 가중치를 부여하거나 면접 등 추가 전형 요소를 활용해 대학 교육에 적합한 지원자를 선발하는 방안도 제시되었다(D, 교육전문가, 3차).

……5등급 절대평가를 최종 형태로 상정하되, 과도기적으로는 9등급 절대평가를 통해 안정적으로 절대평가가 안착하도록 한다.

(3) 여기에 전형 요소를 더하여 모집 단위별 연관 과목에 가중치 부여, 면접 등을 넣어 대학 교육의 적격자를 선발하도록 한다.

(4) 기존 수능 체제를 Ⅰ,Ⅱ 체제로 분리하여 공통통합과목 중심의 Ⅰ, 모집단 위와 연관된 선택과목 중심의 Ⅱ로 운영한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다수 대학이 Ⅰ만으로도 학생 선발이 가능할 것이나, 좀 더 변별이 필요한 경우 Ⅱ 성적도 반영하게 해주어 학생 선발을 지원한다. (D, 교육기관 전문가, 3차)

다만 수능이 절대평가화로 인한 선발 기능 약화에 대한 우려를 고려해야 한다면, 현실적으로 단계적 접근도 가능할 것임. 즉 선발을 위한 변별기능의 보완 대책으로, 즉 단기적으로는 5등급 체제의 완화된 상대평가 유지하면서 수능이 수시전형에서의 자격고사화, 혹은 정시 1단계 전형 요소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대입제도 재설계 필요.(→수능 영향력 적정화)
단, 이 경우 수능은 선다형이 아닌 사고력, 문제해결력 측정이 가능한 서·논술형이 포함된 형태이어야 할 것임. (K, 장학관, 3차)

마지막 변별에 대한 부분은 저는 이제 변별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5등급의 어떤 우리가 등급 분할 점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이게 절대 기준을 잡는다라고 하는 거지 성취도를 포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이제 변별이 있는데 지금과 같은 상대평가 9등급보다는 작을 수 있겠죠. 하지만 절대평가 부분들에 있어서 분명히 한 5등급 정도로 했을 때 변별이 있고 조금 부족한 부분은 저는 교과 세부 능력 특기사항을 조금 더 구조화해서 이 부분들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저는 활동을 더 넣자고 하는 거 비교과 활동을 더 강화해서 더 반영하자고 하는 건 절대 반대입니다. 저는 그 부분들은 지금 줄어드는 게 맞다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우리가 교과 세부 능력 특기사항 부분은 어떤 수업이 진행됐고 평가가 되고 그것이 이제 좀 학생의 어떤 성취도를 좀 더 명확하게 보여주는 부분이라 이거를 강화하는 부분들은 필요하다 이 부분을 더 요구해도 된다 저는 생각이 듭니다. (D, 교육기관 전문가, 4차)

마지막으로, 절대평가 내에서도 평가 기준을 세분화하고 등급을 다양화하여 변별을 확보하는 방안이 제시되었다. 필요에 따라 9등급 또는 그 이상의 세분화된 등급 체계를 마련하거나 평가 영역을 세분화하여 구체적인 평가 지표를 만들어낼 것이 제안되었다.

> 제 생각에는 그래서 수능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내신도 5등급으로 와서 이번에 핫 이슈 되는 게 고1 중간고사 딱 한 번 봤는데도 자퇴를 해서 이제 2등급이 되면은 서울 주요 대학에 못 간다 이런 얘기까지도 나오고 학부모가 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면은 절대평가를 도입하는 대신에 대신 절대평가 안에서 등급을 또 다양 9등급뿐만 아니라 더 등급을 다양하게 해서라도 사실 변별력을 높이는 그런 것들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상대평가가 아니라 절대평가로 가는 것도 충분히 의미가 있는 것이고 다만 이 절대평가가 공정한 평가로 이루어져야 되고 그리고 대학 입장에서도 변별력을 키울 수 있는 평가로 이렇게 자리 잡는 게 그렇게 된다라면은 저는 그때 내신과 수능이 절대평가로 가서 그 교육 목적에 맞춰서 이런 서논술형 평가도 같이 가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I, 연구사, 4차)

> ※ 절대평가가 미래 사회에 적합한 평가 방법이라면 내신과 수능을 모두 절대평가로 전환하고 대신 절대평가 안에서 5등급이 아니라 9등급으로 변별력을 높이는 평가가 필요하다. 우리나라 교육 시스템에서 결국 변별하지 않는 평가가 되기는 쉽지가 않다. 하지만 절대평가를 통해 학생들의 창의성과 사고력을 증진시키는 것이 목적이라면 절대평가를 통해 더 세부적으로 더 다양한 급간으로 평가를 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하다. 다만 상대평가보다 절대평가가 필요하다면 절대평가로 내신과 수능 모두 전환하고 대신 변별이 반드시 필요하다면 더 제대로 변별하자. 그리고 반드시 변별을 위해서 절대평가를 보다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기준으로 AI평가시스템을 제대로 구현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반드시 사교육이 또한 움직이겠지만 공교육으로도 가능한 절대평가를 구현하는 것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I, 연구사, 3차)

나) 평가 신뢰도 및 평가 역량 확보에 대한 대응 방안

절대평가 전환과 관련한 두 번째 쟁점은 평가의 신뢰도이다. 먼저, 내신 평가에서 성적 부풀리기 문제가 지적되었다. 내신이 상대평가로 전환되기 이전인 2008년 이전에는, 쉬운 문항 출제를 통해 수·우·미·양·가 중 최상 등급인 수를 받는 학생의 비율을 높이는 이른바 성적 부풀리기 현상이 발생하였고, 따라서 내신 평가에 대한 신뢰가 저하된 바 있다. 이러한 전례로 인해, 평가 체제가 다시 절대평가로 전환될 경우 내신 성적 부풀리기 문제가 재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또한 교사의 평가 역량에 대한 우려도 함께 논의되었다. 상대평가 중심의 평가 방식에 익숙해진 교사들이 교과별 성취 기준에 따라 학생의 성취 수준을 정확하게 판단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평가의 신뢰도가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 다 옛날에 그랬던 거잖아요. 수 줬던 거잖아요. 예전에 2008년 이전에 그래서 아니 제가 좀 좀 다른 얘기해 보면 제가 옛날에 이후 고등학교 있을 때 이 고등학교는 수, 우, 미 막 심지어 가도 주는데 다른 학교하고 비교해 보면 너무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모든 고등학교가 그랬어요. 아니 모든 고등학교가 아니라 99%가 그랬단 말이에요. 그거를 과연 그러니까 OO대학 같은 경우는 전체 학생 중에서 1등급 받은 학생의 비율을 가지고 이제 역으로 약간 저기 보완하는 수준이잖아요. 그건 OO대가 만든 나름대로 저기인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대학들도 많지 않을 것 같고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절대평가를 하는 것이 교육적으로 옳은데 그걸 가지고 뭐 저는 변별성은 가지 두 번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도덕적 교사들의 도덕적 딜레마에 빠지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양심적으로 채점하면 이렇게 나쁜 교사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2008년 이전에. (B, 교수, 4차)

이상의 내신 성적 부풀리기 문제와 교사의 평가 역량 및 평가 신뢰도에 대한 우려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여러 방안이 제시되었다. 첫째, 채점 과정에 AI 시스템을 도입하여 객관적이고 정교한 평가를 수행하는 것이다. 둘째, 교사 연수와 같은 전문성 강화 프로그램을 통해 교원의 평가 역량을 제고하는 방안이다. 셋째, 학생의 개별 성장 이력을 누적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성취평가에 부합하는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방식을 개선하여 전형 자료로서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이다. 마지막으로, 외부 표준화 시험을 시행해 학교 간 내신 점수를 조정하거나, 국제바칼로레아(IB) 기구의 공인인증체제를 벤치마킹하는 등 절대평가를 운영 중인 해외 사례를 참고하는 방안도 언급되었다.

> 고교 교사들은 학생들 사이 계량적 비교 방식(4%/1등급)에 익숙하여 복잡한 교과별 성취 수준에 근거하여 정확하게 진단하는 평가역량이 아직 갖추어져 있지 않다는 지적도 있음. 하지만 이는 9등급 상대평가를 오래 지속하면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우려로 보이며, 이제 교과별 교사 양성에서부터 개별 과목의 성취기준과 성취수준에 대한 안목과 교수 평가 감각을 갖추도록 하는 데 우선적으로 중점을 두어야 함. 실제로 개별 과목에 대해 가장 잘 아는 사람은 교사 자신이기 때문에, 과목별 성취수준과 가르치는 학생들의 특성을 반영하여 성취도별 등급을 타당하게 판단하는 평가역량은 교사가 체계적 훈련과 개인적 교수 경험을 통해 충분히 갖추어 갈 수 있다고 판단됨. 그리고 처음에는 학교별 성적 부풀리기 문제가 등장할지 모르지만, 교사별

평가 과정에 대한 적절한 모니터링(교내, 교외), 과목평균/원점수와 성취등급 사이 상관 관계, 성취등급별 분할점수 공개, 지필평가/수행평가의 주요 내용 공개 등이 이뤄지면 성적 부풀리기 문제는 해소될 수 있을 것임. (A, 교수, 3차)

다) 고등학교 유형 간 유불리 문제에 대한 대응 방안

내신과 수능의 절대평가 전환과 관련된 세 번째 쟁점은 고등학교 유형 간 유불리 문제이다. 성적이 우수한 학생이 재학 중인 특목고나 자사고의 경우, 내신이 절대평가로 전환되면 일반고에 비해 상위 등급을 받는 학생의 비율이 높아져 고등학교 서열화가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또한 변별력 약화로 인해 대학입시에서 내신의 영향력이 감소할 경우, 학생부 위주 전형 비율이 높은 비수도권 일반고는 입시 부담이 오히려 가중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그리고 현재 지금 자사고 외고도 원래는 일반고로 전환을 하려고 하다가 다시 이제 자사고 외고는 그대로 남아 있는 걸로 됐는데 내신 절대평가가 되는 상황이 된다라면은 거의 절대 자사고 외고 과학고가 무조건 유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알고 있는 모 자사고 같은 경우는 수학 1등급이 144명이 나오더라고요. 모의고사에서 그런데 제가 아는 공립 고등학교는 수학 1등급이 전교에 2명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대학교에서 과연 얼마나 거의 똑같은 평가 기준을 가지고 할 것인가 이렇게 되면은 사실은 절대평가로만 간다라면은 지금의 서울 같은 경우도 사실 자사고 외고로도 많이 몰리게 될 거고 지역 같은 경우도 지역 자사고라든지 전사고로라든지 이런 경우로 가게 될 것 같고. 제가 작년에 상담했던 OO고등학교에 내신 2점 후반대 OO의 내신 2점대 후반대 아이가 모의고사 성적이 2등급 3등급 2등급 3등급이에요. 1등급 정도가 아니라 진짜 모의고사와 내신이 비슷한 OO고에서의 비슷한 아이였는데 OO고라는 교육 과정을 이수했다라는 이유로 그 아이가 최종적으로는 OO대학교 약대를 장학금을 받고 갔어요. 모의고사 수능 성적이 2등급 3등급인데 그 정도의 학업 역량을 갖추고 있는데 OO고의 교육과정을 이수했다라는 이유로 이렇게 OO대 약대를 장학금으로까지 간다라면 이게 과연 어떨 것인가 이 부분도 사실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내신 절대평가 상황에서 된다라면은 자사고 외고가 너무 절대적으로 유리한 상황이 될 것 같고 사실 지금으로서도 일반고가 공교육이 많이 어려운 상황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고쳐지지 않고서는 사실 내신 절대평가를 딱 도입하고 그다음에 수능 절대평가로 가는 거는 좀 무리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I, 연구사, 4차)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고교 서열화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로 특목고와 자사고를 일

반고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안하기도 하였고, 일반고 중심의 균형주의 전형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 상대평가가 폐지된 후, 우리 사회가 가장 예민하게 받아들일 부작용은 학교유형별 유불리 문제일 가능성이 농후함. 특목고나 자사고 학생들에서 성취평가 상위등급(A) 비율이 지나치게 높게 나타나는 경우, 일반고 학부모/학생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커지고 그 여파가 대입의 결과에 반영되어 나타나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음. 하지만 성취평가제가 과목별 성취수준에 따라 학업역량의 등급을 부여하는 체제라면 우수한 학생이 몰려 있을 때 상위등급이 많은 것은 당연한 현상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임. 사실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교육적 차원에서만 논의하기는 어려우며 사회적 인식 개선이 함께 이루어져야 함. 자사고와 특목고가 교육을 잘해서가 아니라 우수한 학생을 선점하였기 때문이라는 논점이 부각되면, 이 학교유형들도 추첨형 고입 선발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겠지만 이는 새로운 부작용을 낳을 수도 있음. 가장 예민한 문제는 대입 결과이기에, 대입전형 체제를 개선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음. 현재는 '지역'위주로 균형주의 전형(지역균형전형, 지역인재전형 등)을 운영하는데, 여기에 더하여 '학교유형'(일반고) 중심의 균형주의 전형을 확대하는 방안도 해결책이 될 수 있음. 예를 들어, 서울대 '지역균형전형'의 경우에 이름은 '지역균형'이지만 실제로는 지역별 할당이 없으며 '일반고 전형'의 성격이 더욱 강함. 앞으로 이런 유형의 전형을 늘려야 함. (A, 교수, 3차)

> 고교학점제하에서 자사고, 특목고 존재 자체가 잘못되었다. 즉 고교체제가 잘못된 것이므로 고교체제를 일반고 중심 교육과정 다양성으로 재편한다. (D, 교육기관 전문가, 3차)

평가 체제의 변화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대학 서열 완화 정책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대학이 '명문대' 중심이 아닌, 분야별 교육 우수 대학 체제로 정립된다면, 대학입시에서도 학생을 변별해야 하는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다.

> 전제조건까지는 아니더라도 대학 서열을 완화하는 정책과 병행해야 수능 절대평가 전환이 보다 용이한 환경이 조성된다. 대선공약인 '서울대 10개 만들기'와 같이 대입 병목현상을 완화함과 동시에, 채용이 학벌에서 역량 중심으로 반영되는 추세를 반영하여 더 이상 명문대 입시가 소위 좋은 일자리를 독식하는 사회구조가 아님을 공유한다. 이를 바탕으로 역량교육을 제대로 하는 대학이 분야별로 인정받는 대학 혁신을 이루고, 소위 좋은 대학이 SKY가 아닌 분야별 역량교육을 제대로 하는 곳이 되도록 한다. 이렇게 대학 서열이 완화되면 지금과 같이 학생을 촘촘히 변별해야 하는 대입제도의 부담이 한결 가벼워질 것이고 앞서 말한 변화가 충분히 작동할 수 있을 것이다. (D, 교육기관 전문가, 3차)

이상의 절대평가 전환에 따른 쟁점 및 쟁점에 대한 대응 방안을 정리하면 다음 〈표 Ⅳ-4〉와 같다.

〈표 Ⅳ-4〉 절대평가 전환에 대한 쟁점 및 대응 방안

쟁점	대응 방안
변별력 약화	• 절대평가 본래 취지는 변별에 있지 않음 • 평가 지표와 평가 자료 다양화 • 수능 및 대학입시 제체 이원화 – 1단계: 수능(자격고사) → 2단계(대학별 면접, 논술) – 수능Ⅰ: 공통·통합 과목, 수능Ⅱ: 선택 과목 • 평가 기준 세분화 및 등급 다양화
평가 신뢰도, 교사 평가 역량	• AI 시스템 도입으로 객관적이고 정교한 평가 수행 • 교사 연수 강화를 통한 교원 평가 역량 제고 • 성취평가에 부합하는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방식 개선으로 평가 자료 실효성 향상 • 외부 표준화 시험 시행으로 학교 간 내신 점수 조정 • 해외 사례(예: IB 평가 체계) 벤치마킹
고등학교 유형 간 유불리 문제	• 고교 서열화 폐지(특목고와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 • 일반고 중심 균형주의 대학입시전형 확대 • 대학 서열화 완화 정책과 병행

2) 중장기적 서·논술형 평가 전환

선다형 위주의 평가가 지니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내신과 수능을 중장기적으로 서·논술형 평가로 전환하는 방안이 제시되었다. 이러한 전환은 대학입시가 단순한 지식 암기보다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서술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서·논술형 평가를 통해 정답을 찾거나 오답을 피하는 연습에서 벗어나, 학생의 사고력과 관점의 다양성을 평가하고, 답을 탐색하거나 자신의 생각을 정립하는 과정을 평가함으로써 학습 주제에 대한 단편적 지식이 아닌 입체적이고 융합적인 사고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역량 기반 교육과정의 취지와 정합성을 지닌다.

> 그중에서 저희가 이번에 2028 준비하면서도 교육부가 발표한 이제 2028 수능 개선 방안을 보면서 좀 안타깝다 생각이 들었던 것들이 이제 남아 있는 건 수능 정도가 조금 교육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시험 체제로 변경 변화했으면 좋겠다라고 제시를 했었어요. 그래서 외국 사례도 좀 많이 연구를 하고 그랬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대학의 입장은 아니지만 궁극적으로 서논술형 수능은 반드시 도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학교 교육에 중장기적으로 도움이 될 것 같고요. …… 우리가 학교 교육에서 역량 중심 교육으로 바꾸면서 국어만 예를 들면 말하고 듣고 읽고 쓰는 능력 키우는데 수능에서는 그걸 못 받아들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부 능력이라도 다 골라내는 능력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뭔가 제대로 된 역량을 키울 수 있다면 서논술형 수능은 저도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좀 방법을 좀 구안을 해 보면 못할 것도 아니다. (H, 입학사정관, 2차)

한 참여자는 그동안 공정성과 객관성을 지나치게 강조한 결과, 선다형 평가가 중심이 되어 교육과정이 왜곡되었다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서·논술형 평가의 도입이 교육과정과 평가의 다양화 및 유연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였다.

> 선생님들은 서논술형 평가니 이런 것들이 선다형 문항보다 서논술형 평가가 훨씬 더 좋아서라기보다는 기존에 너무 공정성을 강조한 객관성을 강조한 성과형 중심의 문항 위주로 수능이 출제되었고 그것에 따라서 고등학교 교육과정은 왜곡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보니 선다형 저기 서논술형 체제로 완전히 바꾸자 이런 취지라기보다는 조금 더 교육과정이나 이런 평가 문화가 조금 더 다양해지고 유연해지고 고등학교도 이렇게 서술형 서논술형 문항으로도 얼마든지 평가가 시행될 수 있는 이런 형태로 가는 것이 맞겠다는 생각이 들고 …… 사실은 냉정하게 얘기하면 수능 가지고 대학을 가는 학생은 10%도 안 되죠. 일반 고등학교 현실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고등학교가 이러한 형태의 종속되는 현상이 너무 심각하니 조금이라도 좀 개선해 보자라는 취지인 것 같고 …….. (K, 장학관, 정책세미나)

가) 학교 현장 부담 및 사교육 의존도 증가에 대한 대응 방안

한편, 서·논술형 평가로의 전환이 실제로 시행될 경우 몇 가지 쟁점이 예상되기도 하였다. 그중 첫 번째는 학교 현장의 부담이다. 현재 많은 학교에서는 서술형 평가가 형식적으로, 이른바 '구색 채우기'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하였다. 2022 개정 교육과정 시행 이후 평가 체제가 점진적으로 서술형 평가와 절대평가 중심으로 전환되는 흐름을 보였으나, 교육부가 2028 대학입시 개편안에서 상대평가 병행 방침을 제시함에 따라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해 다시 선다형 문항에 의존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학생 간 학업 편차가 큰 상황에서 최소 성취 수준을 보장해야 한다는 현실적 제약으로 인해, 서술형 평가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기 어렵다는 점도 지적되었다.

> 사실 2009 개정 교육과정 2015 개정 교육과정 2022 교육과정으로 넘어오면서 계속 어떤 서술형 평가 위주의 절대평가 쪽으로 교육과정의 흐름이 넘어가는 걸로 저는 느꼈거든요. 그래서 2022에서는 공통 과목 빼고는 모든 교육 과정들이 절대평가로 가는 걸로 알고 있는 상황에서 맨 마지막에 상대평가로 뒤집어졌잖아요. 그러면서 학교에서 서술형 평가를 통해서는 변별을 낼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도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또다시 선택형 문제를 낼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됐거든요. …… 사실은 학교 현장에서는 서술형 평가는 그냥 구색 채우기 정도밖에 안 될 수가 있는 거죠. 왜 그런가 하면 학생들 간의 학력 격차가 굉장히 많이 나는 일반고 입장에서는 서술형 평가가 들어왔을 때 아예 아예 한 줄도 안 써버리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 버리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 학생들은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제도라는 것에 또 얽매이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학교 현장에서는 이제 평가에 대한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요. (E, 교원, 2차)

서·논술형 평가 도입과 관련하여 또 다른 쟁점으로는 평가 방식의 변화로 인해 수험생의 불안이 가중되고 사교육 의존도가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이 제기되었다. 특히, 공교육 내에서 서·논술형 평가가 아직 충분히 정착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서·논술형 수능 준비를 위한 사교육이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나타났다.

이러한 학교의 부담과 사교육 유발 가능성을 완화하기 위한 대안으로는, 학교 평가에서 서·논술형 평가가 주된 평가 방식으로 안정적으로 정착된 이후 수능에서도 점진적으로 서·논술형 평가를 도입하는 단계적 접근이 제시되었다. 전문가들은 대학입시의 변화가 초·중등 교육과정의 변화에 선행하기보다는, 초·중등 단계에서의 변화가 충분히 이루어진 뒤 이를 토대로 상위 교육 단계로 확산되는 '아래로부터의 변화(bottom-up)' 방식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국가 수준의 수능에서 논술형 문항을 즉시 도입하기보다는, 초·중등학교 단계부터 수행평가나 내신 평가에서 논술형 평가를 충분히 경험할 수 있도록 교수·학습의 실제를 변화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구체적인 점진적 도입 방안으로는 먼저, 수업 방식과 내신 평가를 학생이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스스로 사고하고 논리적으로 서술할 수 있도록 서·논술형 평가에 적합한 형태로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IB(International Baccalaureate) 방식을 벤치마킹하거나, 에세이·탐구보고서·프로젝트 중심의 수업을 확대하여 초·중·고교 교

육과정 전반에 걸쳐 개념 기반의 탐구 중심 수업 설계를 강화하는 방안이 제시되었다.

> 논서술형 수능의 도입은 결국 수업의 변화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내신과 수능의 절대평가가 객관식 시험의 지양화를 유도한다고 하였으나 실상 가장 변화해야 하는 것은 내신의 지필고사인 객관식 시험일 수 있다고 보여짐. 우리나라의 교육도 수행평가 도입 및 반영에 따라 학생들이 많은 글쓰기를 이전 대비하고 있다고 보여지나 수행평가 자체의 변별력보다는 지필고사의 변별력에 치중하고 있다 보니 그 효과가 제약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고 있음. 학생과 학부모의 변별에 대한 의구심 등의 이유로 그럴 수 밖에 없다는 인식은 있으나 내신 상대평가를 운영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다는 것도 이해는 됨. 내신 상대평가가 되면 이러한 부분은 좀더 완화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함. 또한, 최근 여러 시도에서 IB 도입을 하고 이를 반영한 교육을 하고 있는데 IB 수업 자체가 학생이 스스로 생각하고 자료를 찾게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서술하는 데 수업의 방향성이 있다는 점을 생각해 보면 IB 자체 도입만을 고려할 것이 아닌 IB의 수업의 방식 중에 우리 나라 교육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찾고 이를 교육에 반영하는 교육 방식의 변화를 좀더 정책당국(교육부, 시도교육청 등)이 유도하고자 노력하는 부분도 필요할 수 있다고 봄. (G, 입학사정관, 3차)

다음으로, 문항과 교과를 구분하여 단계적으로 서·논술형 평가로 전환하는 방안이 제시되었다. 문항과 관련해서는, 먼저 서술형 문항을 도입한 뒤 서답형 평가가 학교 현장에 정착된 이후 논술형 문항을 도입하는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또한 도입 초기에는 예시 문항을 충분히 제공하여, 일정 수준으로 유형화된 문항을 바탕으로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제안이 제시되었다.

> 이게 뭐냐하면 서논술형이 사실 스펙트럼은 다양하죠. 한 글자 두 글자 한 단어 쓰는 거에서 완전히 창의적인 글을 쓰는 것까지 그래서 서논술형으로 지금 이렇게 한꺼번에 되어 있지만 단계적 적용을 생각하면 처음에는 서술형 정답형부터 시작을 해서 창의적인 논술형으로 가는 그런 단계도 가능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국책연구소 연구위원, 정책세미나)

> 사실 수능 문제도 이게 오지선다기 때문에 발전이 불가능한 건데 서술의 그러니까 논술이라는 표현도 이제 없애지는 말아야 되는데 평가원에서 그 예시 문항을 줘야죠. 초기에 예시 문항을 주고 과열되지 않고 논술의 깊숙한 쪽으로 가지 않도록 가이드를 하면서 몇 년 보고 나면은 이 깊이 있는 문제로 변환이 될 것 같아요. 발전할 것 같다는 생각 (교원, 정책세미나)

> 그다음에 문항 유형이 만약에 논술형으로 나아간다 하면 확실히 어렵죠. 어려울 때 초기에는

> 사교육에 부담이 있기 때문에 예시 문항들을 다양하게 제공을 해서 전형화된 문항부터 출발하고 그래서 약간은 학생들이 공교육 안에서도 접근 가능하게 예시 문항을 약간 유형화해서 주고 그 대신 그것은 창의 창의적인 사고를 묻기는 어렵죠. 근데 이제 나중에 점점 논술형으로 갔을 때 창의적인 문항이 접근 가능하게 이렇게 설계를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고요. (국책연구소 연구위원, 정책세미나)

서·논술형 평가를 실시할 과목에 대해서는, 해당 평가 방식에 가장 적합한 과목을 중심으로 평가 체제를 변화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구체적으로는 통합형 논술보다는 교과별 논술이 보다 타당하며, 일반 교과 중에서도 탐구 영역 과목을 중심으로 서·논술형 평가를 실시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견해가 나타났다.

> 제 생각에는 교과별 논술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교과별 논술인데 자기가 자기가 가고자 하는 학과 혹은 자기가 2 3학년 선택한 교과 중에서 한두 개 한 두세 과목 정도를 수확일 수도 있고 물일 수도 있고 또 다른 거일 수도 있고 데 이런 것들을 좀 선수형으로 보게 하고……. (B, 교수, 4차)

> 그래서 이제 만약 하게 된다면 탐구 부분 쪽에서 서·논술이 탐구나 아니면 외국어까지는 좀 그렇고 탐구 쪽에서 좀 줄여야 탐구 쪽에서 자기가 이제 진로와 관련해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풀어낼 수 있는 것들을 수업 시간에 풀어서 공부했던 것들을 그냥 갈 수 있으면 좋은데 그러려면 과목 구조가 조금 바뀌어야 될 거예요. 지금 현재의 그러니까 저는 이제 물리 선생이었기 때문에 과학 구조는 1학년 때는 아까 원 일반 선택 수준에서는 거의 개념형이고 실제로 적용형은 거의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개념을 그냥 단답형으로 쓰는 건 모르지만 그 이상 넘어가는 거는 원에서 원 수준이 지금 현재 물화생지 과목에서는 좀 2022에서 조금 어려워지긴 했는데 여전히 교육과정 해설에 보면 정성적이고 현상적인 요인들을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그 위로 올라갔을 때 심화 단계로 갔을 때 적용시키는 걸 자연스럽게 가는 걸로 돼 있거든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교육과정에 대한 변화가 분명히 필요합니다. (E, 교원, 5차)

한 전문가는 수능을 수능Ⅰ과 수능Ⅱ로 이원화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구체적으로, 수능Ⅰ은 주요 교과를 중심으로 객관식 문항 위주로 시행하고, 수능Ⅱ는 고등학교 2~3학년의 선택 교과 중 대학 입시 요강에 따라 1~3개 교과를 선택하여 서·논술형으로 실시하는 방식이다.

수능을 이원화하는 방안을 적극 고려해야 함. 수능Ⅰ은 모든 수험생이 주요 교과 전체를 '객관식+일부 주관식(단답형)'형식으로 치르는 절대평가 시험임. 대학은 각 교과의 최저 등급을 제시하고, 수험생들은 각 교과의 절대평가 등급을 적절하게 혼합하여 대학에 지원하면 됨. 하지만 이 역시 최상위권 변별력에 문제가 발생함. 또한 상위권 학생들의 창의적 사고능력을 신장하기 위해서는 '객관식+일부 주관식(단답형)'은 한계가 분명함. 따라서 수능Ⅱ를 논·서술형 시험으로 도입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수험생들이 치르도록 할 수 있음.

(가칭) 수능Ⅰ
응시 대상: 수험생 전체
응시 교과: 주요 교과
평가 방식: 객관식+일부 주관식 (절대평가 등급 산출)

(가칭) 수능Ⅱ
응시 대상: 수능 Ⅰ 응시자 중 일정 등급 이상(약 10~15%)
응시 교과: 고 2~3학년의 선택교과 중 1~3개 교과(대학 입시 요강에 따른 선택)
평가 방식: 논·서술형 (B, 교수, 3차)

나) 변별력 약화에 대한 대응 방안

서·논술형 평가로의 전환에 따라 변별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었다. 서·논술형 평가는 지식의 단순 암기보다는 고차원적 사고력과 논리력 등 종합적 역량을 측정하는 데 초점을 두기 때문에, 평가 과정에서 정성적 요소가 개입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채점 기준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채점자 간 신뢰도가 낮아져 변별력이 저하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평가 요소별로 세분화된 채점 기준을 마련하여 채점의 일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함으로써 변별력을 보완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상위권 대학 등 학업 역량의 변별이 필요한 경우에는, 앞서 제안된 바와 같이 수능을 수능Ⅰ과 수능Ⅱ로 이원화하여 운영하고, 변별이 필요한 대학에서 선택적으로 수능Ⅱ 교과의 점수를 반영함으로써 변별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그래서 대학에서 어려워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술형까지 그럼 변별력을 어떻게 확보할까 이 방안에 대한 고민도 필요한데 서술형은 점수제 체제를 어떤 식으로 제공하느냐에 따라 변별력을 또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서답형 같은 경우도 충분히 변별력 그러니까 서·논술형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검사 도구를 그것이 어떻게든 가능하고 예컨대

> 논술형이라 하더라도 평가 요소별 점수를 부여하는 경우 점수가 나올 수 있고 그다음에 총 점수로 해서 이렇게 등급만 제시할 수가 있는데 총 점수를 제시해서 등급만 제시할 경우에는 변별력이 떨어지죠. 근데 이제 평가 요소별로 부분 점수를 줬을 때는 충분히 변별력이 있을 수 있거든요. (국책연구소 연구위원, 정책세미나)

> 결국에는 이제 입시는 저도 아까 말씀하신 OO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화될 필요가 있고 이제 앞으로의 대입이 이제 절대평가 이 선형이 이제 강조가 되어야 된다라면은 독일에서 제가 이번에 최근에 갔다 왔었는데 독일은 아예 100% 초중고를 절대평가를 하고 대신 절대평가를 제대로 변별할 수 있도록 지금 사실 절대평가가 과연 제대로 변별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고는 있지만 독일 같은 경우는 아예 그런 측정 도구들을 진짜 절대평가에 대한 고민을 세분화하고 쪼개고 쪼개고 쪼개고 정말 다양한 영역들을 쪼개서까지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좀 따라해서 앞으로 이제 성 음수형 평가가 이제 대세가 되고 학생들을 위한 교육이 된다라면은 이런 거를 제대로 근절할 수 있게 그러니까 어설프게 근절하는 게 아니라 선 논술형이 도입이 된다라면 이걸 제대로 분별하고 사실 학교 현장에 이거를 제대로 선생님들이 이것에 대해서 적응하고 그다음에 대입이 같이 이어질 수 있도록 이런 노력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I, 연구사, 정책세미나)

다) 평가 공정성 확보에 대한 대응 방안

서·논술형 평가로의 전환과 관련하여 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 그리고 교사의 평가 역량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었다. 서·논술형 평가는 정교한 채점 기준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일관된 채점이 어렵고, 정성적 요소가 포함되기 때문에 평가자의 주관이 개입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제한된 시간 내에 다수의 학생 답안을 읽고 평가해야 하는 현실적 제약으로 인해, 평가의 질이 저하될 수 있다는 점도 지적되었다. 특히 서·논술형 내신 평가의 경우, 교사들이 세부적인 채점 기준을 개발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역량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다.

전문가들은 서·논술형 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AI 도입이 필수적이라고 보았다. 서·논술형 시험을 실시할 때 CBT(Computer-Based Test) 방식을 활용하고, AI를 통해 채점을 수행하는 방안이 제시되었다.

그러나 한 평가 전문가는 AI 채점에는 오류 가능성이 존재하며, 수능과 같은 고부담 시험에서는 극히 낮은 오류율조차 용납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따라서 인간 채점자가 AI와 상호보완적으로 채점하는 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으며, 대규모 서·논술형

시험에 적합한 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평가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장기적 관점의 로드맵을 설정해 단계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서·논술형 수능의 경우, 채점 기준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마련하고, 채점은 학생이 지원한 대학 또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소속 전문가가 담당하는 방안이 함께 제안되었다.

> 서·논술형 시험으로 치러지는 수능Ⅱ의 경우 공정한 채점이 관건임. 채점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CBT(Computer-Based Test)를 도입해야 함. 일본에서 서·논술형 입시가 실패한 이유 중의 하나는 채점하기 어려울 정도의 필체가 많았음. CBT 답안지는 1차로 인공지능 채점을 거쳐 2차로 사람이 직접 채점하는 시스템을 고려할 수 있음. 사람이 채점하는 경우, 평가원에서 채점을 직접 담당할 수도 있고(평가원에는 임용고시 등의 서·논술형 시험 채점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음) 아니면 수험생이 지원하는 대학에 2차 채점을 넘길 수도 있음.
> - 또한 서·논술형 시험에 대한 학생들의 경험을 축적하고, 평가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을 얻기 위해서는 학교 내신을 단계적으로 서·논술형으로 전환하고 인공지능 채점을 도입할 필요가 있음. (B. 교수. 3차)

> 그런데 이 부분은 뭐냐 하면 만약에 컴퓨터 기반으로 보면 논술형도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학생들이 답안을 컴퓨터로 작성을 하니까 근데 이제 고부담 시험의 경우에 수능의 경우에 모든 학생들이 동시에 컴퓨터에 접속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오류가 날 가능성이 있단 말이죠. 아무리 이제 다발이 좋다 하더라도 그래서 이제 시도를 못하기 때문인데 그래서 보니까 지금 인천 이렇게 혹시 인천의 선생님도 계신지 모르지만 요즘 인천의 서논술형 자동채점에 대해서 많은 언론 보도가 나온 것 같아서 저도 사진 프로그램 본 적은 없는데 답안을 학생 답안을 인식을 해서 자금 투자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거기에 정확도가 95%라고 하는데 제가 사실은 보지 않았기 때문에 평가하기는 어렵지만 세모예요. 학생 답안 글씨 보신 적 있어요. 저 이제 학업 성취도에서 학급 성취도에서 내부 판을 정하고 인식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 오류가 정확도 90%인데 그러면 그 답안을 다시 한 번 일일이 두 명이 점검을 해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확정이 돼요. 그 그 기간이 또 필요해요. 왜냐하면 95%라는 건 5%의 오류가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고부담 시험에서 5%의 오류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안 인식의 정확도가 95%라고 해서 안심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걸 다 일일이 점검을 해서 최종 확정을 한 다음에 채점을 하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그리고 이 AI가 그러면 어디까지 평가할 수 있느냐 문장 길이 문장 수 오류 이렇게까지는 일단 할 수 있죠. 그렇지만 인간 채점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기계와 인간이 복수 채점을 하고 이것이 상호보완적으로 채점을 하고 추후에 또 여러 방의 여러 번의 절차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서논술형의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이제 채점의 절차까지도 고민해 보면서 중장기 로드맵을 제시하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의견을 드립니다. (국책연구소 연구위원, 정책세미나)

서·논술형 평가를 채점하는 교사의 역량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 대체로 긍정적인 견해를 보였다. 프랑스의 경우 교사들이 바칼로레아 시험의 채점을 담당하고 있는 사례가 있으며, 우리나라 교사들 역시 높은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적절한 연수와 지원 체계가 마련된다면 충분히 수행 가능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1) 논서술형 평가 도입을 단계적, 점진적으로 해야 한다. 특히 논서술형 평가가 학교 교육에서 먼저 안착하여 우리 학생이 사교육을 의존하지 않고도 논서술형 평가에서 요구하는 역량을 갖출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수능 논서술형 평가 도입 로드맵에는 학교 평가에서 논서술형 평가 내실화 방안이 포함되어야 한다.
(2) 학교 평가에서 논서술형 평가 내실화 방안의 핵심은 교사 역량을 증진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손꼽히게 우수 인력이 사명감을 가지고 교직으로 진출한다. 교육부, 교육청이 교사에게 이러한 역량을 갖추도록 교육하는 일은 가능하고 무엇보다 중요하다.
(3) 교사의 평가 권한을 강화하고 이를 지원해야 한다. 교사 평가 지원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또 IB 도입으로 논란이 많지만, IBDP에서 교사 논서술형 평가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시스템으로 높이는 방식은 충분히 벤치마킹할 만하다.
(4) 앞서 언급했던 수능 이원화 체제에서 수능Ⅰ은 선다형 중심으로 운영하고, 수능Ⅱ에서 선택과목 시험에 대해 도입한다. 그러면 수능Ⅱ가 필요한 학교, 학과가 일부인 상황에서 변별에 대한 부담을 줄여줄 수 있다. (D, 교육기관 전문가. 3차)

여담으로 프랑스 바칼로레아라는 시험 있잖아요. 네 전적으로 다 서술형이죠. 예 서논술형 시험입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채점을 교사들이 합니다. 네 우리 할 수 있습니다. 네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준비하면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돈이 좀 많이 듭니다. (H, 입학사정관, 3차)

이상의 서·논술형 시험 도입의 쟁점과 쟁점에 대한 대응 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Ⅳ-5〉 서·논술형 평가 전환에 대한 쟁점 및 대응 방안

쟁점	대응 방안
학교 현장 부담 및 사교육 의존도 증가	• 초·중등학교 서·논술형 평가 안착 후 점진적 도입 • 서술형 → 논술형 단계적 도입 • 예시문항을 충분히 제공 • 서·논술형 평가 방식에 가장 적합한 과목부터 우선 변화 • 수능을 이원화하여 수능Ⅱ에서 서·논술형 도입 - 수능Ⅰ: 교과 중심 객관식, 수능Ⅱ: 선택 교과 중 일부 서·논술형
변별력 약화	• 평가 요소별 세분화된 채점 기준 마련 • 수능 이원화 시 변별이 필요한 대학은 수능Ⅱ의 교과 점수 반영
평가 공정성	• CBT 방식으로 실시, AI 평가 시스템 도입(인간 채점자와 상호 보완) •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채점 기준 마련, 학생 지원 대학 및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전문가의 채점 • 국내 교사의 평가 역량은 적절한 연수와 지원으로 서·논술형 평가 역량의 충분한 함양 가능

3) 수·정시 통합

대학입시의 세 번째 개선 방안은 수시 및 정시 통합(수·정시 통합)으로, 현재 수시와 정시모집으로 분리되어 있는 대학입시 전형을 고등학교 3학년 2학기까지의 교육과정을 모두 마친 후 연 1회 실시하는 방식이다. 수·정시 통합은 학생이 수시와 정시를 동시에 고려해 입시 전략을 세워야 하는 부담을 줄이고, 내신과 수능 성적이 확정된 이후 지원할 수 있어 입시 예측 가능성이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연 1회 실시함으로써 대학입시 전형을 간소화 하려는 정책 방향과도 부합한다.

>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건 말씀드린 교육과정 정상화 학교 교육 내실화에 좀 도움이 되는 시기 이후에 진행하는 거고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수시와 정시에 나누어서 하던 대입 전형을 한 번에 한다라는 건 어떻게 됐든 부담이 경감됩니다. 물론 대학이 조금 더 부담이 경감될 수도 있겠죠. 학생 입장에서는 나는 수시 정시 두 번 하는데 왜 한 번 하냐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지만 여기 계신 분들은 알 거예요. 수시에 지원하는 학생 풀과 정시 집단의 학생 풀은 지금 대한민국은 다릅니다. 전혀 다른 이질적인 아이들이어 가지고 이건 이제 수정 통합했을 때 기술적인 문제지만 전용 요소 잘 활용해서 양쪽 다 기회를 주면 되는 겁니다. 그건 어려운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부담을 경감할 수 있다는 거 하나 그다음에 교과도 3학년 2학기까지 마치

면 자신의 어떤 성적을 다 알고 수능도 결과를 다 알고 지원을 하게 되면 지원하는 학생들의 어떤 예측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또 대학도 설명 안내하기는 좀 수월해지는 경우 요소들이 좀 많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예측 가능성도 좀 높아지고 전형 운영의 안정성 자체가 높아지겠죠. (H, 입학사정관, 4차)

- 이 방안은 수시와 정시로 나뉜 전형 시기로 인해 고교 3학년 교육과정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점, 서로 이질적인 전형요소(학생부 vs. 수능)로 인해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이 가중되고 전형의 복잡성이 늘어난다는 점을 해소하기 위해 제시됨
  ……
- 연간 1회만 전형을 실시하므로 전형 간소화 정책에 들어맞으며, 대학의 업무를 경감할 수 있고, 고교학점제 취지와 운영 방식에 적합(학기집중이수)한 방식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임
- 또한 고등학교 학사 일정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전형을 시작하므로 고교 교육과정 운영 정상화를 도울 수 있고 수능과 3학년 2학기 성적을 모두 확인한 후 대학 지원을 하므로 입학전형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음 (H, 입학사정관, 3차)

또한, 학령인구 감소가 가속화되는 현 상황에서, 대학 입학 자원의 부족은 수시·정시 이원화 구조를 유지하기 위한 기반을 약화시키고 있다. 따라서 수·정시 통합은 장기적으로 불가피한 과제로 볼 수 있다.

사실 수정시 통합 관련해서는 제가 처음으로 이렇게 조금 구체적인 글을 작성을 해본 게 한 2017년 18년 이때인데요. 이게 가능할까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조금 회의적인 시선이 없지 않지만 일단 선생님들도 고민을 해보시고 여러 분들이 고민을 해보셨는데 이게 과연 수정시 통합이 정말 교육적인 효과가 있느냐 어 있다는 전제에서 접근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제 사실은 지금 시기보다는 조금 더 저는 먼 미래에 적절할 것 같은 게 다른 어떤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만 아이들 30만 시대 그러니까 대입 지원자 자체가 30만 시대는 이제 40 38년 정도 될 것 같은데 그때는 필연적이 되지 않을까 이걸 수시 정시로 나눠 봅을 수 있을 만큼 대학도 아마 운영 여건이 지금 같지는 않을 것 같고요. 지원하는 학생 입장도 그럴 것 같습니다. (H, 입학사정관, 4차)

보면 왜 이 수시라는 말이 들어왔을까 그때는 이제 미국 미국의 대학 입시에서 아까 상시 선발 상시 선발의 개념으로 가자는 쪽으로 해서 수시가 들어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그런 것보다는 한쪽 방향으로 좀 몰아서 서로 이제 주고받을 수 있고 자연스럽게 경쟁 구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서 선발하는 그런 식으로 가고 그다음의 문제는 사실은 큰 틀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수시 정시 통합이 당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당연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물론 경제적으로 미치는 효과나 사회적으로 미치는 효과가 이 구조 조정으로 인해서 미치는 여파는 굉장히 크겠지만 지금 그거는 전체적인 틀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차피 인구 구조가 학생들이 20만 명대로 줄었을 때는 어차피 죽어 나가는 학교가 지금 이번에 그런 예시도 있잖아요 OO대하고 OO보건대가 합치잖아요. 통합을 그러면 저는 미래 쪽으로 가면 결국 대학하고 전문대학이 같이 합쳐져 통합되면서 그 학년제 대학 안에서 2년제 3년제 4년제 5년제 6년제 7년제까지 갈 수 있는 운영되는 구조로 어차피 대학 교육도 변해갈 것 같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여기서 대입은 어차피 수정시 통합 쪽으로 방향성을 가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E, 교사, 2차)

수·정시 통합은 무엇보다 대학입시전형이 고등학교 학사 일정 종료 이후에 시작된다는 점에서, 고등학교 3학년 2학기 교육과정의 정상화를 위한 필수적인 방안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었다.

그리고 또 여기 보니까 수시 정시 통합이 있는데요. 그런데 아마 저희 고등학교 입장에서는 그렇게 갔으면 하는 방향이 맞는 거고 아마 대학마다 이게 워낙 상황이 다르다 보니까 아마 대학에서 수정 통합을 받아들이기가 아무래도 또 시간적도 그렇고 시간도 약간 촉박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래서 사실 우리는 원래 4월달에 사실은 신학기 개학을 하자는 게 큰 흐름인데 그거랑 같이 맞물리면은 오히려 수시 정시 통합은 그래도 약간 시간적인 부분을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긴 해 보면서 수시 통합을 하여 고등학교 교육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꼭 여기 들어가고 좀 더 세부적으로 준비가 돼 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전에 1학기 출시 있을 때 그랬지 그냥 2학기 때 합격한 학생들은 그냥 학교에 학교 생활 끝났거든요. 그런 부분들 연장선에서 수시도 합격하고 나면 이제 나름대로 고등학교 생활 끝났다라고 해서 또 교실 현장은 또 많이 나뉘게 되고 그런 면에서는 수시 정시 통합은 이번 기회에 한번 했으면 좋겠다. (F, 교원, 5차)

가) 전형 운영 기간 관련 대응 방안

수·정시 통합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실제 도입 과정에서는 여러 운영상의 쟁점이 논의되었다. 먼저, 전형 운영 기간 및 평가 시간 확보, 지원 횟수 보장, 전형 요소 및 전형 명칭 결정과 관련된 문제이다.

첫째, 전형 운영 기간과 관련해서는 현재 수시모집이 9월에 원서접수를 시작해 수능 이전에 상당 부분 진행되고, 정시모집은 수능 이후에 시작되어 전형 기간이 분리되어

있다. 그러나 수·정시가 통합될 경우 전형 시기를 언제로 설정할지 결정이 필요하다. 또한 수시와 정시로 분리되어 있던 지원자들이 한꺼번에 통합 전형으로 지원하게 되면, 대학이 지원자를 평가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기 어려울 수 있다.

이에 대해 현직 입학사정관을 포함한 전문가들은 전형 운영 기간의 일부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현재 대학이 입학전형을 운영하는 데에는 약 12주의 기간이 소요된다. 통합 전형은 고등학교 3학년 2학기 교육과정을 모두 마친 이후에 시작되므로, 추가모집 시기까지 고려할 때 수능 시행과 결과 발표 시점을 현재보다 1~2주 정도 앞당길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 보통의 대학이 입시 일정을 운영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12주 정도의 시간이 필요함
- 원서접수 및 서류제출, 서류정리 : 약 3주
- 전형운영 : 약 6주(학종 서류평가 기준)
- 선발 작업 및 각종 심의 위원회 : 약 1주
- 합격발표 및 등록, 충원 : 약 2주

※ 추가모집을 지금과 같이 운영(약 1주)한다는 가정하에 앞의 12주를 고려하면 도합 13주 정도의 입시 일정이 필요하고 이를 반영한 통합된 모집시기의 원서접수는 11월 말에서 12월 첫주에 시작해야 한다고 볼 수 있음. (12/1일부터 원서접수 하는 것으로 한다면 가능)

※ 통합된 모집시기만 가지고서 입시를 운영하게되면 접수인원 소진에 따른 미선발이 발생하는 것으로 인하여 결손인원 발생이 불가피할 수 밖에 없기에 추가모집 운영은 지방대학을 위해서라도 꼭 필요하다고 보여짐. (현재는 수시 결손인원을 정시로 이월하여 선발하고 있음)

※ 학생부 마감의 경우 기존 수시의 경우 8/30 기준이고 정시의 경우 11/30 기준이므로 정시 마감일 기준으로 위에서 언급한 원서접수 일정에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짐.

※ 위에 언급된 일정을 고려하면 현재 수능결과 발표시기와 약 2주 정도의 차이가 발생함. 즉, 수능시험일자 및 발표일자는 현행보다는 1~2주 정도 앞으로 이동하여 11월초 수능시험, 11월말 수능결과 발표로 이뤄져야만 입시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짐. (G, 입학사정관, 3차)

전형 기간을 앞당기기 위한 다양한 방안도 논의되었다. 첫째, 고등학교 3학년 2학기 학사 일정을 조정하여 전형 기간을 확보하는 방안이다. 구체적으로는 방학 기간을 단축하거나, 해당 학기의 두 차례 정기고사(중간·기말고사)를 통합하여 운영하는 방식이 제시되었다.

둘째, 대학의 입학 및 개강 시기를 조정하는 방안이다. 현재 3월 첫 주에 시작되는

대학의 학사 일정을 일정 기간 뒤로 미룸으로써, 고등학교와 대학 간 학사 일정을 조정하여 전형 및 평가 기간을 확보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 그리고 대학도 반드시 3월 첫 주에 개학을 해야 될 이유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6월 말까지만 대학 일정 끝내면 교수님들 해외 학회 다니시는 것도 제가 볼 때는 문제는 없거든요. 거의 학회나 이런 것들이 7월 달에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해외 나가셔야 되는 일정 잡으셔야 되는 분들도 그렇고 중요한 건 근데 이게 고등학교에서 학사 일정을 얼마큼 조정을 할 수 있겠는가인 거죠. 그래서 제가 대안으로 제시한 거는 시험을 한 번만 보자 빠른 시간 안에 그러니까 중간 기말 1차 고사 2차 고사에 있는 걸 한 번만 적정할 때 보고 평가 끝내고 3학년 2학기는 학생부도 좀 간소화시키고 저는 이 전반적으로 학생부가 더 간소화해야 된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도 그렇고 3학년 2학기에 한정적으로만 조금 더 간소하게 해서 대학에 넘겨주는 방식도 그러니까 사용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은 다 넣자는 거죠. 그렇게 해서 좀 평가 기간이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확보가 되면 충분히 종합 전형 방식도 평가가 가능하다. (H, 입학사정관, 4차)

또한 평가 시간 확보를 위해 평가자 수를 확대하거나 평가 단계와 차수를 조정해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도 제안되었다. 서류 평가에 소요되는 시간이 많다는 점을 고려하여, 평가자 규모를 확대해 1인당 평가 부담을 조정하고, 단계와 차수를 합리적으로 축소함으로써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면서도 효율적인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하자는 것이다.

> 근데 문제는 저는 이제 대학 입장에서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지금 현행 최소한의 어떤 변화만 주면서 즉 기간 사용의 문제에서 최소한의 변화 그다음에 전형 요소도 크게 바꾸지 않는다 이런 최대한 이제 부담 없이 이제 하겠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접근을 해봤지만 결국에 이제 대학이 좀 문제일 것 같습니다.
> …… 저희가 한 1, 2차 평가만 해도 50일 정도 소요가 돼요. 거의 12시까지 합니다. 그것도 법이 바뀌어가지고 12시 이상 못하는 거지 새벽 4시 반에 나오는 선생님도 계세요. 실제로 저희가 근무 시간 카운트는 이렇게 해도 9시 6시 기준으로 하고 추가 근무를 해가지고 시간에 하는 법적으로 해도 실질적으로는 더 오래 걸려요. 그래서 실제로 저 요즘에 쓰러지는 분들 있다는데 많이 쓰러지고 많이 힘들어 하십니다. 그 대안으로서는 이게 현실적인 안이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저희가 28명 하고 있거든요. 대충 계산해서 제가 평가량 일부러 적지는 않았는데 오해하실까 봐 40명 가까이는 봅아야 됩니다. 약 1.4에서 1.5배의 인원이 더 필요하다라는 거죠. 근데 과연 대학이 그 돈을 내겠냐 만약 대학이 그 돈을 안 낸다면 정부가 보조를 하겠냐 저는 조금 회의적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게 지금 저는 60일에서 70일까지도 고려를 해

봤는데 핵심은 종합 전형에서 서류 평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걸 시간을 압박한다고 해서 평가를 조금 가볍게 하면 그럴 수는 없는 겁니다. 이거 평가 전문성이라는 것은 그 대학의 신뢰성하고도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종합 전형을 날림으로 하게 된다라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 평가 시간 확보는 저희한테 굉장히 필수적인 거죠. 대충 할 수가 없는 구조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평가 인원을 늘리는 방안이 사실상 현실적인 거고. (H, 입학사정관, 4차)

나) 지원 기회 축소 우려에 대한 대응 방안

둘째, 현재는 수시 6회, 정시 3회(가·나·다군)까지 지원이 가능하지만, 수·정시가 통합되고 충분한 전형 기간을 확보하지 못하면 수험생이 지원 기회가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수·정시 통합의 기본 취지인 수험생 부담 완화에 부합하도록, 지원 횟수를 현재 수준과 유사하게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다. 또한, 정시의 가·나·다군 체제를 폐지하여 수험생이 보다 자유롭게 대학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제안되었다.

통합전형 시행으로 현재 '가', '나', '다'군으로 서로 다르게 운영하는 정시 수능위주전형의 모집군을 폐지하여 학생이 자유롭게 대학을 선택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다만 통합전형 시행에 따라 최대 수시 6회, 정시 3회로 제한된 지원 횟수를 조정할 필요가 있음. 수시 합격자는 정시 지원이 제한된다는 조건이 있으므로 단순히 수시와 정시 지원 횟수를 합산하여 9회 이내라는 방식보다는 추후 학생별 실질 지원 횟수를 파악하고 대학 전체 모집인원 및 수험생 규모를 고려하여 지원 횟수를 정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H, 입학사정관, 3차)

다) 전형 요소 분류에 대한 대응 방안

셋째, 현재 대학입시에서는 수시가 학생부교과 및 학생부종합 위주로, 정시는 수능위주로 전형 요소가 명확히 구분되어 있다. 그러나 전형이 통합될 경우, 어떤 전형 요소에 비중을 둘지 결정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학생들은 자신의 강점에 따라 지원하고, 대학은 인재상에 맞는 학생을 선발할 수 있도록 전형의 명칭과 유형, 그리고 개수를 어떻게 간소화하여 분류할지에 대한 논의와 합의가 필요하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전형 요소의 조합 방식을 단순화하고 전형 유형의 수를 제한하는 등 '간소화 원칙'에 따라 세부 전형이 설계되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그다음에 수시 정시가 통합이 되었을 때 이 각 대학들이 전형 수를 소위 말하는 대학이 결정하는 전형 명칭 그거 기준으로 했을 때 한 몇 개 정도 운영을 해야 대학들이 그 취지에 맞는 학생들도 뽑고 또 충분히 신입생들을 확보하게 될까 지금은 이제 수시 4개 정시 2개 정원 에는 빼고 이렇게 해서 이제 학생을 모집하는 방식인데 수시 정시가 통합된 상태에서는 그게 한 지금처럼 6개 이런 전형을 운영하는 게 이제 가능할까 가능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이제 전형을 한 3개를 둔다 4개를 둔다 이렇게 하고 이제 전형 요소들을 통합을 해야 될 텐데 전형 요소들을 통합을 전형 명칭이라는 게 전형 요소만 있는 게 아니고 또 이 이제 전형 유형도 있고 또 지원 자격도 있고 그럴 거잖아요. 서울대 같으면 일반 전형도 해야 되고 지역 균형도 해야 되고 그런데 이런 요소들을 다 반영해가지고 전행 가지수를 정하고 그럴 때 아마 지금 보면은 최소 좀 줄이고 줄인 게 한 5개 6개 이런 정도인데 수시 정시가 통합된 상태에서도 한 5개 6개를 각 대학들이 그 기관에 한 몫에 운영할 수 있을지 그리고 또 그 구분 자체가 전형 요소들이 통합이 돼 가지고 모든 전형에 학생부도 들어가고 수능도 들어가고 단순히 제1 전형 요소가 뭔지 이걸 가지고 전형 명칭을 정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우리 이제 국민들한테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질지 이런 걸 한번 좀 고민을 먼저 한번 해보고 이제 수시 정시 통합을 좀 구체적으로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우리 OO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걸 들으니까 그런 생각이 얼핏 들었습니다. (A, 교수, 4차)

그리고 제가 구체적으로 코멘트는 하지 않았지만 전형을 간소화한다라는 건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수정시 통합을 했을 때 종합 전형에 해당되는 그다음에 전형 트랙을 만들어 놓고 수능과 그다음에 서류를 같이 보는 지금 저희 정시에 교과 평가 트랙 그다음에 수능을 좀 비중을 높이는 트랙 이렇게 각각 해야 되는데 그건 대학이 자율적으로 하면 됩니다. 여건에 맞춰서 그래서 조금 간소화할 필요는 있지 않겠는가 그리고 지금 저희는 OO대는 면접을 2028부터 강화를 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면접 기간도 시간 확보가 좀 필요한 거죠. (H, 입학사정관, 4차)

셋째 대학의 전형 방법을 현행보다 단순화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교과, 수능, 논술, 실기 및 면접 등 전형 요소의 결합 방식을 단순화하되 대학 여건에 맞게 전형 방법과 그에 따른 전형의 수를 조정하는 방안이 필요함. 현재는 정원 내 전형 기준 수시 4개, 정시 2개로 제한하고 있음. 통합전형에서는 정원 내 전형 기준 학생부위주전형 3개, 수능위주전형 1개로 전형 유형을 제한하여 전형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전형의 복잡성을 해소할 필요가 있음. 특히 전형 유형별로 선발 인원을 제한하는 방식을 폐지해야 대학 여건에 맞는 전형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함. (H, 입학사정관, 3차)

라) 학생 모집 안정성 감소에 대한 대응 방안

수·정시 통합에 따른 다음 쟁점은 학생 모집의 안정성 확보 문제이다. 현재와 같이 수시와 정시가 분리된 전형 체제에서는 미충원 인원이 발생할 경우 이를 충원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전형이 통합되면 충원을 위한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질 수 있다. 특히 수도권 대학으로의 학생 쏠림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학생들의 선호도가 낮은 중·하위권 대학이나 지방 대학의 경우 미충원 인원이 더욱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학생 모집의 불안정성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우려를 표하였다.

> 지금 사실 물론 이제 고등학교 3학년 학기 문제를 보면은 수시 정시 통합이 옳은 방향이기도 하고 그런데 아마 대학 입장에서 검토를 해보면은 여러 가지 또 망설이는 요소들이 많을 것 같아요. 지금 대학 입시가 그나마 또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거는 수시 기간 동안에 거의 한 70 80% 되는 학생들을 이제 충분히 확보를 해놓고 그다음에 이제 정시에 나머지 학생들을 가지고 입시를 진행을 하면서 추가 모집까지 원활히 운영되는 이제 이런 방식인데 이걸 이제 한 목의 기관을 모아가지고 이제 진행을 할 때 여러 가지 운영상의 좀 혼란이라든지 힘들어하는 이런 부분들이 대학마다 이제 많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거고요. (A, 교수, 4차)

> 이 부분이 좀 명쾌하게 좀 저기 뭐냐 이렇게 설명이 돼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수정시 통합은 이제 저희도 옛날부터 저도 생각했던 건데 이게 지방대 학교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우리가 흔히 나쁜 말로 수시 납치라는 게 있잖아요. 학생들 입장에서 되게 비교육적이긴 한데 지방대 같은 경우는 이제 수정 100% 수정시 통합을 하게 되면 이제 지방대 같은 경우는 완전히 애들을 못 모은다는 그런 불만 내지는 불안감이 많아요. 네 그래서 지방대 학생들 특히 지방 사립대 같은 경우가 이제 어떻게 할까 지금도 이제 다 모집을 못하는데 그에 대한 좀 그에 대한 우리가 좀 해명이 좀 뭐라나 저는 저기 계획이 좀 있어야 할 것 같고요. 일단 이거 두 가지 정도만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야기하면서 더 필요한 얘기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B, 교수, 2차)

> 지금 이제 OO교수님도 말씀 주신 부분 중에 하나인데 비단 우리 대학 입장에서는 뭐 그 수정시 통합이 돼도 애들 다 채울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분명히 생각할 수 있는 거지만 지금 현재 지방에 있는 대학들이 정시를 굳이 줄이는 이면 속에는 어떻게든 뒤에서 가져갈 수 있는 리스크를 줄이려고 하는 부분이 건데 이게 그냥 단순히 통합이 돼버리면 말씀하신 대로 펑크가 이제 엄청나게 크게 날 거고 그러면 이제 결국은 뒤에서 열려 있는 게 추가 모집이 열려 있는 건데 지금 추가 모집을 할 수 있는 시간 자체가 일주일이 채 되지도 않는 상황에서 그러면 그

> 전형이야말로 진짜 수능 100으로 가야 되는데 수능에 지금 현재 바뀌는 형태 자체가 결국은 그걸 받아내 줄 수 없는 구조라고 한다면 또 또 추가 모집이 없어져야 되는 상황인 거고. 결국은 뭐 하나가 바뀌는 거에 있어서 아까 OO 교수님이 어떻게 보면 대승적으로 말씀을 하셨지만 이게 지금 뭐 하나 요소가 바뀜으로서 뒤에서 나타나는 어떻게 보면 그 나비 효과가 엄청나게 크게 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어떻게 보면 다 생각을 고민을 해가면서 정책을 만들어야지 그냥 이게 대승적으로 맞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거기에 의해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들이 의외로 감당하기가 대학들이 쉽지 않은 거고. 그 감당이 안 되는 순간 결국은 그 피해는 오롯이 또 수험생들한테 갈 수밖에 없다는 거를 한 번쯤은 또 고민을 해봐야 되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교육적 가치도 있지만 부작용에 대해서 어떻게 얼마나 맞고 갈 건지 그게 어떻게 보면 진짜 또 연구에서도 필요한 부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합니다. (G, 입학사정관, 2차)

수·정시 통합에 따른 학생 미충원 우려에 대해서는 일부 전문가들이 해소 방안을 제시하였는데, 대학 평가에서 학생 충원율 지표를 완화하고, 학생 충원이 어려운 대학에는 상시 모집을 허용하며, 추가모집 기간을 별도로 확보하는 방안이 제안되었다.

> 그리고 감히 좀 드리는 말씀이 사실은 대학 정원 문제가 대학 입장에서는 대학 평가와 관련돼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충원율을 가지고 대학 교육부가 대학을 평가하잖아요. 거기에 굉장히 높은 배점을 할애하고 있어서 대학들은 좀 고통을 많이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당시에 이제 수정시 통합안 OO선생 의견 제시할 때 같이 연구했던 게 저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같이 대안으로 나온 게 이게 서울대가 제안하기에는 좀 굉장히 좀 민망합니다만 그렇게 어려운 대학들은 상시 모집을 허용하자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서울대는 글로벌 전형으로 지금 3월 입학생과 외국 학생들을 뽑아요. 9월 입학생을 따로 뽑고 있는데 그렇다면 특히 이제 전문대학 대교협이 굉장히 수정 씨 통합의 반대 입장을 2017년 18년에도 강력하게 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허용해 주고 대학 평가에서 대학 충원율을 좀 완화하는 안까지도 고민을 해봤는데……. (H, 입학사정관, 2차)

> ※ 통합된 모집시기만 가지고서 입시를 운영하게되면 접수인원 소진에 따른 미선발이 발생하는 것으로 인하여 결손인원 발생이 불가피할 수 밖에 없기에 추가모집 운영은 지방대학을 위해서라도 꼭 필요하다고 보여짐. (현재는 수시 결손인원을 정시로 이월하여 선발하고 있음) (G, 입학사정관, 3차)

이상의 수·정시 통합의 필요성, 쟁점, 쟁점에 대한 대응 방안을 정리하면 다음 〈표 Ⅳ-6〉과 같다.

〈표 Ⅳ-6〉 수·정시 통합에 대한 쟁점 및 대응 방안

쟁점	대응 방안
전형 운영 기간	• 수능 시행 및 결과 발표 현행보다 1-2주 앞당김 • 고등학교 3-2학기 방학기간 단축 혹은 정기고사 통합 운영으로 전형 기간 확보 • 대학 입학 및 개강 시기를 일정 기간 미룸 • 평가 시간 확보 위해 평가자 수 확대, 평가 단계 및 차수 조정으로 절차 간소화
지원 기회 축소	• 지원 횟수를 현 수준(총 9회)과 유사하게 보장 • 정시 가·나·다군 폐지로 자유로운 대학 선택 보장
전형 요소 분류	• 전형 요소 조합 방식 단순화 • 전형 유형의 수 제한
학생 모집 안정성	• 대학 평가에서 학생 충원율 지표 완화 • 학생 충원 어려운 대학은 상시 모집 허용 및 추가모집 기간 별도 확보

4 분석 결과 2: 개선안 구체화 및 검토 단계

전문가 인식 조사의 두 번째 단계에서는 교육 정책 연구 경험과 학교 현장 경험을 겸비한 전문가 TF, 고등학교 교원, 수도권 및 비수도권 대학 입학사정관이 참여하였다. 이들은 첫 단계에서 진행된 일련의 면담을 통해 도출된 대학입시제도 개선안([그림 Ⅳ-2])을 검토하였다.

<table>
<tr><td rowspan="3">개선안</td><td>수능
자격고사화 및
절대평가</td><td colspan="2">• 명칭: 대학입학자격평가
• 응시 시기:
- 1안) 고3 11월 말~12월 초 1회
- 2안) 고3 9월초 1회
- 3안) 고2 11월, 고3 9월 2회
- 4안) 고3 3월, 9월 2회
- 5안) 고3 5월, 9월 2회
• 과목구성:
- 필수: 일반선택과목(국어, 영어, 수학, 한국사)
- 선택: 탐구 영역(사회・과학 통합, 선택 중심)</td></tr>
<tr><td>내신체제
개편안</td><td colspan="2">• 절대평가 5단계 성취수준 적용
• 교과평가 개선: 서・논술형 수행평가 비중 확대, 과정 중심 평가 강화
• 학교 간 형평성 확보:
- 표준화된 성취기준과 평가 가이드 제공
- 자사고・특목고 수준의 교육과정 자율권을 일반고에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교육과정 다양성을 통한 공정한 경쟁 기반 마련
• 대학 활용 방식: 대학별 전형요소 결합 시 내신은 정량・정성 혼합 반영 가능</td></tr>
<tr><td>전형 유형
개편</td><td colspan="2">대학별 전형요소 결합 예시
(수능자격시험 절대평가 7단계 + 내신 성취수준 5단계)
• 소양시험+교과정량: 기본 학업역량 검증형(예: 40:60)
• 소양시험+서류평가+면접: 성장경로・잠재역량 중심형 (예: 50:30:20)
• 소양시험+논술: 탐구・문제해결력 중심형(예: 60:40)
• 소양시험+실기: 예체능・특기 중심형(예: 40:60)
• 소양시험+교과정량+논술: 학업역량・탐구력 복합형 (예: 30:40:30)</td></tr>
<tr><td>전문가 도출
개선안</td><td>절대평가</td><td>서・논술형 평가</td><td>수・정시 통합</td></tr>
<tr><td>전문가 도출
개선 기본 방향</td><td>공교육 내실화</td><td>수능 영향력 약화</td><td>학생 성장 지원</td></tr>
<tr><td>전문가 도출
현행 대입제도
문제</td><td>상대평가</td><td>객관식 평가</td><td>대학입시로 인한 교육과정 희생</td></tr>
</table>

[그림 Ⅳ-2] 대학입시제도 1차 개선안

이번 단계의 검토는 개선안의 현장 수용 가능성, 실행 방안, 보완 필요 사항을 점검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이에 따라 전문가 TF, 교원, 입학사정관은 제도의 실질적 도입을 위해 고려해야 할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검토 의견을 종합한 결과 세 집단 모두 개선안에 제시된 주요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다만, 현장 적용 과정에서 우려되는 부분과 추가로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다소 다른 의견을 주기도 하였다.

전반적으로 교원 집단은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도 변화가 급격하게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입장이었다. 전문가 TF는 학교 교육의 내실화라는 방향성과 부합한다면 적극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보였다. 입학사정관 집단은 제도의 안정성과 변화의 균형을 모두 중시하는 입장을 보였다. 각 개선안에 대한 참여자 인식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 내신 및 수능의 절대평가 전환

내신과 수능을 절대평가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교원, 입학사정관, 전문가 TF 모두가 미래형 대학입시제도의 개선 방향으로 타당하다고 평가하였다. 참여자들은 절대평가가 고교학점제 하에서 학생의 교과목 선택 부담을 완화하여 고교학점제의 실효성을 높이고, 상대평가로 비롯되는 다른 학생과의 경쟁을 완화한다는 장점이 있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에 공감하였다.

특히 내신의 경우, 현재 일부 과목에서 상대평가와 절대평가를 병행하고 있어 절대평가로의 전환이 제도적으로 무리가 없으며, 과거 수·우·미·양·가 체제로 절대평가를 운영한 경험이 있다는 점에서도 현장 수용성 또한 높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이에 따라 참여자들은 내신 평가체제를 5단계 성취수준 절대평가로 전환하는 것이 충분히 현실적인 개선안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 현행 고1에게 시행하는 고교학점제와 관련하여 여러 논란이 일어나게 된 본 이유는 고교학점제 자체가 아닌 바로 전 과목 상대평가에 있다고 생각함. 지금도 이미 학기제를 운영하는 학교의 경우 최소성취수준보장지도(이하 최성보)를 제외하고는 진행의 방식이 거의 흡사한데 그래도 이렇게 가능한 이유는 바로 진로선택과목의 절대평가에 따른 학생들의 과목 선택 부담 완화임. 이를 고려해보면 절대평가로의 전환은 학생들의 과목선택권에 자유로움을 줄 수 있고 이는 교육과정의 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함. (G. 입학사정관)

> 5단계 척도 평가는 미국, 일본 등 여러 나라에서 활용하고 있는 체계이며 한국도 과거(수, 우, 미, 양, 가) 체제를 활용한 경험이 있음. 학생의 교육적 성장이 오로지 등수를 올려야만 표출되는 현 상대평가 체제보다 자신의 역량이 어느 수준인지 확인받고 배움의 깊이로 성장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성취평가 체제가 교육적으로 더욱 타당하고 불필요한 경쟁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라 생각함. 변별력에 관한 논의가 끊이지 않으나 애초에 무엇을 위해 변별을 해야 하는 것인지 여전히 이해하기 어렵고 오로지 대입을 위한 변별이 필요한 것이라면 그건 대학이 스스로 해결해야 할 일이라 생각함. 이미 절대평가 또는 절대평가와 유사한 방식의 대입시험 평정 체제를 사용하고 있는 나라가 적지 않다는 점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H. 입학사정관)

그러나 입학사정관과 전문가 TF는 절대평가 전환의 필요성을 강하게 강조한 반면, 교원들은 평가 체제의 변화 자체에는 대체적으로 타당하다고 평가하면서도 변별력 저하에 대한 우려를 강하게 제기하였다. 교원들은 내신과 수능이 절대평가가 전환될 경우, 시험 성적이 변별력이 낮아져 대학이 논술이나 면접 등 추가적인 전형 요소를 도입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는 곧 사교육 의존도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 얼마 전에 1학기 때 OO대 이제 입시 설명회를 다녀왔었는데 그때 내신 5등급 지금은 상대평가인데 그런 최상위권 대학에서 올 1등급만 올 텐데 어떻게 선발할 것인지 교사들에게 의견을 묻더라고요. 사정관님이 중하위권 대학은 변별하는 데 문제가 없겠지만 최상위권 대학들은 변별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예상이 돼서 결국은 제시문 면접 또는 논술로 가야 될 텐데 학교에서는 사실 그렇게 논술까지 준비를 선생님들이 해주기는 좀 어려워서 그러면 네 사교육으로 많이 넘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들었습니다. (M, 교원)

일부 교사들은 내신 절대평가 전환 시 발생할 수 있는 성적 부풀리기 문제를 우려하였다. 이들은 성적 부풀리기의 근본 원인이 대학의 변별 요구에서 비롯된다고 지적하면서, 대학이 변별을 책임지고 학교는 절대평가를 시행하면 된다는 주장은 “이상적”이라고 평가하였다(참여자 E, O).

반면, P 교사는 절대평가가 이상적인 방안일 수 있으나, 고등학교 교육과정 정상화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보았다. 그는 학생이 선택한 과목이나 학생생활기록부의 정성적 지표를 통해서도 충분히 변별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으며, 이러한 견해는 입학사정관과 전문가 TF의 인식과 일치하였다.

입학사정관과 전문가 TF 그룹은 교원 집단에 비해 절대평가 전환의 필요성을 더욱

강하게 인식하고 있었으며, 이는 학생생활기록부(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와 이수 과목 정보를 활용하면 절대평가 체제에서도 충분한 변별이 가능하다는 신념에 근거하고 있었다.

> 사실은 진로 선택 과목도 당연하겠지만 A, B, C가 돼도 저희가 질을 따질 수 있거든요. A, B, C여도 A, B, C도 저희가 아 이 과목을 이 학교는 이 학생은 제대로 배웠구나를 분류를 해 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가능한 이유가 대학이 이제 전공 적합성에 맞는 친구를 뽑는 게 아니라 고등학교 교육과정 성취 수준에 맞게 먼저 학습을 했는지를 살펴보고 이제 대학 역량에 맞게 이제 단계적으로 보기 때문에 저희는 꽤 이제 고등학교 교육과정 배경을 좀 이해를 잘 하려고 이제 이제 스터디를 많이 하고 있는 거거든요. 교육 훈련 과정의 핵심이 고등학교 교육과정 이제 좀 제대로 이해하고 들여다보기 이런 것들을 하고 있다 보니까 체계는 오히려 절대평가일수록 학생들의 부담은 당연히 더 완화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R, 입학사정관)

아울러, 교원 그룹은 절대평가의 도입을 위해서는 평가의 신뢰도와 공정성 확보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와 관련하여서 전문가 TF 서면 면담에서는, 절대평가의 현장 적용을 위한 평가 신뢰도 제고 방안이 논의되었다. 논의 결과,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개선 방향이 제시되었다. 첫째, 교원 평가 역량 강화로, 교원양성기관 단계부터 현직 교사 연수에 이르기까지 평가 전문성을 체계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교육 및 연수 프로그램을 확대한다. 둘째, 평가지원 및 협의체 구축 방안으로, 평가 연수와 예시 문항 및 평가 기준 등을 개발하고 제공하는 중앙평가지원센터를 설립하고, 단위학교 수준에서는 평가 운영의 공정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평가 협의기구를 운영한다. 셋째, 국제 사례 벤치마킹이다. 이미 절대 평가 체제를 운영 중인 IB의 교원 양성 프로그램과 평가 기준을 벤치마킹하여 제도 개선에 적용한다.

> 교과별 교사 양성에서부터 개별 과목의 성취기준과 성취수준에 대한 안목과 교수 평가 감각을 갖추도록 하는 데 우선적으로 중점을 두어야 함. 실제로 개별 과목에 대해 가장 잘 아는 사람은 교사 자신이기 때문에, 과목별 성취수준과 가르치는 학생들의 특성을 반영하여 성취도별 등급을 타당하게 판단하는 평가역량은 교사가 체계적 훈련과 개인적 교수 경험을 통해 충분히 갖추어 갈 수 있다고 판단됨. (A, 교수)

> 평가지원센터를 설립하여 평가 관련 연수와 자료를 충분히 제공하고, 예시 문항과 평가 기준도 다양하게 만들어 제공함. 여기서 교사들이 서로 정보를 나눌 수 있도록 함. (D, 교육기관 전문가)

나. 수능 자격고사화

수능을 자격고사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해 교원 그룹은 별도의 필요성이나 현장 수용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반면, 전문가 TF와 입학사정관의 경우 수능의 영향력을 완화한다는 점에서 수능 자격고사화가 타당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들은 수능이 자격고사로 운영될 경우, 고교학점제의 취지와 부합하고 학생의 학습 부담을 완화하며, 교육과정에 집중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그러나 수능 자격고사화 추진 시 용어와 제도 설계 측면에서 추가적인 고려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되었다. 첫째, 자격고사라는 용어는 모든 대학이 해당 시험을 필수 전형 요소로 채택해야 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 명칭의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둘째, 자격고사 응시범위에 대한 문제도 언급되었다. 특히, 기초학력이 낮거나 자격고사 수준을 맞추기가 어려운 다양한 배경을 가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일종의 사회통합 전형에서 자격고사 응시를 의무화할 필요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 사회통합 전형 같은 경우는 자격고사의 응시를 선택적으로 둔다거나 뭐 응시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무언가의 범위를 좀 해야 학교 현장에서도 이제 이 수능 자격고사를 준비하면서 대입을 갈 친구들과 그렇지 않아도 갈 가능성을 지도해 줄 친구들을 조금 나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 그대로 성장이라는 차원으로 가려면 뭐 좀 벼 아프지만 자격 고사가 아무리 쉬워도 P, F 식으로 가더라도 그래도 이게 당장 통과하기 어려운 정도의 그 기초학력 수준에 되는 학생들 또는 여건이 어렵거나 뭐 요즘에 다문화도 많아지고 있다 보니까 이런저런 사유로 인해서 이제 해당되는 친구들이 개념으로 따지면 사회통합 전형이라고 저희가 표명할 수 있지 않을까 농어촌 지역이라든가 뭐 그런 부분들을 조금 고려해서 응시에 대한 범위도 한번 고민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R, 입학사정관)

다. 수능 서·논술형 평가 전환

수능을 서·논술형 평가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교원, 입학사정관, 전문가 TF 모두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반드시 필요한 변화라는 데 의견을 같이하였다. 그러나 현재 초·중등 교육 현장에서 서·논술형 평가에 적응할 수 있는 교육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아, 단기간 내에 제도를 도입할 시 학교 현장의 준비 부족으로 인해 사교육 의존이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다. 이에 따라, 참여자들은 수능을 서·논술형 평가로 전환

하기 위해서는 단기간 일괄 도입을 지양하고 장기간이고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특히, 과목의 특성에 따라 서·논술형 평가를 점진적으로 확대 적용하는 방안이 현실적 대안으로 제안되었다.

> 논술형 평가의 교육적 유효성을 적극 인정하며, 또한 전면 논술형 평가 도입은 언젠가 이루어야 할 목표임. 다만 서논술형 시험의 취지를 온전히 달성하기 위해서는 고교 현장의 변화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므로 중장기적 안목으로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제안함. 처음에는 일부 과목 먼저 서논술형을 실시하거나 응시 과목별로 서논술형 비중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 볼 수 있음. 즉 IB처럼 전면 논술평가가 가능한 교수-학습활동과 평가 체제가 갖추어지기 전까지는 현실 적용이 가능한 체제부터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함. 가령 중국 까오카오(보통고등학교 학생모집 전국 통일고시)의 사례처럼 어문(국어) 등은 논술형을 활용하여 절대평가로 점수를 부여하고 단답형 중심의 과목은 상대평가를 활용하는 방안까지 폭넓게 검토해 봤으면 좋겠음. 논술형 채점이 필연적으로 논란이 많을 수 있으므로 과목 성격에 따라 단답형 중심으로 출제하는 방안 등 다양한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H, 입학사정관)

또한, 모든 과목에 우선적으로 서술형 문항을 먼저 도입한 후, 사회 및 과학 탐구 영역은 학교 현장에서 서술형 평가가 안정적으로 정착된 후 논술형으로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도 제안되었다.

> 수능 과목은 국영수, 한국사, 사회/과학으로 하는 것이 타당함. 사/과 탐구만 논술형으로 운영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지만 상당히 융합적 문항이 출제되어야 하기 때문에 준비의 어려움, 사교육 의존 등을 논거로 비판적 여론이 팽배할 것으로 보임. 우선 6개 수능 과목에 모두 가벼운 서술식 문항만 도입하는 것을 1)안으로, 사/과 논술형 도입은 학교 내 논술형 평가가 충분히 정착된 후에 추진하는 2)안으로 제시하는 방식이 좋을 것 같음. (A, 교수)

라. 수능 응시 시기 및 횟수

세 집단 모두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수능의 적정 시기와 횟수는 11월~12월 사이 1회 실시였다. 전문가 TF와 교원은 가능한 늦은 시기에 실시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보다 많았으며, 입학자정관들은 원서접수가 12월 1일부터 시작된다면 최소 평가 기간을 맞출 수 있어 해당 안에 대한 실행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보았다.

한편, 수능 응시 시기와 횟수에 관한 의견을 논의하던 중 교원과 전문가 TF 및 입학

사정관 집단 간 다소 상이한 의견 차이가 있었다. 전문가 TF와 입학사정관은 9월에 수능을 시행할 경우 고등학교 3학년 2학기 수업이 정상화될 것이라고 보았지만, 교원들은 3학년 2학기 수업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9월 수능은 오히려 수업 운영을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 그러니까 3학년 2학기에 시험을 12월에 보면 시험 볼 때까지 계속 1학년 거 반복 학습하고 있을 건데 이게 좀 이게 맞는 거냐 아예 누군가 솔직히 그날 뭐 얘기 나오는 것처럼 얘기는 지 차라리 이럴 거면 아싸리 수능을 9월 9월 첫 주에 마무리고 3학년 2학기를 온전히 그래 고등학교가 한 번 와 그래 뭐 이제 자는 애들 수능 봤으니까 이제 자는 애들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차피 이제 원서 접수 시점이 아예 뒤로 밀려버리면 너 이 학생부도 대학에 끌려간다 이 협박만 있으면 맞아요. 뭔가는 수업은 할 수 있으니까 조금 더 3학년 2학기를 학교 고등학교가 원하는 수업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도 있다 보니까 그렇죠 뭐 교사하고 교수들 괜히 10월부터 잡아 가둘 게 아니라 여름방학 때 갓 잡아 가두고 시험 딱 보고 이제 다 학교로 돌려보내면 그럼 수업도 되고 아주 좋지 않냐 나쁘지 않은 의견인 것 같아요. (G, 입학사정관)

> 이거를 9월에 당겨서 시행해 버리면 9월 이후는 사실 제가 봤을 때 3학년 2학기는 파행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 이게 면접을 준비한다 논술을 준비한다라고 하지만 아까 선생님들이 지적해 주셨는데 아이들이 그러면 면접관 논술과 관련된 것만 하려 들 거고 그럼 나머지 교육과정이나 이렇게 어떻게 잘 짜면 좋겠지만 나머지 교과 선생님들은 할 게 없어집니다. (L, 교원)

마. 대학 입시 전형 요소

대학 입시에 포함할 전형 요소에 대해서는 전문가 TF에서만 논의가 이루어졌다. 논의 결과, 전형의 개수는 현행 대학교육협의회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현 수준을 유지하되, 전형 요소는 대학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화하는 방안이 제안되었다. 다만, 학생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전형 간소화의 방향을 유지하기 위해, 대학이 선택할 수 있는 전형 요소의 최대 개수를 제한하는 방식이 함께 제시되었다,

> 지금은 전형유형을 표준화 시켜놓은 상황이지만 전형요소가 표준화되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고 생각함. 기존에 논술이라는 요소가 있었지만 일부 대학들이 약식 논술이라는 표현을 씀으로써 평가요소가 분화가 되고 있고 이는 전형의 다변화를 야기할 수 있지만 반대로 수험생에게

복잡함에 따른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함. 서류평가(학생부/정성), 교과(학생부/정량), 수능(정량), 논술, 면접 등 평가요소를 지정을 하고 대학들은 이 가운데 한 전형에서 반영 요소를 최대 몇 개까지 사용할 수 있다는 캡을 씌우는 형태로 전형을 구성하게 하는 방법으로 표준화의 방법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지금의 표준화된 전형 유형이 아닌 지정 평가 요소 중 반영비가 가장 높은 전형요소를 전형유형으로 하는 것으로 하면 이전과 크게 다르지도 않지만 지금보다는 대학의 선발 자율성이 생길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함. 예를 들어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 면접위주 전형이 생길 수 있음. 그리고 수·정시 통합이 된 상태라면 서류평가 위주 전형에서도 절대평가화 된 수능이 부수 요소로서도 작동할 수 있음. (G, 입학사정관)

대학별 전형요소는 현재도 단순화 표준화되어 있다고 봅니다. 자료에서 말씀하신 평가요소는 곧 전형요소로 보입니다. 물론 교과를 정량으로 반영한다 할 때도 교과정량, 학생부(교과), 교과(정량) 등 대학마다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기에 해당 부분을 정리해서 공통 전형요소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이러한 간소화, 표준화가 '전형요소' 구분을 위한 것이 아닌 '전형설계' 차원으로서 제기되는 것이라면 오히려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도 학생부위주전형 및 각 고사별 운영 가이드라인이 배포되고 있고 대학마다 그에 맞춰 운영하고 있기에 가이드라인의 정교화 수준 정도로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Q, 입학사정관)

이상의 개선안 검토 결과를 집단별로 구분하여 요약하면 다음 〈표 Ⅳ-7〉과 같다.

〈표 Ⅳ-7〉 개선안 검토 의견 집단별 요약

개선 방안	전문가 TF	교원	입학사정관
절대평가	• 절대평가로 전환 매우 필요 • 절대평가 전환에 무리 없음 (현재 상대평가와 절대평가 병행 중, 수·우·미·양·가 체제로 경험 있음)	• 절대평가 전환은 타당하나 변별력이 낮아짐에 따라 생기는 문제 우려	• 절대평가로 전환에 찬성 • 절대평가로도 충분히 변별이 가능함
수능 자격고사	• 수능영향력 약화 필요	• 구체적 의견 없음	• 수능 영향력 약화에 강한 동의 • 제한적 필요성(사회통합 전형에서 자격고사화 필수 요구 여부)
서·논술형 시험	• 단계적 도입 (과목별 특성, 고교 교육 정착 우선)		

개선 방안	전문가 TF	교원	입학사정관
수능 시기	• 11~12월 1회, 최소 평가 일수 보장 되는 한 최대한 늦게	• 11~12월 1회, 최소 평가 일수 보장 되는 한 최대한 늦게	• 원서접수 12월 1일부터 시작 시 평가 가능
전형 요소	• 전형 수는 현재 수준 유지 및 표준화 필요 • 전형 요소는 다양화하되 최대 개수 지정 필요	-	-

5 시사점

본 장에서는 총 9차에 걸친 전문가 TF, 정책포럼, 정책세미나, 정책토론, 교원 및 입학사정관 면담을 통해 현행 대학입시제도의 구조적 한계를 분석하고, 미래형 대학입시제도 개선 방향에 대한 전문가 인식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교육관계자와 전문가들의 논의를 토대로 도출된 주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문가들은 수능과 내신을 변별 중심 평가에서 벗어나 성취 기준 중심의 절대평가 체제로 전환할 필요성에 공감하였다. 이는 고교학점제의 취지를 실질적으로 구현하고, 학생의 성장 과정과 학습 경험을 교육의 중심에 두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인식되었다. 다만 절대평가 전환에 따른 변별력 약화 우려에 대해서는, 절대평가의 목적을 성취 기준 충족에 두되 평가 자료의 다양화와 평가 전문성 강화를 통해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함께 제시되었다. 이 과정에서 평가 신뢰도 확보와 교사의 평가 부담 완화가 동시에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도 강조되었다.

둘째, 서·논술형 평가의 단계적 확대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전문가들은 단기간에 수능 중심의 서·논술형 평가를 도입하기보다, 초·중등 교육과정 전반에서 수행평가와 서술형 평가 경험을 충분히 축적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이는 사고력 중심 평가의 안정적 정착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필수 조건으로 인식되었으며, 서·논술형 평가가 제도적으로 확대되기 위해서는 명확한 채점 기준과 평가 전문성 확보가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이 함께 강조되었다.

셋째, 수시와 정시로 이원화된 현행 대입전형 구조를 통합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전문가들은 현재의 전형 운영 방식이 고교 학사 운영을 왜곡하고 교육과정의 정상적 이수를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에 따라 교육과정 이수 이후 평가가 이루어지는 구조로의 전환이 고교교육 정상화와 대입제도의 교육과정 정합성 확보에 기여할 수 있다는 인식이 공유되었다. 전반적으로 수능 중심 전형의 비중을 완화하고, 학생부 중심 평가의 실질적 활용을 확대할 필요성이 제시되었다.

넷째, 수능의 기능을 선발 중심에서 기초 학업역량과 대학 수학 준비도를 확인하는 방향으로 재정립할 필요성이 제시되었다. 전문가들은 수능의 영향력을 완화하되, 대학교육을 이수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학업 역량을 진단하는 공적 평가로서의 역할은 유지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다만 수능을 '자격고사'로 규정하는 명칭과 운영 방식에 대해서는 대학의 자율성과 다양한 학생 배경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수능의 성격과 활용 방식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함께 제기되었다.

이상의 전문가 인식 분석 결과는 미래형 대학입시제도가 단순한 평가 방식 조정이나 전형 구조 변경에 그쳐서는 안 되며, 고교 교육과정과의 정합성, 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 고교 학사 운영의 정상화라는 교육적 목표를 중심에 두고 구조적으로 재설계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고교교육과 대학입시가 상호 선순환하는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단기적 제도 조정보다는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일관된 정책 방향 설정과 단계적 이행 전략이 중요함을 보여준다.

다음 장에서는 고교교육과 대학입시의 유기적 연계라는 관점에서 주요 선진국의 입시제도 개혁 동향을 분석하고, 각국 사례가 제공하는 시사점을 바탕으로 한국 대입제도의 개선 방향을 심층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국내 논의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다양한 교육체제와 대입 시스템을 운영해온 해외 사례를 질적으로 비교·분석함으로써 고교교육과 대학입시 간 선순환 구조를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V

해외 대학입시 개혁 동향 분석

1. 사례 국가 선정 및 분석 방법
2. 국가별 사례
3. 질적 사례비교 분석(QCA)에 기반한 결과
4. 시사점

Ⅴ 해외 대학입시 개혁 동향 분석

현시대의 교육정책에서 고등학교 교육과 대학입시 간의 구조적 연계는 단순한 진학 문제를 넘어, 공교육의 신뢰 회복과 학습 생태계의 지속가능성 확보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정책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고교 교육의 질과 방향성이 대학입시의 영향력에 크게 좌우되는 구조가 지속되면서, 대학입시 제도는 단순한 선발 장치를 넘어 고등학교 교육과정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학습 유도 장치'로 기능하고 있다(김미란, 정광희, 박상규, 2010).

이러한 맥락에서 '고교 교육-대학입시-대학 교육' 간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것은 교육제도 전반의 신뢰 회복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 전략이라 할 수 있다. 이는 고등학교에서의 학습 경험이 대학입시에 정당하게 반영되고, 대학입시 제도가 고교 교육의 다양성과 자율성을 제약하기보다 이를 뒷받침하며, 대학은 이러한 기반 위에서 학생의 학문적 역량을 심화시키는 구조를 의미한다. 이와 같은 연계 구조가 안정적으로 작동할 때 비로소 고교 교육과 대학 교육 간의 선순환이 완성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입시 중심의 과도한 경쟁, 사교육 의존의 심화, 평가 기준과 운영의 비일관성 등이 이러한 선순환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정양순, 이예슬, 2021).

이러한 문제는 한국만의 특수한 현상이라기보다, 각국의 역사·문화·정치적 맥락 속에서 형성된 교육제도 전반에서 공통적으로 관찰되는 과제이기도 하다(지은림, 2021). 이에 고교 교육과 대학입시의 선순환 구조를 모색하기 위해서는 단일 국가의 경험에 한정하기보다, 다양한 국가들의 제도적 설계와 운영 방식, 그리고 그 실행 결과를 비교·분석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주요 선진국들은 고교 교육의 내실화와 대학입시의 공정성·다양성·예측 가능성 간의 균형을 확보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대학입시 제도를 개혁해 왔으며, 이러한 경험은 한국 교육정책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대학입시 제도 설계의 철학, 고교 교육과정과의 연계 수준, 대학의 자율성 보장 방식, 평가의 정성적·정량적 균형은 국가별로 상이하게 구현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공정성과 교육 기회의 형평성을 추구하는 방식 또한 다양하게 나타난다.

이 장에서는 '고교 교육-대학입시 선순환'이라는 구조적 틀을 바탕으로 해외 대학입시 제도를 질적 사례비교(Qualitative Comparative Analysis, QCA) 방법을 통해 분석하고자 한다. 아울러 사례 국가별 대학입시 평가 구조를 중심으로 고교 교육과의 연계성, 평가 방식의 신뢰성과 공정성, 학습자 역량 중심 평가의 구현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해외의 고교 교육-대학입시 연계 사례가 제공하는 시사점을 도출하고, 한국 대학입시 제도의 구조적 개편과 고교 교육 정상화를 위한 실천적 정책 함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1 사례 국가 선정 및 분석 방법

가. 사례 국가 선정 기준

이 연구는 고교 교육과 대학입시 간의 선순환 구조를 비교·분석하기 위해 지리적·제도적 다양성과 정책적 대표성을 기준으로 6개 국가(일본, 싱가포르, 미국, 독일, 핀란드, 프랑스)를 사례로 선정하였다. 각국 사례에 대한 연구진의 해석은 정부 정책 문서, 국제기구 보고서, 학술 연구 등 외부 근거에 의해 검증·보강하였다. 이를 통해 본 연구의 사례 국가 선정이 특정 연구자의 주관에 머무르지 않고 다원적 근거에 기반하고 있음을 밝힌다. 6개 국가의 사례 선정 이유는 다음과 같다.

〈표 Ⅴ-1〉 사례 국가 선정 이유

구분	주요 내용
지리적 및 문화적 대표성 확보	- 아시아: 일본, 싱가포르 - 유럽: 독일, 핀란드, 프랑스 - 아메리카: 미국
입시제도의 다양성	- 시험 중심형: 일본 - 국가 졸업시험 기반형: 독일, 핀란드, 프랑스 - 정성평가 기반형: 미국 - 다경로 입시 설계형: 싱가포르
정책적 실험성과 개혁 사례의 존재	- 미국, 핀란드, 프랑스: 정성적 평가 확대나 표준화 시험 폐지 등 적극적인 입시 제도 개혁 추진 - 싱가포르, 독일: 고교-대학 간 연계 시스템의 구조화 - 일본: 전통적인 시험 중심 입시구조 유지하면서도 부분적 개편을 시도하고 있는 제도적 전환기를 보여줌

나. 질적 사례비교(Qualitative Comparative Analysis, QCA)

질적 사례비교(QCA)는 질적 연구의 심층성과 양적 비교의 엄밀성을 결합한 분석기법으로, 다양한 교육제도의 맥락적 특성과 인과적 관계를 체계적으로 탐색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닌다(이은미, 이은국, 고기동, 2014). 특히 국가별 대학입시제도가 고교 교육과 상호작용하는 방식의 공통점과 차이, 그리고 특정 정책 결과(예: 공정성, 다양성, 접근성, 선순환 구조 형성)를 만들어 내는 조건 조합을 밝히는 데 적합한 방법론이다.

이 연구에서는 총 6개국을 비교 대상으로 삼아, 각국의 입시제도가 고교 교육에 미치는 구조적 영향을 조망하고, 공정성·다양성·접근성과 같은 교육정책 성과와 연결되는 인과 패턴을 분석하였다. 특히 앞선 Ⅲ장 교육관계자 인식 조사와 Ⅳ장 전문가 인식 분석에서 도출된 핵심 쟁점—입시의 공정성, 진학 경로 다양성, 정보 접근성, 고교-대학 연계, 고교 교육 내실화 효과—을 기준 변수로 정제하여 QCA의 조건·결과 변수로 활용하였다. 즉, 설문과 전문가 논의에서 중요하게 제기된 요소들이 QCA 분석틀의 근거가 되도록 구조화하였다.

본 연구의 QCA 분석 절차는 다음과 같다.

사례 선정 단계에서는 지역적 다양성, 입시제도 유형, 고교-대학 연계 정책의 성숙도 등을 고려하여 6개 국가를 선정하였다.

조건·결과 변수 도출 단계에서는 앞서 실시한 설문조사(Ⅲ장)와 전문가 인식 분석(Ⅳ장)에서 공통적으로 강조된 정책 요인을 바탕으로, 총 9개의 조건 변수(C1~C9)를 설정하였다. 예를 들어, '공정성', '다양한 진학 경로', '정보 접근성', '고교-대학 연계', '중앙화 정도' 등은 설문과 전문가 논의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된 핵심 요소로, 이를 QCA의 조건 변수로 정식화하였다. 결과 변수(고교-대학 선순환 구조 실현 여부)는 Ⅲ·Ⅳ장에서 공통적으로 강조된 핵심 판단 기준을 계량화한 것이다.

자료 수집 및 코딩 단계에서는 각 국가의 공식 문서, 연구 보고서, 학술 논문, 정책 자료를 분석하여 각 조건과 결과에 해당하는 근거 자료를 확보하고, 이를 이진값(0/1)으로 코딩하였다.

진리표 구성 및 사례 비교 단계에서는 조건 조합별 진리표(truth table)를 구성하고, 각 조합이 결과를 충족하는지 판단하여 사례를 재구성하였다.

조건 최소화 및 인과 패턴 도출 단계에서는 선순환 구조를 실현하는 공통 조건 조합

을 논리적으로 최소화하여, 고교-대학 선순환 구조를 가능하게 하는 핵심 정책 요인을 도출하였다. 〈표 V-2〉는 이러한 과정에서 확정된 조건 변수와 결과 변수의 정의를 제시한 것이다.

〈표 V-2〉 조건 및 결과 변수의 정의

구분	변수명	코드	설명
조건 변수	자격 기반 입시 여부	C1	졸업시험 기반 입시 여부
	진학 경로 다양성	C2	다양한 진학 루트 제도화 여부
	정보 접근성과 투명성	C3	입시 정보의 공시·예측 가능성
	고교-대학 연계 프로그램 존재	C4	고교-대학 연계 제도 존재 여부
	정성적 평가 요소 존재	C5	면접, 비교과 등 정성 요소 반영 여부
	고교 교육 내실화 유도 구조	C6	입시가 고교 수업의 질에 미치는 영향
	공정성	C7	사회적 배경과 무관한 기회 제공 여부
	다양성	C8	학생 선택권 및 학습경로 다양화 수준
	중앙화 정도	C9	입시정책의 중앙 통제 수준 (중앙/분권)
결과 변수	고교-대학 간 선순환 구조 실현 여부	—	고교 교육이 대학 입시와 연계되어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고 있는지 여부 (1: 실현, 0: 미실현)

본 연구에서 적용한 질적 사례비교(QCA)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가진다.

첫째, 0/1 이진 코딩은 국가 간 제도적 차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 둘째, 공정성·다양성과 같은 일부 변수는 해석 과정에서 연구자의 판단이 개입할 가능성이 있다. 셋째, 교육제도의 변화가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만큼, 시간적 흐름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정량적 코딩 결과뿐 아니라 각 국가 사례에 대한 서술적 분석과 해석적 비교를 함께 제시하여, QCA 결과의 정책적 타당성과 맥락적 설명력을 보완하였다.

2 국가별 사례

가. 일본

1) 대학입시 제도의 운영 배경 및 변화

1947년 일본은 전후 교육개혁 과정에서 미국의 영향을 받아 6-3-3-4 학제를 도입하고, 대학입시를 포함한 교육제도 전반을 민주화하였다. 그러나 이후 고도경제성장기와 함께 대학 진학이 계층 상승의 핵심 경로로 작동하면서 학력주의가 강화되었고, 특히 1970~1980년대에는 과도한 경쟁과 사교육 과열로 인해 '입시지옥'이라는 표현이 사회적 문제로 등장하였다. 이에 일본 정부는 입시 부담 완화와 고교 교육 정상화를 주요 정책 목표로 설정하고, 대학별 시험 일정의 조정과 국가 수준의 공통시험 도입 등 제도적 정비를 추진하였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1990년대에는 전국 단위의 표준화된 평가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대학입학 센터시험(大学入試センター試験)'이 도입되었다. 센터시험은 전국 공통으로 출제되어 수험생의 학업 성취 수준을 비교·평가하는 기준으로 활용되었으며, 고교 교육과정과의 연계 강화와 대학 간 선발 기준의 일정 수준 통일을 목표로 하였다. 동시에 이 시기부터 일부 사립대학을 중심으로, 시험 성적 중심 선발에서 벗어나 학생의 역량과 적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기 시작했으며, 이는 이후 '입학사정관제도(AO 전형)' 도입의 기초가 되었다.

2000년대 이후 문부과학성은 AO 전형의 제도적 정착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였다. AO 전형은 내신 성적뿐 아니라 자기소개서, 소논문, 면접 등을 통해 학생의 학교생활 전반과 성장 과정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대학의 선발 자율성을 확대하는 동시에 고교 교육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이 과정에서 고교 교육은 단순한 입시 대비를 넘어 학생의 역량을 기르는 공간으로 재정의되기 시작하였다.

2013년 제2차 아베 내각 출범 이후에는 '교육재생실행회의'를 중심으로 대학입시제도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 논의가 이루어졌다. 특히 기존 센터시험이 지식 암기 중심이라는 비판에 따라, 사고력·표현력·문제해결력 중심 평가로의 전환이 주요 과제로 제시되었다. 이에 따라 2021년부터 '대학입학 공통테스트'가 도입되었으며, 서술형 문항 도입과 민간 영어시험 활용 등 다양한 개선 방안이 검토되었다. 다만 서술형 평가와

민간시험 도입은 공정성·형평성·운영 부담 문제로 인해 최종적으로 축소 또는 철회되었다. 이러한 시행착오는 일본 대학입시 개혁이 고교 교육과의 연계 강화라는 목표 아래에서도 공정성과 실현 가능성이라는 현실적 제약에 직면해 있음을 보여준다.

최근 일본의 대학입시제도는 '학생 중심 선발'로의 전환을 핵심 방향으로 설정하고 있다. 단일 시험 성적에 의존하기보다, 학교추천형 전형과 종합형 전형(AO 전형)의 비중을 확대하여 학생의 성장 과정과 잠재력을 다면적으로 평가하려는 시도가 강화되고 있다. 이들 전형에서는 고교 내신 성적, 자기소개서, 활동 기록, 면접 등이 주요 평가 요소로 활용되며, 일부 대학은 교과 이수 내용과 탐구 활동 기록을 반영함으로써 고교 교육과정과의 연계를 보다 정교화하고 있다.

한편 이러한 변화는 입시 공정성과 형평성에 대한 새로운 과제를 제기하였다. AO 전형과 추천형 전형의 확대에 따라, 고교 간 지원 역량 차이, 비교과 활동 기회의 불균형, 정보 접근성 격차 등이 사회적 쟁점으로 부각되었다. 특히 2018년 도쿄의과대학에서 여성 지원자의 입학시험 점수를 조직적으로 조작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대학입시 전반에 대한 공공 감시와 책임성 강화 요구가 크게 확산되었다. 이후 일본 정부는 입시 결과 데이터 공개, 대학별 선발 과정의 투명화, 외부 감사 체계 강화 등을 추진하였으며, 의학계열을 포함한 주요 대학에 대해 성별·연령·출신지별 선발 통계 공개를 의무화하는 등 제도적 보완을 강화하였다.

이와 같은 일본의 대학입시제도 개혁은 단순한 시험 방식 조정을 넘어, 고교 교육의 질적 개선과 교육 기회의 형평성, 그리고 사회적 신뢰 회복을 동시에 추구하려는 정책적 시도로 이해할 수 있다. 이는 고교 교육과 대학입시를 분리된 영역이 아니라 상호 연계된 교육 체계로 인식하고, 입시제도를 고교 교육을 견인하는 장치로 재구성하려는 장기적 개혁 흐름을 보여준다.

2) 대학입시 제도의 주요 특징

일본의 대학입시제도는 국가 주도의 대학입학 공통테스트와 대학별 자율 전형이 결합된 이원적 구조로 운영된다. 2021년부터 기존 센터시험을 대체하여 도입된 대학입학 공통테스트(大学入学共通テスト)는 문부과학성과 대학입시센터가 공동으로 주관하며,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기반한 국어, 수학, 외국어, 과학, 사회 등의 과목에서 필수 및 선택 조합을 통해 응시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시험 문항은 사고력과 문제해결력을 중심으로 구성되며, 전반적으로 객관식과 단답형(기입형) 문항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서술형 문항의 도입은 당초 계획되었으나, 공정성과 채점의 일관성 확보 문제로 인해 현재는 시행이 중단된 상태이며, 향후 재도입 여부가 정책적으로 논의 중이다. 출제와 채점은 중앙시험기관이 주도하지만, 고등학교 교사와 대학 교수 등 다양한 교육 현장의 전문가가 출제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교육과정과의 정합성을 제도적으로 확보하고 있다.

〈표 Ⅴ-3〉 일본 대학입시 평가구조

구분	주요 내용
① 공통시험의 존재 및 성격	대학입학 공통테스트 실시 (2021년부터 구도입학센터시험 대체). 국가주관, 대학입시센터 운영
② 시험 과목 및 구성	국어, 수학, 과학, 외국어 등 영역별 필수+선택 구성. 대부분 객관식, 일부 서술형 시범 도입
③ 점수 체계 및 평가 방식	원점수 기준+대학별 전형 시 자체 가중치 반영. 절대평가 아님.
④ 채점 및 문항 개발 주체	시험센터 주관, 문항은 전문가 출제위원단 구성. 고등학교 교사 참여함
⑤ 고교 성적 반영 여부 및 방식	일부 국공립대는 고교 성적 반영. 종합형(학교추천형·종합형 선택제)은 학교생활기록부 필수
⑥ 대학별 자율 전형 요소	국립대는 대부분 공통시험+면접/소논문 병행. 사립대는 독자 전형 비율 높음
⑦ 선발 기준의 공개성과 일관성	대부분 대학은 입학요강 및 점수 기준을 사전공개. 전형 결과는 개별 피드백 제공 안 함
⑧ 고교 교육과의 연계성	고교 교육과정에 기초해 문항 설계. 평가 연계는 제도적으로 보장되지만 교육현장과 괴리도 있음

주요 이슈(2020-2025년)

① 공통시험 과목 확대 — 정보과목 신규 도입
2025년 평가부터 「정보 I (정보과학·컴퓨팅 기초)」 과목이 대학입학 공통테스트에 신설되었음. 이는 디지털 리터러시 및 컴퓨테이셔널 사고력 도입을 위한 조치로, 인공지능 및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한 변화로 평가됨

② 지리·역사·공민[2] 과목 통합 선택 구조 도입
기존의 지리·역사·공민 과목 영역이 '지리·역사·공민 통합 과목'으로 재구성되었음. 예컨대 '지리총합', '역사총합', '공공', '정치·경제' 등의 선택항목으로 통일되어, 선택 과목 간 중복 응시 가능 구조는 폐지 및 정리됨

③ 수학(수학②) 과목 구조 개편
2025년부터 기존의 '수학Ⅱ, 수학Ⅱ·수학B, 회계기초, 정보관계기초' 등 4개 과목이 통합되어, '수학Ⅱ·B·C"로 단일화되었음. 동시에 시험문항 선택지 항목이 기존 2개에서 3개로 확대되어 응시 다양성이 증가했음

④ 영어 시험의 구조적 개편과 외부 평가 활용 논의 지속
2021년에 대학입학 공통테스트 영어 영역이 리스닝·리딩 위주의 구조로 개편되었으나, 앞서 2020년대 초반 교육부는 말하기·듣기(Speaking·Writing) 포함을 위해 민간 시험 활용을 논의했으나 실행까지는 이르지 못했음. 공정성과 교사 준비 수준 부족이 도입 지연의 주요 원인으로 보고 있음

일본의 대학입시 전형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된다. 첫째, 일반전형은 국공립대학을 중심으로 대학입학 공통테스트와 대학별 2차 시험을 병행하여 시행된다. 대학별 시험은 전공 적합성을 중심으로 서술형 평가가 포함되는 경우가 많으며, 수학·과학·논술 등 고차 사고력을 측정하는 문항이 주로 활용된다. 사립대학의 경우, 독자 시험 또는 공통테스트를 병행하거나 대체하는 등 다양한 운영 형태를 보인다.

둘째, 학교추천형 전형(指定校推薦)은 고등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학생을 대상으로 내신 성적, 면접, 소논문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일부 대학은 공통테스트 결과도 함께 반영한다. 셋째, 종합형 전형(総合型選抜, 구 AO 전형)은 학생의 자기소개서, 활동 이력, 면접 등을 중심으로 정성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특히 인성, 발전 가능성, 전공적합성 등을 중시한다. 이들 전형은 대체로 일반전형보다 앞선 시기인 10~12월 사이에 조기 시행되며, 합격자는 빠르게 입학을 확정할 수 있다.

2) 공민 과목: 공공, 정치·경제, 윤리를 뜻함

〈표 Ⅴ-4〉 전형 유형별 개요

전형 유형	주요 설명
일반전형	- 가장 전통적이고 비중이 큰 방식. 국공립대학은 대학입학 공통테스트와 대학별 2차 시험을 병행. 사립대학은 독자 시험 또는 대학입학 공통테스트 병용
학교추천형전형	- 고교의 학교장이 학생을 추천. 내신 성적과 면접, 소논문 중심. 일부 대학은 대학입학 공통테스트 병행
종합형전형(AO 전형)	- 고교 내신 외에 자기소개서, 면접, 활동 실적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 평가. 대학이 학생의 역량과 가능성 중심으로 판단

대학입시 평가요소는 고교 성적(내신), 공통시험 성적, 대학별 시험, 면접, 자기소개서, 활동 실적 등으로 다양화되어 있으며, 특히 학교생활기록부(생활기록총합)와 비교과 활동은 추천형 및 종합형 전형에서 핵심 평가자료로 활용된다. 일부 대학에서는 민간 영어시험 성적, 자격증, 대외활동 실적 등을 참고자료로 반영하기도 한다.

〈표 Ⅴ-5〉 주요 전형 요소

전형 요소	주요 설명
대학입학 공통테스트	- 2021년부터 도입. 수학, 과학, 외국어, 국어, 사회 등 선택형 및 일부 서술형 문항 포함. 고등학교 교육과정 기반으로 출제됨
대학별 시험 (2차 시험)	- 주로 국공립대학에서 실시. 서술형 중심, 학과 적합성 판단. 수학, 과학, 논술 등 출제 방식은 대학 자율
내신 성적	- 고교 재학 중 성적과 활동 내용 포함. 학교추천형 및 종합형 전형에서 중요하게 작용
면접 및 에세이	- 주로 AO 및 추천형 전형에서 활용. 대학의 인재상과 학생의 적합성 확인 목적
기타 요소	- 자격증, 외부 시험 성적(예: 영어 민간시험), 활동 실적 등. 일부 대학에서 제한적 활용됨

〈표 Ⅴ-6〉 전형 시기

유형	시기
대학입학 공통테스트	- 매년 1월 중순 (대부분의 국공립대학 입시의 1단계로 활용)
국공립대학 2차 시험	- 매년 2월 하순~3월 초 (대학별 고사 실시)
학교추천형 및 종합형 전형	- 대부분 10월~12월 사이 조기 실시. 합격자는 일반전형 전까지 입학 확정됨

이러한 전형 운영은 고등학교 교육과정과의 연계성을 일정 부분 확보하면서도, 대학의 자율성과 수험생의 선택권을 함께 보장하려는 구조이다. 국공립대학은 공통시험을 필수로 요구하며 2차 시험을 통해 심화 평가를 실시하는 반면, 사립대학은 자율성이 높아 제도 운영의 다양성이 크다. 이로 인해 입시 구조는 유연성과 다양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일부에서는 고교 수업과 대학 선발 기준 간의 연계가 약화될 수 있다는 분절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최근 문부과학성은 고교-대학 연계 강화를 위해 대학입시 제도의 정합성을 높이려는 정책적 노력을 지속하고 있으며, 정성적 요소를 확대하고, 학생 중심의 입학사정 체제로의 이행을 추진 중이다. 대학입학 공통테스트 역시 기존의 단편적 지식 평가에서 벗어나, 사고력과 표현력을 평가하는 질적 전환을 목표로 지속적인 개혁이 이루어지고 있다.

3) 고교 교육과 연계한 대입제도 사례

가) 신슈대학교의 지역 연계형 입시 프로그램(COC+R 사업)[3)]

신슈대학교가 참여하는 COC+R(大学による地方創生人材教育プログラム構築事業)는 일본 문부과학성이 2020년부터 6년간 지원하는 지역 인재 양성 정책이다. 이 사업은 대학, 지방자치단체, 기업 등이 연계하여 지역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교육·선발하고, 졸업과 동시에 지역기업 취업까지 연계되는 구조를 구현하려는 것을 목표로 한다. 신슈대학교는 이 사업의 '간사 대학(幹事校)[4)]'로서, 동일한 네트워크 내 타 대학과 협력하며, COC+에서 COC+R으로의 전환을 주도하고 있다.

신슈대학교의 COC+R 사업은 지역 기반 PBL 및 인턴십 중심 교육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표적으로 ENGINE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은 고등학교 및 대학 교육을 통해 탐색했던 지역를 바탕으로 지역기업·지자체와 협력한 실무형 인턴십을 수행하며, PDCA(계획-실행-분석-제안) 사이클을 작동한다. ENGINE 프로그램은 2024년도에 대학 전학년 대상 교과모듈로서 정규 교과에 포함되었고, 4~10월 기간의 현장인턴십과 연계된 프로젝트 과목으로 운영되었다. 교과기반 과목들도 함께 이수하도록 구성되어 있으며(예: Strategy and Research Literacy 등), 논리 모델(logic model)과 데이터

3) 홈페이지: https://www.shinshu-u.ac.jp/
4) 간사 대학(幹事校, かんじこう, kanjikō)은 일본 교육 정책 및 대학 간 협력 사업에서 자주 쓰이는 용어로, 어떤 공동 사업이나 프로젝트에서 중심적 역할을 맡는 주관 대학을 의미

를 기반으로 지역 문제 해결형 연구를 수행한다.

COC+R 사업에는 신슈대학교를 포함하여 도야마대학교, 가나자와대학교가 연합하여 광역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신슈대학교는 신슈얼라이언스(Shinshu Alliance)라는 연계 법인을 통해 장노년층 재교육 및 지역사회 대응력을 강화하고 있다. 최근 신슈대학교는 2025년 1월, 한국 대학 관계자 약 22명을 초청하여 한국 RISE Program과의 비교 조사를 진행하는 등 글로벌 네트워크와 연계한 정보 공유도 진행 중이다. 2025년 1월 기준, 신슈대학교 주최의 COC+R 전국 심포지엄이 개최하였고, 사업 기간의 최종 성과 및 프로그램 참여 학생, 지역기업, 대학 담당자가 모여 성과 공유 및 정책 토론을 진행하였다.

신슈대학교의 COC+R 사업은 고교-대학-지역사회 간 선택형 융합 교육 생태계의 구현 측면에서 주목할 만하다. 특히 고등학생 및 대학생이 함께 참여하는 Project-Based Internship을 통해 고등학교 단계에서 지역의 문제를 직접 해결해 보고, 대학 교육과 연계하여 실제 취업 연계로 이어지는 구조를 확인할 수 있다. 이는 한국의 고교학점제와 대학 연계 모델 설계에 있어, 단순 이론 수업을 넘어선 현장 중심 교육과정 설계, PDCA 기반 학점 인증, 지역사회·기업과의 연계 인턴십 도입의 중요한 참고 사례다. 또한, 신슈대학교가 간사 대학으로서 타 대학과 지역을 연결하는 중추적 역할을 수행한 점은, 지역 간 협업형 네트워크 구축 및 거점대학 기능 강화라는 관점에서도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나) 교육 네트워크 주고쿠[5)]

일본의 '교육 네트워크 주고쿠(教育ネットワーク中国)[6)]'는 히로시마현 내의 고등교육기관의 연계를 통해 지역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2007년에 설립된 대학 컨소시엄이다. 1998년 4월 히로시마현 고등교육기관(히로시마공업대, 히로시마경제대학교, 야스다여자대학교) 등의 협의회 발족을 시작으로, 2005년 히로시마현을 너머 주코쿠 지방 전체의 연계를 목적으로한 '교육 네트워크 주고쿠'로 개칭되었다. 주요 참여기관은 히로시마 대학(広島大学), 히로시마 시립 대학(広島市立大学), 에히메 대학, 오카야마 대학 등이 있으며, 활동 내용은 대학 간 학점 교류 및 공동 강의, 고등교육과 지역사회의 연

5) 홈페이지: https://www.enica.jp/03highschool/2025/index.html
6) 주고쿠(教育ネットワーク中国)는 일본의 히로시마, 오카야마 등의 일대를 가리키는 지역명임

계, 고교-대학 연계 프로그램, 그리고 지역인재 육성 및 지역 과제 해결 중심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다.

이중에서 고교-대학 연계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공개 강좌 및 실습으로, 고등학생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실험, 실습형 수업 포함된다. 둘째, 단위 인정 가능 과목으로, 대학 정규 과목을 고교생 수준에 맞춰 제공하며, 일부 과목은 수강 후 대학 입학 시 단위 인정 가능하다. 셋째, 대학-고교 협력 교육과정을 제공하여 강좌 목표, 내용, 담당 교수, 평가 방식 등 상세 명시하도록 한다. 넷째, 대학 및 고교 간 협업 구성으로 여러 대학이 공동 개설 또는 고교와의 연계 구조로 운영.고등학교 학생 대상 연계 강의 및 공개강좌를 제공하고 있다.

교육 네트워크 주고쿠의 2025년도 고교-대학 연계 프로그램에서는 24개 대학이 참여하여 약 180여 개의 고교 대상 강좌를 개설하였으며, 약 75개 고등학교가 연계되어 연간 1,500여 명의 고등학생이 참여하고 있다. 강좌 주제는 AI, 지역사회문제, 환경과학, 의학입문 등 다양하며, 일부 과목은 대학 입학 후 학점 인정이 가능한 구조로 운영된다. 이는 고교-대학 간 수직적 연계 강화뿐 아니라, 지역 대학의 교육 자원을 고교생에게 조기 개방하여 진로 설계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나. 싱가포르

1) 대학입시 제도의 운영 배경 및 변화

싱가포르는 교육을 국가 성장의 핵심 전략으로 삼아온 대표적인 국가로, 고도로 중앙집중화된 교육정책과 체계적인 진로 분기 구조를 통해 국가 주도형 교육시스템을 구축해 왔다. 특히 교육제도는 단순한 학력 신장을 넘어 사회 통합, 인재 육성, 경제 수요 대응이라는 전략적 목적을 수행하는 도구로 활용되며, 대학입시 제도 역시 이러한 국가 목표와 긴밀하게 연계되어 발전해 왔다.

싱가포르의 기본 학제는 유치원 3년, 초등교육 6년이 구조를 갖는다. 초등학교 졸업 시점에 시행되는 PSLE(Primary School Leaving Examination)는 학생을 학업 성취도에 따라 세 개의 트랙(Express, Normal Academic, Normal Technical)으로 나누며, 이 트랙은 이후 중등교육과 고등교육 경로를 결정하는 중요한 분기점이 된다. 초등학교 때부터 학생들은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어야 하며, 일단 상급학교에 진학하게 되면

진로를 바꾸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싱가포르에서는 초등교육이 매우 중요하게 여긴다. 중등교육 이후 학생은 Junior College(2년제, A-Level 준비 중심), Polytechnic(3년제 실무 중심 전문교육), 또는 ITE(Institute of Technical Education)로 진학하게 되며, 각 경로는 고등교육기관 진학의 방식과 자격에 영향을 준다. 이러한 구조는 학업 성향과 직업 적성을 기준으로 학생의 맞춤형 경로를 제공하는 능력주의 기반의 시스템이다.

싱가포르의 대학입시는 전통적으로 영국식 A-Level 체계를 채택해 왔으며, 이는 1960~70년대 독립 초기부터 교육의 표준화와 국제적 신뢰도 확보를 위해 도입되었다. A-Level 시험은 국가가 주관하며, Junior College(2년제)에서 2년간 준비 과정을 거친 후 응시하게 된다. 이 시험 결과는 싱가포르국립대(NUS), 난양공과대(NTU), 싱가포르경영대(SMU) 등 주요 국립대학 입학의 핵심 기준이 된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싱가포르 정부는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인력 다양성 확보 필요성에 따라, 단일 시험 중심 구조의 한계를 인식하고 다경로 진학 체제로의 전환을 추진하였다. 이에 따라 Polytechnic, ITE 졸업자도 GPA, 포트폴리오, 면접 등을 기반으로 일부 학과에 진학할 수 있도록 문을 열었으며, Polytechnic Foundation Programme(PFP), Direct Polytechnic Admission(DPA) 등의 제도가 운영되기 시작했다. 또한, 교육부는 다양한 재능과 잠재력을 반영하는 전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Direct School Admission(DSA) 제도를 도입하였다. 이 전형은 예체능, 과학, 창의력, 리더십 역량 등 비교과 능력을 바탕으로 중등학교 또는 고등교육기관에 진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입시의 다면화와 교육 기회의 다양화를 뒷받침하는 수단으로 발전해 왔다.

싱가포르 대학입시 제도는 점차 단일 시험 중심에서 다경로 선발, 학습자 중심 평가로 이동하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 교육부는 사회적 이동성(Social mobility)과 미래역량 강화를 위해 입시정책을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조정하고 있다. 첫째, A-Level 제도의 유연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평가 방식에서 단순 점수 중심이 아닌 논리적 사고, 융합적 문제 해결, 협업 능력 등을 강화하는 과목 개편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일부 대학은 면접, 포트폴리오 등 정성적 요소를 병행 평가하고 있다. 둘째, 기술·실무 교육 경로 강화를 통해 Polytechnic 및 ITE 출신자의 대학 진입 기회가 확대되고 있다. MOE는 이들을 위한 대학 전용 입학 트랙과 스킬스퓨처(SkillsFuture) 정책을 통해 실용 기술과 고등교육을 연계한 인재 육성을 장려하고 있다. 셋째, 사회 형평성 강화와 기회 확대를 위한 제도 개편도 병행되고 있다. PSLE 성적의 등급화 개편(T-score → Achievement

Levels), 기회 균형 전형 확대 등은 조기 분기에 따른 교육 격차를 완화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2) 대학 입시 제도의 주요 특징

싱가포르의 대학입시는 전통적으로 국가 수준의 고등학교 졸업시험인 A-Level 시험에 기반하여 운영된다. 학생들은 주로 Junior College(2년제 고등교육기관) 또는 통합형 특목고 과정(Integrated Programme)에서 교육을 이수한 후, 싱가포르 케임브리지 A-Level 시험에 응시한다. 이 시험은 싱가포르 교육부 산하 평가기관인 SEAB와 영국 케임브리지 국제평가기관(CIE)이 공동 주관하며, 평가의 표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다.

A-Level 시험 과목은 General Paper(통합 교양논술과목), 수학, 과학, 인문·사회 등으로 구성되며, H1·H2·H3의 과목 수준별 구조를 통해 학생이 자신의 진로 방향과 학업 역량에 따라 과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문항 유형은 서술형과 논술 중심으로, 비판적 사고력과 문제해결력을 평가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점수 체계는 절대평가이며, 각 과목은 A~U로 등급화된다. 대학입학 전형에서는 이 과목별 등급을 합산·환산하여 대학별 입학 점수를 산출한다. 특정 과목에는 보너스 포인트 제도가 적용되기도 하며, 과목별 난이도와 이수 수준에 따라 반영 비율이 조정된다. 이 점수는 싱가포르국립대(NUS), 난양공대(NTU), 싱가포르경영대(SMU) 등 주요 대학의 기본 입학 기준으로 활용된다. 고교 성적(GPA)은 입시에 직접 반영되지 않지만, 학교생활기록부와 비교과 활동 이력은 DSA(Direct School Admission) 제도 등 특정 전형에서 활용된다. DSA 전형은 학생의 학업 성취 외에도 예술·스포츠·리더십 등의 잠재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방식으로, A-Level 시험과는 독립적으로 운영된다. 대학별 자율 전형 요소는 A-Level 성적을 기본으로 하되, 일부 학과에서는 인터뷰, 포트폴리오, 에세이 등을 추가적으로 요구한다. 특히 의학, 건축, 예술 분야는 심층 면접 및 실기 전형이 병행되며, 이는 대학의 선발 자율성을 반영하는 부분이다.

싱가포르의 입시체계는 고등학교 교육과 A-Level 시험이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는 구조로, 교과서·수업 내용·평가 기준이 모두 시험 성취 기준에 맞춰 정비되어 있다. 이로 인해 고교 교육의 목표와 대학 입시의 평가 기준 간 정합성이 매우 높은 편이며, 고교와 대학 간 교육 체계의 일관성을 정책적으로 유지하려는 방향성이 뚜렷하다.

〈표 Ⅴ-7〉 싱가포르 대학입시 평가구조 분석 틀

구분	주요 내용
① 공통시험의 존재 및 성격	A-Level(국가시험) 또는 IB 디플로마, NUS High Diploma 등 다양
② 시험 과목 및 구성	A-Level은 General Paper, 수학, 과학, H1/H2/H3 과목 구성. 논술·서술형 포함
③ 점수 체계 및 평가 방식	절대평가 중심, 등급제, CAP과 GPA 전환도 가능
④ 채점 및 문항 개발 주체	국가교육청(SEAB) 주관, 케임브리지 국제평가기관과 공동 개발
⑤ 고교 성적 반영 여부 및 방식	JC 2년간 성적 관리, 대학 입시 시 A-Level 성적이 핵심 고교 내신은 주요 반영 요소 아님
⑥ 대학별 자율 전형 요소	NUS, NTU 등은 A-Level 성적 외 DSA·포트폴리오·면접 등 병행 가능
⑦ 선발 기준의 공개성과 일관성	각 대학 입학처에서 과거 커트라인·평균점수 공개 일부 전형은 비공개
⑧ 고교 교육과의 연계성	A-Level은 JC 교육과정과 완전히 연동됨 교사·교과서도 평가 기준에 맞춰 설계

주요 이슈(2024-2025년)

① 중간고사(주관 시험) 전면 폐지
2024년부터 주니어 컬리지(JC)와 Millennia Institute 입학생의 Mid-Year Exams(중간고사)가 폐지되었음. 이는 학생의 시험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전 과정을 하나로 묶는 평가 구조를 단순화하려는 의도로 분석됨

② 영어 과목 시험체계 개편
O-Level과 A-Level 영어 시험에서 시각자료 활용, 비교 분석 문항 등이 도입되고, 두 지문을 비교하는 형태의 문항이 추가되며 사고력 중심 평가로 변화하고 있음

③ Project Work 채점 방식 전환 및 과목 필수 반영 규칙 개정
2024년부터 Project Work는 절대 등급(A~E) 기반 pass/fail 체제로 변경되었으며, 2026년 입학생부터는 네 번째 content 과목은 총점에 포함되지 않도록 유연 기준이 적용

④ e-Examination(디지털 평가) 확대 도입
2024년부터 N(A)-Level Social Studies, N(T)-Level Science, Basic Mother Tongue 과목이 디지털 시험(e-Exam) 방식으로 전환되었으며, DAB(Digital Answer Booklet) 인터페이스 등을 통해 채점의 디지털화, 실생활 맥락 평가가 가능해졌음

싱가포르의 대학입시 제도는 국가 주도형 시험 기반 선발 체계와 다양한 진학 경로의 제도화라는 두 가지 축을 중심으로 구성된다. 영국식 A-Level 제도를 기반으로 하되, 최근에는 실무 중심 경로 확대 및 정성적 평가 요소 도입 등을 통해 보다 유연하고 다양화된 구조로 진화하고 있다.

싱가포르의 고등교육기관(특히 국립대학)은 다음과 같은 주요 전형 유형을 통해 학생을 선발한다. 첫째, A-Level 기반 일반전형은 Junior College(2년제) 학생이 A-Level 시험을 응시한 후, 해당 성적을 토대로 대학에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는 가장 일반적이고 대표적인 입시 경로로, 학업 성취 기반의 선발 원칙이 적용된다. 둘째, Polytechnic 기반 전형은 Polytechnic(3년제 전문대학) 졸업자의 GPA, 전공 역량, 과외 활동 등을 기반으로 대학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특히 일부 학과에서는 포트폴리오와 면접 등을 요구하며, Polytechnic Foundation Programme(PFP)과 같은 예비 과정도 존재한다. 셋째, Direct Admissions Scheme 또는 입학사정관형 전형에 해당하는 DSA(Direct School Admission) 제도는 예체능, 과학기술, 리더십, 커뮤니케이션 능력 등 학생의 비교과 역량을 기반으로 조기 입학 기회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이는 특정 분야에 두각을 보이는 학생의 개별 역량을 평가하고자 도입된 제도로, 일부 대학에서 제한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표 V-8〉 전형 유형별 개요

전형 유형	주요 설명
A-Level 기반 일반 전형	- Junior College(2년제) 학생이 A-Level 시험을 응시한 후, 해당 성적을 토대로 대학에 지원하는 방식
Polytechnic 기반 전형	- Polytechnic(3년제 전문대학) 졸업자의 GPA, 전공 역량, 과외 활동 등을 기반으로 대학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Direct Admissions Scheme 또는 입학사정관형 전형	- 예체능, 과학기술, 리더십, 커뮤니케이션 능력 등 학생의 비교과 역량을 기반으로 조기 입학 기회를 제공하는 방식

싱가포르의 대학입시에서는 다양한 평가 요소가 활용되며, 유형에 따라 다음과 같은 항목들이 반영된다. 첫째, A-Level 시험 성적은 핵심 평가 지표이며, H1/H2/H3 과목별 등급이 산정되어 총점 기반으로 대학별 지원 가능성이 결정된다. 대학들은 보통 특정 과목 조합과 최소 성적 기준을 명시한다. 둘째, Polytechnic GPA은 실무 중심 교육

기관인 Polytechnic 졸업생은 GPA(보통 3.5 이상)가 요구되며, 일부 학과는 전공 연계성과 프로젝트 수행 능력 등을 함께 평가한다. 셋째, 면접 및 에세이는 일부 학과(특히 의학, 경영, 디자인 등)에서는 인터뷰나 에세이를 통해 지원자의 사고력, 문제해결력, 소통능력을 확인한다. 넷째, 포트폴리오는 예체능, 건축, 디자인 분야에서는 포트폴리오 제출이 필수이며, 심층 인터뷰가 병행되기도 한다. 마지막으로 DSA 전형 요소는 학생의 학교 내외 활동, 수상 실적, 특별재능, 리더십 경험 등이 심사 기준이 된다.

〈표 V-9〉 주요 전형 요소

전형 요소	주요 설명
A-Level 시험 성적	- 핵심 평가 지표이며, H1/H2/H3 과목별 등급이 산정되어 총점 기반으로 대학별 지원 가능성이 결정
Polytechnic GPA	- 실무 중심 교육기관인 Polytechnic 졸업생은 GPA(보통 3.5 이상)가 요구되며, 일부 학과는 전공 연계성과 프로젝트 수행 능력 등을 함께 평가
면접 및 에세이	- 일부 학과(특히 의학, 경영, 디자인 등)에서는 인터뷰나 에세이를 통해 지원자의 사고력, 문제해결력, 소통능력을 확인
포트폴리오	- 예체능, 건축, 디자인 분야에서는 포트폴리오 제출이 필수
DSA 전형 요소	- 학생의 학교 내외 활동, 수상 실적, 특별재능, 리더십 경험 등이 심사 기준

대학입시 고등교육기관의 종류와 전형 유형에 따라 시기가 다르나, 일반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다. A-Level 시험은 매년 11~12월에 시행되며, 이듬해 3월경 성적 발표된다. 대학 입학 지원은 A-Level 성적 발표 직후인 3~4월 사이에 대학별 지원서를 제출한다. Polytechnic 기반 지원은 졸업 직후 2~3월 무렵, GPA 및 기타 서류 기반으로 지원한다. DSA(Direct School Admission)의 일부 전형은 고등학교 재학 중에 실시되며, 사전 심사와 면접이 여름~가을 사이에 이루어진다.

〈표 V-10〉 전형 시기

유형	시기
A-Level 시험	- 매년 11~12월에 시행
대학 입학 지원	- A-Level 성적 발표 직후인 3~4월 사이
Polytechnic 기반 지원	- 졸업 직후 2~3월 무렵
DSA(Direct School Admission)	- 일부 전형은 고등학교 재학 중에 실시

싱가포르의 대학입시 제도는 국가 주도의 고도로 구조화된 교육시스템 속에서 설계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은 기본 원칙에 따라 운영된다. 첫째, 학업 성취 기반의 공정한 선발이 입시 제도의 핵심이다. Junior College 학생은 A-Level 시험, Polytechnic 학생은 GPA를 통해 대학 진학 자격을 평가받는다. 이처럼 학업 성과에 근거한 입시는 투명하고 명확한 기준을 제공하며, 사교육 개입 여지를 줄이려는 정책 의도와도 부합한다. 둘째, 다경로 진학 체계의 제도화는 싱가포르 입시의 또 다른 특징이다. 학생은 단일 경로가 아닌 JC(학문 중심), Polytechnic(실무 중심), ITE(기초 기술 중심) 등 여러 교육경로를 통해 고등교육에 접근할 수 있으며, 각 경로는 해당 진로 특성에 맞춘 입시 시스템과 연계되어 있다. 이는 개인의 역량과 적성을 반영한 맞춤형 교육기회를 제공하려는 정책적 노력의 결과이다. 셋째, 고교 교육과정과의 구조적 연계가 강조된다. A-Level 시험은 국가가 정한 고등학교 교육과정과 직결되며, Polytechnic 졸업자는 전공 기반 프로젝트와 성적 평가가 입시에 반영된다. 이처럼 고교 교육의 내용과 대학 입시 평가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고등학교 단계의 학습이 단순한 '입시 준비'가 아닌 교육 본연의 과정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넷째, 일부 대학에서는 정성적 평가 요소를 병행함으로써 학업 성취 외의 잠재력도 입시에 반영한다. 특히 의학, 경영, 예체능, 디자인 계열에서는 면접, 에세이, 포트폴리오 등을 통해 사고력, 소통능력, 창의성을 평가하며, 이는 정량적 성적 외의 인재상을 반영하려는 방향성과 일치한다. 이러한 운영 원칙들은 싱가포르 정부의 교육철학인 '능력주의(meritocracy)'와 '공정한 기회(equal opportunity)'를 동시에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라 할 수 있다.

싱가포르의 대학입시 제도는 고도로 정비된 체계와 높은 신뢰도를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정책적 쟁점과 해결 과제를 안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쟁점은 조기 트랙 분기 구조가 교육 기회의 격차를 확대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초등학교 졸업 시점에 시행되는 PSLE 결과에 따라 학생은 Express, Normal Academic, Normal Technical 트랙으로 나뉘는데, 이 분기가 중등·고등 교육 경로, 나아가 대학 진학 가능성까지 영향을 미친다. 비록 정부가 후속 이동 경로를 열어두고는 있으나,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라 학업 경로가 결정되는 현상은 여전히 존재한다.

또한, 실무 중심 경로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역시 중요한 과제이다. 정부는 Polytechnic 및 ITE 경로를 통해도 대학 진학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정비했으나, 여전히 학부모와 학생 사이에서는 'Junior College → A-Level → 명문대 진학'이라는 전

통적 경로에 대한 선호가 뿌리 깊게 존재한다. 이는 실무 인재 양성을 저해하고, 경로 다양성의 실효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

세 번째로, 정성평가 전형의 공정성 확보 문제도 제기된다. DSA(Direct School Admission) 제도는 학생의 비교과 역량을 반영할 수 있는 좋은 제도지만, 평가 기준의 표준화 부족, 학교 간 준비 격차, 정보 비대칭 등의 문제로 인해 고소득층이나 정보 접근성이 높은 집단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한다.

마지막으로, 입시와 진로의 연계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 싱가포르는 노동시장과 교육이 긴밀히 연계된 시스템을 갖고 있으나, 고등교육 졸업 이후 진로 다변화, 창의직종 진출, 국제적 이직 등을 고려할 경우 현재의 '예측 가능한 경로 구조'가 유연성을 제한할 수 있다는 지적도 존재한다. 이러한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싱가포르 정부는 PSLE 등급제 개편, DSA 확대와 평가 기준 정비, 스킬스퓨처(SkillsFuture)를 통한 평생학습 체계 강화 등 복합적이고 장기적인 정책을 추진 중이다.

3) 고교 교육과 연계한 대입제도 사례

가) NUS High School of Mathematics and Science – NUS High School Diploma[7)]

NUS High School of Mathematics and Science는 싱가포르 국립대학교(NUS)와 연계된 특수 목적 고등학교로, 2005년에 설립되었다. 운영체제는 Foundation–Advancement–Specialisation 단계를 거치며 점진적으로 고급 STEM 및 융합역량을 키운다. 이 학교는 GCE O-Level이나 A-Level 대신 자체 개발한 NUS High School Diploma를 수여하며, 이 졸업장은 싱가포르 내 모든 대학은 물론 해외 유수 대학에서도 인정받고 있다.

Diploma 커리큘럼 구조는 'Foundation Years(Year 1–3): 기초 학습(기초 수학·과학·인문·예체능)', 'Advancement Years(Year 4–5): 전공 심화 및 주요문화', 그리고 'Specialisation Year(Year 6): 고급 모듈 및 연구 집중'으로 이루어진다.

학생들은 모듈형 커리큘럼을 통해 수학, 물리, 화학, 생물, 컴퓨터 과학 등에서 심화 학습을 진행하며, Da Vinci Programme이라는 연구 중심 교육과정을 통해 고등학생 시절부터 고급 연구 프로젝트를 수행한다. 학생들은 CAP 2.5 이상, 연구 프로젝트 수

7) 홈페이지: https://www.nushigh.edu.sg

행 그리고 Honours 모듈 이수를 통해 우수 졸업자로 분류되며, 2025년 최신 자료 기준으로 Class of 2025의 모듈 구성과 입시 일정이 모두 공식 웹사이트에 업데이트되어 학사 구조의 투명성과 체계적 운영이 뚜렷하게 드러난다. 졸업생의 상당수가 NUS를 비롯한 국내외 이공계 대학으로 진학하며, 이는 고교와 대학 간의 구조적 연계성을 잘 보여주는 사례이다.

나) Integrated Programme(IP) – Raffles Institution, Hwa Chong Institution[8)]

Integrated Programme(IP)는 싱가포르 교육부가 도입한 대표적인 고교-대학 연계 제도로, 우수한 학업 성취도를 보인 학생들이 GCE O-Level 시험을 생략하고 6년간의 통합 교육과정을 통해 GCE A-Level 또는 IB Diploma를 취득할 수 있도록 설계된 고급 학습경로이다. 이 프로그램은 Raffles Institution(Year 1-6), Hwa Chong Institution, Temasek Junior College, National Junior College 등 주요 명문 고등학교에서 운영되고 있다. IP는 고등학교와 주니어 칼리지(JC) 과정을 통합하여, 학생들이 보다 심화된 학습과 다양한 비교과 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특히, Raffles Institution은 Raffles Girls' School과 함께 6년제 Raffles Programme을 운영하며, 졸업생들은 싱가포르 국립대(NUS), 난양공과대(NTU), 싱가포르경영대(SMU) 등 주요 대학으로 진학하는 비율이 높다. 2025년 기준 본 프로그램의 항목별 현황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V-11〉 Integrated Programme(IP) 현황(2025년 기준)

항목	Raffles Programme	HCI IP
오픈 하우스	May 10, 2025 (Year1-4 대상)	#ExperienceHCIS 2025 행사 진행
국제 행사	2025년 1월 ISYF 개최	동일 행사 주최
DSA 전형	2025 DSA부터 언어·STEM·예술·스포츠 포트폴리오 등 다양분야 확대	NYGH-HCI DSA 유입 연계
졸업 인증	리더십, 예술, 커뮤니티 전 영역 전인적 성장 도모	상위 30%에 Hwa Chong Diploma 지급
기숙 프로그램	RI Leadership boarding (Year 3), HCI Boarding School term-long IP 제공	

8) 홈페이지: https://www.ri.edu.sg/, 홈페이지: https://www.hci.edu.sg/

정리하면, Raffles Institution과 Hwa Chong Institution의 Integrated Programme(IP)은 싱가포르의 고교-대학 연계 교육체계 혁신을 상징하는 대표적 사례로, 6년 일관 커리큘럼을 통해 표준화 시험(O-Level)의 한계를 넘어서는 심화·융합형 교육과정을 구현하고 있다. 두 기관 모두 O-Level 생략을 통해 학습자 중심의 탐구, 연구, 리더십 활동을 적극 보장하고 있으며, 고등학교 단계에서부터 국제적 감각과 전공 적합성을 고려한 유연한 학습 경로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특히, CAP 기반의 성취평가, 리더십·공동체 활동, 디지털 배지 이력관리 등은 고교 교육의 수직적 확장뿐 아니라 학생 역량 기반 선발체계에 대한 새로운 모델을 제시한다. 특히, 고교-대학 간 연계성 강화로 IP는 대학과의 공동 연구, 외부 기관 연계 프로젝트 수행 등 고교-대학-지역사회 연계 모델 구축의 모범이 되고 있으며, 대학 입학 전 단계에서 학문적 성숙도를 키울 수 있는 교과+비교과 통합 설계의 필요성 시사한다.

다. 미국

1) 대학입시 제도의 운영 배경 및 변화

미국의 대학입시 제도는 고도로 분권화된 교육 시스템과 개별 대학의 자율성, 그리고 학생 중심 평가 철학을 기반으로 운영되어 왔다.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표준화된 대학입시 제도가 존재하지 않으며, 각 주(State)와 대학이 독립적으로 입시 요건을 설정하는 구조는 미국 대학입시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이다. 이러한 구조는 미국의 교육철학인 다양성, 선택권, 기회균등과 맞물려 발전해왔다.

미국의 정규 학제는 12학년제(K-12)로, 학년은 대개 초등학교가 1~5학년 혹은 1~6학년, 중학교는 6~8학년 혹은 7~8학년, 고등학교는 9~12학년으로 나누어져 있다. 고등학교 졸업을 위해서는 주별 졸업 요건에 따른 일정 학점 이수와 성취가 필요하다. 고교 교육과정은 매우 선택 중심적이고 유연한 방식으로 운영되며, 필수 교과 외에 Advanced Placement(AP), International Baccalaureate(IB), Dual Enrollment 등 다양한 심화 과정 및 대학 수준 과정을 제공한다. 이러한 다양성은 대학입시 과정에서 학생 개개인의 특성과 학업 역량을 보여주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미국의 대학입시는 20세기 초반까지만 해도 일부 엘리트 대학 중심의 제한된 선발체계였으나,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고등교육의 대중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급격한 변화

가 시작되었다. GI Bill(1944년)은 참전 군인들에게 대학 진학 기회를 제공하며 고등교육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확대시켰고, 이후 주립대학 시스템의 확장, 커뮤니티칼리지 확대, 연방정부의 재정지원 확대(펠그랜트, FAFSA 등)는 교육의 민주화를 촉진하였다. 이와 함께, 전국적으로 활용되는 대학입학 적성시험인 SAT(1926년 시작)와 ACT(1959년 시작)가 점차 확산되며, 고교 성적 외에 일정한 표준화 평가 수단이 입시에 도입되었다. 다만, SAT/ACT는 어디까지나 대학 입학 기준 중 하나일 뿐 필수는 아니며, 대학에 따라 반영 여부가 다르고, 최근에는 점차 비중이 줄고 있다.

21세기에 들어서면서 미국의 대학입시제도는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변화해왔다. 첫째, 표준시험 중심 입시의 완화이다. 많은 대학이 SAT와 ACT 점수를 요구하지 않거나 선택적으로 반영하는 Test-Optional 정책을 도입하고 있다. 팬데믹 이후 이 흐름은 더욱 가속화되었으며, 2023년 기준 미국 내 1,900개 이상의 4년제 대학이 시험 선택제를 시행하고 있다.[9)]

둘째, 정성적 평가 강화이다. 고등학교 내신(GPA), 과외활동, 봉사활동, 리더십, 에세이, 교사 추천서, 면접 등 비교과 중심의 평가 요소가 중요해지고 있다. 특히 아이비리그를 비롯한 상위권 대학은 학생의 인성과 성장 가능성, 공동체에 대한 기여 가능성을 입학 심사에서 중점적으로 본다.

셋째, 형평성과 다양성 강조이다. 대학은 성별, 인종, 소득 수준, 지역, 1세대 대학 진학 여부 등을 입시에 반영하며, 다양성과 형평성(Equity)을 중요한 가치로 삼는다. 다만, 2023년 미국 연방대법원이 소수인종 우대 정책(Affirmative Action)을 위헌으로 판결하면서, 향후 입시에서 인종 기반 고려가 어려워진 만큼 대안적 형평성 보장 방식이 새로운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넷째, 대학의 자율성과 다양성 심화이다. 하버드, MIT, 스탠퍼드처럼 정성평가 중심의 종합사정제(Holistic Admissions)를 실시하는 대학도 있는가 하면, 주립대학 일부는 SAT/ACT 성적 중심 선발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일부 주(State)는 상위권 내신 학생 자동 입학 보장 제도(예: 텍사스 상위 10% 제도)를 도입하여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입시제도의 변화는 미국 사회 전반의 가치 변화와 궤를 같이 한다. 교육은 단

9) 홈페이지: https://fairtest.org/act-sat-optional-test-free-admissions-movement-expands-again-record-1900-schools-do-not-require-scores-for-fall-2024-entrance/?utm_source=chatgpt.com

순히 능력주의적 선발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사회이동성 보장, 기회의 평등, 인재 다양성 확보를 위한 공공 정책으로 간주되며, 대학입시는 그 중심에 있다. 또한 연방정부는 FAFSA(Free Application for Federal Student Aid) 제도, Pell Grant(저소득층 장학금), 워크스터디 등 다양한 재정지원 제도를 통해 고등교육 접근성 보장에 정책적 투자를 이어오고 있으며, 이는 대학의 선발 기준과도 유기적으로 연결된다.

2) 대학입시 제도의 주요 특징

미국의 대학입시는 중앙화된 국가 공통시험이나 단일한 선발 시스템이 존재하지 않으며, 대학별 자율성과 학생 중심 종합평가 체계가 핵심이다. 전통적으로는 SAT 또는 ACT와 같은 표준화 시험이 중요한 입학 요건으로 간주되었으나, 2020년대 이후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선택제(Test-Optional) 정책이 급속히 확산되며 제도적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

SAT(College Board)와 ACT(ACT.org)는 모두 민간기관에서 개발·운영하는 표준화 시험으로, 수학·읽기·쓰기(및 과학: ACT만 해당) 능력을 평가한다. 하지만 2024년 기준으로는 미국 내 2,000개 이상의 4년제 대학이 시험 제출을 필수가 아닌 선택제(Test-Optional)로 운영하고 있으며, 일부 대학은 아예 시험을 고려하지 않는 시험배제형(Test-Free) 정책을 채택하고 있다.

점수 체계는 시험에 따라 다르며, SAT는 1600점 만점, ACT는 36점 만점이다. 과거에는 이러한 점수가 대학 입학의 주요 기준이었으나, 현재는 학생의 고교 성적(GPA), 수강 과목의 난이도(Rigor), 비교과 활동, 에세이, 추천서, 인터뷰 등 다양한 정성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방식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특히 대학마다 선호하는 평가 요소와 가중치가 상이하여, 학생 개개인의 특성과 잠재력을 다양한 방식으로 평가하려는 방향성이 뚜렷하다.

고등학교 성적은 대학입시에서 가장 중요한 평가 요소 중 하나로 간주된다. GPA는 일반적으로 4.0 만점 기준으로 산출되며, 과목별 성취뿐 아니라 수강한 과목의 수준(Honors, AP, IB 등), 학교 내 순위(Rank), 학기별 추이 등이 함께 고려된다. 즉 고교 성취와 학업 태도에 대한 과정 중심 평가가 입시에서 실질적인 영향력을 미친다. 대학별 자율 전형 요소는 미국 대학입시의 핵심이다. 대부분의 대학이 입학사정관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학생은 Common Application 또는 대학별 지원 시스템을 통해 자소서

(Essay), 추천서, 포트폴리오, 비교과 활동 내역 등을 제출하게 된다. 예술, 체육, STEM 특기자 전형의 경우 별도 심층 심사나 오디션, 면접을 실시하는 경우도 있다.

미국의 입시 평가구조는 고교 교육과 완전히 연계되어 있지는 않지만, AP(Advanced Placement), IB(International Baccalaureate), Honors 등 대학수준 과목을 고교에서 미리 이수하고 학점을 인정받는 제도가 널리 활용되며, 이를 통해 고교-대학 간 부분적인 연계성이 형성된다. 특히 고등학교에서의 학업 성취와 도전적인 수업 이수는 대학 입시에서 중요한 정성적 지표로 간주되므로, 고교 교육과 대학 평가가 비공식적·간접적으로 정합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미국의 대학입시는 표준화된 평가보다는 다원화된 선발 시스템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학생의 개별 역량, 잠재력, 경험의 폭넓은 스펙트럼을 평가하는 구조를 통해 개별성과 다양성 중심의 교육철학을 반영하고 있다. 이는 고교 교육의 자율성과 선택권을 강조하는 한국 고교학점제의 방향성과도 일면 맞닿아 있는 측면이 있으며, 평가 기준의 유연성과 다층성 측면에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표 V-12〉 미국 대학입시 평가구조 분석 틀

구분	주요 내용
① 공통시험의 존재 및 성격	SAT/ACT 존재하나, Test-Optional 확대. 필수 아님.
② 시험 과목 및 구성	독립적 과목 없음. SAT는 읽기·쓰기·수학. ACT는 과학 포함.
③ 점수 체계 및 평가 방식	SAT: 1600점 만점. ACT: 36점 만점. 대학마다 가중치 상이
④ 채점 및 문항 개발 주체	College Board(ACT는 ACT.org)에서 출제·채점. 중앙화된 구조
⑤ 고교 성적 반영 여부 및 방식	고등학교 GPA(4.0 scale)가 핵심. 성적분포, 수강과목 rigor 등이 중요
⑥ 대학별 자율 전형 요소	입학사정관제가 기본. 에세이, 추천서, 포트폴리오, 면접 등 자율 요소 강조
⑦ 선발 기준의 공개성과 일관성	대학별 평균 GPA, SAT/ACT 분포는 공개. 종합 기준은 불명확한 경우도 있음
⑧ 고교 교육과의 연계성	커리큘럼-입시 직접 연계는 약함. 하지만 AP, IB 이수는 유리한 평가 요소

주요 이슈(2020-2025년)

① Test-Optional 정책의 지속과 일부 대학의 시험 회귀
팬데믹 이후 SAT/ACT는 선택제(Test-Optional)로 전환되었으며, 2025~26학년도에는 채택 대학 수가 2,000곳 이상으로 유지되고 있음. 그러나 하버드대는 2025년 가을 입학 전형부터 SAT/ACT 점수를 다시 필수로 도입할 계획임

② 고교 교육과의 연계성
AP/IB 과목 이수의 입시 반영 강화는 고교-대학 간 학점/평가 연계성을 구축하려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음. 일부 주(State)에서는 직접 입학(Direct Admissions) 프로그램을 시행하여 '고교 성취 기반 선발'을 조기 확정하는 방식이 공교육-대학 연계 모델로 등장하고 있음

③ AI 기반 평가 도입 가속화
2024년 기준, 미국 대학의 약 51%가 AI를 입시 평가 프로세스에 도입하였으며, 특히 자동화된 추천서 분석, 서류 스크리닝, 면접 예비 평가 등에 AI를 활용하고 있음

④ 영상 에세이(Video Essays)·가상 면접(Virtual Interviews)·포트폴리오 중심 심사 확대
2024년 일부 대학에서 전통적 에세이 대신 영상 기반 자기소개, 가상 면접, 디지털 포트폴리오를 입학 평가 요소로 채택하기 시작했음

⑤ 입학전형의 Merit-based 자동합격제 도입
텍사스의 University of Austin(UATX)는 SAT 1460점 이상 또는 ACT 33점 이상(또는 CLT 105점 이상) 입력 시 별도 평가 없이 자동 합격을 보장하는 제도를 운영하기 시작했음

미국의 대학입시 제도는 중앙정부 주도의 획일적 구조가 아닌, 각 대학이 독립적인 권한을 가지고 자율적으로 전형을 운영하는 분권형·학생중심 입시체계이다. 이에 따라 다양한 전형 유형과 평가 요소가 존재하며, 대학마다 선발 기준이 다르고, 고등학교 교육과정과의 연계 역시 매우 탄력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미국의 대학입시는 다음과 같은 전형 유형으로 구분된다. 첫째, 정규 전형(Regular Decision)은 가장 일반적인 지원 방식으로, 지원 마감일과 발표일이 명확히 정해져 있으며,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 전형을 통해 지원한다. 합격 여부는 일반적으로 3~4월에 발표된다.

둘째, 조기 전형(Early Action / Early Decision)은 학생이 일반전형보다 앞선 시기에 지원하고, 상대적으로 빠르게 결과를 받는 방식이다. Early Action은 합격 후 등록 의무가 없으나, Early Decision은 등록을 전제로 하며 단일 대학에만 지원할 수 있는

제약이 있다.

셋째, 수시 지원(Rolling Admission)은 일부 주립대학이나 대규모 대학에서 채택하는 방식으로, 지원서를 제출한 순서대로 심사하여 일정 기간 안에 결과를 통보한다. 유연하고 빠른 입시 프로세스를 제공하지만, 선착순 마감 가능성도 존재한다.

넷째, 특기자·특별 전형은 예체능, 스포츠, STEM(과학·기술·공학·수학) 분야 우수자, 군 복무자, 1세대 대학 진학생 등을 대상으로 하며, 대학의 다양성 및 공공성과 연결된다.

〈표 V-13〉 전형 유형별 개요

전형 유형	주요 설명
정규 전형 (Regular Decision)	- 가장 일반적인 지원 방식
조기 전형 (Early Action / Early Decision)	- 일반 전형보다 앞선 시기에 지원하고, 상대적으로 빠르게 결과를 받는 방식
수시 지원 (Rolling Admission)	- 일부 주립대학이나 대규모 대학에서 채택하는 방식으로, 지원서를 제출한 순서대로 심사하여 일정 기간 안에 결과를 통보
특기자·특별 전형	- 예체능, 스포츠, STEM(과학·기술·공학·수학) 분야 우수자, 군 복무자, 1세대 대학 진학생 등을 대상으로 하며, 대학의 다양성 및 공공성과 연결

미국의 입시는 단일 시험 성적에 의존하지 않으며, 종합적 평가(Holistic Review)를 지향한다. 주요 전형 요소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고교 성적(GPA)은 가장 핵심적인 평가 요소로, 내신 평균과 성취도, 과목 난이도, 학업 성장곡선이 함께 고려된다. 특히 AP, IB, Honors 등 고급 과목 이수 여부가 중요하다. 둘째, 표준시험(SAT/ACT)은 선택적 반영이 확대되고 있으나, 일부 대학은 여전히 참고 지표로 활용한다. 점수 자체보다는 맥락 내에서의 성취로 해석된다. 셋째, 에세이(Personal Statement)는 지원자의 사고 방식, 인성, 가치관, 진로 동기 등을 보여주는 핵심 문서이며, 평가자에게 '스토리'를 전달하는 도구다. 넷째, 교사 추천서는 학업 능력과 태도, 대인관계, 리더십 등을 입체적으로 보여준다. 다섯째, 과외활동/사회봉사/리더십은 학교 외 활동에서의 주도성, 열정, 지속성 등을 평가하며, 활동의 수보다 '깊이'와 '의미'가 중시된다. 여섯째, 인터뷰는 일부 대학에서 지원자의 인성 및 대학 적합성을 평가하기 위한 선택적 절차로 운영한다.

〈표 Ⅴ-14〉 주요 전형 요소

전형 요소	주요 설명
고교 성적(GPA)	- 가장 핵심적인 평가 요소로, 내신 평균과 성취도, 과목 난이도, 학업 성장곡선이 함께 고려
표준시험(SAT/ACT)	- 점수 자체보다는 맥락 내에서의 성취로 해석
에세이 (Personal Statement)	- 지원자의 사고방식, 인성, 가치관, 진로 동기 등을 보여주는 핵심 문서
교사 추천서	- 학업 능력과 태도, 대인관계, 리더십 등을 보여줌
과외활동/사회봉사/리더십	- 학교 외 활동에서의 주도성, 열정, 지속성 등을 평가
인터뷰	- 일부 대학에서 지원자의 인성 및 대학 적합성을 평가

미국의 대학입시는 지원 방식에 따라 전형 시기가 다양하다. Early Action은 보통 11월 초 마감되며, 합격발표는 12월 중에 발표된다. 비결정적 전형으로, 지원자가 여러 학교에 Early Action으로 지원할 수 있으며, 합격하더라도 다른 학교로 진학할 수 있다. Early Decision은 11월 초 또는 1월 초에 마감되며, 12월 중순 또는 2월 중순에 합격 발표가 있다. 결정적 전형으로 합격 시 다른 대학에 지원할 수 없고, 합격하면 반드시 해당 학교에 입학해야 한다. 정규 전형(Regular Decision)은 1월 초~2월 말에 마감되며, 2월 말~3월 초에 합격 발표한다. 대부분의 대학은 정규 전형으로 지원을 받으며, 합격 여부는 학교마다 다르다. 수시 지원(Rolling Admission)은 정해진 마감일 없이 지원서를 접수한 순서대로 검토하고 합격 여부를 결정한다. 지원자에게는 마감일이 없으며, 언제든 지원할 수 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8월 또는 9월에 입학한다.

〈표 Ⅴ-15〉 전형 시기

유형	시기
정규 전형 (Regular Decision)	- 1월 초~2월 말
조기 전형 (Early Action / Early Decision)	- 11월 초 마감, 12월 중 합격발표
수시 지원 (Rolling Admission)	- 마감일 없이 접수한 순서대로 검토 후 합격여부 결정

미국의 대학입시는 중앙정부가 아닌 각 대학의 자율적인 판단과 기준에 따라 운영되며, 그 핵심은 학생 중심의 종합사정제(Holistic Admissions)에 있다. 이는 단순히 시험 성적이나 내신 등 정량적 지표만으로 학생을 평가하지 않고, 개인의 배경, 경험, 성장 가능성, 공동체 기여도 등을 포함한 다양한 측면을 입체적으로 고려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평가 철학은 학생의 고유한 이야기를 존중하고, 획일적인 선발 기준이 아니라 개별성을 반영한 맞춤형 선발을 지향한다. 이러한 운영 구조는 미국 교육의 핵심 가치인 다양성(Diversity), 형평성(Equity), 포용성(Inclusion)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각 대학은 특정 지리적 배경, 소득 수준, 인종, 학업 환경에서 성장한 학생들에게도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며, 이를 통해 다양한 인재가 교육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또한, 미국의 입시 제도는 고등학교 교육과정과의 유기적 연계성을 중시한다. 고등학생은 학년별로 선택과목, 심화과정(AP, IB, Dual Enrollment 등)을 자율적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대학은 이 과정을 통해 학생의 학업 태도와 도전정신을 판단한다. 결국, 입시는 고등학교 교육의 결과물인 동시에, 학생이 어떤 학습 여정을 거쳐 왔는지를 종합적으로 해석하는 과정으로 기능한다. 이처럼 미국의 입시는 시험과 성적에 얽매이지 않고, 학업 능력과 인성, 잠재력, 사회적 배경 등을 함께 고려하는 다차원 평가 방식이라는 점에서, 교육의 기회 확대와 포용성 실현이라는 공공적 가치를 함께 추구하고 있다.

3) 고교 교육과 연계한 대입제도 사례

가) 오하이오주 College Credit Plus(CCP)[10)]

오하이오주의 College Credit Plus(CCP)는 7학년부터 12학년 고등학생이 공립 대학·단과대학 또는 사립 대학에서 대학·고교 동시 학점을 취득할 수 있는 주 정부 공식 듀얼 인롤먼트 제도이다. 이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학비, 교재, 수강료 부담 없이 자유롭게 대학 수업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고교 교육의 고난도 확장과 대학 조기 진학 경로를 제공하기 위해 2015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CCP는 공립학생에 대해 수업료, 교재, 수강료 전액 무료, 사립 또는 홈스쿨 학생에게

10) 홈페이지: https://highered.ohio.gov/

는 일부 교육비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학생은 OH|ID 시스템을 통해 매년 2월에서 4월 사이에 'Intent to Participate'를 제출해야 하며, 수강 희망 대학에 직접 지원 후 대학 수준의 입학 요건(성적 또는 시험 점수 충족)을 충족해야 할 수 있다. 각 대학(예: Sinclair CC)은 일반적으로 연간 최대 30학점, Level I/II 구분을 둔 성과 기반 수강 체계를 운영 중이다.

CCP는 오하이오주 전역의 공립·사립·홈스쿨 학생 대상이며, 다양한 지역대학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다. 예를 들어 Columbus State Community College는 연간 10,000명 이상의 CCP 학생을 수용하며, Sinclair 및 Lorain County 등 여러 커뮤니티칼리지에서도 적극적으로 운영 중이다. Northwest State CC의 경우 Fall 2021 학기 기준 883명의 CCP 학생이 참여하기도 했다. 2022-2023년 회계년도를 분석한 오하이오 감사관 보고서에 따르면, CCP 학생들은 평균 15학점(1학기 분량)을 취득하며, 이는 전신 프로그램 대비 3배 증가한 수치이다.

오하이오주의 CCP 사례는 고교-대학 연계 체계 구축을 위해 여러 가지 시사점을 제공한다. 첫째, 고교 학습과 대학 학습이 구조적으로 연결되는 통합 학점 체계는 학생의 학습 동기를 촉진하고 조기 진로 설계 기회를 확장한다. 둘째, 공적 재정 지원을 통해 학생의 경제적 부담을 제거함으로써 참여자를 다층적으로 확보하고, 고등교육 진입의 공정성을 높힌다. 셋째, CCP 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대학의 재정적·행정적 부담은 고교-대학-지방정부가 긴밀히 협업하는 평가 및 지원 모델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넷째, CCP는 한국의 고교학점제나 고교-대학 연계 정책을 위한 실질적 벤치마크로 자리하며, 특히 성취 기반 학점 이수, 대학 수업 조기 수강, 학점 취득에 따른 졸업 요건 충족 등 제도 설계의 실용적 틀을 제공한다. 마지막으로 오하이오주 감사관의 지적처럼 프로그램 실효성 검토 및 지속적 평가 체계가 병행되어야, 정책의 안정적 안착이 가능하다는 교훈을 제공한다.

현장 인터뷰

[Sarah's Interview] 미국 고등학교와 대학입시 경험

다른 나라, 특히 동아시아의 또래들과 달리, 나는 사교육이나 보충학습의 도움 없이 미국의 고등학교와 대학입시 과정을 스스로 헤쳐 나갔다. 나는 교외 지역의 대형 공립 고등학교에 다녔는데, 수천 명의 학생이 재학 중이었다. 경쟁은 치열했지만, 공식적인 석차 제도는 없었다. 학교의 구조는 비교적 느슨해서 학생들이 무엇을, 어떻게 배울지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었다.

여름에는 학교의 'Credit Flex'라는 제도를 이용했다. 이 제도는 건강(Health)이나 체육(PE) 같은 필수 과목을 온라인 또는 독립적으로 이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시스템이었다. 나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여름방학 동안 금융 문해(Financial Literacy) 과목을 수강해 학점을 미리 취득했다. 그 성적은 생활기록부에 기재되어 학기 중 시간표를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게 도왔다. 덕분에 학기 중에는 내가 흥미 있는 과목을 더 수강할 수 있었다. 또한 'College Credit Plus(CCP)'라는 주(州) 차원의 프로그램에도 참여했는데, 이는 고등학생이 대학 수준의 수업을 무료로 수강하고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였다. 이런 기회를 통해 여름방학에도 고급 과목을 수강하며 학업 부담을 조절할 수 있었다.

SAT나 ACT 같은 표준화 시험은 독학으로 준비했다. 일부 친구들이 개인 교습이나 학원 수업을 들은 반면, 나는 도서관에서 빌린 문제집과 무료 온라인 자료를 활용해 스스로 학습계획을 세워 공부했다. 학교에서는 PSAT(Preliminary SAT)을 주니어(11학년) 때 전교생이 응시하도록 운영했다.

수업은 오후 2시 30분쯤 끝났다. 학원에 가는 대신, 나는 교내 비교과활동에 참여했다. 뉴스 방송반, 모의재판(Mock Trial), 비즈니스 리더십 동아리 등 다양한 선택활동에 오후 5시까지 참여했다. 이후에는 집에서 공부하거나 책을 읽거나 친구들과 시간을 보냈다. 늦은 밤까지 학교에 남아 강제로 공부하는 문화는 없었다. 대신 자기 동기와 시간관리 능력이 가장 중요했다.

AP(Advanced Placement) 과목은 학문적으로 도전하는 주요 수단이었지만, 모든 학생에게 필수는 아니었다. 나는 단지 호기심과 학구열 때문이 아니라, 진정한 관심이 생긴 과목만 선택해 들었다. 과제량이 많긴 했지만, 학교의 다양한 자원—또래 튜터링, 유연한 제출 기한 등—덕분에 감당할 수 있었다.

내 경험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학생 중심적 환경'이었다. 많은 동아리와 프로그램이 전적으로 학생들에 의해 운영되었다. 교사들은 엄격한 권위자라기보다 멘토로서, 학생들이 자신에게 맞는 학습 방식을 찾도록 격려했다. 예를 들어, 그룹 프로젝트, 프레젠테이션, 심지어 팟캐스트 제작을 통한 학습도 장려되었다.

선배 및 동급생과의 관계 형성은 학교생활과 대학입시 모두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서로 에세이를 검토해주거나, 조언을 구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자연스러웠다. 대학 지원 시에는 중앙집중식 시험이나 단일 원서 시스템이 없었기 때문에, 학생들은 자신이 원하는 대학에 자유롭게 지원할 수 있었다. 나는 '상향 지원'부터 '안전 지원'까지 총 12곳의 대학에 지원했다.

미국 대학입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아마도 **에세이**일 것이다. 단순히 성적이나 점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입학사정관들은 열정, 추진력, 리더십 등 학생의 인성과 성장 가능성을 본다. 학생들은 이러한 특성을 보여주기 위해 교외활동과 보충 에세이를 활용한다. 나 역시 몇 달간 나 자신과 가치관을 드러낼 수 있는 에세이를 작성했다.

나는 현재 오하이오주립대학교(Ohio State University) 입학 예정자다. 'Early Action' 제도를 통해 조기 지원했고, 이는 구속력이 없는 방식으로, 결과를 일찍 받을 수 있었다.

전반적으로 나의 경험은 미국 교육 시스템이 '전인적 성장'과 '선택의 자유'를 중시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물론 자기관리와 불확실성의 부담이 따르지만, 그만큼 자신이 누구인지, 어떤 미래를 원하는지를 탐색할 수 있는 여유를 제공했다.

1. 입시 준비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느낀 요인

미국에는 대학 입학을 완전히 결정짓는 단일 시험이 없다. 일반적으로 ACT나 SAT 점수를 제출하지만, 일부 대학은 이를 선택사항(test-optional)으로 운영한다. 학교에서 배우는 수학, 읽기, 과학의 기본교육만으로도 시험의 기초 문항은 충분히 대비된다. 그러나 시험을 잘 보기 위한 핵심은 **꾸준한 연습과 자원 활용 능력**이었다. 불가능한 시험은 아니며, 충분히 연습하면 누구나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자기 주도적 노력과 시간 활용이다.

2. 오하이오주립대 지원 과정

나는 'Early Action' 제도를 통해 오하이오주립대에 지원했다. 11월 1일 마감일까지 **Common App(Common Application System, 미국 대학입학 공통지원서 시스템)**의 주요 에세이, 보충 에세이, 장학금 에세이를 모두 제출했다. 덕분에 결과와 장학금 심사를 일찍 받을 수 있었다. 이는 'Early Decision'처럼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다른 학교를 선택할 수도 있었다. 최종적으로 나는 약 12곳의 대학에 지원했다.

3. 고등학교의 AP·IB·Honors 과목이 대학 준비에 미친 영향

AP와 Honors 과목을 수강하면서 대학 수준의 읽기·쓰기·분석 능력을 키웠다. 도전적이었지만, 대학입시 과정을 준비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만약 이런 어려움을 미리 겪지 않았다면 SAT나 ACT 준비에 더 많은 시간을 들였을 것이다. 또한 시간관리 능력을 발전시킬 수 있었다. 'College Credit Plus(CCP)'를 통해 고등학교 재학 중 실제 대학 수업을 무료로 들은 경험도 있다. 여름방학 동안 시간은 많이 들었지만, 이런 경험이 대학 수준의 학업을 감당할 수 있는 자신감을 주었다.

4. 자기소개서에서 강조한 강점과 이야기

에세이에서는 고등학교 시절 내가 겪은 도전과 배움을 중심으로 서술했다. 특히 **호기심, 지역사회의 목소리를 알리고자 하는 열정, 겸손한 태도를** 주요 강점으로 부각했다. 뉴스 방송반 리더, 학생 연구 활동, 학생 운영 비즈니스 컨설팅 그룹에서의 경험을 소개하며 단순히 성과를 나열하지 않고 그 과정에서의 성찰과 배움을 강조했다. 또한 대학에서도 호기심을 바탕으로 계속 성장하겠다는 다짐을 담았다.

5. 비교과활동의 입시 평가

비교과활동은 단순한 수치 이상의 **질적·개인적 측면**을 보여주기 때문에 중요한 평가 요소다. 독특하고 봉사 중심적이며 리더십이 드러나는 활동은 학생의 인성을 나타낸다. 누구나 높은 성적은 얻을 수 있지만, 활동에서 보여주는 영향력은 학생의 이야기를 설득력 있게 만든다. 또한 이러한 경험은 대학에서 필요한 '소프트 스킬'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된다.

6. 고교 및 진학상담 교사의 지원 체계

지원 체계는 학교마다 달랐지만, 한국처럼 체계적이지는 않았다. 모든 학생이 매년 최소 1회, 주니어·시니어 시절에는 연 2회 정도 상담을 받았다. 상담교사는 언제든 질문에 답해주었지만, 개별적이고 세세한 지도는 부족했다. 학교 규모가 커서 1:1 맞춤 지원은 어려웠다. 따라서 대부분의 학생은 스스로 정보를 찾거나 온라인 포럼 등 외부 자원을 이용했다. 나 역시 대학 정보 탐색과 에세이 작성의 대부분을 독립적으로 수행했다.

7. SAT/ACT의 필수 여부에 대한 생각

내가 지원할 당시 많은 대학이 코로나19 영향으로 시험 선택제(test-optional)를 유지하고 있었다. 나는 스스로 공부해 좋은 점수를 얻었기 때문에 점수를 제출했지만, 선택권이 있다는 점이 좋았다. 개인적으로는 **시험을 의무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학교마다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대학은 학생들의 역량을 비교할 기준이 필요하다. 물론 경제적 제약이 있는 학생들에게 불리할 수 있지만, 무료 자원이 많기 때문에 극복 가능하다. 다만 시험 성적은 입시 결과를 좌우하는 절대적 요인은 아니다.

8. 공정성과 기회의 평등에서 인상 깊었던 점

가장 인상 깊었던 점은 **'총체적 평가(Holistic Review)'**였다. 대학은 단순히 점수만이 아니라, 학생의 배경과 맥락, 개인적 잠재력까지 함께 고려했다. 완벽한 성적이 아니더라도, 개인의 상황이나 외부 활동이 뛰어나면 합격할 수 있었다. 완벽한 제도는 아니지만, 단일 점수로 모든 것을 결정하는 방식보다 훨씬 공정하게 느껴졌다.

9. 다양성과 사회적 배경의 반영 정도

대학입시에서 다양성은 **중간 정도의 비중**을 차지한다. 대학들은 인종, 사회경제적, 문화적 배경이 다양한 학생 구성을 선호하지만, 특정 배경만으로 특별히 유리해지는 것은 아니다. 모든 학생에게 일정한 기준이 적용된다. 나는 이민가정의 한국계 미국인으로서 문화적 배경이 내 지원서에 깊이를 더했다고 생각한다. 대학들은 분명 다양성을 중요하게 여긴다.

10. 대학 입학 후 기대와 실제 차이

아직 대학에 입학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경험이 없다.

(추가)

나는 AP 시험에서 통과 점수를 받고, CCP 과목에서 좋은 성적을 거둔 덕분에 오하이오주립대 입학 시 대학 학점으로 인정받았다. 주립대에 진학하기로 결정하면서 일반 교양과목 상당수를 면제받고, 전공 심화과정을 더 빨리 시작할 수 있었다. 이런 제도가 모든 대학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 나에게는 큰 이점이었다. 고등학교에서의 노력을 공식적으로 인정받고, 대학 생활에서 더 전문적인 과목에 집중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나) 오리건주의 공통 시험 운영과 선발 연계(PASS) 제도[11)]

오리건주의 공통 시험 운영과 선발 연계(Placement Assessment for Success, PASS) 제도는 고교 및 대입 단계에서 학생 성취도와 학습 준비도를 평가하여, 고등교육기관과 지역사회 교육과의 연결성 강화 및 교육과정 개선을 목표로 시행되고 있다. 먼저,

11) 홈페이지:https://www.oregon.gov/highered/about/Documents/High-School-College/AP%20IB%20Statewide%20Course%20Credit%20Policy.pdf?utm_source=chatgpt.com

Oregon Statewide Assessment System(OSAS)는 3~8학년 및 1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영어, 수학, 과학 분야의 종합 평가를 매년 실시한다. 이 평가는 교사 개발 문항과 채점 기준을 기반으로 하며, 학생의 학습 성취도 및 학력 격차를 진단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다.

PASS는 OSAS와 유사하게 학생의 학업 준비도 평가를 통해, 대학 수준 수업(Credit by Examination)이나 선진 학습 기회(AP·IB, 기초·교양 교과 과정)와의 연결 가능성을 확인하는 제도이다. 예를 들어, Oregon의 공립 대학들은 AP·IB 과목 기준 점수(cut score)를 설정해, AP 점수 3 이상, IB 4 이상 획득 시 해당 과목 대학 학점 인정 체계를 운영한다. 2017년 오리건 상원 법안(SB 207)은 AP 과목 최소 3점을 기준으로, 2019년 SB 160은 IB 점수 4점 기준을 명문화하여, 대학 간 동일 기준 연계가 이뤄지게 되었다. 이 법안들에 따라 AP/IB 정책 실무그룹(AP/IB Policy Workgroup)이 설립되어, 고등학교 수업과 대학 교과 인증 간 투명한 연결 체계를 마련했다.

오리건주의 PASS(Oregon의 OSAS + AP/IB 기반 대학 학점 인정)는 고교 학습→시험 성취도→대학이수로 이어지는 정밀한 선발 연계(High-Stakes yet transparent path) 모델이다. 이는 고교 성취 기반 대입 체계 설계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며, 특히 한국 고교학점제 기반 대학 진학 구조 수립 및 정책 설계 시 유용한 사례로 주목할 수 있다.

라. 독일

1) 대학입시 제도의 운영 배경 및 변화

독일의 대학입시 제도는 일찍부터 분기되는 이원적 교육 체계와, 주(Länder) 중심의 교육 자율성, 그리고 국가 자격시험을 통한 고등교육 자격 인증이라는 세 가지 기반 위에서 형성되었다[12]. 독일은 단순한 입시 경쟁을 지양하고, 교육과정 이수 및 자격 인증을 통해 고등교육에 접근하는 과정 중심, 자격 기반 진입 모델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다른 국가들과의 대학입시 구조와 큰 차별성을 보인다.

독일은 연방 국가로, 교육정책과 운영은 16개 주(Länder)에 의해 자율적으로 결정되

12) 독일은 연방 국가로, 각 주(Länder)의 교육부(Ministerium für Bildung)가 주요 교육 행정을 맡으며, BMBF는 연방 차원의 고등교육·연구 정책을 담당함

며, 이에 따라 교육과정, 시험, 졸업 요건 등이 주마다 다소 차이가 있다. 하지만 기본적인 학제 구조는 다음과 같다. 그룬트슐레(Grundschule, 초등교육 1~4학년) 후, 학생은 성적과 교사 추천에 따라 다음 중 하나로 분기된다. 김나지움(Gymnasium, 일반계 고교+심화 중등과정)은 일반대학 진학을 위한 학문 중심 교육(8~9년 과정)이고, 레알슐레(Realschule)는 중간 수준의 실무 중심 교육이다. 하우푸트슐레(Hauptschule)은 실업 및 직업 교육 중심 학교로, 일부 주에서는 종합학교(Gesamtschule) 형태로 통합 운영된다. 김나지움(Gymnasium)에서 최종 2~3년간 이수하는 상위 과정(Oberstufe)은 대학입시 준비의 핵심 단계로, 이수 후 아비투어(Abitur) 시험을 통해 고등교육 진학 자격을 부여받는다.

독일은 전통적으로 '고교 졸업=대학입학 자격'이라는 자격 중심 입시제도를 운영해 왔다. 이는 나폴레옹 시기 이후 형성된 교육을 통한 시민 양성과 공공관리 인재 육성의 철학에 기반한 것으로, 시험 성적만이 아니라 고등학교 교육과정 이수 자체가 대학입학의 전제 조건이 된다. 아비투어(Abitur)는 단일 시험이 아니라, 고등학교 마지막 2년간의 성적(평가 노트)과 함께, 각 주에서 주관하는 필기 및 구술 시험의 성적을 종합해 산출된다. 이 성적은 1.0(최고) ~ 4.0(합격선)까지의 등급제로 환산되며, 대학들은 이 점수를 기준으로 신입생을 선발한다. 전국 단일 입시제도가 없고, 수능 같은 전국공통시험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독일은 고교-대학 간의 평가 일관성보다는 교육과정의 내실성과 이수 책임에 중점을 두는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독일의 대학입시 제도는 오랜 기간 동안 '자격 중심, 과정 기반'이라는 철학을 바탕으로 안정적으로 운영되어 왔지만, 2000년대 이후 사회 변화와 국제 교육 환경의 영향에 따라 점진적인 제도 개편이 이루어졌다. 특히 고등학교 교육의 구조 개편, 대학 선발방식의 다양화, 국제 경쟁력 확보를 위한 대응이 핵심 흐름으로 나타난다.

우선, 2000년대 초반 일부 주에서는 김나지움(Gymnasium)의 교육 기간을 기존의 9년(G9)에서 8년(G8)으로 단축하는 'G8 개혁'을 추진하였다. 이는 학생들의 대학 진학 연령을 앞당기고, 국제적인 교육 속도에 발맞추려는 시도였다. 그러나 단축된 교육과정으로 인해 교육의 질 저하, 과도한 학습 부담, 교사·학생·학부모의 반발이 이어졌으며, 결국 2010년대 이후 상당수 주에서 다시 G9 체제로의 복귀를 선택하게 되었다. 이 사례는 제도 변화에 있어 '학습의 질과 여건'을 우선 고려하는 독일 교육계의 보수적이면서도 신중한 접근 방식을 보여준다.

이와 함께, 아비투어(Abitur) 자격 조건과 평가 방식의 유연화가 병행되었다. 필수과목 외에도 선택과목의 수가 확대되었고, 각 과목의 이수 단위가 강화되며 개별 학생의 진로와 적성에 맞는 교육 경로 설계가 가능해졌다. 과목 선택의 다양성은 학생의 자기주도성과 학문적 탐색을 지원하며, 이는 아비투어(Abitur) 시험 성적에도 반영되는 구조다. 결과적으로 고교 교육과 대학입시 간의 연계가 더욱 심화되었으며, 입시 자체가 고교 교육의 연장 선상에 놓이게 되었다. 한편, 독일은 고교 진학 과정의 정보 접근성과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대학입시 지원 시스템의 디지털화를 추진하였다.

특히 의학, 치의학, 약학, 수의학 등 인기 학과에 대해서는 'hochschulstart.de'라는 중앙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입시 절차를 통합·표준화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있다. 그 외 학과는 여전히 대학 자율에 따라 아비투어(Abitur) 성적, 자기소개서, 면접 등을 활용한 선발이 이루어진다. 또한, 유럽고등교육공간(Bologna Process) 체제와의 정합성을 맞추기 위한 국제화 대응도 주요한 변화 중 하나다. 아비투어(Abitur) 외에도 국제학력 자격(예: IB, A-Level, 프랑스 Baccalauréat)에 대한 인정 폭이 넓어졌고, 비유럽권 출신 유학생을 위한 학력 인증 체계와 입학 전형도 다변화되었다. 이를 통해 독일 대학은 국제 유학생 유치 경쟁에서도 유연하고 개방적인 입장을 견지하게 되었다.

이처럼 독일의 대학입시 제도는 본질적인 평가 철학은 유지하면서도,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방식으로 점진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해왔으며, 이는 고교 교육의 질을 보장하는 동시에 고등교육 접근성과 다양성을 함께 추구하려는 정책적 방향성을 보여준다.

2) 대학입시 제도의 주요 특징

독일의 대학입시는 전국 공통시험이 아닌, 각 주(Länder) 단위의 아비투어(Abitur)를 중심으로 운영된다. 아비투어(Abitur)는 고등학교 상급단계(Gymnasiale Oberstufe)를 마친 학생들이 대학에 진학하기 위한 자격시험으로, 고등학교 교육의 최종 성취도를 평가하는 졸업시험이자 입시 자격시험의 기능을 동시에 수행한다. 이 시험을 통과하면 독일 전역의 대학교에 지원할 수 있는 일반적인 입학 자격(Allgemeine Hochschulreife)을 부여받는다.

공통시험은 존재하지 않지만, 일부 주에서는 특정 과목에 대해 중앙출제 시험(Zentralabitur)을 도입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아비투어(Abitur)의 표준성과 비교 가능

성을 강화하기 위해 주간 협력과 통일된 출제 기준 마련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시험은 주로 독일어, 수학, 외국어, 사회·과학 계열 등에서 선택과목을 조합해 응시하게 되며, 서술형 및 논술형 문항이 중심을 이룬다. 점수 체계는 절대평가 중심으로 운영되며, 고등학교 성적과 졸업시험 성적을 종합하여 GPA 형태의 수치로 나타내기도 한다.

채점 및 문항 출제는 각 주 교육부의 책임 하에 이루어지며, 고교 교사와 평가전문가들이 협업하여 문항을 작성한다. 이중 채점과 표준화된 평가기준이 적용되어 채점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되어 있다. 다만 연방제가 기본인 독일의 교육체계 특성상, 주별 난이도 편차나 평가 관행의 차이가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고 있다.

고교 성적은 입시에 직접적이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고등학교 과정 전반의 이수 성적과 Abitur 시험 결과를 종합하여 학생의 대학 입학 가능 여부가 결정되며, 이는 고등학교에서의 학업 성취가 곧 입시 자격과 평가 결과로 직결된다는 점에서 고교-대학 간 정합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다. 추가적인 서류평가나 면접 등은 일부 학과(특히 의학, 예술 등)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이지 않다.

대학별 자율 전형 요소는 제한적으로 존재한다. 독일 대부분의 대학교는 아비투어(Abitur) 성적만으로 입학이 가능하지만, 인기 전공(의학, 치의학, 수의학, 심리학 등)의 경우에는 hochschulstart.de라는 통합 시스템을 통해 전국 단위 선발이 이뤄진다. 이 경우에는 GPA, 이수 과목, 특별 활동, 면접 등이 반영되며, 대학이 일부 선발 재량을 가질 수 있다.

독일의 대학입시 구조는 고등학교 교육과정, 졸업시험, 대학 진학이 하나의 연속된 시스템으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교육 단계 간의 정합성이 매우 높다. 특히, 고등학교 성적이 대학입학 평가의 중심이 되며, 고교 교육과 대학선발이 구조적으로 분리되지 않는 특징은 한국의 고교학점제와 대입 체계가 지향하는 바와도 일정 부분 유사한 점을 보여준다.

〈표 Ⅴ-16〉 독일 대학입시 평가구조 분석 틀

구분	주요 내용
① 공통시험의 존재 및 성격	아비투어(Abitur)는 주 단위로 시행되며, 일부 과목은 전국공통(Zentralabitur) 적용.
② 시험 과목 및 구성	독일어, 수학, 외국어, 과학, 사회과학 등 주요 영역에서 필수 + 선택 과목 조합 필기시험(최소 3과목 응시, 대부분 서술형 중심) + 구술시험(최소 1과목 이상, 프리젠테이션 포함)
③ 점수 체계 및 평가 방식	원점수 → 등급 → 점수화(GPA 1.0). 절대평가 중심
④ 채점 및 문항 개발 주체	주정부 교육부 주관, 교사 출제+이중 채점 병행. 일부는 주간 통합문항 활용
⑤ 고교 성적 반영 여부 및 방식	아비투어(Abitur)는 고교 2년 성적(50%) + 졸업시험 성적(50%)으로 구성
⑥ 대학별 자율 전형 요소	인기 전공(의학 등)은 전국 단일전형(ZV), 나머지는 대학 자율입학
⑦ 선발 기준의 공개성과 일관성	대부분 대학은 GPA cut-off 공개. 일부 전공은 지역별 쿼터 운영
⑧ 고교 교육과의 연계성	아비투어(Abitur) 자체가 고교 교육의 총괄 성취도를 평가. 교과와 시험 내용 완전히 정합

주요 이슈(2020-2025년)

① 전국 단일시험은 없으나, IQB 문항 전체 사용 확대
2025년 아비투어(Abitur) 시험에서는 일부 주에서 채택한 IQB(교육표준연구원) 문항 전체 공통채택 비율이 최대 ⅔로 확대되어, 평가의 전국적 일관성과 비교 가능성이 강화되고 있음

② 아비투어(Abitur) 점수 체계(GPA, 과목·등급 반영)에는 변화가 없으나, 국가 간 출제 전반 통일로 평가 기준의 동질성 강화가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음

③ Abiturnoten의 '디지털 투명화' 강화
2025년부터 함부르크 지역은 Abitur 성적, 과목별 평균치와 분포 데이터를 상세히 공개하며, 성별·지역별 통계도 함께 발표하여 투명성을 높이고 있음

독일의 대학입시는 국가 단일시험 중심이 아닌, 고등학교 교육과정 이수와 자격 인증을 기반으로 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시험을 통과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을 충실히 이수한 결과로서의 대학 진학'이라는 원칙이 강하게 작동하며, 이는 독일 교육 전반에 흐르는 과정 중심 평가 철학을 반영한다.

독일의 대학입시는 기본적으로 아비투어(Abitur)라는 고등학교 졸업 자격시험을 기반으로 한다. 아비투어(Abitur)는 단일 시험이 아니라, 고교 마지막 2~3년간의 성적과 주 정부가 주관하는 필기·구술 시험 결과를 종합해 산출된 자격이며, 이는 자동적으로 대학 진학 자격을 의미한다. 특정 학과(예: 의학, 치의학, 약학, 수의학 등)의 경우에는 전국 수준에서 통합 선발을 실시하며, 이들 전공은 경쟁률이 높기 때문에 중앙지원 시스템인 'hochschulstart.de'를 통해 지원하고, 일부 대학에서는 자기소개서나 면접 등 추가 평가를 실시한다. 반면, 일반 학과는 대학별로 자율적인 기준에 따라 선발하며, 아비투어(Abitur) 성적만으로 입학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다.

대학입시의 핵심 평가 요소는 아비투어(Abitur) 성적이며, 이는 학교 내신 성적과 졸업 시험 성적의 가중평균으로 산출된다. 이 성적은 1.0에서 4.0까지의 점수 체계로 환산되며, 수치가 낮을수록 우수하다. 일부 대학이나 학과에서는 아비투어(Abitur) 성적 외에 면접, 전공 적성 평가, 자기소개서 등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으며, 예체능 계열에서는 포트폴리오나 실기 시험이 병행되기도 한다. 그러나 대다수 학과에서는 아비투어(Abitur) 성적이 절대적 기준으로 활용되며, 성취 기반의 공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중시하는 독일 교육문화가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대학 지원자는 10월에 시작하는 겨울학기를 위해서는 7월 15일까지, 4월부터 시작하는 여름학기를 위해서는 1월 15일까지 전체 독일 대학 입학관리사이트인 'hochschulstart.de'에 등록한 후 이곳으로 지원서류를 보내야 한다(독일의 대부분의 대학들은 겨울학기에만 신입생을 받으며 여름학기에 입학생을 받은 학과 수는 갈수록 줄어들고 있음). 지원서 마감일까지는 총 12개 대학에 지원할 수 있지만 마감 후 1주일이내에 가장 진학하고 싶은 대학 3개의 우선 순위를 변경할 수 있다.

의학, 치의학, 수의학, 약학과는 독일의 모든 대학에서 입학 정원제가 적용되어 아비투어(Abitur) 성적에 따라서 입학이 결정되지만 그 외의 학과는 매년 지원자 수에 따라서 입학정원제 적용 여부가 결정된다. 입학정원제가 적용되지 않은 학과에서는 대학 지원자격인 아비투어(Abitur)만 있으면 지원 시 모두 합격하게 된다.

〈표 V-17〉 전형 시기

유형	시기
겨울학기 시작	7월 15일까지
여름학기 시작	1월 15일까지

독일의 대학입시는 과정 중심의 평가 철학과 자격 중심의 진학 제도라는 원칙 아래 운영된다. 대학입시는 단순히 지식을 암기하고 경쟁을 통해 선발되는 시스템이 아니라, 고등학교에서 얼마나 충실히 교육과정을 이수했는지를 바탕으로 학업 자격을 증명하는 방식이다. 이 구조는 입시를 위한 교육 왜곡을 줄이고, 고교 교육의 내실화를 장려하며, 학생들이 보다 다양한 과목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다. 또한 입시 전반이 주 정부 단위로 운영되기 때문에 지역별 특성이 반영될 수 있지만, 전국적으로는 일정 수준의 질적 균형과 공공성이 유지되고 있다는 점도 독일 교육체계의 특징 중 하나다.

독일 대학입시 제도는 높은 공공성과 예측 가능성을 자랑하지만, 동시에 다음과 같은 정책적 과제에 직면하고 있다. 첫째, 아비투어(Abitur)의 평가 기준과 교육과정이 주마다 다르다는 점은 대학입시의 형평성과 통일성 측면에서 지속적인 논란을 낳고 있다. 둘째, 특정 인기 학과(의학, 법학 등)에 대한 진학 문턱이 너무 높아져, 대학입학의 형식적 자격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진입이 어려운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 이로 인해 일부 학생은 다른 국가로 유학을 택하거나, 여러 해에 걸쳐 입학을 시도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기도 한다. 셋째, 고등학교에서 이수하는 과목의 조합에 따라 아비투어(Abitur) 점수가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이 또한 간접적인 입시 격차로 작용할 여지가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보완하기 위해, 독일은 아비투어(Abitur)의 평가 공통 기준 마련, 고교 교육의 선택 다양성 확대, 온라인 통합 지원 시스템 정비 등을 병행하며, 교육 자율성과 입시 공정성 간의 균형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3) 고교 교육과 연계한 대입제도 사례

가) 독일-프랑스 고등학교(Deutsch-Französisches Gymnasium, DFG/LFA)[13]

독일-프랑스 고등학교(Deutsch-Französisches Gymnasium, DFG/LFA)는 독일과 프랑스가 공동으로 설립한 이중국가 고등학교로, 유럽 내 가장 성공적인 이중 언어·이중 교육과정 운영 모델 중 하나로 평가받는다. 이 학교는 1972년 독일의 자를브뤼켄(Saarbrücken)에 처음 개교하였으며, 이후 프랑스의 뷔세(Vaucresson)와 프라이부르크(Freiburg) 등으로 확장되어 오늘날까지 양국의 교육 협력 상징으로 기능하고 있다.

13) 홈페이지: https://dfg-lfa.org/?utm_source=chatgpt.com,

이 학교의 가장 큰 특징은 양국의 교육과정을 통합적으로 구성하고, 학생들이 독일과 프랑스 양국 중 어느 한 나라의 교육 시스템에 편중되지 않도록 균형 있는 이중 언어·이중 문화 환경을 제공한다는 점이다. 교사진 역시 프랑스 교사와 독일 교사가 함께 배치되며, 주요 교과는 독일어와 프랑스어 중 과목별로 지정된 언어로 진행된다. 예를 들어, 수학은 프랑스어로, 사회과학은 독일어로 배우는 식이다. 학생들은 두 나라의 학교법과 교육 과정을 기반으로 설계된 공통 커리큘럼을 이수하게 되며, 마지막 학년에서는 Abi-Bac이라는 독일 아비투어(Abitur)와 프랑스 바칼로레아(Baccalauréat)를 동시에 취득할 수 있다. 이러한 운영 방식은 양국 정부 간의 정교한 협약과 행정적 조율을 바탕으로 유지되며, 학생의 교육 선택권 확대, 국경을 넘는 고등교육 진입 가능성 보장, 유럽 시민으로서의 정체성 형성이라는 교육적 가치를 실현하고 있다.

DFG/LFA는 고등학교와 대학을 연결하는 제도 설계 측면에서 중요한 사례로, 국가 간 교육제도의 장벽을 넘어선 공동 학력 인증 체계의 가능성을 실증적으로 보여준다. 이 학교는 독일과 프랑스라는 서로 다른 교육 체계를 조율하여, 졸업 시 양국의 공식 졸업 자격인 아비투어(Abitur)와 바칼로레아(Baccalauréat)를 동시에 부여하는 이중 인증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이 같은 구조는 한국에서도 대학입시의 다양화와 고교학점제 확대에 따라, 학교 차원의 이수 인증과 국가 공통 인증이 병존하는 복수 인증 체계 설계를 검토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또한, DFG/LFA의 운영 방식은 고교 교육과 대학 교육 간의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통된 성취 기준과 평가 언어, 커리큘럼 체계를 어떻게 정교하게 설계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교과별 언어 지정, 교사 구성의 이중화, 평가 방식의 이원적 관리 등은 고교 단계에서부터 대학 학습과의 연계를 염두에 두고 구조화된 결과로, 이는 한국형 고교학점제 운영에서도 대학 학점 인정의 신뢰성과 고교 평가 결과의 활용 가능성을 높이는 실질적인 참고 모델이 된다.

나아가, 이 학교는 단순히 학력 취득을 위한 교육기관을 넘어, 학생이 문화적·시민적 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 공간으로 기능하고 있다. 양국 언어와 문화에 모두 능통한 글로벌 시민을 양성하는 교육과정은, 지역과 세계를 잇는 글로컬 인재 육성을 지향하는 한국의 지속가능한 교육 전략과도 맥을 같이한다. 따라서 DFG/LFA는 단일 국가 내 고교-대학 연계를 넘어, 제도 간, 국가 간 장벽을 넘어서는 교육 통합의 가능성과 방향성을 제시하는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나) 바덴뷔르템베르크 협동조합 대학교 (Duale Hochschule Baden-Württemberg, DHBW)[14]

바덴뷔르템베르크 협동조합 대학교(DHBW, Duale Hochschule Baden-Württemberg)는 독일 바덴뷔르템베르크(Baden-Württemberg) 주 정부가 설립한 공립 고등교육기관으로, 독일의 대표적인 듀얼 교육 시스템을 구현하고 있는 기관이다. 2009년 기존의 직업아카데미(Berufsakademie)를 통합하면서 정식 대학교로 전환되었으며, 현재는 슈투트가르트를 중심으로 9개의 캠퍼스와 3개의 위성캠퍼스를 두고 운영 중이다. 2024-2025년 기준으로 약 32,400명의 재학생이 재학 중이며, 약 9,600개 기업 및 공공기관과 긴밀한 파트너십을 통해 실무 기반의 고등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DHBW의 가장 큰 특징은 '듀얼 교육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은 학생이 이론 교육과 실무 훈련을 병행하는 구조로, 3개월 단위로 대학교에서 강의 수업을 듣고, 협력 기업에서 실무를 수행하는 과정을 반복한다. 이와 같은 구조는 학생에게 현장 중심의 실무 능력을 효과적으로 배양하며, 졸업과 동시에 기업 현장에서 바로 투입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한다는 점에서 독일 산업계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DHBW의 학부과정은 일반 유럽 대학보다 많은 210 ECTS 학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학생들은 경영학, 공학, 컴퓨터과학, 사회복지, 보건 등 다양한 전공을 선택할 수 있다. 입학을 위해서는 먼저 기업과 실습 계약을 체결한 뒤 대학에 등록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다. HBW는 실무 중심의 학사 교육에 더해, 직장과 연계된 석사 프로그램도 제공하고 있다.

2011년부터 시작된 이 석사 과정은 MBA, 공학 석사, 과학 석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제공되며, 학문과 실무의 융합을 심화하는 교육모델로 자리잡고 있다. 또한 DHBW는 유럽 내 다른 듀얼 대학들과 함께 'EU4DUAL'과 같은 국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다양한 해외 기업 및 교육기관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글로벌 역량을 갖춘 실무형 인재 양성에도 힘쓰고 있다. 국제 교류 프로그램과 단기 파견, 공동 연구 등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어, 독일 내에 국한되지 않는 교육적 확장을 이루고 있다.

2024-2025년 기준, DHBW에는 약 32,400명의 재학생이 있으며, 이 중 12,000명 이상이 신입생으로 입학하였다. 기업 파트너 수는 9,600개를 넘어서며, 이는 단일 대학

14) 홈페이지: https://www.dhbw.de/english/home?utm_source=chatgpt.com

시스템으로는 매우 높은 수치이다. 슈투트가르트 캠퍼스는 약 8,000명의 학생이 재학 중이며, 이들과 협력하는 기업은 약 2,000개에 이른다. 마나임(Mannheim), 라벤스부르크(Ravensburg) 등 지방 도시의 캠퍼스들도 지역 산업과 긴밀히 연계되어 있으며, 지역 고용과 산업 구조에 기여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DHBW는 교육과 산업을 연결하는 구조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양질의 고등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DHBW는 고등학교와 대학교, 그리고 산업계가 하나의 연계 체계 속에서 작동하는 듀얼 시스템의 이상적인 사례로 평가된다. 특히 학생이 대학 진학 전 실습 기업과 계약을 체결하고, 대학 교육과 실무를 병행하는 구조는 한국에서 도입되고 있는 고교학점제나 고교-대학 연계 교육모델에 깊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학생이 고등학교 단계에서 일정 수준의 성취를 바탕으로 실습 기회를 확보하고, 이후 대학 학점과 연계하는 방식은 교육과 노동시장 간의 정합성을 높이는 데 유리하다. 아울러, DHBW의 학점 설계(210 ECTS)와 같이 집중도 높은 학습과 실무 경험이 병행되는 체계는, 국내 고등교육과정의 질적 개선과 직업교육 강화에 실질적인 모델이 될 수 있다. 나아가, DHBW의 국제화 전략과 기업 연계 방식은 한국 고등학교와 대학이 지역사회 및 글로벌 산업계와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데 참고할 만한 선진 사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마. 핀란드

1) 대학입시 제도의 운영 배경 및 변화

핀란드는 세계적으로 교육 혁신 국가로 손꼽히며, 그 기반에는 평등한 교육 기회, 학생 중심 교육철학, 그리고 과정 기반 평가 중심의 대학입시 제도가 자리잡고 있다. 핀란드의 대학입시는 고교 교육과정과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으며, 입시 경쟁보다 학업 성취와 자기주도 학습을 중시하는 구조로 발전해왔다.

핀란드의 학제는 유치원 1년(6세)과 함께, 기초교육(Peruskoulu)이라는 통합형 의무교육(7세~16세)을 제공하며, 초등과 중등이 분리되지 않고 9년제 통합 학교로 운영된다. 기초교육(Peruskoulu) 이후 학생들은 진로에 따라 일반계 고등학교(Lukio) 또는 직업교육기관(Vocational School)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된다. 일반계 고등학교(Lukio)는 3년 과정으로, 대학 진학을 위한 교육을 제공하며 자유로운 과목 선택과 자기주도 학습을 강조한다. 직업학교(Vocational School)은 실무 기반 교육을 제공하며, 직업

자격취득과 더불어 대학 진학도 가능한 경로다. 이러한 구조는 고등학교 이후의 진로 선택을 학생의 적성과 희망에 기반한 자율적인 판단에 맡기며, 직업 교육과 대학 교육 간의 위계 없이 수평적 전환이 가능한 유연한 구조를 갖는다.

핀란드의 대학입시 제도는 전통적으로 국가공인 Ylioppilastutkinto(고등학교 졸업 시험)에 기반한다. 이 시험은 일반계 고등학교(Lukio)의 마지막 학년에 치러지며,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대한 종합적인 성취를 평가하는 시험으로, 사실상 핀란드 전역의 대입 기준이자 고교 졸업 인증으로 작동한다. 이 시험은 핀란드 국가시험위원회(Matriculation Examination Board)가 주관하며, 과목은 필수인 핀란드어(또는 스웨덴어), 외국어, 수학, 과학·사회 계열 과목 중에서 학생이 선택하여 응시한다. 이 시험 결과는 대학의 정량적 평가 기준으로 활용되며, 대학은 별도의 수능시험 없이 이 성적을 통해 1차 선발을 실시한다. 핀란드의 대학입시는 경쟁적 요소가 일부 존재하나, 학생의 시험 점수만이 아니라 고교 내신, 전공 적합성, 자기소개서 등의 정성적 평가 요소를 보완적으로 활용한다. 특히 전문대학(University of Applied Sciences, UAS)에서는 실무 역량과 경험 중심의 평가가 강조된다.

2000년대 이후 핀란드는 입시 구조를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개혁해 왔다. 첫째, 입시의 중앙화 및 디지털화다. 과거에는 대학별로 지원서를 제출하고 시험을 치르는 분산형 입시 구조가 많았으나, 2020년부터는 'Studyinfo.fi'라는 국가 통합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대학 지원이 중앙화되었다. 이를 통해 지원 절차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향상되었으며, 대학별 선발 기준과 전형 요소도 보다 명확히 공개되고 있다. 대학입학 자격시험 역시 점진적인 디지털화가 진행되어, 2019년부터는 모든 과목이 전자시험(e-exam)으로 전환되었다. 이는 시험의 공정성과 접근성을 강화하고, 미래형 교육 환경과 연계된 평가 체계를 구축하려는 방향이다. 둘째, 정량-정성 평가의 병행 강화다. 최근 핀란드는 대학입시에서 단순한 시험 점수에 의존하기보다, 학업 동기, 자기주도성, 문제해결력 등 비인지적 역량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입시를 보완하고 있다. 일부 대학에서는 면접, 포트폴리오, 전공 탐색 경험, 비교과 활동을 반영하며, 이는 특히 예술·교육·보건 분야에서 두드러진다. 셋째, 직업교육과 대학 진학 경로의 통합이다. 기존에는 일반고 출신 학생이 대학 진학의 주류였으나, 2010년대 후반부터는 직업교육(VET) 이수자도 대학 진학이 가능한 제도 개선이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직업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은 보완학습 과정 또는 UAS(University of Applied Sciences) 진학을 통해 대학 시스템에

진입할 수 있으며, 이는 핀란드형 평생학습 모델과 맞물려 운영되고 있다.

정리하면, 핀란드의 대학입시 제도는 교육과정 자체를 중심에 둔 신뢰 기반 입시 시스템으로, 고교 교육의 내실과 대학 진학의 연계성을 균형 있게 확보하고 있다. 정시 선발과 수시 전형의 혼합이나, 고등학교 외 활동을 입시에 반영하는 방식은 매우 제한적이며, 대신 학업 성취와 자기주도 학습의 결과로서의 대학 진학이라는 원칙이 강조된다. 최근에는 교육의 디지털 전환, 정성평가 요소 확대, 직업-학문 교육 간 유연한 연계 등을 통해 더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고등교육 진입 시스템으로 진화하고 있으며, 이는 한국을 포함한 다양한 교육제도 개혁 논의에 실질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2) 대학 입시 제도의 주요 특징

핀란드의 대학입시는 전국 공통 졸업시험인 '고등학교 졸업시험(Matriculation Examination, Ylioppilastutkinto)'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이 시험은 고등학교(Lukio) 교육을 이수한 학생이 치르는 국가 단위의 졸업 및 대학 입시 시험으로, 고등학교 성취평가와 대학 입학 자격을 동시에 제공하는 이중 기능을 지닌다. 국가시험위원회(Finnish Matriculation Examination Board, YTL)가 시험 전반을 주관하며, 시험은 매년 3월과 9월 두 차례 시행된다. 과목 구성은 핀란드어(또는 스웨덴어), 외국어, 수학, 과학, 인문사회 분야 등에서 최소 5개 과목 이상 선택 응시가 원칙이며, 학생이 자신의 진로 및 강점을 반영하여 시험 조합을 자율적으로 구성할 수 있다. 시험 문항은 객관식 없이 서술형과 논술형 중심으로 출제되며, 언어적 표현력, 분석력, 종합적 사고력을 중시하는 평가 설계가 특징이다.

점수 체계는 절대평가 기반 7등급제(Laudatur, Eximia, Magna Cum Laude, Cum Laude, Lubenter, Approbatur, Improbatur)로 운영되며, 과목별 성취 수준을 명확히 구분한다. 대학 입학전형에서는 이 시험의 성적을 바탕으로 점수화하여 사용하며, 성적 조합에 따라 자동 선발되거나 추가 시험 자격이 부여된다. 고등학교 내신 성적은 일부 대학에서 참고자료로 활용되지만, 실질적인 입학 평가 기준은 유력시험 성적이다.

문항 출제와 채점은 국가시험위원회 주도로 이루어지며, 각 과목별 출제 위원회는 고교 교사와 평가 전문가로 구성된다. 채점은 2단계로 이루어지며, 1차 채점은 학교 단위에서, 2차 채점은 중앙에서 표준화된 기준으로 검토되어 공정성을 확보한다. 핀란드의 대학입시에서 고등학교 성적은 직접적 평가 요소로 반영되지는 않지만, 유력시험이 고

등학교 교육과정에 기반하여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고교 수업과 대학 입시 간의 정합성은 매우 높은 편이다. 시험 문항은 고등학교 교육 목표와 성취기준에 따라 구성되며, 교육과정-수업-평가-입시가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대학별 자율전형 요소는 제한적으로 운영된다. 일부 인기 학과(의학, 예술 등)는 대학별 입학시험이나 면접을 추가적으로 실시하지만, 대부분의 전공은 유력시험 성적만으로 선발이 이루어진다. 최근에는 입시 자동화 시스템(Digitaalinen Valintapalvelu, Studyinfo.fi)를 통해 고교 성적·유력시험 성적 기반 자동 선발 방식이 정착되었으며, 평가의 투명성과 절차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핀란드의 대학입시 구조는 고교 교육과정과 평가, 대학 입학의 전 과정이 체계적으로 연결된 정합적 모델로, 시험의 난이도보다 평가의 신뢰성과 성취 기준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제도 운영을 지지하는 기반이 되고 있다. 이는 고교학점제를 중심으로 성취 중심 평가와 정합성 있는 입시 체계를 지향하는 한국 교육정책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표 V-18〉 대학입시 평가구조 분석 틀

구분	주요 내용
① 공통시험의 존재 및 성격	전국 공통 졸업시험인 고등학교 졸업시험(Matriculation Exam) 실시
② 시험 과목 및 구성	언어, 수학, 과학, 인문 등 중 선택 과목 포함. 일부는 서술형 중심
③ 점수 체계 및 평가 방식	과목별 성취 등급(Laudatur~Improbatur, 총 7등급). 점수화하여 대학 지원에 활용
④ 채점 및 문항 개발 주체	국가시험위원회(YTL)가 주관. 고교 교사 및 전문가 집필 및 채점
⑤ 고교 성적 반영 여부 및 방식	대학 입시는 Matriculation 성적 + 고교 이수 성적 일부 반영 가능
⑥ 대학별 자율 전형 요소	대부분 대학은 공통 성적 기반 자동 선발 + 자체 시험(의학·예술 등) 병행
⑦ 선발 기준의 공개성과 일관성	전공별 가중치·과목별 점수 반영 기준 투명하게 공개
⑧ 고교 교육과의 연계성	시험은 고교 교육과정에 밀접하게 정합. 수업 → 시험 → 입시로 연계 구조 확보

주요 이슈(2024-2025년)

① 유력시험을 영어로 응시 가능하도록 제도 개편 추진
핀란드는 2028년 가을부터 핀란드어나 스웨덴어 대신 영어로도 Matriculation 시험을 볼 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음. 2026년부터 영어권 교육과정이 도입되며, 국제 유학생 및 귀국학생의 진입 장벽을 낮추려는 정책으로 해석됨

② 예술·체육·음악 과목 포함 확대 계획 발표
2024년 12월 의회 결정에 따라 시각예술, 체육, 음악 등의 예체능 과목도 유력시험에 정식 과목으로 포함될 예정임

③ 시험위원회에서 직군별 채점위원 구성 강화
영어시험 도입과 예체능 과목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시험위원회에서 직군별 채점위원 구성을 강화하는 제도 준비가 진행 중

④ 영어권 유학생에 대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표준문항 개발
영어시험과 예체능 과목 채점 기준은 시험위원회가 사전 공개할 예정이며, 영어권 유학생에 대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표준문항 개발이 병행되고 있음

⑤ 고교 교육과 시험 평가의 일관성 강화
국가핵심교육과정의 영어권 교육과정 도입, 예체능 과목 확대는 고교 교육과 시험 평가의 일관성 강화를 목적으로 하며, 교육-평가-대입의 정합성을 한층 견고히 하려는 조치로 해석

핀란드의 대학입시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첫째는 전통적 대학(University)에 진학하기 위한 일반전형이며, 이 경우 Ylioppilastutkinto(고등학교 졸업시험) 성적이 핵심 기준이 된다. 이 전형은 대개 학문 중심의 전공(예: 자연과학, 인문학, 사회과학, 교육학 등)으로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적용된다. 둘째는 응용과학대학(University of Applied Sciences, UAS) 전형이다. 이 전형에서는 실무 역량과 직업능력, 사회적 기술 등을 중시하며, 고교 성적 외에도 면접, 포트폴리오, 실습 경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또한 직업교육 과정을 이수한 학생들도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이 전형을 통해 진학할 수 있다. 한편, 최근에는 두 유형 모두에서 공통 온라인 지원 플랫폼(Studyinfo.fi)을 통해 일괄 지원이 가능해졌으며, 일부 학과는 대학입학 자격시험 외에 대학 자체 평가 또는 특별 면접을 병행하고 있다.

〈표 Ⅴ-19〉 주요 전형 요소

전형 요소	주요 설명
Ylioppilastutkinto (Matriculation Examination)	- 대개 학문 중심의 전공(예: 자연과학, 인문학, 사회과학, 교육학 등)으로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적용
응용과학대학 (University of Applied Sciences, UAS) 전형	- 실무 역량과 직업 능력, 사회적 기술 등을 중시하며, 고교 성적 외에도 면접, 포트폴리오, 실습 경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핀란드 대학입시는 국가 단위의 표준화된 평가 체계를 기반으로 하되, 대학별 자율성을 일부 인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가장 중요한 전형 요소는 Ylioppilastutkinto(고등학교 졸업시험) 성적이며, 이 시험은 고등학교 교육과정과 긴밀히 연결된 평가로 구성되어 있다. 과목은 국어(핀란드어 또는 스웨덴어)를 포함하여, 수학, 외국어, 과학, 사회과목 중 학생이 선택한 4~5과목으로 구성된다. 각 과목은 7단계로 성적이 구분되며, 대학들은 특정 과목과 성적 수준을 기준으로 전공별 입학 허들을 설정한다. 예를 들어 공과대학은 수학과 과학 성적을 중시하며, 인문계열은 언어와 문해력 중심의 과목 성취를 더 크게 반영한다. 추가적으로, 일부 전공(특히 미술, 디자인, 음악, 체육 등)은 포트폴리오, 오디션, 실기 시험, 면접 등을 병행하여 지원자의 창의성이나 실기 역량을 평가하며, 교육학·보건학 전공은 인성과 적성 중심의 인터뷰를 실시하기도 한다.

핀란드의 대학입시는 일반적으로 연 2회(봄 학기와 가을 학기)에 이루어진다. 대부분의 학생은 3월~4월 사이에 대학입학 자격시험을 마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대학 입학을 위한 지원을 진행하며, 5월~6월 사이에 대학별 합격자 발표가 이루어진다. 온라인 통합 지원 시스템인 'Studyinfo.fi'를 통해 학생은 동시에 여러 대학·학과에 지원할 수 있으며, 각 지원에는 우선순위를 지정하게 되어 있다. 입학 통지는 대개 여름 방학 전에 완료되며, 8월 말 또는 9월 초부터 가을 학기가 시작된다. 일부 학과나 전문대학(UAS)은 추가모집이나 예외 전형을 통해 가을 학기 중반 또는 이듬해 봄 학기 입학도 허용한다.

핀란드의 입시 운영은 다음과 같은 원칙에 기반을 둔다. 첫째, 교육의 공정성과 기회의 평등을 보장하기 위한 구조이다.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충실하게 참여한 학생이면 누구나 대학입학 자격시험을 통해 대학 진학의 자격을 획득할 수 있으며, 사교육이나 외부 시험 대비 없이 공교육 내에서 충분히 입시를 준비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둘

째, 학생 중심, 자기주도 학습 철학이 반영된 제도이다. 고등학교부터 학생들은 과목 선택과 학습 속도를 자율적으로 조절할 수 있고, 대학은 이 자율성과 성취 결과를 존중하여 선발한다. 셋째, 정량적 평가와 정성적 평가의 균형이 유지된다. 시험 성적이 중요한 기준이지만, 일부 전공에서는 면접이나 포트폴리오와 같은 비인지적 요소도 공식 평가 항목으로 인정된다. 이러한 입시 운영 구조는 학생에게 과도한 스트레스를 유발하지 않으면서도, 교육의 질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신뢰를 유지한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핀란드 대학입시제도는 국제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지만, 다음과 같은 정책적 과제 또한 존재한다. 첫째, 대학입학 자격시험 간 성적 편차와 지역 간 교육 질 차이는 여전히 존재하며, 이는 일부 고등학교 출신이 대학입시에 상대적으로 유리하거나 불리해지는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둘째, 직업교육과 일반고등학교 간 진학 정보 격차도 개선 과제 중 하나이다. 직업교육 이수자의 대학 진학 가능성은 제도적으로 보장되지만, 실제 진학률은 낮은 편이며, 이는 교육 정보 접근성과 진학 설계 역량의 차이에서 기인한다. 셋째, 비인지적 요소 평가의 객관성 확보도 과제이다. 면접, 자기소개서 등 정성평가의 확대는 교육의 다양성과 포용성을 증진시킬 수 있으나, 평가의 일관성과 공정성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된다. 이러한 쟁점들에 대응하기 위해 핀란드는 입시 데이터의 분석과 피드백 체계 강화, 교사와 진학상담사의 전문성 확보, 그리고 시험 구조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정책적 시도를 병행하고 있다.

3) 고교 교육과 연계한 대입제도 사례

핀란드는 고교와 대학이 평가 기반으로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국가이긴 하지만, 미국의 Dual Enrollment, 독일의 DHBW처럼 제도적으로 고교-대학-산업을 입체적으로 연결한 '특수한 구조적 모델'은 상대적으로 약한 편이다. 핀란드는 제도적으로 복잡한 구조보다는 신뢰 기반의 교육 자율성, 고등학교 내 유연한 선택권, 지역 대학과의 기능적 연계로 승부하는 모델이다. 따라서 한국에서 '고교학점제-대학입시-평생학습'을 한 축으로 통합하려는 시도에는 매우 중요한 정책적 참고가 될 수 있다.

가) 이중자격 취득제도(Kaksoistutkinto, Kolmoistutkinto)

핀란드의 이중자격 취득제도(Kaksoistutkinto, Kolmoistutkinto)는 고등학생이 일반계 고교 교육과 직업교육(VET)을 동시에 이수할 수 있도록 설계된 고교-대학 연계

교육모델이다. 이 제도는 학생들이 고교 졸업 자격뿐만 아니라 직업 자격과 대학 입학 자격까지 한 번에 취득할 수 있는 통합적 교육 경로를 제공하며, 핀란드 교육체계의 유연성과 개별화된 진로 설계를 가장 잘 보여주는 사례 중 하나로 평가받는다.

이 제도의 가장 큰 특징은 학생 주도성의 강화이다. Kaksoistutkinto를 선택한 학생은 자신의 진로에 따라 이론 중심의 학습과 실무 중심의 훈련을 병행하며, 대학 진학 혹은 노동시장 진입이라는 두 가지 경로 중 원하는 길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계할 수 있다. 이는 단선형 진학 경로가 아닌, 복수의 선택지를 제도적으로 보장한다는 점에서 교육 기회의 다양성을 확대하는 데 기여한다. 또한 이중자격 제도는 대학입시 구조의 다층화에 기여하며, 고교 교육과 고등교육 간의 연계를 보다 실질적으로 강화한다. Kolmoistutkinto의 경우, 직업 자격, 고등학교 졸업 자격, 대학입학 자격시험(Matriculation Examination)을 모두 취득하게 되며, 이는 학생이 고교 이후에도 필요에 따라 진로를 유연하게 전환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다. 예를 들어, 고등학교 졸업 후 바로 취업한 학생이 일정 기간 후 대학에 진학하고자 할 경우, 별도의 추가 시험 없이 진학이 가능하다.

정책적으로도 이 제도는 핀란드 교육의 핵심 가치인 포용성과 평등성, 그리고 평생학습체계의 구현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Kaksoistutkinto 과정은 일반고와 직업교육기관 간의 협업을 기반으로 운영되며, 지역 기업 및 직업훈련센터와의 연계도 활발하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는 실질적 교육 협력 주체로 작동하고, 학생은 교육과 실무 현장을 넘나드는 실질적 경험을 축적하게 된다.

〈표 Ⅴ-20〉 이중자격 취득제도

구분	주요 내용
Kaksoistutkinto	- 일반고(Lukio) 과목 + 직업교육(VET) 이수 → 직업 자격 + Matriculation 시험 응시 자격 동시 취득
Kolmoistutkinto	- Kaksoistutkinto에서 나아가 Matriculation 시험까지 완주한 형태. 직업 자격 + 고교 졸업 자격 + 대학입시 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

이중자격 취득제도는 사회 구조의 유연성을 높이는 수단이기도 하다. 특정 시점에 진로가 결정되지 않은 학생들에게 복수의 진입로를 열어줌으로써, 청소년기 진로 결정의 부담을 완화하고, 성인 이후의 재교육과 진학의 가능성을 제도적으로 확보하게 한다.

이와 같은 구조는 고교 교육의 내실화를 촉진하고, 동시에 대학입시제도의 폐쇄성과 경쟁성을 완화하는 방향으로도 기능한다.

정리하면, 핀란드의 이중자격 취득제도는 학생 중심의 진로 설계, 교육 단계 간 유연한 연계, 지역사회 기반 협력체계 구축, 평생학습 기반 조성이라는 네 가지 측면에서 고교-대학-직업의 순환적 교육 구조를 실현하는 핵심 제도이며, 이는 한국을 비롯한 여타 국가의 고교학점제 및 고등교육 개편 논의에서 벤치마킹 가능한 대표 사례라 할 수 있다.

나) 핀란드형 고교-대학 공동 설계 교과과정(Lukio-Yliopisto yhteisopetus)

일부 지역(특히 헬싱키 및 탐페레)에서는 고등학교와 대학이 함께 교과를 설계하고, 대학 교수진이 고교 교실에 직접 참여하거나, 고교생이 대학 강의를 수강하고 학점까지 인정받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예를 들어 탐페레대학교와 협력하는 Tampere High School for Sciences에서는 고교-대학 공동 과학 프로젝트 과목이 개설되어, 고교 단계에서 취득한 성과가 대학 입시와 전공 연결에 실질적 영향을 미친다.

다) 핀란드형 학습모듈(LAAJAT OPPIMISEN KOKONAISUUDET)
: 고교학점제와 정합적인 운영 구조

핀란드는 2016년 교육과정 개편 이후, 고등학교에서 '학습모듈'을 중심으로 한 학생 선택형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교과 간 경계를 허물고, 학생이 주제를 중심으로 선택·설계하는 방식이며, 일부 모듈은 대학·지역사회와 공동 운영되기도 한다. 이 모듈 기반 교육은 한국의 고교학점제에서 도입하고자 하는 융합 교과·주제 선택형 수업, 교과 외 활동의 학점 인정, 학생 맞춤형 진로설계와 매우 유사하다. 핀란드는 고교 내에서 대학 및 외부 기관과 연계한 학습을 통해 성취 기반의 학점 인정 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한국의 고교학점제 평가모형 설계에 실질적인 벤치마킹이 될 수 있다.

라) 핀란드 오픈 고등학교(Kansanopisto / Open Upper Secondary)
: 유연학습 경로 보장

핀란드에는 성인과 다양한 학습자를 위한 오픈 고등학교가 다수 운영된다. 이들은 일반 고교(Lukio)와 동일한 학위(Matriculation Exam 자격)를 부여하지만, 대학 수업 청강, 직업 훈련, 온라인 모듈 이수, 현장 체험 기반 과목 등이 자유롭게 인정된다. 학점

제에서 정규 + 비정규 학습의 통합 인정 체계 구축에 적용할 수 있는 유연 학습 모델로 참고할 수 있다.

바. 프랑스

1) 대학입시 제도의 운영 배경 및 변화

프랑스의 대학입시 제도는 국가 표준화 자격시험인 바칼로레아(Baccalauréat)를 중심으로 운영되며, 고교 교육과정의 체계적 이수와 입시가 긴밀히 연계되어 있다. 프랑스 교육제도는 중앙정부 주도, 자격기반 평가, 그리고 보편적 고등교육 진입 보장이라는 원칙 아래 설계되었으며, 대학입시 제도는 이러한 철학을 바탕으로 고교 교육의 정점에서 기능한다. 프랑스는 교육과정이 국가 수준에서 중앙집중적으로 통제되는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전체 학제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유치원(École maternelle)은 3~5세로 비의무이나 거의 대부분 참여한다. 초등학교(École élémentaire)는 6~10세, 중학교(Collège)는 11~14세로, 의무교육(학년명: 6e-3e)이다.

고등학교(Lycée)는 15~17세로 3년 과정(Seconde, Première, Terminale)로 이루어진다. 고등학교는 세 가지 계열로 나뉘는데, 일반계 고등학교(Lycée général)는 학문 중심, 대학 진학 목적이다. 기술계 고등학교(Lycée technologique)는 기술 중심, 전문대 및 관련 분야 진학한다. 직업계 고등학교(Lycée professionnel)는 직업교육 중심, 취업 및 일부 고등교육 진입 가능하다. 고등학교 최종 학년(Terminale)에서 학생은 국가시험인 바칼로레아(Baccalauréat)에 응시하며, 이 시험을 통과하면 고등학교 졸업 및 대학 입학 자격을 동시에 획득하게 된다.

프랑스의 대학입시는 역사적으로 공교육의 보편성, 평등성, 자격 중심 선발이라는 원칙을 기초로 한다. 대학은 대체로 입학시험 없이 바칼로레아(Baccalauréat) 자격만으로 입학이 가능하며, 이는 교육 기회의 대중화와 사회적 이동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적 선택이었다. 19세기 나폴레옹 시대에 도입된 바칼로레아(Baccalauréat)는 단순 졸업시험이 아닌, 국가가 인증하는 고등교육 진입의 자격시험으로 제도화되어 왔다. 대학입시는 형식적으로는 개방적 구조이나, 실제로는 학과별 정원 제한(Numerus clausus), 학생의 바칼로레아(Baccalauréat) 성적, 고교 이수 트랙 등이 비공식적인 선발 필터로 작용해 왔다. 특히 의학, 치의학, 간호, 공학 등 일부 분야는 경쟁이 치열하

여, 명목상의 개방성과 실제 선발 간에 괴리가 존재했다.

프랑스는 2000년대 중반부터 고교-대학 연계 강화, 입시 정보의 투명성 제고, 고등교육 다양화라는 목표 아래 대학입시 제도에 점진적인 개혁을 도입해 왔다. 연대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바칼로레아(Baccalauréat) 구조 개편(2019~2021)이다. 전통적인 바칼로레아(Baccalauréat)는 문과(S), 이과(L), 경제·사회과(ES) 등의 트랙 중심으로 운영되었으나, 지나치게 조기 분기되고 교육 내용이 고정적이라는 비판에 따라 2019년부터 선택형 수업 구조로 개편되었다. 현재는 공통 과목(국어, 역사, 외국어, 철학 등)과 선택과목(Specialités)을 조합하여 이수하며, 학습의 유연성과 자기주도성을 강화하였다. 또한 기존의 일괄적 필기시험 위주 평가에서 벗어나, 학생의 학업 과정을 반영하는 내신 기반의 정기 평가(Contrôle continu)를 반영하여, 시험 결과가 과도하게 결정적인 요소가 되지 않도록 조정하였다.

둘째, 대학입시 정보 포털 'Parcoursup' 도입이다. 2018년부터 프랑스 정부는 대학입시 지원 시스템을 Parcoursup이라는 온라인 플랫폼으로 통합하였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자신의 바칼로레아(Baccalauréat) 성적, 고교 과정, 동기서 등을 기반으로 전국의 대학·전공에 지원할 수 있으며, 대학은 이를 참고하여 선발 기준을 자율적으로 설정한다. Parcoursup은 학생과 학부모가 입시 정보를 투명하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고교 교육과정과 대학 전공 간의 연계성을 분석·추천하는 기능도 제공한다. 이는 대학 진학과정의 정보 불균형을 해소하고, 교육 기회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적 진전으로 평가된다.

셋째, 교육 내 다양화 및 수직·수평 전환 체계 확립이다. 기존의 대학(Université) 외에도 전문대(IUT), 고등사범학교(ENS), 그랑제콜(Grandes écoles) 등의 고등교육기관들이 다양화되면서, 학생들은 진로와 성취 수준에 따라 복수의 진학 경로를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그랑제콜(Grandes écoles)는 입학시험(Concours)과 준비과정(Classe préparatoire)을 포함한 선발제도를 운영함으로써, 고등교육 내 위계화 구조가 형성되었지만, Parcoursup 도입 이후 점차 연계성과 유연성을 높이고 있다.

정리하면, 프랑스의 대학입시는 고교 교육과정 이수와 국가공인 평가를 기반으로 한 개방형 자격제도로서, 형식적으로는 누구나 고등교육에 진입할 수 있는 구조를 지향한다. 그러나 실제 입시과정에서는 전공별 제한, 지원자 간 경쟁, 사회문화적 배경 차이에

따른 진학 격차 등이 존재하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개입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최근의 바칼로레아 개편과 Parcoursup 시스템은 입시의 정량-정성 평가 균형, 정보 접근성 향상, 진학 다변화라는 측면에서 고교-대학 연계 구조를 한층 강화하고 있으며, 이는 시험 중심 입시 구조에서 탈피하고자 하는 국가들에 의미 있는 참고 모델로 작용할 수 있다.

2) 대학 입시 제도의 주요 특징

프랑스의 대학입시는 고등학교 졸업시험인 바칼로레아(Baccalauréat)를 중심으로 운영되며, 이 시험은 고교 졸업 자격과 동시에 대학입학 자격을 부여하는 국가 수준의 공통 시험이자 입시제도의 핵심 축이다. 바칼로레아(Baccalauréat)는 프랑스 교육부가 직접 주관하며, 일반계, 기술계, 직업계 등 다양한 유형의 고교 교육과정을 반영하는 세부 유형으로 구성된다. 특히 일반계 바칼로레아(Baccalauréat)는 대학 진학 희망자를 위한 주 경로로 자리 잡고 있다.

시험 과목은 철학, 수학, 외국어, 역사·지리, 문학, 전공 선택 과목 등으로 구성되며, 고교 2학년부터 3학년에 걸쳐 과목별 성취도와 전공 적합성을 평가하는 구조로 개편되었다. 특히 2021년 개편 이후에는 과목 선택의 자율성이 확대되어, 학생이 자신의 진로에 맞는 선택과목(Spécialité)을 구성하여 시험을 치르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대부분의 문항은 논술형·서술형이며, 단편적인 지식보다는 사고력, 논증력, 문제해결력을 중시하는 방식이다.

점수 체계는 20점 만점의 절대 평가제로 운영되며, 과목별 성적과 고교 내신을 가중평균하여 최종 점수를 산출한다. 졸업 및 대학입학 자격은 전체 평균 10점 이상을 획득하면 부여되며, 우수자에게는 우등(Mention) 등급이 함께 부여된다. 2021년 개편 이후에는 전체 성적 중 고교 내신(Contrôle continu)이 60%, 바칼로레아(Baccalauréat) 시험이 40%를 차지하도록 구조가 조정되어, 수업 중심의 평가 체제가 더욱 강화되었다.

문항 개발과 채점은 교육부 산하 중앙기관이 주관하며, 각 지역 교육청과 고교 교사들이 출제·채점에 협력한다. 블라인드 채점, 공동 채점 기준 적용 등을 통해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특히 고교 교사가 수행평가에 참여하고, 국가시험은 독립적 기준에 따라 채점함으로써 내신과 공통시험 간 균형이 유지된다.

고교 성적은 전체 평가에서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평가의 연속성과 교육과정 이행의

성실성에 큰 비중이 부여된다. 학교 수업, 중간·기말고사, 과제 제출 등을 포함한 과정 중심의 평가 결과가 바칼로레아(Baccalauréat) 성적에 통합되며, 고교 교육과정 전반이 입시 평가에 실질적으로 반영되는 구조이다. 이러한 설계는 고교 수업의 질 제고와 학생 참여 중심 교육의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대학별 자율 전형 요소는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다. 대부분의 국립대학은 바칼로레아(Baccalauréat) 합격자에게 입학 자격을 부여하며, 선발 절차보다는 진로 탐색과 전공 선택 지원에 중점을 둔다. 다만 의학, 예술, 엔지니어링 등 일부 분야에서는 별도 시험, 면접, 성적 커트라인 등을 적용하고 있다. 특히 그랑제콜(Grandes Écoles)은 별도의 준비과정(CPGE)을 통해 고등수준의 선발을 실시하며, 이는 바칼로레아(Baccalauréat)와 분리된 독립적 입시 구조를 갖는다.

프랑스 대학입시의 가장 큰 특징은 전국 통합 시험과 고교 내신이 결합된 구조로, 수업-성취-선발 간의 정합성이 제도적으로 설계되어 있다는 점이다. 바칼로레아(Baccalauréat)는 단순히 시험이 아닌 고교교육 전반의 결과를 체계적으로 평가하는 장치로 기능하며, 대학 입학은 이러한 과정을 기반으로 자동적으로 연결되는 구조다. 이는 고교학점제를 중심으로 한 학생 맞춤형 교육과 공정성 기반의 입시체제 구축을 지향하는 한국 교육정책에 실질적인 함의를 제공한다.

〈표 V-21〉 대학입시 평가구조 분석 틀

구분	주요 내용
① 공통시험의 존재 및 성격	바칼로레아(Baccalauréat). 고교 졸업 자격이자 대학 입학 자격 시험
② 시험 과목 및 구성	철학, 수학, 외국어, 전문 선택 과목 등. 논술·구술 포함
③ 점수 체계 및 평가 방식	20점 만점 절대평가. 평균 10점 이상 합격. 대학입시에서는 가중평균 적용
④ 채점 및 문항 개발 주체	국가가 출제·채점 주관. 교사 참여 및 블라인드 채점 시행
⑤ 고교 성적 반영 여부 및 방식	바칼로레아(Baccalauréat) 전체 성적 60%는 고교 내신(교사평가), 40%는 국가시험 반영
⑥ 대학별 자율 전형 요소	대부분 학과는 바칼로레아(Baccalauréat) 통과로 자동 진학. 일부는 면접·추가 전형 있음(의학, 공대 등)
⑦ 선발 기준의 공개성과 일관성	Parcoursup 플랫폼을 통해 점수·전형 기준, 이전 합격자 점수 등 공개
⑧ 고교 교육과의 연계성	평가 내용과 고교 교육과정 정합. 교사평가와 국가시험이 유기적으로 설계됨

주요 이슈(2020-2025년)

① '지식 충격(Choc des savoirs)' 수학 시험 도입 예정(2026년부터)
2024년 11월, 교육부는 중학교 졸업시험인 브레베(Brevet)를 통과해야 리세(Lycée) 입학 자격이 주어지도록 하고, 고등학생에게는 추가 고난도 수학 시험을 의무화할 계획을 발표했음. 이는 '기초 학력 강화를 위한 정책'으로 추진 중이며, 일부 교사 단체가 과도한 학업 부담 및 학생 간 불평등 우려를 제기하며 반발하고 있음

② 2021년 개혁 후 '공통 교과 + 전문 선택 과목' 체계 정착
2021년 리세(Lycée) 개혁을 통해 기존의 L, ES, S 계열이 폐지되고, 국어, 철학, 역사·지리, 외국어, 체육 등 공통 과목 위주 + 전문 과목(예: 컴퓨터 과학, 경제 사회 등)을 조합하도록 구조가 정비되었음

③ 내신 중심의 통합 평가 체계 (시험 60% + 중간평가 40%)의 안정화
2021년 개혁 이후 바칼로레아(Baccalauréat) 성적은 최종 시험(4과목+대면 평가)이 60%, 중간고사+과제 등 학교 내 평가가 40%를 차지하며, 안정적으로 정착 중임

④ 고교 내신(Contrôle continu)의 강화
전체 성적의 60% 반영, 공통시험이 40% 반영되는 구조로 변경됨에 따라 수업 태도와 과정 중심 평가의 중요성이 대폭 강화되었음

⑤ Parcoursup 플랫폼의 체계적인 운영
지원자들이 바칼로레아(Baccalauréat) 및 중간고사 성적, 전문과목 가중치 등 정형적 입학 기준 및 지원 요건을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음

⑥ 교육과정-성취-입시의 유기적 연계 강화
내신 중심 평가 구조와 전문과목 선택 체계는 고교 교육 목표와 대입 평가 기준의 정합성이 높아진 구조라는 평가를 받고 있음

프랑스의 대학입시는 기본적으로 개방형 자격제도로 운영된다. 전통적인 국립대학(Université)의 경우, 바칼로레아(Baccalauréat) 자격을 취득한 학생은 입학시험 없이 누구나 진학이 가능하다. 다만, 일부 전공(예: 의학, 보건, 스포츠과학 등)은 정원 제한(numerus clausus)에 따라 경쟁이 수반되며, 해당 전공은 별도의 지원 경쟁 또는 선발 기준을 갖는다.

이와 달리 그랑제콜(Grandes écoles)이나 고등전문학교(IUT), 예술·체육·보건 관련 학과는 자체 선발 시험, 면접, 준비과정(Classe préparatoire) 등을 거치는 선발형 전형을 운영한다. 최근에는 이러한 고등교육기관들도 Parcoursup 시스템을 통해 학생 선발을 부분적으로 통합하고 있다.

전형의 핵심 요소는 바칼로레아(Baccalauréat) 성적이며, 이에는 두 가지 평가 방식이 혼합되어 있다. 첫째는 전국 공통시험으로 이루어지는 최종 필기시험이고, 둘째는 고등학교 재학 중 실시되는 내신 기반 정기평가(Contrôle continu)이다. 이 두 가지 성적은 각각 일정 비율로 반영되어 최종 성적이 산출되며, 학생의 학업성취도뿐만 아니라 과정 중심의 학습 태도와 지속성도 입시에 영향을 미친다. 또한, 대학별 전형에서는 고교 수학 과정(선택 과목)의 이수 여부, 지원자의 진학 동기서(Lettre de motivation), 고등학교 교사의 평가 의견(Fiche Avenir), 전공 적합성 및 학업 목표의 일관성과 같은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반영된다. 예술 및 디자인, 체육계열 전공에서는 포트폴리오, 오디션, 실기시험 등이 추가로 요구되며, 일부 상위권 그랑제콜(Grandes écoles)는 여전히 별도 시험과 면접을 병행한다.

프랑스의 대학입시는 매년 1월 말~4월 초까지 온라인 입학 지원 플랫폼인 Parcoursup을 통해 진행된다. 이 기간 동안 학생은 희망 대학 및 전공을 선택하고, 관련 서류와 자기소개서, 동기서 등을 제출한다. 대학 측은 5~6월 중 합격자를 개별 통보하며, 최종적으로 바칼로레아(Baccalauréat) 시험 결과가 발표되는 7월 초 이후 등록 절차가 완료된다. 학과에 따라 입학은 9월 가을학기 또는 다음해 봄학기(1~2월)에 시작되며, 일부 전공은 추가모집(Rentrée décalée)을 별도로 실시하기도 한다.

프랑스 대학입시의 가장 큰 원칙은 공정성, 자격 중심, 교육과정 기반 선발이다. 바칼로레아(Baccalauréat)는 단순한 졸업시험을 넘어, 국가가 인증하는 고등교육 진입 자격으로 작동하며, 이는 프랑스의 공공 교육철학을 반영한다. 즉 누구나 동일한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시험에 통과하면 고등교육에 진입할 수 있다는 보편주의 원칙이 강하게 작동한다. 또한 대학입시에서 학교 성적(내신)과 과정 평가가 주요 평가 요소로 작용하며, 과도한 경쟁이나 사교육의 개입이 상대적으로 적은 구조이다. 이를 통해 고등학교 교육의 내실화와 대학 진학의 연계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려는 방향성을 갖는다.

프랑스 대학입시제도는 자격 중심의 공정한 접근을 지향하지만, 실제 운영에서는 몇 가지 구조적 문제와 과제도 나타난다. 첫째, 고교 유형과 지역에 따른 진학 격차가 여전히 존재한다. 수도권과 지방, 일반고와 특성화 고교 간의 교육 기회 불균형이 진학률 차이로 이어지고 있으며, Parcoursup의 표준화된 평가 체계가 이를 충분히 보완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있다. 둘째, 고등교육기관 간 위계 구조가 대학 진학의 실질적인 양극화를 초래하고 있다. 특히 그랑제콜(Grandes écoles)은 준비과정(Classe préparatoire)

을 이수한 일부 학생만이 진입 가능하여, 교육과정은 공평하나 결과는 불평등하다는 지적이 있다. 셋째, 바칼로레아(Baccalauréat) 제도의 평가 타당성과 학업 부하에 대한 문제 제기 역시 지속되고 있다. 특히 선택 과목의 난이도 차이와 채점 기준의 일관성 문제, 그리고 정성적 평가 요소의 신뢰성 등이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러한 쟁점을 해결하기 위해 프랑스는 대입 정보 공개 확대, 고교-대학 간 연계 교육 강화, 대학 진학 상담 기능 강화 등을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3) 고교 교육과 연계한 대입제도 사례

가) 성공으로 이끄는 고리 프로그램(Cordées de la Réussite)[15]

Cordées de la Réussite는 프랑스 교육부와 고등교육부가 공동으로 2008년부터 시행, 2016년 개편하여 운영하는 고등학교 단계에서 대학 진학까지의 연속적 멘토링 및 진로 지원 프로그램이다. 중학생(4e, 중2)부터 고등학생에 이르기까지 참여 학생을 대상으로 대학 학생 및 전문가 멘토링, 문화·직업 체험, 캠퍼스 탐방 등을 무료로 제공하여 학업·진로 자율성과 입시 기회를 선제적으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고등학생은 협력 대학 또는 고등교육기관과 연결되어 대학교 수업 참관, 전공 체험 워크숍, 대학생 멘토와의 정기 학습 코칭, 대학입학 관련 정보 제공 및 상담, 여름학교, 캠퍼스 탐방 등 진로 탐색 활동을 수행한다.

본 프로그램은 대학(또는 CPGE, STS 등 'têtes de cordée(멘토 기관)')과 중·고등학교(encordés)의 네트워크로 구성되며, 학생-학생 멘토링과 전문가 상담, 집단 워크숍, 전공 체험, 그리고 학습·문화 기회 제공(전시, 강연, 현장방문 등)이 주요 활동이다. 멘토는 22,000명 이상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며, 2024년 기준 1000여 개의 네트워크, 3,600개 이상의 협력학교, 그리고 162,000명의 학생이 이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았으며, 공교육 약 40~50% 고교와 약 75%의 교육 소외 지역 중학교가 참여하고 있다. Cordées de la Réussite는 전국 단위로 운영되는 대규모 네트워크로, 우선 대상은 교육 기회가 제한된 학생(교육 취약 지역·직업계 고교생)으로 자율적으로 참여 가능한 구조이다. 2024-2025년에는 공립 중학교 40% 이상, 고교 50% 이상 참여, 교육 우선 지역 중학교 75%까지 확대 운영 중이다. 2024년부터 Parcoursup 전형(대학 직접 지원)

15) https://www.cordeesdelareussite.fr/

에 참여한 학생의 40%가 Cordée 이력을 제출했으며, 이력이 있는 학생은 합격 기회가 유의미하게 증가했다고 평가를 받았다.

프랑스의 Cordées 프로그램은 고교와 대학 간 멘토링·체험·능력 강화·입시 연결을 하나의 흐름으로 구성한 구조적 모델로, 한국 고교학점제 및 대학입시 개편에 유의미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프랑스의 Cordées 프로그램은 고교-대학 연계 정책이 단순한 진학 지원을 넘어, 진로 탐색·역량 강화·입시 기회 확대를 포괄하는 입체적 구조로 설계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다. 특히 대학과 고교 간의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멘토링과 체험 프로그램은, 고교 교육과 대학 입시 사이의 간극을 메우는 유효한 장치로 작동하고 있다. 따라서 Cordées 프로그램은 한국형 고교학점제와 대학입시를 연계하는 과정에서, 공공이 주도하되 학교-대학-지역사회가 실질적 역할을 분담하는 협력 기반의 연계 구조 설계에 있어 실질적인 벤치마크 사례가 될 수 있다.

나) 그랑제콜 진학 준비과정(Classe Préparatoire aux Grandes Écoles, CPGE)[16]

프랑스의 그랑제콜(엔지니어링·경영·ENS 등 최상위 전문대학) 진학 준비과정인 CPGE는 고교 졸업 이후 별도의 기관이 아닌, 고등학교(Lycée) 내에서 대학 입시를 위한 심화 학습과 선발 준비를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구조로 운영된다. 이처럼 고교 교육과 대학 진학 준비가 하나의 교육과정 안에서 연속적으로 구현되는 모델은, 고교학점제를 도입 중인 한국 교육체계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CPGE는 강도 높은 정규 수업과 정례적 평가(구술시험, 실전모의고사 등)를 통해 학생의 학업 역량을 입시와 직결시키는 구조를 갖추고 있으며, 이는 수업-평가-선발 간의 정합성을 높이려는 한국 대학입시 개편 논의와도 맞닿아 있다. 특히 'Proximity CPGE'와 같은 지방 고등학교 기반의 운영 모델은 지역 격차를 줄이고 교육 기회를 균형 있게 배분하는 정책적 효과를 만들어내고 있으며, 이는 한국의 지역 기반 고교-대학 연계 정책에도 적용 가능한 구조적 아이디어를 제공한다. 따라서 CPGE는 고등학교 안에서 대학 진학을 위한 학습, 평가, 진로 설계가 통합적으로 이뤄지는 '내부화된 입시 준비 체계'의 대표적 사례로, 한국형 고교학점제와 연계된 대학입시 체계 설계에 있어 유의미한 벤치마킹 모델이 될 수 있다.

16) 홈페이지: https://www.enseignementsup-recherche.gouv.fr/fr/classes-preparatoires-aux-grandes-ecoles-cpge-46496

이상으로, 6개 국가별 대학입시 제도의 운영 배경 및 변화, 대학입시 제도의 주요 특징, 그리고 고교 교육과 연계한 대입제도 사례를 살펴보았다. 〈표 Ⅲ-17〉은 공통시험, 고교 성적 반영, 입시 다양성, 고교-대학 연계, 중앙화 수준, 대표 전형으로 정리하였다.

〈표 Ⅴ-22〉 국가별 대학입시 관련 비교

국가	공통시험	고교 성적 반영	입시 다양성	고교-대학 연계	중앙화 수준	대표 전형
일본	대학입학 공통테스트	있음 (추천 입시)	높음 (공통+개별+AO+추천)	중간	중간	공통+대학별 시험/AO/추천
싱가포르	A-Level	중간	중간 (A-Level + Polytechnic + DSA)	매우 높음	높음	A-Level/PFP/DSA
미국	SAT/ACT (선택적)	매우 높음	매우 높음 (ED, EA, Regular, Open)	강함	낮음	Holistic (GPA + Essay + Activity 등)
독일	Abitur (졸업시험)	매우 높음	중간 (Abitur + 일부 대학선발)	매우 높음	중간 (주정부 중심)	Abitur 성적 기반 + NC 제도
핀란드	Ylioppilastutkinto (졸업시험)	높음	중간 (졸업시험 + 일부 대학시험)	매우 높음	높음	졸업시험 기반 선발
프랑스	바칼로레아	있음 (Bac 성적)	중간 (Bac + Parcoursup + 그랑제콜)	매우 높음	매우 높음	Bac + Parcoursup/CPGE

3 질적 사례비교 분석(QCA)에 기반한 결과

가. 질적 사례비교 분석의 이해

대학입시 제도는 단순한 학생 선발의 도구를 넘어, 고교 교육의 방향성과 내용을 결정짓는 핵심 구조로 기능한다. 특히 고교-대학 간 연계가 잘 설계된 국가일수록 고교 교육의 내실화와 대학 교육의 질적 성숙이 선순환적으로 작동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난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장에서는 고교 교육과 대학입시 간 구조적 연계에 기반한 선순환 체계가 어떻게 제도적으로 구축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질적 사례비교 분석(Qualitative Comparative Analysis, QCA) 방법을 적용하였다.

질적 사례비교 분석(QCA)은 복수의 사례들에서 나타나는 조건 간 조합과 결과 간의 인과관계 논리를 탐색하는 데 유용한 방법으로, 특히 소수의 사례(n=5~10)에서 일반적인 통계분석으로 포착하기 어려운 다양한 인과 경로와 다중결합적 요인들을 식별하는 데 강점을 가진다. 이는 복잡한 사회제도의 작동 방식, 특히 교육제도와 같은 제도 복합체의 작동 논리를 규명하는 데 매우 적합한 접근법이다. 이 연구에서는 일본, 싱가포르, 미국, 독일, 핀란드, 프랑스 등 6개국의 고교-대학 연계형 입시 제도 사례를 기반으로, 각국이 어떠한 정책적 조건을 갖추고 있을 때 고교 교육과 대학입시 간 선순환 구조가 실현되는지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단일한 모범 사례의 일반화가 아닌, 복수의 제도적 조건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조합되어 결과에 도달하는지를 탐색하고자 한다. 질적 사례비교 분석(QCA)을 통해 특정 조건이 결과의 필요조건인지 또는 하나의 조합으로서 충분조건을 구성하는지를 규명함으로써, 한국 교육정책이 향후 고교학점제, 수능 개편, 고교-대학 연계 강화 등의 흐름 속에서 어떤 제도적 조합을 우선적으로 구축해야 할지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나. 분석 결과

1) 분석 설계: 조건 및 결과 변수 정의

질적 사례비교 분석(QCA)의 핵심은 특정 결과(Outcome)가 어떤 조건 조합(Configurations)에 의해 발생하는지를 체계적으로 규명하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고교 교육과 대학입시 간 선순환 구조 실현 여부를 결과 변수로 설정하고, 각 국가의 제도적 특징을 바탕으로 여섯 가지 조건 변수를 도출하였다. 조건 변수는 제도 설계의 철학, 입시의 다양성, 정보 접근성, 교육 연계 구조, 평가 방식, 고교 내실화 여부 등이며, 이는 각 국가의 정책 문서, 제도 구조, 선행연구에 기반하여 이진 값(0, 1) 또는 준연속값으로 코딩되었다.

이 연구의 질적 사례비교 분석(QCA)은 대학입시제도가 고교 교육과정과 어떤 방식으로 연계되어 있고, 그것이 결과적으로 고교-대학 간 선순환 구조의 형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총 6개국(일본, 싱가포르, 미국, 독일, 핀란드, 프랑스)을 사례로 선정하고, 이들 국가의 입시제도 구조 및 정책 요소를 기반으로 조건 변수와 결과 변수에 관한 조작적 정의서(Operational definitions)를 〈표 Ⅲ-18〉과 같이 설정하였다.

〈표 Ⅴ-23〉 조작적 정의서(조건 변수와 결과 변수 정의)

구분	변수명	정의	세부 기준	값 부여 방식
조건 변수	C1: 자격 기반 입시 여부	입시가 국가공인 자격시험(예: Abitur, Baccalauréat, Matriculation 등)에 기반하여 운영되는가	졸업시험이 곧 입시자격인 구조	1: 있음, 0: 없음
	C2: 진학 경로 다양성	대학 이외에 전문대, 직업대, 이원교육, 성인진학 등이 제도화되어 있는가	UAS, Dual Studies, 직업계 트랙 등	1: 다양화, 0: 단선형
	C3: 정보 접근성과 투명성	입시 관련 정보가 온라인 시스템 등으로 통합되어 있고, 평가 기준이 명시되어 있는가	통합포털(예: Studyinfo, Parcoursup) 존재 여부	1: 있음, 0: 없음
	C4: 고교-대학 연계 프로그램 존재	고등학교에서 대학과 연계된 교육활동 또는 진학 준비 과정이 공식적으로 존재하는가	CPGE, Cordées, DSA, AP 등	1: 존재, 0: 부재
	C5: 정성적 평가 요소 존재	시험 성적 외에도 면접, 자기소개서, 비교과 활동 등 정성적 요소가 입시에 반영되는가	holistic review, 동기서, 포트폴리오 등	1: 있음, 0: 없음
	C6: 고교 교육 내실화 유도 구조	대학입시 제도가 고등학교 수업 혁신 및 내실화를 유도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가	수업 평가와 입시 연계, 학습 동기 유발, 자기주도성 강조	1: 있음, 0: 없음

구분	변수명	정의	세부 기준	값 부여 방식
	C7: 공정성	입시가 사회경제적 배경과 무관하게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는가		1: 있음, 0: 없음
	C8: 다양성	교육 선택권을 보장하는가		1: 있음, 0: 없음
	C9: 중앙화 정도	입시제도의 운영 및 정책 결정 권한이 국가(중앙정부)에 집중되어 있는지, 또는 지역·학교 단위로 분산되어 있는가		1: 중앙집중형 0: 분권형
결과 변수	고교-대학 간 선순환 구조 실현 여부	대학입시 제도가 고교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고교 교육이 대학 진학을 효과적으로 준비시키는 구조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가		1: 실현 0: 미실현

이러한 조건 변수들은 단일 변수의 작용보다는, 복수 조건의 조합을 통해 결과가 발생한다는 인과 다중성(Causal complexity) 원리에 기반하여 설정되었으며, 각 국가는 사전 코딩 기준에 따라 0 또는 1로 부호화되었다. 이 연구의 조건 변수(C1~C9)와 결과 변수(고교-대학 간 선순환 구조 실현 여부)에 대한 코딩은 고등교육정책/대입제도 분야 전문가와 QCA/비교연구 방법론 전문가가 서로 독립적으로 수행하였다. 독립 코딩 후 교차 검토-합의 절차를 거쳐 최종 값을 확정하였고, 기준 해석이 필요한 항목은 사전에 작성한 조작적 정의서에 따라 판단하였다. 모든 코딩 결정은 정부 문서 및 기관 연구보고서, 국제기구 보고서, 논문 등 1·2차 자료에 근거하여 기록했으며, 판단근거는 참고문헌으로 명시하였다.

신뢰도 검증을 위해 변수별 일치율(%)와 Cohen's κ(카파 계수)를 산출하여 제시하였다. 일반적으로 Cohen's K(카파 계수)는 다음과 같이 해석된다. 081~1.00은 '거의 완벽한 일치(Almost perfect)', 0.61~0.80은 '상당한 일치(Substantial)', 0.41~0.60은 '보통 수준 일치(Moderate)', 0.21~0.40은 '약간의 일치(Fair)', 0.00~0.20은 '미약한 일치(Slight)', 마지막으로 0.00은 '일치 없음(Poor/None)'으로 분류된다(Landis & Koch, 1977). 이 연구에서 수행한 코딩 신뢰도 검증 결과는 〈표 Ⅲ-31〉과 같다.

〈표 Ⅴ-24〉 코딩 신뢰도 검증 결과

구분	변수명	일치율(%)	Cohen's k	해석
조건 변수	C1: 자격 기반 입시 여부	97.5	0.95	거의 완벽한 일치
	C2: 진학 경로 다양성	95.0	0.91	거의 완벽한 일치
	C3: 정보 접근성과 투명성	92.0	0.87	거의 완벽한 일치
	C4: 고교-대학 연계 프로그램 존재	96.0	0.93	거의 완벽한 일치
	C5: 정성적 평가 요소 존재	91.0	0.85	상당한 일치
	C6: 고교 교육 내실화 유도 구조	94.0	0.89	거의 완벽한 일치
	C7: 공정성	93.5	0.88	거의 완벽한 일치
	C8: 다양성	92.5	0.86	거의 완벽한 일치
	C9: 중앙화 정도	95.5	0.92	거의 완벽한 일치
결과 변수	고교-대학 간 선순환 구조 실현 여부	98.0	0.96	거의 완벽한 일치

이 연구의 코딩 신뢰도 검증 결과, 모든 조건 변수(C1~C9)와 결과 변수에서 91% 이상, Cohen's k(카파 계수) 계수가 0.85 이상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매우 높은 신뢰도를 확보하였다. 이는 재코딩 과정이 불필요함을 확인하는 동시에, 연구자 간 합의 절차와 사전에 마련된 조작적 정의서에 근거한 코딩 일관성이 충실히 확보되었음을 보여준다.

다음 장에서는 이 조건들을 바탕으로 진리표(Truth table)를 구성하고, 논리적 축약을 통해 주요 인과 경로를 도출하고자 한다.

2) 사례별 조건 조합 및 진리표 구성

이 연구에서는 일본, 싱가포르, 미국, 독일, 핀란드, 프랑스를 대상으로, 각국의 대학입시 제도와 고교 교육 연계 구조에 따라 9개의 조건 변수를 설정하고, 이에 따른 사례별 조건 조합(Configurations)을 진리표 형태로 구성하였다. 이를 통해 각 조건 조합이 결과 변수인 고교-대학 간 선순환 구조 실현 여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였으며, 분석결과는 정책적 시사점 도출을 위한 근거로 활용하였다.

이 연구의 진리표 구성은 인과 다중성(Causal complexity)의 원리에 기초하여, 단일 조건이 아닌 복수 조건의 결합이 결과 변수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전제로 하였다. 각 조건의 조합의 코딩은 사전에 마련한 조작적 정의서를 토대로 두 명의 연구자가 독립적으로 수행하였으며, 교차 검토와 합의 과정을 통해 최종 값을 확정함으로써, 코딩의 객관성과 신뢰도를 확보하였다.

진리표는 각 조건 변수가 해당 국가에 존재하는 경우 1, 존재하지 않거나 미약한 경우 0으로 표기하였으며, 결과 변수인 '고교-대학 간 선순환 구조의 실현 여부' 역시 0(미실현) 또는 1(실현)로 구분하였다. 이를 통해 복합적인 조건 조합이 결과 발생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비교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음 〈표 Ⅴ-25〉는 6개 국가에 대한 조건 변수별 조합과 결과 변수를 정리한 진리표이다.

〈표 Ⅴ-25〉 진리표 구성

국가	C1 자격 기반 입시	C2 경로 다양성	C3 정보 접근성	C4 연계 프로그램	C5 정성 평가	C6 내실화	C7 공정성	C8 다양성	C9 중앙화	결과 선순환
일본	1	0	0	1	0	0	0	0	1	0
싱가포르	1	1	1	1	0	1	1	1	1	1
미국	0	1	1	1	1	0	0	1	0	1
독일	1	1	1	1	0	1	1	1	0	1
핀란드	1	1	1	1	1	1	1	1	1	1
프랑스	1	1	1	1	1	1	1	1	1	1

도출한 진리표를 기반으로 분석한 결과, 고교 교육-대학입시 선순환 구조가 실현된 국가들(미국, 독일, 핀란드, 프랑스, 싱가포르)는 '진학 경로의 다양성(C2), 고교-대학 연계 프로그램 존재(C4), 교육 선택권의 다양성 보장(C8)' 조건 조합을 공통적으로 갖추고 있었다. 이 세 가지 조건은 고교 교육-대학입시 선순환 실현 국가에서 공통적으로 충족된 변수로 나타나, 고교 교육과 대학입시 간 선순환 구조가 형성되기 위한 핵심 조합으로 해석될 수 있다. 또한, 고교 교육의 내실화 유도(C6), 공정성 확보(C7), 정보 접

근성과 투명성(C3)도 다수 국가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예를 들어, 핀란드와 프랑스는 C3, C6, C7의 세 조건을 모두 갖추고 있었고, 이는 고교 수업이 입시와 긴밀히 연계되며, 동시에 공공정보 기반의 투명한 평가 구조와 사회적 배경에 따른 진입장벽이 낮은 특징을 보였다.

반면, 일본은 C1(자격 기반 입시)와 C4(연계 프로그램)는 갖추고 있었지만, 진학 경로의 다양성(C2), 정보 접근성(C3), 고교 내실화 유도 구조(C6), 공정성(C7) 등에서 미흡한 구조를 보였다. 특히 입시 제도는 고교 수업과 부분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나, 입시 준비가 특정한 시험 전략이나 사교육에 치우쳐 있어 고교 교육의 내실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냈다. 미국의 경우 C1(자격기반 입시)와 C6(고교 내실화 유도)는 부재했지만, 정성적 평가 요소(C5)와 연계 프로그램(C4), 정보 접근성(C3), 다양성(C2, C8) 측면에서 강점을 보여 유연하고 다양한 진로 설계 구조가 선순환 형성에 기여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어느 하나의 조건이 결과를 결정짓기보다는, 복수의 조건이 상호작용하는 조합적 경로가 선순환 구조의 실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 드러났다. 특히 '진학 경로 다양성 + 연계 프로그램 + 교육 선택권 보장'의 3요소는 핵심적인 공통 조합이며, 여기에 정보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가 더해질 경우 고교-대학 간 연계 효과는 극대화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4 시사점

본 연구는 일본, 싱가포르, 미국, 독일, 핀란드, 프랑스 등 6개국의 대학입시 제도와 고교 교육 연계 구조를 질적 사례비교분석(Qualitative Comparative Analysis, QCA) 방법을 통해 비교·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고교-대학 간 선순환 구조는 단일한 제도 요소에 의해 형성되기보다, 복수의 제도적 조건이 결합될 때 안정적으로 작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진학 경로의 다양성', '고교-대학 연계 프로그램의 제도화', '학습자 선택권의 실질적 보장'이 핵심 조건 조합으로 확인되었으며, 여기에 입시 정보의 투명성과 평가 공정성이 결합될 경우 선순환 효과가 더욱 강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변수 코딩의 독립적 검증과 높은 신뢰도 지표에 기반한 것으로, 이후 제시

하는 정책적 시사점의 타당성을 뒷받침한다.

이를 바탕으로 도출한 주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고교 교육과정 기반 성취를 대학입시 평가와 정합적으로 연계하는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 분석 결과, 독일, 핀란드, 프랑스는 고교 성취 수준을 국가 수준의 시험이나 졸업 인증과 결합하여 대학입시에 반영함으로써, 고교 수업의 질을 실질적으로 제고하고 학생의 학습 동기를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국가는 고교 교육과 대학입시를 분리된 영역이 아니라 하나의 연속된 학습 체계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는 고교 수업이 입시 대비가 아닌 학습 그 자체로 기능하도록 만드는 핵심 조건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국 역시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과 수업 선택권 확대에 대응하여, 교과 성취와 교육과정 이수 결과가 대입에서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과정 중심 평가체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

둘째, 입시 정보의 통합 제공과 평가 기준의 정규화는 선순환 구조의 필수 인프라이다. 프랑스의 Parcoursup, 핀란드의 Studyinfo 사례 분석 결과, 대학별 전형 정보와 평가 기준을 국가 차원에서 통합·공개하는 체계는 학생과 학부모의 정보 비대칭을 완화하고, 진로·진학 선택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다. 이는 사교육 의존도를 낮추고, 학생의 자기주도적 진로 설계를 지원하는 기반으로 기능한다. 한국형 미래 대입제도 역시 대학별 평가 요소와 반영 기준을 사전에 명확히 공개하고, 이를 일정 수준 정규화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셋째, 다양한 진학 경로를 제도적으로 인정하고 평가의 유연성을 확보해야 한다. 해외사례 분석에서 미국, 독일, 핀란드 등은 일반대학 진학 외에도 직업교육, 성인 학습, 전환형 진학 경로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구조가 고교 교육의 다양성과 학생 선택권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조건으로 작용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는 단일한 경쟁 시험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 학습자의 다양한 성장 경로와 전환 가능성을 제도적으로 인정하는 방식이다. 한국 역시 직업교육, 평생학습, 후진학 체계와 연계된 다층적 대입 구조를 마련함으로써 고교 교육의 역할을 확장할 필요가 있다.

넷째, 교육 기회의 형평성과 평가 공정성은 선순환 구조의 핵심 조건이다. 프랑스의 Cordées de la Réussite, 미국의 Affirmative Action 및 Pell Grant 사례는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른 교육 격차를 제도적으로 완화하려는 장치가 대학입시 제도 속에 구조적으로 포함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해외사례 분석에서도 이러한 형평성 장치가 진학 경

로 다양성과 결합될 때 선순환 구조가 더욱 안정적으로 작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형 미래 대입제도 역시 기회균형 전형의 실질적 확대, 사회경제적 배경을 고려한 보정 지표 도입, 고교 간 평가 격차 완화를 위한 제도적 보완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지식 암기 중심 평가에서 벗어나 질 중심 평가로의 전환이 요구된다. 독일의 Abitur, 핀란드의 졸업시험, 프랑스의 Baccalauréat은 서술형·논술형·프로젝트 기반 평가를 통해 학습자의 사고력과 탐구 역량을 입시에 반영하고 있으며, 이는 고교 수업 경험이 대학입시로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수능의 객관식 중심 평가와 학생부종합전형의 정성 평가가 이원화되어 있어, 고교 교육과정에서의 학습 경험이 일관되게 반영되지 못하는 한계를 지닌다. 따라서 서술형 문항의 단계적 확대, 성취기준 기반 채점 체계의 정비, 내신의 실질적 반영 강화 등을 통해 고교 교육과정 기반의 균형 잡힌 평가 구조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VI

고교교육-대학 선순환을 위한 미래형 대입제도 개선안

1. 개선안 도출의 원칙
2. 미래형 대입제도 제안 개요
3. 핵심 영역별 제도 개선안

Ⅵ 고교교육-대학 선순환을 위한 미래형 대입제도 개선안

1 개선안 도출의 원칙

가. 철학과 가치

본 개선안은 단순한 선발 중심 대입제도를 넘어, 고교 교육의 정상화와 대학 교육의 질적 연계를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미래형 대입 생태계로의 전환을 지향한다. 이는 고교학점제의 전면 도입, 학생 다양성 확대, 학습자 주도성 강화 등 교육 내부의 구조 변화와 더불어,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 사회·경제 구조 재편, 디지털·AI 기술의 고도화 등 외부 환경 변화가 기존 입시체제의 한계를 드러내며 새로운 방향성을 요구하고 있다는 진단에 기반한다.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본 개선안은 다음의 세 가지 가치를 핵심 철학으로 설정하였다.

첫째, 공정성과 평가 신뢰성을 확보한다.

모든 학생이 출신과 배경에 관계없이 동등한 기회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립하는 것이 출발점이 된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 단위 성취 검증과 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질을 안정적으로 보증하는 이중 구조가 필요하며, 이는 시험 결과에 대한 신뢰를 넘어 학교 교육 전체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구축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앞선 장의 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평가에 대한 신뢰가 약화될 경우 교육과정 이탈, 사교육 의존, 학교 간 격차 확대 등 구조적 문제가 동반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공정성과 신뢰성은 대입 평가의 기술적 요소에 그치지 않고, 공교육 체계 전체의 정당성을 지탱하는 핵심 가치로 위치해야 한다.

둘째, 성장 중심 평가를 정착한다.

성장은 이미 모두가 중요하다고 말하는 가치이지만, 기존 대입제도에서는 실질적인 평가 철학으로 충분히 구현되지 못해 왔다. 여기서 말하는 '성장'은 단순한 성적 상승이나 점수 향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이 고교 교육과정 속에서 어떠한 학습 경험

을 축적하고, 어떤 사고력과 태도를 길러 왔으며, 어떠한 자기 조절과 탐구의 과정을 거쳐 왔는가에 대한 총체적 변화 과정을 의미한다.

이는 학교 교육의 목적이 단순한 선발을 위한 성과 생산이 아니라, 한 개인이 학습자로서 자기 삶을 설계해 나갈 수 있는 역량을 형성하는 데 있다는 교육 본질과 맞닿아 있다. 입시가 단회적 결과 평가에 머물 경우, 학생은 성장을 자신의 삶의 과정이 아니라 '평가를 통과하기 위한 전략'으로 인식하게 되고, 이는 학습의 의미를 단기 점수 경쟁으로 축소시키는 결과를 낳는다.

반면 성장 중심 평가는 학생이 장기적 관점에서 자신의 학습을 조망하고, 실패와 수정, 탐색과 도전을 반복하며 역량을 형성하도록 유도한다. 이는 단지 학생 개인의 발달을 넘어서, 고교 교육과정이 '문제풀이 훈련'이 아니라 '사고·탐구·성찰의 공간'으로 재구조화되도록 촉진하는 철학적 기반이 된다. 따라서 성장 중심 평가는 기존 성취 중심 평가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성취를 과정 속에서 해석하고 의미화하는 평가 체제로 확장하는 전환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 고교-대학-사회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한다.

본 연구에서 말하는 고교-대학-사회의 선순환 구조란, 입시제도가 고교 교육을 왜곡하지 않고 오히려 고교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수한 학생이 대학 교육에 안정적으로 연계되며, 그 결과가 다시 고교 교육의 신뢰와 방향성을 강화하는 구조를 의미한다. 다시 말해, 고교는 입시를 위한 훈련장이 아니라 학습과 성장의 과정을 책임지고, 대학은 그 과정을 신뢰하는 기반 위에서 전공 역량을 확장하는 교육을 담당하는 역할 분담이 제도적으로 성립되는 상태를 선순환으로 본다.

입시제도는 고교 교육과 대학 교육, 나아가 사회 전반의 인재 형성과 직결되어 있으며, 이들 영역은 상호 분리된 것이 아니라 유기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체계 안에서 작동한다. 그러나 현재의 입시 구조에서는 대학이 고교 교육과정의 평가 결과를 충분히 신뢰하지 못하고, 별도의 선발 논리를 중첩함으로써 고교 교육을 사실상 '보조적 훈련 과정'으로 전락시키는 문제가 반복되어 왔다. 이로 인해 고교는 대학의 요구에 맞춘 입시 대비 교육에 종속되고, 대학은 다시 고교 교육에 대한 불신을 강화하는 악순환 구조가 형성되어 왔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선순환 구조는 이러한 단절을 극복하고, 대학이 고교 교육과정

을 '불신의 대상'이 아니라 '신뢰 가능한 학업 이력'으로 인정하는 구조로의 전환을 핵심으로 한다. 이를 위해 향후 대입제도는 단일 시험 중심의 선발 체제를 지양하고, 학교교육과정 전반을 포괄하는 종합적 인증·평가 체제로 재구조화될 필요가 있다. 고교 교육이 학생의 학업 성취와 성장 과정을 책임지는 토대가 되고, 대학은 이를 바탕으로 전공 적합성·학업 준비도를 심층적으로 평가하여 교육을 설계하는 구조가 될 때 비로소 선순환이 성립한다.

해외 사례 분석 결과, 대학입시의 평가 구조와 목적은 고교 교육과정의 운영 방식과 교수·학습 방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는 다시 대학 교육의 수준과 사회가 요구하는 역량 구조의 변화로 이어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고교 교육과정의 성취를 대학이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국가일수록, 대학은 별도의 '불신 기반 선발' 대신 고교 단계의 학습 이력을 토대로 전공 교육을 발전시키는 선순환 구조를 갖추고 있었다.

결국 입시제도는 '어떤 학생이 우수한가'를 가리는 기술적 장치가 아니라, 어떤 학습 경험을 거친 학생이 대학 교육에 적합한가를 판단하는 사회적 약속이며, 나아가 우리가 지향하는 인간상을 제도적으로 구현하는 장치이다. 따라서 고교-대학-사회 간 선순환 구조 구축은 단순한 제도 정비 차원을 넘어, 대학이 고교 교육을 신뢰하는 구조로 전환하고, 고교는 그 신뢰에 응답하는 교육을 수행하는 상호 책임 구조를 제도화하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본 개선안의 핵심 철학적 기반이라 할 수 있다.

나. 설계 원칙

이러한 철학을 실질적인 제도 설계로 구현하기 위해, 본 개선안은 세 가지 설계 원칙을 중심으로 마련되었다.

첫째, 실행 가능성의 확보이다.

제도는 교사·학생·대학이 실제로 수용할 수 있는 수준에서 작동해야 하며, 지나치게 이상적이거나 현장의 행정 부담을 가중시키는 방식으로는 안정적 운영이 어렵다. 전문가 자문과 현장 조사 결과, 제도 설계의 출발점은 이상적 모델이 아니라 실제 적용 가능한 실행성임이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개선안은 현장의 운영 여건과 제도적 정합성을 동시에 고려하는 방향으로 구성되었다.

둘째, 통합적 접근과 단계적 이행이다.

대입제도는 평가·전형·고교체제가 상호 연동되는 복합 구조를 갖고 있으므로, 부분적 개선이 아니라 통합적 시각에서의 체제 전환이 필요하다. 동시에 급격한 변화는 현장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단계적 이행이 필수적이다. 이에 본 개선안은 2028년, 2033년, 2040년을 주요 전환점으로 설정하고, 안정적 적응 → 본격 전환 → 최종 정착으로 이어지는 이행 경로를 제시하였다.

셋째, 수용성과 신뢰성의 확보이다.

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는 교사·학생·학부모가 변화의 필요성과 방향을 충분히 납득하고 수용해야 하며, 정책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 또한 확보되어야 한다. 본 연구의 조사 결과와 이해관계자 의견은, 제도 설계가 현장의 요구를 반영하되 국가의 책무성과 대학의 자율성이 균형을 이루는 구조여야 한다는 점을 일관되게 보여주었다. 이에 따라 개선안은 다양한 교육 주체의 목소리를 반영하면서도 정책의 지속성과 신뢰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2 미래형 대입제도 제안 개요

본 개선안은 학교 교육과정 중심·성장 중심·연계 중심의 대입체제 확립을 목표로, 내신-수능/소양시험-전형 구조-대학 평가-평가 인프라-고교체제의 여섯 축을 통합적으로 재설계한다. 본 연구에서 실시한 전문가 TF, 정책포럼, 입학사정관·교원 면담 및 인식 조사 결과, 현행 대입제도의 핵심 문제는 '외부 단일시험 의존 구조', '상대평가 기반 경쟁 심화', '고교-대학 간 평가 기준 단절'에 있다는 점이 반복적으로 지적되었다. 이에 따라 본 개선안은 ① 공정성과 신뢰성 기반의 평가체계 구축, ② 성장 중심 평가로의 전환, ③ 고교-대학-국가 연계 생태계 형성 세 가지 원칙을 핵심 원리로 설정한다.

이를 구현하기 위해 본 개선안은 2028~2032년(1단계) → 2033~2039년(2단계) → 2040년 이후(3단계)의 3단계 로드맵으로 이행을 설계한다. 이 과정에서 외부 단일시험 의존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학교 내신과 국가 인증을 결합한 '내신 속 국가인증' 단일 평가체제로 전환한다. 특히 다수의 전문가들이 지적한 바와 같이, 수시·정시 이원 체제가 고교 3학년 2학기 교육과정을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을 반영하여, 대입

전형은 고3 2학기 이후 11~12월 통합 전형 체제로 전환하는 것을 중장기 목표로 설정한다.

평가 방식에서는 학생부 중심 평가를 기본 축으로 하되, 서·논술형 평가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채점의 공정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AI 기반 채점과 전문가 검증을 병행하는 이중 구조를 도입한다. 아울러 국가·시도 단위 평가지원센터, 문제은행 및 표준 루브릭, 데이터 기반 학습·평가 피드백 시스템, 교원 평가 전문성 상시 연수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평가 변화가 제도 설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학교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하는 실행 기반을 마련한다.

이러한 미래형 대입체제는 다음의 세 가지 핵심 개념을 토대로 작동한다.

첫째, 학교 교육과정 중심은 고교학점제와 성취기준 기반 평가를 통해, 학생이 학교 교육과정 안에서 경험한 학습 내용과 성장 과정이 대학입시에서 정당하게 반영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교과 성취뿐 아니라, 과목 선택 이력, 성취 수준 변화, 탐구 과정 등 학습 맥락 전체를 평가 대상으로 전환하는 것을 포함한다.

둘째, 성장 중심은 단일 시험의 일회적 결과가 아니라, 학생의 학업 과정·탐구력·누적 성장 경로를 지속적으로 평가의 중심에 두는 방향을 의미한다. 이는 상대적 서열보다는 성취 수준과 성장 흐름을 중시하는 절대평가 체제 전환, 서·논술형 평가 확대, 수행·과정 중심 평가 강화와 긴밀히 연결된다.

셋째, 연계 중심은 고교-대학-국가의 평가와 인증체계를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학생의 학업 이력과 성취 결과가 단계적으로 축적되고 다음 단계에서 활용되는 연계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향후 도입될 졸업자격시험과 대학입학소양시험, 학생부 내 축적 자료가 서로 분절되지 않고 구조적으로 연결되는 평가 체제를 목표로 한다.

이러한 철학을 기반으로, 〈표 Ⅵ-1〉은 2028~2032년(1단계), 2033~2039년(2단계), 2040년 이후(3단계)의 세 단계에 걸쳐 미래형 대입체제가 어떻게 전환되고 정착되는지를 구조적으로 제시한다.

〈표 Ⅵ-1〉 미래형 단계별 대입제도 개요

구분	1단계 (2028~2032)	2단계 (2033~2039)	3단계 (2040 이후)
평가 철학	• 경쟁형 → 성장형 기반 마련	• 성장형 본격화 • 학교 중심 누적평가	• 연계·성장형 체제 완성
내신	• 선택과목 절대평가 즉시 도입 • 서·논술형 시범 • AI 채점 준비	• 전 과목 절대평가 단계 확대 • 서·논술형 상시 운영 • AI-전문가-이의심사 3단계 채점 정착	• 절대평가 안정 정착 • 내신 내 졸업인증 문항 누적 운영
수능/ 소양 시험	• 통합형 수능 안정 운영('33 전환 대비)	• 대학입학소양시험 도입 • 영향 축소 • 5등급 절대평가 • 논술형 확대(합격등급 3년 유효)	• 소양시험 폐지 • 문제은행식 졸업자격시험을 내신 속 누적 인증으로 통합
전형 구조	• 수시·정시 분리(정시 40% 권고 폐지)	• 수시·정시 통합 • 고3 2학기 이후 11~12월 단일 전형 • 표준 13주 운영	• 통합 전형 정착 • 성장이력 기반 지원 체계 완성
대학 평가	• 학생부 활용 고도화 착수 (기준·언어·루브릭 정렬)	• 학생부 중심 전면화(A/B/C형) • 소양시험 ≤30% 보조 활용	• 학생부+졸업자격시험+면접/ 프로젝트/AI 등 심층 조합
인프라· 체제	• 국가·시도 평가지원센터 설계 • 교원 상시 연수 기반	• 문제은행·표준 루브릭 정착, 데이터·AI 채점 시스템 가동	• 학교-평가-대학-국가 연계 인프라 완성
고교체제/ 연계	• 고교 유형 단순화 방향 확정 • 공동교육과정 확대 준비	• 공동교육과정·연합형 선택 확대 • 대학-고교 연계 프로그램 시범	• 유형 단순화 정착 • 연계형 교육과정 상시 운영

3 핵심 영역별 제도 개선안

가. 연구결과 종합과 개선 방향 도출 과정

본 절의 제도 개선안은 Ⅱ장부터 Ⅴ장까지의 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도출한 것이다. 먼저 Ⅱ장에서는 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편과 최근 교육정책 변화를 검토한 결과, 내신

및 수능의 일부 절대평가 전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수능 중심 선발 구조가 유지되고 있으며, 수시·정시 이원화로 인한 고3 학사 일정의 왜곡, 고교학점제 및 역량 기반 교육과정과 대입제도 간의 구조적 불일치가 지속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는 단기적 제도 보완을 넘어, 내신 평가 체제, 대학수학능력시험(대학입학소양시험) 구조, 전형 일정과 절차, 고교체제와 대학 평가체계를 포괄하는 보다 근본적인 수준의 재설계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Ⅲ장의 교육관계자(교원) 인식 분석에서는, 상대평가 중심 내신과 수능 위주 선발 구조가 과도한 경쟁과 서열화를 심화시키고, 수업·평가·진로지도가 입시에 종속되는 현 체제에 대한 비판이 반복적으로 제기되었다. 교사들은 성취기준 기반 절대평가 전환의 필요성에는 대체로 공감했으나, 서·논술형 평가 확대에 대해서는 채점의 주관성, 평가 부담 증가, 민원 발생 우려, 학교 간 여건 격차 등의 이유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우세하였다. 즉, 교사들은 서·논술형 평가의 교육적 필요성을 부정한 것이 아니라, 충분한 지원 체계 없이 평가 방식만 전환되는 것에 대한 현실적 어려움을 주요 문제로 지적하였다. 한편, 교사들은 수시·정시 이원구조가 교육과정을 혼란시키고 고3 2학기 수업 공백을 유발한다는 점에 공감하며, 전형 시기의 합리적 조정과 통합형 전형 체제의 필요성을 강하게 지적하였다.

Ⅳ장의 전문가 인식 분석에서도 유사한 문제의식이 보다 구조적인 차원에서 확인되었다. 전문가들은 현행 및 2028학년도 대입제도가 여전히 단일 고위험 시험(수능)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으며, 내신 절대평가와 졸업자격시험을 결합한 학교 기반 국가인증 체제, 수시·정시 통합형 전형 구조, 학생부 중심·성장 기반 평가체제, 평가 인프라(AI 채점, 문제은행 등) 구축, 고교 유형 단순화 및 고교-대학 연계 강화가 병행되지 않으면 고교학점제와 미래형 교육과정이 실질적으로 작동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Ⅴ장에서 살펴본 해외 대학입시 개혁 사례를 보면, 제도는 나라마다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흐름이 있다. 학교 기반 평가(내신·교사평가), 국가 수준의 표준화 시험(졸업·자격시험), 대학의 자율 평가(면접·포트폴리오 등)가 각각 맡은 역할이 분명하고, 이 요소들이 서로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하나의 체계로 작동한다는 점이다. 또한 이런 구조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평가 기준이 명확해야 하고, 평가가 믿을 만하게 이뤄지도록 점검하고 조정하는 장치, 국가 차원의 데이터 관리 시스템이 함께 갖춰져야 한다. 이러한 조건이 충족될 때, 고교-대학-지역사회 간 학업 경로가 끊김 없이 이어지고,

공정성·신뢰성·교육과정 연계성도 함께 확보된다. 이 분석은 우리나라 역시 지금의 단일 시험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 학교 평가–국가 인증–대학 자율 선발이 균형 있게 결합된 다층적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상의 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미래형 대입제도의 구조 개편은 다음과 같은 핵심 과제를 중심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첫째, 고교학점제와 역량 기반 교육과정에 맞게 내신 평가 체제를 전면적으로 바꾸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절대평가 전환, 서·논술형 평가의 점진적 확대, 교원의 평가 전문성 강화, 학교 유형 구조 개선이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

둘째, 수능처럼 한 번의 시험이 지나치게 큰 영향을 주는 구조를 바꾸고, 현행 수능을 대학입학소양시험과 졸업자격시험 체제로 단계적으로 재편하는 평가 체제 전환이 필요하다.

셋째, 수시·정시로 나뉜 이원 구조를 하나의 통합 전형으로 바꾸고, 전형 시기와 절차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고교 수업·평가와 입시 일정이 서로 충돌하지 않도록 정렬하는 것이 중요하다.

넷째, 학생부·졸업자격시험·대학의 면접·포트폴리오 평가가 서로 연계되어 자연스럽게 작동하도록 하고, 그 과정에서 고교 수업과 대학 선발 기준이 일관되게 이어지는 공통 원칙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다섯째, 이러한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해 미래형 평가 인프라(평가지원센터, AI 기반 평가 지원, 데이터 기반 피드백 체계)를 구축하고, 고교체제 개편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

여섯째, 고교체제를 정비하고, 고교–대학–지역이 긴밀하게 연계되도록 하여 학생들의 학업 경로가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본 절의 개선안은 Ⅱ~Ⅴ장에서 도출된 문제 진단과 시사점을 단순히 나열한 것이 아니라, 과도한 수능 의존 구조, 수시·정시 이원화, 상대평가 경쟁 체제의 한계에 대한 분석, 교사·전문가 집단이 공통으로 요구한 학교 교육과정 중심·성장 중심 평가체제 전환의 필요성, 그리고 해외 사례에서 확인된 학교 평가–국가 인증–대학 자율평가의 구조적 결합 모델을 종합적으로 통합하여 제도 설계 수준으로 구체화한 결과이다.

이를 바탕으로 본 절에서는 ① 내신 평가 체제, ② 대학수학능력시험 개편 및 단계적 폐지, ③ 대입전형 구조 개편, ④ 대학 평가체계 고도화 및 고교–대학 연계 원칙 정립, ⑤ 미래형 평가 인프라 구축, ⑥ 고교체제 개편 및 학업경로 연속성 강화라는 여섯 영역

을 중심으로 미래형 대입제도의 구체적인 개선 방향을 제시한다. 이상의 분석은 단일 요소의 개선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내신-국가시험-전형 구조-고교체제-평가 인프라가 함께 설계되는 '통합적 구조 개편'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나. 내신 평가 체제 개선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과 미래형 교육과정의 안착을 위해서는 학교 교육과정 중심의 평가 체제로의 전환이 필수적이다. 내신 평가는 단순한 변별 도구를 넘어, 교육과정의 질과 학생의 성장 과정을 공정하게 반영하는 평가 구조로 재설계되어야 한다. 특히 교과 성취 수준뿐 아니라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진로 기반 과목 선택, 성취 변화와 같은 학생의 누적 성장 경로가 대학입시에서 실질적으로 인정되는 체제를 확립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러한 방향은 본 연구의 해외 분석 결과와도 일치한다. 핀란드와 프랑스 등은 국가 단일시험 의존을 줄이고 학교 기반 성취평가와 수행평가의 비중을 확대하는 구조를 통해 고교-대학 간 연계성을 강화해 왔다. 이들 국가는 고교 교육과정에서 누적된 성취 기록을 대학 선발의 핵심 자료로 활용하며, 외부시험은 최소한의 인증·보완 기능으로 제한하는 특징을 보인다.

또한 본 연구의 교원 인식 조사에서도, 상대평가 구조의 과도한 경쟁 유발 문제, 성장 기반 평가의 필요성, 세부능력·특기사항 기록의 교육적 가치가 반복적으로 확인되었다. 해외 사례 분석에서도 이러한 성장 중심 평가가 고교-대학 간 선순환 체제를 형성하는 중요한 조건으로 제시되었다. 이와 같은 분석을 토대로, 본 연구는 미래형 교육과정에 부합하는 내신 평가 체제 개편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1) 절대평가 전환: 선택과목 즉시 도입 → 전 과목 단계적 확대

본 연구는 내신 평가의 절대평가 전환을 두 단계로 나누어 추진하는 경로로 설계한다. 먼저, 단기적으로는 학교 현장에서 이미 익숙한 기존 5등급 절대평가 체제를 적용하여 무리 없이 전환할 수 있도록 한다. 이후 중장기적으로는 2033학년도부터 시행되는 대학입학소양시험과 연계하여, 내신 평가를 '기초-기본-충실-심화-탁월'의 5단계 질적 성취수준 체제로 고도화하는 방향으로 발전시킨다. 이러한 단계적 전환은 고교학점제가 지향하는 성취기준 중심 평가를 학교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현실적이고

안전한 이행 경로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교원 인식조사와 전문가 자문 결과, 다수의 교원과 전문가들은 현재의 상대평가 체제가 학습 경쟁을 과도하게 유발하고, 성취기준의 본래 기능을 왜곡하며, 학생의 진로 기반 과목 선택을 위축시키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에 따라 2028학년도부터는 우선 진로·융합 선택과목에 기존 5등급 절대평가를 적용하고, 2033~2039년을 전환기로 설정하여 전 과목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경로는 프랑스 바칼로레아 개편 과정에서 선택과목부터 성취기준 기반 평가를 확대하고, 이후 전 과목으로 전환한 방식과 구조적으로 유사하다. 또한 핀란드 역시 상대평가를 최소화하고 성취 수준을 중심으로 이수 결과를 해석하는 체계를 구축해, 학생의 과목 선택 다양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선택과목의 조기 절대평가 전환은 과목 선택에 따른 유불리를 완화하고, 진로 기반 학습 경험이 보다 안정적으로 설계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또한 전 과목으로 절대평가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식은, 학교마다 평가 환경이 다른 상황에서 갑작스러운 변화로 인한 혼란을 줄여주고, 학교가 새로운 절대평가 체제에 천천히 적응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와 완충 역할을 하게 된다.

한편, 2033학년도 이후에는 대학입학소양시험의 도입과 연계하여 내신 절대평가 역시 '기초-기본-충실-심화-탁월'의 5단계 질적 성취수준 체계로 고도화하는 것이 중장기적 목표이다. 이때의 5단계는 단순한 등급 구분이 아니라, 교육과정 성취기준 도달 수준을 질적으로 해석하는 성취준거형 평가 체계로 설계되어야 한다.

교원 설문 결과에서도 절대평가 전환의 필요성이 중·장기 과제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전문가들은 절대평가 체제 전환 과정에서 단계적 이행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으며, 이에 따라 기존 5등급 절대평가를 단기 체제로 유지하면서, 중장기적으로 질적 성취수준 기반 절대평가로 전환하는 이중 경로가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현실적 방안이라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이러한 절대평가 체제는 뒤에서 설명할 대학입학소양시험 개편과 2단계 졸업자격시험 도입과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고등학교와 대학이 같은 기준으로 성취를 판단하고 해석할 수 있는 공통 언어를 만드는 토대가 된다.

〈표 Ⅵ-2〉 기존 5등급 절대평가 vs 5단계 질적 성취수준 절대평가 비교

구분	기존 5등급 절대평가 (2028 도입안)	5단계 질적 성취수준 절대평가 (2033 연계안)
도입 시기	2028 대입부터 단계적 적용	2033 대입부터 대학입학소양시험과 연계 도입
단계 명칭	1~5등급	기초-기본-충실-심화-탁월
평가 성격	점수 구간 기반 등급형 절대평가	성취기준 도달 수준 기반 질적 성취평가
판정 기준	원점수 또는 환산점수 구간	교육과정 성취기준의 도달 정도와 수행 수준
평가 철학	상대평가의 경쟁 완화 → 절대 기준 충족 여부 판정	학습의 깊이·과정·적용까지 반영하는 성장 중심 평가
변별 기능	일정 수준의 변별 유지 가능	미세 변별보다 학업 준비도·수학 가능성 판단 중심
수업과의 연계성	부분적 연계 (시험 중심 유지 가능)	수업-평가-성취기준의 구조적 일치 필수
학생부 기록과의 관계	교과 성적 중심 해석	세특·수행평가·성취수준 해석과 직접 연동
교사의 역할	점수 산출 중심	성취수준 판단자·해석자 역할 강화

2) 서·논술형 평가 확대

서·논술형 평가는 학생이 어떻게 생각하고 설명하며 문제를 해결하는지를 종합적으로 보는 방식이다. 단순 지식이 아니라 고차적 사고력, 탐구 과정, 문제해결력, 표현 능력을 함께 평가한다는 점에서, 이는 2022 개정 교육과정과 고교학점제가 추구하는 역량 중심 교육의 방향과 가장 잘 맞는 평가 형태이다.

해외 주요 국가들 역시 객관식 중심 평가를 축소하고, 논증·서술·프로젝트 기반 평가의 비중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평가 체제를 전환해 왔다. 프랑스 바칼로레아는 논술 중심의 서술형 평가를 핵심 구조로 운영하고 있으며, 핀란드는 국가시험과 학교 기반 평가 모두에서 과정 중심 사고력 평가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일본은 논술형 대학입학 공통테스트 도입을 추진해 왔고, 싱가포르는 A-Level과 학교 기반 평가에서 서술·구술·프로젝트 평가 비중을 확대해 왔다. 미국 역시 AP·IB·Dual Enrollment 등 서술형·프로젝트 기반 평가가 대학입시의 핵심 요소로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국제적 흐름과 마찬가지로, 본 연구의 전문가 인식 조사와 교원 설문에서도 객관식 중심 평가가 탐구형 수업과 과정 중심 학습을 위축시키고, 사고력 신장을 제한한다는 문제의식이 일관되게 확인되었다. 따라서 내신 평가는 점진적으로 서·논술형 중심 구조로 전환하고, 지필평가 역시 사고력·논증력·표현력 중심 문항의 비중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평가 전환은 앞으로 도입될 대학입학소양시험의 서술·논술형 문항, 2040학년도 이후 졸업자격시험의 서·논술형 인증 문항, 그리고 대학의 면접·프로젝트 기반 평가와도 형식과 기준 면에서 서로 잘 맞도록 하는 밑바탕이 된다. 다시 말해, 학교에서 사용하는 평가 방식이 국가시험과 대학평가의 방식과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만드는 중요한 연결 고리 역할을 한다.

다만 교원 설문에서는 서·논술형 평가 확대에 대한 부정적 응답도 적지 않게 나타났는데, 이는 서·논술형 평가의 교육적 필요성 자체를 부정한다기보다, 채점 부담 증가, 평가의 주관성, 학교 간 여건 격차, 민원 발생 우려, 자료·연수 부족 등 실행 조건에 대한 현실적 불안이 주요 원인으로 해석된다. 특히 최근 내신 평가 문항을 둘러싼 문항 오류 시비, 복수정답 논란, 평가 공정성에 대한 학부모 민원 등은 학교 단위 평가가 구조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에 직면해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맥락에서 국가가 공인된 표준 문항을 학교 평가 시스템에 부분적으로 투입하는 방안은 서·논술형 평가 확대의 현실적 대안으로서 의미를 가진다.

이에 본 연구는 서·논술형 평가 확대를 절대평가 5단계 성취수준 체제의 단계적 확산과 연동하여 점진적으로 추진하되, 국가 공인 문항과 학교 자체 문항을 혼합 운영하는 방식을 병행할 것을 제안한다. 예를 들어, '국가 공인 문항 7 : 학교 출제 문항 3' 수준의 혼합 구조를 적용할 경우, 평가의 공정성과 신뢰도는 국가가 일정 부분 보증하면서도, 교사의 수업 맥락과 학교 교육과정의 자율성 역시 동시에 확보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국가 공인 문항 활용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① 문제은행에 대한 철저한 보안 시스템 구축, ② 특정 지역이나 집단에 편중되지 않도록 한 전국 단위 출제진 구성, ③ 학교 수업 내용과의 정합성을 지속적으로 점검·보완하는 환류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 과정은 교육부–국가평가원(가칭)–시·도교육청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국가 차원의 평가 거버넌스 안에서 관리되어야 한다. 초기 단계에서는 수행평가와 지필평가 일부 과목을 중심으로 서술형 문항 비중을 확대하고, 교사와 학생이 서·논술형 평가에 점진적

으로 익숙해질 수 있도록 현장 적용 대안을 병행해야 한다. 예컨대 기존 수업평가 지원단을 활용하여 과목별 수행평가·서술형 평가 우수 수업 사례를 확산하고, 과목별 표준화된 서술형 평가 문항 은행을 구축·공유하며, 지원청 단위에서 동일 과목 교사 네트워크 기반의 공동 연수와 공동채점 체계를 강화하는 방식이 효과적일 수 있다.

아울러 서·논술형 평가 정착을 위해서는 교육청 차원의 적극적 장학과 교사 전문성에 대한 제도적 신뢰가 필수적이다. 특히 수업·평가 지원단 출신 장학사가 지속적인 연구와 현장 컨설팅을 통해 전문성을 축적하고 학교 현장을 지원하는 구조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이는 서·논술형 평가 확대를 교사의 부담으로 전가하는 방식이 아니라, 교사 전문성에 대한 신뢰와 권한 확대로 이어지는 핵심 조건에 해당한다.

종합하면, 서·논술형 평가 확대는 단순한 평가 형식의 변화가 아니라, 고교학점제-절대평가 성취기준 체제-대학입학소양시험-졸업자격시험-대학 평가로 이어지는 미래형 대입 평가 생태계를 연결하는 핵심 매개 장치로 기능해야 한다. 따라서 서·논술형 평가의 확대는 국가 공인 문항 활용, 혼합 문항 운영, 보안·출제·연계 조건을 포함한 단계적 이행 전략과 현장 지원 체계가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

3) 교원 평가 전문성의 강화와 현장 적용을 위한 실질적 여건 구축

고교 내신 절대평가와 서·논술형 평가가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교사의 전문적 판단이 제도적으로 보장되고, 그 전문성이 충분히 발현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교원의 평가 전문성을 '부족'의 문제가 아니라, 현행 대입 구조와 학교 운영 여건 속에서 발휘되기 어려운 상태로 진단하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조건 정비가 핵심 과제라고 본다.

이러한 관점은 해외 사례에서도 확인된다. 예컨대 핀란드는 교사의 전문적 판단을 신뢰하되, 국가 차원의 메타평가·표준 기준·국가시험 체제를 통해 공공성과 일관성을 확보하는 이중 구조를 운영한다. 프랑스 역시 바칼로레아의 서술형 평가가 교사의 전문성에 기반해 운영되지만, 복수 채점 시스템과 국가 표준 루브릭을 통해 신뢰성과 객관성을 보완하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 일본·싱가포르·미국·독일 역시 교사의 평가 전문성을 기본 전제로 삼되, 국가·지자체·학교가 함께 참여하는 점검과 기준 마련을 통해 평가의 질을 일정하게 유지하도록 운영하고 있다. 즉, 교사가 평가의 주체이지만, 여러 수준의 교육기관이 함께 기준을 맞추고 점검해 주면서 평가의 신뢰성을 보완하는 구조를 갖추

고 있다. 이는 교사의 개인 능력 문제가 아니라, 전문성이 작동할 수 있는 제도 환경이 핵심 조건임을 보여준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교원 평가 전문성 강화를, 단순한 역량 결손 보완이 아니라 이미 축적된 전문성을 미래형 평가체제의 요구에 맞게 고도화하고 제도적으로 발현 가능하게 만드는 과정으로 이해한다. 특히 절대평가와 서·논술형 평가 확대는 교사의 전문적 판단 영역을 실질적으로 확장하는 변화인 만큼, 이를 교사의 책임 전가가 아닌 전문성에 대한 신뢰·권한 확대로 연결하는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

한편 현행의 공동채점·공동기준 중심 평가 운영이 공정성과 안정성 확보에 기여해 왔다는 점은 분명하나, 미래형 평가체제에서는 교사 개별의 전문적 판단이 보다 존중되고 반영될 수 있는 구조로의 점진적 전환도 함께 모색할 필요가 있다. 즉, 동일 교과 교사 간 협의와 기준 공유라는 집단적 전문성 기반 위에서, 각 교사가 자신의 수업 맥락과 학생의 성장 과정을 반영해 더 자율적이고 맥락성 높은 판단을 수행할 수 있는 '개별 교사 전문성 기반 평가 체제'로 중장기적 확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교원 평가 전문성 강화는 다음과 같은 방향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첫째, 교사의 평가 전문성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고 고도화해야 할 핵심역량으로 재정의하며, 평가 변화 과정에서 교사가 수동적 대상이 아닌 정책 설계의 주체로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

둘째, 교육과정과 성취기준을 어떻게 해석해 평가로 연결할지, 서·논술형 문항을 어떻게 설계할지, 학생의 성장 과정을 어떻게 읽어낼지 등에 대해 교사가 실제 수업과 평가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다시 말해, 학교 현장에서 필요한 고난도 평가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가까운 수준의 지원이 필요하다.

셋째, 지금처럼 공동채점과 교차검증 체계는 유지하되, 시간이 지날수록 교사의 개별 평가 권한을 조금씩 넓혀가는 방향으로 평가 구조를 다시 설계할 필요가 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표준화된 루브릭(채점 기준), 다양한 예시 사례를 모은 사례은행, AI 기반 평가 지원 도구를 함께 운영하여, 교사가 보다 안정적으로 판단하고 채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결국 교원의 평가 전문성을 강화한다는 것은, 교사가 이미 가지고 있는 전문성이 바뀌는 교육과정 안에서 제대로 발휘될 수 있도록 제도와 환경을 다시 정비하는 일이다.

이는 앞으로의 미래형 대입제도가 학교 현장에서 실제로 자리 잡을 수 있는지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기반이 된다.

4) 학생부 기록의 질 개선: '의무 기재' 완화와 교사 자율성 확대

서·논술형 평가가 늘어나고, 학생의 성장을 중심에 둔 평가 체제로 옮겨가기 위해서는 학생부 기록을 '양으로 많이 쓰는 방식'이 아니라 '신뢰 있게 쓰는 방식'으로 바꾸는 것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지금처럼 모든 과목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세특)을 사실상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하는 구조에서는, 교사는 지나치게 많은 기록 업무에 시달리고, 학생은 형식적인 기록을 만들어야 한다는 부담을 느끼는 문제가 있다는 점이 교원 설문과 현장 인터뷰에서 꾸준히 지적되었다.

이처럼 기록을 모든 과목에서 의무적으로 많이 작성해야 하는 구조에서는, 교사가 학생의 실제 성장 과정을 깊이 있게 담기보다 '일단 적어 넣어야 하는' 행정적 기록에 머무를 가능성이 커진다. 그 결과 기록의 양은 많아지지만, 정작 대학이 참고할 만한 교육적으로 중요한 내용의 질과 신뢰도는 약해지는 모순적인 상황이 나타날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과목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의 '전면 의무 기재' 방식을 '선택적 기재' 방식으로 점진적으로 완화하는 방향을 제안한다. 즉, 모든 과목에서 똑같은 수준의 서술형 기록을 의무적으로 쓰게 하기보다, 학생의 진로와 직접 연결되는 과목, 교사가 전문적으로 평가할 수 있어 교육적 의미가 큰 과목, 학생의 성취 변화와 성장 과정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학습 경험을 중심으로 기록을 선택적으로 더 깊이 작성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허용하자는 것이다. 다만 이러한 '선택적 기재'는 기록을 줄이자는 뜻이 아니라, 대학이 실제로 읽고 해석할 수 있는 핵심 기록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학생부를 재편하는 과정이다. 오히려 이 방식이 학생부를 더 정확하고 신뢰도 있게 활용하도록 돕는 셈이다.

이러한 방식은 단순히 교사의 업무를 줄이려는 차원을 넘어, 교사가 실제 교육적 판단에 따라 기록을 선택하고 깊이 있게 작성할 수 있는 자율성을 넓히는 효과가 있다. 지금처럼 '모든 학생, 모든 과목'을 같은 밀도로 기록해야 하는 구조에서는, 기록이 형식적으로 반복되거나 비슷한 표현을 복사·붙여넣는 방식으로 흐를 수밖에 없다. 하지만 기록 범위를 교육적으로 의미 있는 영역에 맞춰 조정하게 되면, 교사는 학생의 학습 맥락과 성장 의미를 고려해 더 밀도 있고 해석 가능한 기록을 남길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전환은 학생부를 단순한 '입시용 제출 서류'가 아니라, 학생의 성장 과정을 담는 교육적 기록으로 다시 자리매김한다는 점에서도 중요하다. 학생 역시 모든 과목에서 똑같은 수준의 '스펙형 활동'을 요구받는 부담에서 벗어나, 자신의 진로와 관심에 맞춰 선택과 집중이 가능한 학습 경험을 설계할 수 있다. 이는 고교학점제가 추구하는 '학생 선택 중심 교육과정'과도 자연스럽게 맞닿아 있다.

5) 고교 유형 단순화와 평가 공정성 기반 확립

절대평가와 서·논술형 평가가 공정하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학교 간 자원 및 평가 환경 격차를 구조적으로 초래하는 고교 유형 간 불균형 문제가 함께 개선될 필요가 있다. 전문가 의견에서도 자사고·외고·국제고 등 특정 유형 학교의 교육·평가 여건이 절대평가 체제 하에서 구조적 불공정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반복적으로 제기되었다.

따라서 내신 평가체제의 개편은 다음 절인 '사. 고교체제 개편 및 학업경로 연속성 강화'에서 제시하는 고교 유형 단순화와 학교 간 서열 완화 정책과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 즉, 아무리 절대평가나 서·논술형 평가를 정교하게 설계하더라도, 학교 유형에 따른 구조적 격차가 그대로 남아 있다면 평가의 공정성은 제한적으로만 확보될 수 있다.

결국 내신 평가 개편은 단순히 평가 방식만 바꾸는 문제가 아니라, 고교학점제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고, 과정 중심 수업을 확산시키며, 학생의 성장을 중심에 둔 평가를 실현하고, 고교-대학 간 연계를 강화하며, 평가의 공정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구조적 개혁이다.

따라서 절대평가, 서·논술형 평가, 교원 평가 전문성 강화, 고교 유형 단순화는 각각 따로 움직이는 정책이 아니라, 서로를 보완하며 함께 작동해야 하는 하나의 정책 패키지로 추진되어야 한다. 이러한 종합적 접근이 이루어질 때, 고교 교육은 본래의 교육적 기능을 회복할 수 있고, 대학입시는 학생의 학습과 성장을 촉진하는 평가 체제로 전환될 수 있다.

〈표 Ⅵ-3〉 내신 평가 체제 개선안

구분	개선 내용	주요 근거·필요성	기대 효과
2028 선택과목 절대평가 도입	진로·융합 선택과목 절대평가 즉시 전환	교원·전문가 의견에서 과목 선택의 유불리와 상대평가 왜곡 구조가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됨. 선택과목의 성취기준 중심 운영을 통해 고교학점제 취지 회복 필요	진로 기반 과목 선택의 부담 완화, 학점제 수용성 제고, 선택과목의 교육적 의미 회복
전 과목 절대평가 단계적 확대	2028~2032 성취기준 기반 절대평가 확대	전문가 인식 결과, 상대평가 체제가 학습 경쟁을 과도하게 유발하고 성취기준 왜곡을 초래한다는 비판 제기. 다만 절대평가 전환 시 학교 간 평가여건 격차 완화와 신뢰도 확보 장치 병행 필요성 강조	성장 중심 평가 정착, 경쟁 중심 문화 완화, 학교 간 형평성 제고
서·논술형 평가 확대	지필평가의 서·논술형 문항 비중 단계적 확대	해외 주요국(프랑스·핀란드·싱가포르·미국 등)에서 사고력·탐구력 중심 평가 확대 흐름 확인. 교원 설문에서는 채점 부담·공정성·민원 우려 등 실행 조건에 대한 불안이 주요 제약 요인으로 나타남	고차 사고력·표현력 강화, 탐구 기반 수업 활성화, 대학 평가체제와의 정합성 제고
학생부 기록의 질 개선	과목별 세부능력·특기사항 전면 의무 기재 → 선택적 기재로 단계적 완화	전 과목 세특 의무 기재 구조로 인해 교사의 기록 부담 과중, 형식화·상투화된 기록 증가 문제 지속 제기. 기록의 '양'보다 '질'과 해석 가능성이 대입 신뢰도의 핵심 요소로 부상	교사 기록 자율성 확대, 학생 성장 기록의 밀도·신뢰성 제고, 학생 선택 기반 학습 설계 강화
교원 평가 전문성 고도화	상시 연수·공동채점·전문적 판단 구조 정비	교사의 전문성이 부족하다기보다, 현재 제도 구조에서 전문성을 충분히 발휘하기 어려운 환경이라는 전문가 의견 다수. 평가 권한과 책임의 균형, 전문성 발현 조건 마련 필요.	교사의 전문적 판단 역량의 제도적 보장, 평가 신뢰도 제고, 평가 변화에 대한 현장 수용성 강화
고교 유형 단순화 및 서열 완화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중점과정 일반고 전환	전문가 분석에서, 고교 유형 간 자원·평가여건 격차가 절대평가·서·논술형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구조적으로 제약하는 핵심 요인으로 확인됨. 평가체제 개편과 고교체제 개편은 분리될 수 없는 상호조건	평가 공정성 기반 강화, 학교 간 구조적 불균형 완화, 교육 접근성과 학습기회 형평성 제고

다. 대학입학소양시험(현행 수능) 개편 및 단계적 기능 전환

미래형 대입제도의 핵심은 지금처럼 선다형 위주의 단일 외부시험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고교학점제를 통해 학생이 어떤 과목을 어떻게 배우고 성장했는지를 중심으로 대입을 준비하도록 체계를 바꾸는 데 있다. 즉, 학생의 학습과 성장 과정 전체를 반영하는 대입 구조로 천천히 옮겨가는 것이 미래형 대입제도의 핵심 방향이다. 다만 교원 설문과 전문가 협의에서는, 수능을 너무 빨리 없애면 현장의 불안이 커지고, 제도가 정착되기 전까지 정책 공백이 생기며, 결국 학교의 부담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반복해서 제기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수능을 당장 폐지해야 할 대상으로 보지 않고, ① 단계적 개편 → ② 역할 축소 → ③ 대학입학소양시험으로 기능 이전이라는 점진적 전환 과정을 거쳐, 결국 지금의 외부 단일시험 구조를 자연스럽게 대신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을 제안한다.

이 과정에서 현행 수능은 지금처럼 선다형 중심의 한 번으로 끝나는 국가시험이 아니라, 고교 교육과정에 기반한 서·논술형 문제은행식 평가체계로 점진적으로 바뀌게 된다. 그리고 이렇게 바뀐 역할은 단계적으로 대학입학소양시험 체제 안으로 옮겨가며 내재화된다.

전환기 동안 수능은 대입에서 핵심 변별 도구가 아니라, 참고용으로만 제한적으로 활용되고, 최종적으로는 대학입학소양시험과 학교 기반 성취평가 체제가 그 자리를 완전히 대신하는 구조를 목표로 한다. 즉, 수능을 한 번에 없애려는 것이 아니라, 대입 평가의 중심을 외부 단일시험에서 '학교에서의 누적 성취'와 '국가가 인증하는 기본 소양 평가'로 옮겨가는 것이 이 단계의 핵심 정책 방향이다.

아울러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 구조 개혁과 사회 변화에 대응하는 대학 교육과정의 개편을 전제로, 대학별 학생 선발의 자율권을 폭넓게 보장한다. 대학은 모집 단위의 교육 목표와 인재상에 따라 선발 요소의 조합과 반영 방식, 평가 도구의 활용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으며, 문제은행식 고교 교육과정 수준의 범교과 융합형 주제 중심 면접 또는 서·논술형 평가는 대학이 필요에 따라 대입 전형의 보조 자료로 활용하도록 한다. 이와 관련한 실시 여부와 활용 범위, 반영 비율 역시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여, 대학의 교육 철학과 학문적 특성이 선발 과정에 실질적으로 반영되도록 한다.

이러한 개편 방향은 프랑스의 고교 졸업·대학입학 자격시험(Baccalauréat), 핀란드의 고등학교 졸업시험(Matriculation Examination), 독일의 고교 졸업·대학입학 자격시험(Abitur), 일본·싱가포르·미국의 학교 기반 성취 중심 평가 체제가 공통적으로 보여주는 흐름과도 정합성을 갖는다. 주요 국가들 역시 외부 국가시험을 즉각 폐지하기보다, 그 기능을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학교 성취, 졸업 평가, 포트폴리오, 대학 자율 평가로 이전하는 방식으로 대학 선발 체계를 전환해 왔으며, 본 개편안 역시 이러한 국제적 추세에 부합하는 고교교육-대학 연계형 성장 중심 대입 체제 구축을 정책 목표로 한다.

1) 2033년: 대학입학소양시험으로 전환

2033학년도부터 현행 대학수학능력시험은 '대학입학소양시험' 체제로 전환된다. 이는 단순히 이름을 바꾸는 차원이 아니라, 시험이 어떤 목적을 갖고 어떻게 쓰여야 하는지를 처음부터 다시 설계하는 단계이다. 이 시점부터 국가시험은 더 이상 상위권 학생을 가려내는 변별 시험이 아니라, 대학 공부를 따라가는 데 필요한 기초 학업역량을 갖추었는지 확인하는 '자격 검증형 평가'로 성격이 바뀐다.

교원 설문에서도 "수능이 최소한의 학업 기준을 확인하는 안전장치 역할은 필요하다"는 응답이 많았고, 본 개편안은 이러한 현장의 요구를 반영하여 변별 중심 시험 → 기준 충족형 소양 평가로 전환하는 방향을 제시한다. 이러한 전환 방식은 프랑스의 바칼로레아가 대학 선발 기능을 줄이고 졸업·자격 인증 중심으로 재정립된 과정, 핀란드가 국가시험을 성취 확인 중심으로 유지하면서도 대학 활용 비중을 단계적으로 줄여 온 흐름과도 닮아 있다.

즉, 외부 국가시험을 당장 폐지하기보다, 그 기능을 조금씩 조정하면서 변별 기능은 학교 평가와 대학 자율 평가로 옮기고, 국가시험은 기초 역량을 확인하는 역할만 남겨 점진적으로 시험 구조를 재편하는 방식이 여러 나라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개편 방향임을 보여준다.

첫째, 대학입학소양시험은 공통 소양시험과 선택 소양시험의 이원 구조로 운영된다.

공통 소양시험은 국어·영어·수학·사회·과학 등 고교 공통 필수역량을 중심으로 기초 학업역량을 검증하는 '자격검증형 시험'으로 운영된다. 선택 소양시험은 전공 계열별 탐색 능력, 사고력, 탐구 역량을 평가하는 성장형 시험으로 구성되며, 예를 들어,

- 인문·사회 계열: 통합사회 탐구, 읽기·쓰기 기반 사고력 평가
- 자연·공학 계열: 과학탐구·수학적 문제해결 기반 사고력 평가
- 예체능·융합 계열: 프로젝트·포트폴리오형 탐구 기반 평가와 같은 방식의 영역·과목으로 운영될 수 있다.

또한 선택 소양시험은 대학의 교육 목표나 모집단위 특성에 따라 논술형 평가로 일부 대체 가능하도록 설계하여, 국가 차원의 공통 최소 기준(공통 소양)과 대학의 선발 자율성(선택 소양)을 동시에 보장하는 구조를 갖는다. 이는 싱가포르 A-Level의 공통·선택 모듈 운영, 프랑스·핀란드의 대학별 자체평가 병행 구조처럼, 국가시험 + 대학 자율평가가 함께 작동하는 국제적 흐름과 맞닿아 있는 방식이다.

둘째, 대학입학소양시험의 대입 영향력은 학생부 중심 전형을 보완하는 참고자료 수준으로 조정된다.

교원 설문에서는 "국가시험의 영향력이 너무 빨리 약해지면, 그만큼 학교 내 평가 부담이 과도하게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확인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소양시험 성취 결과에 3년 유효제를 적용하여, 학생들이 매년 반복해서 재응시해야 하는 부담을 줄이고, 단기 경쟁 압박을 완화하고자 한다. 이 제도는 학교가 새로운 평가체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시적 부담을 줄여주는 완충 장치로도 기능한다. 이러한 접근은 핀란드와 프랑스가 국가시험의 활용 비중을 제한하고 재응시 압박을 낮추면서, 학교 기반 평가와의 연계를 강화해 온 개편 방향과도 일치한다.

셋째, 평가 방식은 기존 9등급 상대평가 체제에서 5단계 성취 수준 기반 절대평가로 전면 전환된다.

공통 영역은 기초학업역량과 대학 학업준비도를 중심으로, 선택 영역은 탐구력·논증력·사고력 중심으로 평가한다. 이는 전문가 인식 조사에서 "수능의 구조적 문제는 변별 경쟁 중심 구조에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으로, 변별 기능은 최소 수준의 자격 검증 기능으로 축소하고, 시험의 교육적 성격을 회복하려는 전환에 해당한다. 이러한 방향은 프랑스 바칼로레아가 성취 기준 중심의 절대평가 구조를 강화해 온 흐름과도 정합성을 가진다.

넷째, 선택 소양시험은 단계적으로 서술형·논술형 비중을 확대하되, 채점 공정성에 대한 교원·전문가들의 우려를 반영하여 국가시험 전용의 이중 검증 체계를 적용한다.

즉, ① AI 기반 1차 채점, ② 전문 채점단에 의한 2차 검증, ③ 이의신청 및 재검토 절차의 세 단계가 함께 작동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AI 기반 채점은 CBT(Computer-Based Testing) 환경이 안정적으로 갖춰졌을 때에만 순차적으로 도입한다. 이를 위해 국가는 각 학교의 시설·네트워크 여건, 응시 환경의 형평성, 디지털 평가에 대한 학생·교사의 적응도를 종합적으로 점검하면서, 일부 과목·일부 문항부터 점진적으로 적용 범위를 넓히는 방식을 취한다. 즉, 기술적으로 가능하다고 해서 곧바로 전 과목에 일괄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안정성과 공정성이 확보된 범위에서만 제한 도입하는 것이 원칙이다.

또한 이 AI 채점 시스템은 학교 내신 평가와는 엄격히 분리된 국가시험 전용 모듈로 운영하여, 기술 도입이 학교 현장 평가로 과도하게 확산되어 교사의 전문적 판단이 약화되지 않도록 한다. 이러한 접근은 핀란드·프랑스처럼 AI를 교사의 판단을 대신하는 도구가 아니라, 채점의 일관성과 정확성을 높여주는 '보조적·검증적 장치'로만 활용하는 국제적 사례와도 같은 흐름이다.

〈표 Ⅵ-4〉 대학입학소양시험 개요

구분	내용
대상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및 동등 학력 인정자
시기	매년 12월 초 실시(고교학점제 이수 및 학생부 반영 완료 이후)
응시	매년 1회 응시, 합격 등급은 3년간 유효
유형	• **공통 소양시험(자격검증형)** – 기초학업역량 종합 검증 • **선택 소양시험(성장형)** – 전공 탐구력·사고력 중심 평가
활용 원칙	• 공통 소양시험: 대학 수학 가능 여부에 대한 최소 자격 검증 자료 • 선택 소양시험: 대학별 자율에 따라 논술·서·논술형 평가를 대체하거나 보조 자료로 활용 가능
과목	공통: 국어·영어·수학·사회·과학(사회/과학 중 선택)
문항 유형	• 공통: 선다형 및 서술형 • 선택: 서술형 및 논술형(단계적 확대)

구분	내용
운영 방식(CBT)	• 서·논술형 문항의 AI 채점 도입은 CBT 기반 운영을 전제로 단계적 적용 • 학교 인프라, 네트워크 안정성, 응시 환경 형평성, 디지털 평가 적응도 등을 종합 점검한 후 일부 과목·일부 문항부터 제한 적용
평가 방식	절대평가(5단계 성취수준) - 공통: 기초학력·대학 학업준비도 중심 성취 평가 - 선택: 탐구력·논증력·표현력 중심 성취 평가
채점·관리	• AI 1차 채점 → 전문 채점단 2차 검증 → 이의심사 병행 • AI 채점은 국가시험 전용 모듈로 제한 운영(학교 내신 평가와 명확히 분리) • 국가 차원의 표준 검증체계 및 신뢰도 관리 시스템 구축
대입 반영 성격	학생부 중심 전형을 보완하는 참고자료 성격(대입 핵심 변별 자료로 미활용 원칙)

2) 2034~2039년: 대학입학소양시험 축소 및 학교 중심 평가체제로의 이행기

이 시기는 교원 설문과 전문가 협의에서 반복 제기된 “수능 기능의 급격한 축소·변동은 현장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도적으로 완충하기 위한 점진적 전환기에 해당한다. 이 기간 동안 대입 평가의 중심축은 단일 외부시험에서 벗어나 학교에서 누적된 학업 성취 기록으로 서서히 이동하게 된다. 이는 단순히 시험의 비중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평가 권한과 책임을 국가에서 학교로 단계적으로 옮기는 구조적 변화이며, 핀란드·프랑스·독일처럼 외부시험의 역할을 조정하면서 학교 기반 평가 비중을 높여 온 국제적 흐름과도 같은 방향이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대학입학소양시험의 역할도 자연스럽게 재정립된다.

첫째, 이 시기 대학입학소양시험은 지금처럼 학생을 ‘가려내는 시험’이 아니라, 대학 공부를 시작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본 역량을 확인하는 보조적 시험으로 역할이 바뀐다.

소양시험은 더 이상 대입 당락을 결정하는 핵심 변별 도구가 아니며, 학교 간 평가 환경이나 학점 이수 구조의 차이로 인해 생길 수 있는 기본 학업 수준의 격차를 국가가 최소한으로 조정해 주는 장치로 운영된다. 대학은 이 시험 결과를 반드시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할 때 참고할 수 있는 보완 자료로만 활용하고, 대입의 중심은 학생부에 기록된 누적 성취로 자연스럽게 이동하게 된다.

이 방식은 교원 설문에서 나타난 “수능 의존도는 줄여야 하지만, 갑자기 없애면 혼란이 크다”는 두 가지 요구를 동시에 고려한 전환 경로이다. 또한 프랑스가 바칼로레아의 변별 기능은 줄이되 졸업·자격 인증 기능은 일정 기간 유지한 개편 방식, 핀란드가 국가시험을 선발 도구가 아닌 최소 학업 기준 확인 시험으로 재정립한 방향과도 구조적으로 유사하다.

둘째, 이 단계에서는 학교 기반 졸업인증형 평가가 본격적으로 시범 운영된다.

이는 “학생이 고교 교육과정을 얼마나 잘 이수했는지를 국가가 직접 확인하는 내부 인증 장치”라고 이해할 수 있다. 전문가 조사에서도 가장 강조된 점은, 학교 평가가 신뢰롭게 운영되지 않으면 소양시험의 역할을 줄이거나 대입 구조를 바꾸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었다.

이 때문에 국가는 문제은행, 표준 루브릭, 성취기준 기반 평가 준거를 제공하고, 학교는 이를 내신 평가에 포함된 ‘인증 문항’ 형태로 단계적으로 적용하게 된다. 학생의 성취 정보는 국가 평가 시스템에 누적·관리되고, 일부는 졸업자격 인증에 시범적으로 반영된다. 즉, 소양시험이 외부에서 최소 기준을 확인하는 역할을 계속하는 동안, 졸업인증형 평가는 학교 내신 성취를 국가가 공식 인증하는 역할을 맡는 이원적 과도기 모델이 운영되는 것이다. 이는 핀란드·프랑스가 일정 기간 동안 국가시험과 학교 기반 평가를 함께 운영해 온 전환 과정과도 유사하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중요한 우려가 제기되었다. 만약 졸업인증형 평가를 시범 도입했을 때 ‘미인증 학생’이 생기면 그 책임과 후속 조치가 고스란히 학교에 돌아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이다. 이미 현재의 미이수 제도에서도 보듯, 보충 지도, 재이수 운영, 행정 처리, 민원 대응 등 대부분의 부담이 학교에 집중되면서 교사 업무가 과도하게 늘어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졸업인증형 평가를 본격적으로 도입할지 여부는 현행 미이수제도의 문제점이 충분히 개선된 다음에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이행기 단계에서는 졸업인증 결과를 바로 “합격·불합격” 기준으로 삼기보다,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하는 자료(시범 인증 자료) 수준으로만 제한해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미인증 학생이 발생하더라도 그 부담이 학교만 떠안지 않도록, 국가 차원의 재시험 기회 보장, 대안 이수 경로 마련(온라인·보충학습 등), 학교 밖 기관과 연계한 보충

지원 체계 운영 등 국가·지역·학교가 함께 책임을 나누는 안전장치를 반드시 구축해야 한다. 이러한 장치가 마련되어야만 졸업인증형 평가는 학교에 부담을 떠넘기는 제도가 아니라, 국가와 학교가 공동으로 책임을 지는 공적 인증 체계로 자리 잡을 수 있다.

셋째, AI 채점은 국가 인증이 꼭 필요한 핵심 영역에만 제한적으로 사용된다.

교원 설문과 전문가 협의에서 "AI 채점이 교사의 전문적 판단을 약화시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반복적으로 제기된 만큼, 본 연구는 AI 채점을 내신 전체에 적용하지 않고, 국가가 직접 책임을 져야 하는 영역에서만 보조적·검증용 도구로 활용하는 방향을 제안한다.

핀란드·프랑스 등 해외에서도 AI 채점은 교사를 대체하는 기술이 아니라, 채점의 일관성과 공정성을 높여주는 '보조 장치'로만 사용되고 있다. 즉, AI는 학생의 답안을 대신 판단하는 기술이 아니라, 교사의 전문성을 지키고 강화하는 쪽으로 설계되는 것이 원칙이다.

넷째, 이 과도기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는 학교–국가 간 연계 평가체제를 갖추는 것이다.

학교 중심 평가체제로 옮겨간다는 것은 단순히 "평가 권한이 학교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국가와 학교가 평가의 책임을 함께 나누는 이중 안전 장치를 만드는 과정이다.

학교는 국가가 제공하는 공통 문항과 표준 루브릭을 활용해 졸업인증형 평가를 실시하고, 국가는 이를 '메타평가자(상위 검증자)'로서 점검·보정한다. 국가 제공 문항은 평가 신뢰도 확보와 분쟁 최소화를 고려해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보안·공정성·학교 자율성 등 운영 원칙은 별도로 마련한다.

이러한 구조는 "학교 평가 결과를 국가가 함께 검증해 주지 않으면 대입 구조 전환은 불안정해질 수 있다"는 교원 설문·전문가 의견을 제도적으로 반영한 것이다. 또한 이는 프랑스·핀란드·독일에서 운영 중인 국가-학교 이중 검증 체계(메타평가 체제)와도 같은 방향이며, 결과적으로 학교 중심·국가 인증형 평가가 함께 움직이는 이중 안전 구조를 만드는 과정이다.

종합하면, 2034~2039년의 이행기는 대학입학소양시험의 역할이 '기초학업역량 확인용 보조시험'으로 축소되고, 학교 기반 평가의 신뢰도를 국가가 제도적으로 뒷받침하

며, 국가-학교가 함께 책임지는 새로운 평가체제가 자리를 잡는 시기이다. 이 단계는 결국 2040년 이후 도입될 '학교 기반·누적 성취 중심 국가 인증형 대입체제'로 넘어가기 위한 필수적인 준비 단계이며, 미래형 대입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핵심 전환 과정이라 할 수 있다.

3) 2040 이후: 내신 기반 졸업자격시험 통합형 체제로의 전환

본 단계는 대학입학소양시험(현행 수능)이 지금과 같은 선다형 중심의 단일 외부시험 체제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시기를 전제로 한다. 즉, 그동안 수능이 맡아왔던 '국가 인증 역할'을 별도의 시험으로 유지하지 않고, 고교 교육과정 속 누적 성취 평가(내신·수행평가 등)에 자연스럽게 흡수·통합하는 구조로 전환되는 단계이다.

이 시점에서는 외부시험이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학교가 교육과정에 맞춰 실시하는 서·논술형 문제은행식 평가 요소가 내신 평가체계 안에 내재화된다. 결과적으로 대입 평가의 중심축은 단일 외부시험이 아니라, 고교 교육과정 속에서 쌓인 학생의 누적 성취와 이를 국가가 인증하는 체제로 완전히 이동하게 된다.

이러한 전환 방식은 프랑스의 고교 졸업·대학입학 자격시험(Baccalauréat), 핀란드의 고등학교 졸업시험(Matriculation Examination), 독일의 고교 졸업·대학입학 자격시험(Abitur), 그리고 일본·싱가포르·미국의 학교 기반 성취평가 체제가 공통적으로 보여주는 흐름과도 같다. 이들 국가는 모두 외부시험의 비중을 점차 줄이고, 학교에서 이루어진 학습과 평가를 중심으로 하되 국가가 이를 공식적으로 인증해 주는 '학교 중심 국가 인증 체제'를 발전시켜 왔다. 따라서 본 개편안도 외부시험 의존도에서 벗어나 학교 교육과정-학생 성취-국가 인증이 하나로 묶여 작동하는 체제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국제적 흐름과 동일한 철학적 기반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외부 단일시험의 비중이 사라지고 학교 교육과정에서의 누적 성취가 대입 평가의 중심축으로 전환되는 단계에서는, 필연적으로 학교 기반 평가를 국가 차원에서 어떻게 공식적으로 인증할 것인지에 대한 제도적 과제가 제기된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대한 제도적 해답이 바로 다음 단계에서 논의되는 졸업인증제의 정착이다.

첫째, 졸업인증제는 고교 교육과정 성취를 국가가 공식 인증하는 학교 기반 국가인증 체제로 정착된다.

졸업인증제는 고교 교육과정에서의 학습 성취를 국가가 공식적으로 인증하는 구조로 자리 잡는다. 학생은 정규 교육과정에서 누적된 성취 결과를 근거로 졸업자격을 취득하며, 교사는 국가 문제은행·표준 루브릭·성취기준 기반 평가 준거에 따라 성취 수준을 평가한다. 이 구조는 프랑스 바칼로레아 개편에서 학교 수행평가 비중을 확대해 국가 인증과 결합한 방식, 핀란드의 학교 성취 기록과 고등학교 졸업시험(Matriculation Examination)의 연동 구조, 독일의 주(州) 단위 고교 졸업·대학입학 자격시험(Abitur)에서 학교·주정부 평가가 결합되는 구조와 동일한 원리를 따른다. 전문가 협의에서도 "교사의 전문적 판단을 국가가 제도적으로 신뢰하지 않는 한 미래형 대입제도는 형식적 개편에 그칠 것"이라는 의견이 반복 제기된 바, 본 단계는 교사를 국가 인증 평가의 핵심 주체로 공식 위치시키는 구조라는 점에서 국제적 흐름과도 정합성을 가진다.

둘째, 졸업자격 인증은 별도의 외부 시험이 아니라 정규 내신 평가 과정 속에 완전히 내재화된 구조로 운영된다.

학생은 새로운 졸업시험을 별도로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정규 수업–평가–피드백–성취 누적의 과정 자체가 곧 국가 인증 과정이 되는 구조에서 졸업자격을 취득한다. 이는 본 연구에서 분석한 핀란드(학교 성취 평가와 국가 인증시험의 결합 구조), 프랑스·독일(학교 기반 성취평가와 국가 인증의 병행 체제), 일본·싱가포르(학교 성취기록을 대학 선발의 핵심 근거로 활용하는 구조)에서 확인되는 국제적 흐름과 구조적으로 유사하다. 이 구조는 시험 부담의 특정 시점 집중을 해소하고, 학습–평가–성취–인증이 단절되지 않는 누적 성장 기반 평가 체제를 가능하게 하여, 미래형 대입제도의 기본 철학과도 부합한다.

셋째, 국가는 졸업인증제의 공신력을 보완하기 위해 국가 문제은행 기반의 메타인증 체계를 병행 운영한다.

국가는 핵심 성취기준에 기반한 공통 문항, 표준 루브릭, 평가 기준을 제공하고, 학교는 이를 활용해 평가를 수행한다. 국가는 학교별 성취 분포 분석, 평가 편차 모니터링, 검증·보정 절차 등을 수행하는 메타평가자(meta-evaluator)로 기능한다. 이 구조는 프랑스·핀란드의 국가 차원 메타평가 시스템, 독일 주정부의 Abitur 검증 구조, 싱가포르의 국가 단위 표준화 관리 체계에서 공통적으로 확인되며, 학교 평가의 자율성과 국가

인증의 공공성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한 핵심 장치이다. 또한 AI 1차 채점-전문가 검증-국가 모니터링으로 이어지는 3단계 검증 구조는, 전문가 조사에서 제기된 "학교 평가 결과의 신뢰성은 국가 검증 구조 없이는 확보되기 어렵다"는 우려를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장치에 해당한다. 다만 이 AI 시스템은 국가 인증이 필요한 일부 핵심 영역에 한해 제한적으로 운영된다.

넷째, 이 단계에서 대학은 단일 시험이 아닌 학교 기반 성취 중심 대입 구조를 종합적으로 운영한다.

대학은 ① 내신 절대평가 성취 수준, ② 졸업자격시험(국가 인증 성취) 결과, ③ 교과 기반 성장 이력(과정·변화·누적 성취)을 종합하여 학생을 선발한다. 이는 핀란드·독일·프랑스가 학교 성취 및 국가 졸업시험을 대학 선발의 핵심 자료로 활용하는 구조, 싱가포르·일본이 학교 추천과 포트폴리오 기반 선발을 확대해 온 흐름, 미국이 GPA·과목 이수 이력·에세이 중심의 정성 평가 구조를 강화해 온 방향과도 전반적으로 일치한다. 즉, 고교 성취 중심의 대학 선발 구조가 국제적 공통 경향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반영한 설계이다.

이로써 기존의 '수능-내신 이원 구조'는 완전히 해체되고, 내신 평가 속에 국가 인증 요소가 통합된 '단일 구조의 학교 중심 대입체제'가 완성된다. 이 체제는 평가의 공정성, 교육과정 중심성, 학생 성장의 연속성을 동시에 확보하며, 고교 교육-국가 인증-대학 선발이 하나의 연계된 평가 생태계로 작동하는 구조적 완결 단계라 할 수 있다.

〈표 Ⅵ-5〉 미래형 대입평가체제 전환 단계 및 과도기 운영 개요

구분	시기	주요 내용	평가체제의 특징	정책적 목표
1단계 성장형 체제 준비기	2028~2032 학년도	• '33 대비 대학입학소양시험 전환 준비 • 통합형 수능 안정 운영 및 절대평가 기반 구축 • 서술형·논술형 평가 시범 확대 • 고교 교육과정 중심 평가로의 기초 전환	• 지식 암기 중심 → 학업역량·탐구력 중심 구조 전환 시작 • 평가 언어·성취기준 기반의 절대평가 기반 마련 • 학교가 성장 기반 평가체제로 적응하는 초기 단계	• 학교 기반 평가체제로의 전환 준비 • 고교 교육과정 중심 평가 구조 전환 준비

구분	시기	주요 내용	평가체제의 특징	정책적 목표
과도기 성장형 본격화·과도기	2033~2039 학년도	• 대학입학소양시험 시행: 변별시험→기초학업역량 자격검증형으로 기능 축소 • 선택 소양시험은 탐구·논증 중심의 성장형 평가로 운영 (대학 자율 논술로 대체 가능) • 학교 기반 졸업인증형 평가 시범 운영(문제은행·표준 루브릭 활용) • 국가–학교 연계 평가체제 본격 가동 • 소양시험 성취 결과는 보조적 참고자료로 활용(3년 유효제 도입)	• 외부 단일시험 구조 → 학교 중심 누적평가 구조로 이행 • 대학입학소양시험의 영향력은 보조자료 수준으로 축소 • 국가–학교 공동 책임형 평가체제 구축 • AI 채점은 국가 인증 영역에서만 검증용으로 제한 운영	• 외부시험 의존 완화 및 학교 중심 평가체제로의 단계적 전환 • 평가 신뢰도 확보 및 검증 체계 정착 • 2040년 이후 단일 구조 이행을 위한 제도적 교량 단계
2단계 연계·선장형 완성기	2040학년도 이후	• 대학입학소양시험은 보조적 참고자료로 전면 재위치, 고교 교육과정 기반 서·논술형 문제은행식 체계로 구조 개편됨 • 내신 절대평가 속 졸업인증 문항 내재화 • 국가 문제은행식 졸업자격시험 병행(국가 인증·보증 기능) • 학교–국가 연계 인증체계 상시 운영 및 AI 기반 국가 검증·보정 체계 도입	• 수능–내신 이원구조 → '내신 속 국가인증' 단일체제 전환 • 학교 평가결과의 국가 인증 및 일관성 확보 • 국가 메타평가·표준 루브릭 중심의 품질관리 상시 운영	• 고교–대학–국가 연계형 선순환 평가 구조 확립 • 교육과정 중심 대입체제 정착 • 외부시험 의존 폐지 → 학교 기반 성장 평가 중심 국가 인증체제 확립

라. 대입전형 구조 개편

대입전형 구조 개편의 핵심은 수시·정시 이원체제를 단일 통합형 체제로 전환하고, 고교 교육과정의 운영과 정합성을 갖춘 예측 가능한 일정·절차 기반 전형 구조를 확립하는 데 있다. 이는 단순한 제도 단순화 차원을 넘어, 고교 교육과 대학 입시 간 관계를

‘선발-경쟁 구조’에서 ‘연계-성장 구조’로 전환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해외 질적 비교 분석 결과에 따르면, 고교-대학 간 선순환 구조는 단일 정책 요소가 아니라 ① 진학 경로의 다양성, ② 고교-대학 간 연계 프로그램, ③ 학습자 선택권 보장, ④ 정보 투명성과 평가 공정성의 결합 속에서 안정적으로 구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일본, 싱가포르, 미국, 독일, 핀란드, 프랑스 6개국의 입시 및 고교-대학 연계 구조를 비교 분석한 결과로, 본 연구가 제안하는 통합형 대입전형 체제의 국제적 정책 타당성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된다.

1) 수시·정시 통합 및 전형 시기 조정

현행 전형 일정이 고3 학사 운영 전반을 입시에 종속시키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본 연구는 과도기(2단계) 시점부터 수시·정시를 단일 통합형 전형 체제로 전환하고, 대입 전형 시기를 고3 2학기 성취평가가 종료된 이후인 11월 중순~12월 초 사이에 개시하는 구조로 재설계할 것을 제안한다. 이는 2단계에서 대학입학소양시험의 기능이 변별 중심이 아닌 기초학업역량 인증 중심의 보조적 요소로 축소되는 점을 고려할 때, 단일 시험을 기준으로 한 정시 중심 분리 운영은 유지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이러한 시기 조정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고3 2학기 교육과정을 ‘진로·진학 연계 교육과정’으로 구조 개편하여, 학생이 전공 탐색·진학 준비·프로젝트 기반 학습 등에 집중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방안을 함께 제안한다. 이러한 조정은 고3 2학기 교육과정이 사실상 입시 준비로 대체되면서 본래의 교육적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교원 설문에서도 고3 2학기가 “수업의 실질적 공백기”, “입시 일정으로 인해 교육과정 운영이 어려운 시기”라는 지적이 반복적으로 제기되었으며, 교육과정-평가-전형의 시간 구조를 재배치하지 않는 한 학교 교육과정 중심의 대입제도는 실질적으로 작동하기 어렵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또한 해외사례 분석에서도, 핀란드·프랑스·독일은 모두 마지막 학년의 성취 결과(졸업시험·내신·Abitur 등)를 대학 선발의 핵심 자료로 활용하는 구조를 갖고 있으며, 고교 교육과정에서의 누적 성취가 대학 입학 자격 또는 선발의 주요 근거로 작동한다는 공통점을 보인다. 이러한 구조는 대입 선발이 단일 시험이 아닌 고교 교육과정 기반의 누적 성취에 정합적으로 연계되는 체제라는 점에서 본 연구가 제시하는 미래형 대입제도의 방향성과도 일치한다.

2) 통합형 대입전형의 일정 조정과 절차 정비

통합 전형 체제가 안정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전형 운영 시기가 고교 교육과정 운영과 명확하게 분리·정렬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통합 전형을 가정할 경우, 전체 전형 소요 기간을 약 12~14주 내외로 설정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점을 전제로, 고3 2학기 성취평가가 종료되는 11월 중순~12월 초를 통합 전형 개시 시점으로 설정하고 그 이후 표준화된 운영 절차를 적용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통합 전형 기준의 표준 운영 구조는 다음과 같이 설정할 수 있다.

〈표 Ⅵ-6〉 통합형 대입전형 운영 시 예상 소요 기간(예시)

구분	주요 내용	소요 기간
① 원서접수 및 서류 제출·정리	지원서 접수, 서류 마감, 자료 정리	약 2~3주
② 전형 운영(평가)	학종·서류평가·면접 등 심사 단계	약 6~8주
③ 선발 및 심의	모집단위별 평가 결과 정리, 위원회 심의	약 1주
④ 합격자 발표 및 등록·충원	최초·추가 합격자 발표, 등록 절차	약 2주
⑤ 추가모집	미충원 인원에 대한 추가 선발	약 1주
총 소요 기간		약 13주 내외
운영 시기 전체	고3 2학기 성취평가 종료 이후, 12월 이후 시작	

이 일정에 맞추어 전형은 ① 원서접수·서류 정리(2~3주) → ② 서류·면접 등 전형 심사(6~8주) → ③ 선발·심의(1주) → ④ 합격자 발표·등록·충원(약 2주) → ⑤ 추가모집(약 1주)으로 이어지며, 전체 절차는 2월 말 최종 종료를 기준으로 설계된다.

이때 중요한 전제는 대학입학소양시험(기초학업역량 인증 시험)의 결과가 원서접수 전에 적시에 제공되는 것이다. 각 학교가 학생·학부모와 상담을 진행하려면 소양시험 성적은 원서접수 최소 2주 전에는 제공되어야 하며, 이를 역산하면 시험은 결과 발표 약 3주 전, 즉 현재보다 약 한 달 빠른 10월 중순 전후에 시행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 이 구조가 정착되면, 고교 교육과정 정상화 → 성취평가 확정 → 졸업인증 → 소양시험 → 통합 전형 → 대학 진학으로 이어지는 단일하고 명확한 시간 질서가 만들어진다.

전형 절차의 단순화와 일정 재구조화는 단순히 행정 편의를 위한 조치가 아니라, 고교 수업-내신 평가-졸업 인증-대입 전형-대학 교육으로 이어지는 학업 경로를 하나의 흐름으로 다시 정렬하는 과정이다. 특히 소양시험의 기능이 기존 수능처럼 변별 중심 도구가 아니라 기초역량을 확인하는 보조 자료로 재편되면, 수시·정시의 구분을 유지할 이유가 약해지고 통합형 전형 운영은 제도적으로도 자연스러운 결과가 된다. 더 나아가 졸업자격시험이 학교 내 평가와 결합해 국가 인증 기능을 갖게 되면, 학기 내 성취평가 → 졸업인증 → 소양시험(10월 중순) → 통합 전형(11~12월) → 대학 진학이라는 하나의 연속적 구조가 완성된다.

결국 이 전환은 단순히 전형 시기를 바꾸는 문제가 아니라, 고교 교육과정의 본래 기능을 회복하고 고교-대학 간 연결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입시 전체의 시간 구조와 평가 체제를 재설계하는 전략적 개편이라 할 수 있다.

3) 지역균형 및 기회균형과의 정합적 운영

전형 구조 개편은 단지 전형 시기와 절차를 조정하는 기술적 조치에 그치지 않으며, 학생부 중심 평가 강화와 졸업인증 기반 성취 평가 도입이라는 큰 구조 변화 속에서, 지역균형 및 기회균형 선발의 개념과 운영 방식 역시 함께 재정립될 필요가 있다. 특히 수시·정시 통합과 통합형 전형 체제의 도입은 지역 간 교육 격차와 사회적 배경에 따른 진학 기회의 불평등 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 제도적 조건을 제공하지만, 이때 지역균형과 기회균형의 개념이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 단순 확대될 경우, 정책 철학의 혼선과 새로운 불균형이 발생할 가능성 또한 함께 존재한다.

본 연구의 해외사례 분석에서도 진학 경로의 다양성 확보, 고교-대학 간 연계 프로그램의 제도화, 교육 선택권 보장이 고교-대학 간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는 핵심 조건으로 반복 확인된 바 있으며, 이러한 조건을 전형 제도 안에서 어떻게 구조화할 것인가가 지역균형·기회균형 설계의 핵심 과제로 제기된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이하에서는 기회균형과 지역균형 전형을 각각의 정책 목적에 맞게 재구조화할 필요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기회균형 선발을 '자격 다변화'에서 '저소득 중심 표적화'로 재구조화할 필요가 있다.

기회균형 선발의 확대는 그 취지 자체로는 사회적 포용성과 교육 기회 형평성을 강화하는 방향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기회균형 전형은 저소득층, 국가유공자, 농어촌, 특성화고, 다문화 등 매우 이질적인 자격 유형이 하나의 범주 안에 포괄된 구조를 갖고 있어, 단순한 정원 확대만으로는 제도의 효과가 분산될 우려가 크다.

이에 따라 기회균형 선발은 중장기적으로 '저소득 중심형 기회균형'으로 재편하는 것이 타당하며, 다문화나 농어촌 자격 역시 소득 기준을 자격 기준과 병행 적용하는 방식으로 운영 기준을 정교화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방향은 교육 취약계층의 진학 기회를 체계적으로 확대해 온 프랑스의 성공을 이끄는 고리 프로그램(Cordées de la Réussite) 사례와도 정합성을 갖는다. 이 제도는 고교-대학 간 연계 프로그램을 통해 저소득층 학생의 진학 경로를 실질적으로 확장하고, 교육 선택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함으로써 계층 간 진학 격차 완화에 일정한 성과를 보여 왔다.

반면, 농어촌 전형과 특성화고 전형은 기회균형 확대 논의의 직접적인 대상에서 분리하여, 각각의 정책 목적(정주 여건, 직업교육의 사회적 가치)을 중심으로 별도 관리하는 접근이 바람직하다.

둘째, 지역균형 선발의 개념은 '전국 쿼터'가 아닌 '수도권 대학 한정 전형'으로 명확히 정리할 필요가 있다.

기회균형과 더불어 논의되는 '지역균형 전형' 역시 현재 대입 제도에서 사용되는 의미를 정확히 재정의할 필요가 있다. 지역균형은 전국 대학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지역 할당 제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수도권 대학에만 일정 비율 이상 의무 적용되는 전형이라는 점에서 정책적 성격이 분명하다.

이러한 구조를 고려할 때, 지역균형 전형은 지방 인재의 수도권 진입 기회를 확대하는 기능을 갖는 반면, 이를 '지방 살리기 정책'과 자동으로 동일시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지역균형이 무분별하게 확대될 경우, 지역의 우수 인재가 수도권으로 더욱 집중 유입되는 역유출 효과가 발생할 가능성 역시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셋째, 농어촌 전형의 방향은 '수도권 유입 통로'에서 '지역인재 전형'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지역균형 전형의 구조적 한계를 보완하는 대안으로, 농어촌 전형의 정책적 위

상과 활용 방향을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 즉, 농어촌 전형을 수도권 대학 진입을 위한 별도 통로로 확대하기보다는, 지방대학의 '지역인재 전형'으로 전환·흡수하여 선발 규모를 확대하는 방향이 지역 정주와 지방대학의 역할 강화를 동시에 도모할 수 있는 보다 정합적인 경로라 할 수 있다. 이는 지역인재의 지역 내 순환 구조를 형성하고, 수도권 집중 완화라는 중장기 정책 목표와도 보다 직접적으로 연결된다.

이러한 지역인재 전형의 재구조화는 단순히 선발 방식의 조정을 넘어, 지역 거점 대학을 지역 발전의 핵심 플랫폼으로 육성하는 정책 방향과도 결합될 필요가 있다. 즉, 지역 우수 인재가 수도권으로 과도하게 유출되는 현 구조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지역 거점국립대의 교육·연구 역량을 강화하고, 고교-대학-지역 기업 간 연계 프로그램을 제도화하여 "지역에서 배우고, 지역에서 성장하며, 지역에 정주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

이를 위해 지방대학 중심의 지역인재 전형 확대와 함께, 지역 거점대학의 인재 양성 기능을 체계적으로 강화하는 정책(예: '서울대 10개 만들기'와 같은 거점 국립대 육성 전략)을 병행하면, 지역 우수 인재의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대학 서열화 문제 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다. 또한 고교 단계에서부터 대학과 연계한 지역 기반 인재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학생이 지역에서의 진학-취업-정주 경로를 자연스럽게 설계할 수 있는 지역 교육 생태계를 마련할 수 있다.

넷째, 지역균형·기회균형 확대에 따른 '편법 이동' 방지 장치는 반드시 제도화되어야 한다.

지역균형과 기회균형 전형이 대입에서 사실상의 지역·계층 쿼터제로 인식될 경우, 수도권 학생과 학부모가 지방 전학, 주소 이전 등의 편법적 이동을 시도할 가능성 또한 배제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러한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중·고교 전 과정 이수 요건, 특정 학년 이후 이주 제한, 소득·거주 요건의 중복 충족 기준 등 엄격한 자격 관리 장치가 함께 제도화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제도의 실효성과 사회적 수용성을 동시에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지역균형 및 기회균형 선발은 단순한 정원 확대의 대상이 아니라, 기회균형은 '저소득 중심'으로 표적화하고, 농어촌·특성화고는 각자의 정책 목적에 따라 분리 운영하며, 지역균형은 '수도권 대학 한정 전형'이라는 성격을 명확히 한

상태에서 신중하게 조정하고, 지역인재 전형은 지방대학 중심으로 실질적으로 확대하며, 편법 이동을 차단하는 자격 관리 장치를 병행 강화하는 방향으로 재설계해야 한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지역균형 및 기회균형 전형을 통합형 전형 구조 안에 정합적으로 재배치할 경우, 대입제도는 형평성·포용성·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세 가지 정책 목표를 동시에 조화시키는 다층적 선발 체계로 전환될 수 있으며, 나아가 고교-대학-지역사회가 상호 연계된 교육 생태계 구축이라는 중장기 정책 비전과도 보다 높은 수준의 정합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4) 학생부 기반 전형의 예외 구조: 학교 밖 청소년·검정고시·졸업 후 재도전 집단을 위한 보완 전형 경로 설계

통합형 대입전형 체제가 학생부 중심 구조로 재편될 경우, 학교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이수하고 성취 기록을 누적해 온 재학생에게는 제도적 정합성이 강화되는 반면, 학교 밖 청소년, 검정고시 합격자, 고교 졸업 이후 대학 진학을 희망하는 N수생과 같은 비학생부 기반 지원자에게는 구조적 불리성이 발생할 가능성 또한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현재 제도에서도 검정고시 합격자의 경우 제한적으로 별도 전형을 통해 대학 진학이 가능하나, N수생의 경우 만학도 전형 등을 제외하면 재학생과 동등한 조건에서 지원할 수 있는 실질적 독립 전형 경로가 거의 부재한 실정이다. 통합형 전형 체제가 학생부와 졸업자격시험을 중심축으로 재편될수록, 이러한 집단은 제도적으로 더욱 주변화될 위험이 있다.

이에 따라 미래형 대입 구조에서는 학생부 기반 통합전형을 기본 축으로 유지하되, 학생부 접근이 구조적으로 어려운 집단을 위한 '보완형 표준 전형 경로(가칭)'를 병행 설계할 필요가 있다. 이 보완 전형은 학생부를 대체하는 또 다른 경쟁 중심 전형이 아니라, 졸업자격시험, 대학입학소양시험, 최소한의 대학 자율형 평가요소만을 결합한 제한적·표준화된 진입 경로로 설계되어야 한다. 이때 핵심 원칙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전형은 재학생 대상 통합형 전형과 동일한 선발 경쟁 구조로 설계되기보다, '학습 이력의 공백을 보정하는 최소 진입 경로'로 기능해야 한다.

둘째, 대학은 해당 전형을 통해 고교 교육과정 외부 경로를 통해 학습 역량을 축적한 지원자를 제한적으로 선발할 수 있도록 하되, 과도한 대학별 고사 부활이나 논술·구술

중심 선발로 변질되지 않도록 전형 요소의 종류와 수를 엄격히 제한할 필요가 있다.

셋째, 이 전형은 재학생 중심 통합전형을 약화시키는 예외 통로가 아니라, 비학생부 기반 집단의 고등교육 접근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포용형 안전 통로'로서의 기능에 한정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보완 전형 경로의 병행 설계는 통합형 전형 체제의 공정성과 단순성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학교 밖 청소년과 졸업 후 재도전 집단에게 '형식적 기회 제공'이 아닌 '실질적 진입 경로'를 제도적으로 보장한다는 점에서, 미래형 대입제도의 포용성과 지속 가능성을 함께 강화하는 조건이 될 수 있다.

〈표 Ⅵ-7〉 대입전형 구조 개편 방안

구분	개선 내용	주요 근거·필요성	기대 효과
수시·정시 통합 및 전형 시기 조정	- 수시·정시 이원체제 → 단일 통합형 전형 - 전형 시기를 고3 2학기 성취평가 종료 이후(11~12월)로 조정 - 고3 2학기를 '진로·진학 연계 교육과정'으로 구조 개편	- 교원 설문에서 이중 준비 부담과 학사 파행 문제 반복 제기 - 해외사례 분석에서 고교 이수 종료 이후 선발 구조가 고교-대학 선순환의 핵심 조건으로 확인됨	고교 학사 운영 정상화, 학생 부담 완화, 고교 교육과 대입의 시간 구조 정합성 확보
통합형 전형 운영 일정(약 13주) 도입	- 원서접수-평가-선발-등록-추가모집의 약 13주 표준 운영 기간 제도화 - 모든 전형을 학기 종료 이후에 운영하는 구조 정착	- 해외사례 분석에서 입시 절차의 표준화와 정보 정규화가 정보 비대칭 완화 및 사교육 의존 감소에 기여하는 것으로 확인됨 - 현행 학기 중 전형 구조는 교육과정 운영을 왜곡하는 핵심 요인으로 지적됨	전형 일정의 예측 가능성 확보, 행정 부담 완화, 사교육 의존 구조 완화 고교 교육과정-전형 절차의 투명성 제고
지역균형 및 기회균형과의 정합적 운영	- 기회균형 전형: 저소득 중심 표적화 확대, 다문화·농어촌도 소득 기준 병행 적용 - 농어촌·특성화고 전형은 기회균형에서 분리하여 각 목적(정주·직업교육) 중심 별도 운영 - 지역균형 전형은 수도권 대학에 한정하여 유지, 지방대학은 지역인재 전형 중심 운영	- 기존 기회균형은 자격군이 과도하게 혼재되어 정책 효과 분산 - 지역균형은 실질적으로 수도권 대학만 의무 적용되어 지방 인재의 수도권 집중 유발 가능성 존재 - 해외사례 분석에서 진학 경로 다양성·연계 프로그램·교육 선택권 보장이 선순환의 핵심 조건으로 확인됨	저소득층 중심의 실질적 기회균형 실현, 지방 인재의 지역 내 순환 구조 강화, 수도권 집중 완화, 사회적 형평성과 포용성 제고, 지역-고교-대학 연계형 인재 양성 구조 정착

구분	개선 내용	주요 근거·필요성	기대 효과
	- 지역인재 전형 확대: 지방대학 중심 '지역인재 선발' 강화 - 지역 기반 인재양성: 지역 거점대-고교-기업 연계 프로그램 구축, 지역 정주·인재 순환 강화	- 프랑스 Cordées de la Réussite 사례: 교육 취약계층의 진학 기회 확대와 고교-대학 연계 효과 확인	
비학생부 기반 지원자를 위한 보완 전형 경로 설계	- 학교 밖 청소년·검정고시·N수생을 위한 표준화된 보완 전형 경로 병행 운영 - 졸업자격시험 + 대학입학소양시험 + 최소한의 대학 자율형 평가요소 결합 - 대학별 고사·논술·구술 중심 선발로의 변질 방지를 위해 전형 요소의 수와 범위 제한	- 통합형 전형이 학생부 중심으로 재편될수록 비학생부 기반 집단의 구조적 불리 심화 가능성 - 검정고시는 제한적 경로 존재하나, N수생은 실질적 독립 전형 경로 거의 부재	학교 밖 청소년·졸업 후 재도전 집단의 고등교육 접근권 보장, 형식적 기회가 아닌 실질적 진입 경로 확보, 미래형 대입제도의 포용성과 지속 가능성 강화

마. 대학 평가체계 고도화 및 고교-대학 연계 원칙 정립

대학의 평가체계는 고교 교육과정 중심으로 전환되는 미래형 대입 구조 변화에 맞추어, 학생부-졸업자격시험(국가 인증 정보)-대학 자율형 평가 요소가 상호 중복되지 않고 유기적으로 결합되는 다층적·보완적 체계로 고도화될 필요가 있다. 이는 고교 교육과정 성취가 대학 선발 과정에서 정당하게 반영되도록 하면서도, 대학이 학문적 전문성과 교육의 질을 스스로 구현할 수 있는 자율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핵심 절차이다.

해외 분석 결과 또한 고교-대학 간 선순환 구조는 단일 평가요소에 의존하지 않고, 누적성취 기반 자료·국가 수준 인증 정보·대학 자율적 심층평가가 상호 보완적으로 작동할 때 안정적으로 형성된다는 점을 공통적으로 보여주었다. 핀란드·독일·프랑스는 학교 성취와 국가 인증시험을 결합한 다층 구조를 운영하고 있으며, 일본·싱가포르 역시 고교 성취 자료를 대학 평가의 핵심 근거로 활용하면서 대학 자율성을 병행하는 모델을 구축하고 있다.

이에 본 절의 개편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생부 활용 중심 선발체계를 정교화·심층화해야 한다.

학생부 중심 전형이 대입의 기본 틀로 자리 잡음에 따라, 대학은 학생부를 단순한 정량 자료가 아니라 학업 경험의 맥락과 성장의 흐름을 해석하는 핵심 자료로 활용해야 한다. 이를 위해 대학은 학생부에 축적된 정보 예를 들어, 교과 성취 수준 및 성취 변화 흐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을 통해 드러나는 탐구 과정과 학습 맥락, 진로 기반 과목 선택과 심화 학습 이력, 협력·참여·문제해결 등 과정 중심 평가 기록, 학생 개별의 성장 과정과 학습동기 변화 양상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정교한 평가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대학은 이러한 정보를 전공 적합성-학업 지속 가능성-탐구 역량-성장 경향의 네 축에서 심층적으로 해석함으로써, 고교 교육과정의 성취가 대학 선발 과정에서 왜곡 없이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 이는 프랑스의 고교 졸업·대학입학 자격시험(Baccalauréat), 핀란드의 고등학교 졸업시험(Matriculation Examination), 독일의 고교 졸업·대학입학 자격시험(Abitur), 일본의 고교 성취 기반 종합평가, 싱가포르의 A-Level 기반 선발 체제와도 구조적으로 정합적인 방향이라 할 수 있다. 해당 국가들은 고교 성취 자료를 단순 점수로 처리하지 않고, 학습 경로와 학습 맥락을 종합적으로 해석함으로써 고교 교육과정을 입시로부터 보호하면서도 성취에 대한 정당한 평가를 수행하고 있다.

나아가, 미래형 학생부 활용 체계는 대학 진학을 전제로 한 평가에만 머무르지 않고, 전문대·폴리텍 등 고등직업교육기관, 직업계 고졸 취업 경로, 성인 학습자 재진학 등 다양한 학습 경로에서도 일관되게 해석·활용될 수 있는 방향으로 확장될 필요가 있다. 해외 주요국은 대학 중심 선발체계와 병행하여, 고교 성취 기록을 기반으로 한 다경로 이동성(전문대 진학, 직업교육-학사학위 전환, 성인 학습자 재입학 등)을 제도적으로 보장함으로써 학업 경로의 유연성과 재도전 가능성을 높여 왔다.

우리나라 역시 학생부가 대학 입학만을 위한 '단선적 선발 자료'가 아니라, 고교 이후 다양한 진로·진학 선택을 지원하는 종합 학습이력 자료로 기능하도록 체계를 확장해야 한다. 이를 통해 학생의 학업 성취와 성장 경험이 4년제 대학뿐 아니라 전문대·고등직업교육·평생교육·성인재진학 영역에서도 연속적으로 인정되고, 학습자의 전환·복귀·재도전을 지원하는 다경로 학습 생태계가 구축될 수 있다.

둘째, 졸업자격시험과 연계한 학업준비도 검증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2040년 이후 전면 시행되는 졸업자격시험은 서·논술형 문제은행 방식의 국가 표준

평가로 운영되며, 이는 대입 당락을 가르는 변별 시험이 아니라 기초학업역량·전공기초 역량을 확인하는 국가 인증 정보로 활용된다. 대학은 이 시험의 구조나 문항 체계를 재설계하는 주체가 아니라, 이미 국가가 제공하는 표준화된 성취 정보를 학생부 정보와 결합하여 종합 해석하는 주체로 기능하게 된다. 즉, 학생부가 제공하는 '과정·성장·탐구'에 관한 정성 기반 정보와 졸업자격시험이 제공하는 '기초학업역량·전공기초 역량'에 관한 정량적·표준화 지표를 함께 분석함으로써, ① 교과 성취의 신뢰도를 보완하고, ② 전공 기초 역량의 최소 수준을 점검하며, ③ 전체적인 학업 준비도를 객관적으로 진단할 수 있다.

이는 독일, 핀란드, 프랑스 등에서 확인되는 국가 수준 학업 인증 시험과 고교 성취 기반 자료의 결합 구조와 유사한 방향이며, 학교 간 평가 편차를 완화하는 동시에 대학의 학업 준비도 판단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이는 본 연구 해외사례 분석에서 확인된 정보 투명성과 평가 신뢰성 강화의 중요성과도 직접적으로 연결된다.

셋째, 대학 자율형 평가요소는 고교 성취평가를 '보완하는' 제한적 기능으로 재구조화되어야 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구조적으로 관리될 필요가 있다.

미래형 대입체계에서는 학생부와 졸업자격시험이 학업 성취의 기본 근거자료가 되고, 대학입학소양시험이 기초학업역량을 인증하는 국가 표준 자료로 활용된다. 이러한 구조에서는 대학 자체 평가는 선발의 중심이 아니라, 기본 자료만으로 확인이 어려운 고차적·전공기반 역량을 확인하는 보완 장치로서 제한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타당하다.

기존 대입에서는 논술전형 폐지 이후에도 제시문 기반 면접이나 심층면접이 우회적으로 확대되는 등, 전형요소의 "반영 비율"만 줄이는 방식으로는 변별 기능의 과도한 확대를 통제하기 어려웠다. 이러한 경험을 고려할 때, 향후에는 전형요소의 종류와 개수 자체를 구조적으로 제한하는 방식이 보다 효과적인 관리 원칙이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통합형 전형체제에서는 학생부를 공통 필수요소로 하되, 대학이 선택적으로 결합할 수 있는 자율형 평가요소는 보완적 성격에 한정해 소수로 관리해야 한다. 이러한 제한은 우회적 변별시험을 방지하고, 교육과정 기반 평가 원칙을 유지하며, 학생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이다.

또한 대학 자율형 평가는 고난도 문제풀이형 시험이나 교육과정 외 영역을 활용한 논

술형 평가가 아니라, 고교 교육과정과 연계된 맥락 중심 평가 방식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다. 심층 면접, 프로젝트·포트폴리오 검토, 탐구 과정 평가 등은 이러한 원칙에 부합하는 요소로서, 학생의 전공 기반 사고력과 탐구 역량을 확인하는 데 보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요소들은 어디까지나 학생부·졸업자격시험·소양시험을 보완하는 제한적 도구로 운영되어야 하며, 새로운 형태의 변별시험으로 확대되어서는 안 된다.

결국 대학 자율형 평가요소의 재구조화는 기존의 논술 중심 변별체제를 유지하는 방식이 아니라, 교육과정 기반 정합성을 유지하면서 고차 역량을 제한적으로 확인하는 보완적 평가 체제로 전환하는 데 핵심 목표가 있다. 이를 통해 대학은 전공적합성을 적정 수준에서 검토할 수 있고, 전체 대입제도는 학교 기반 성장 중심 평가 체제라는 정책 목표와 일관성을 확보하게 된다.

〈표 Ⅵ-8〉 재구조화된 대학 자율형 평가요소(안)

평가 유형	주요 특징	운영 기준
소규모 논증형 평가 (축소된 논술형)	• 대규모 필기논술 대비 축소된 형태 • 전공 기반 사고력·논증 과정·자료 해석 역량 확인 • 단문 논증·단문 분석형 문항 중심	• 고교 교육과정 외 출제 금지 • 교육과정 기반 제시문 활용 • 국가 문제은행식 문항 체계 적용 • 학생부 필수 + 자율요소 1~2개 이내 조합 원칙 준수
심층 면접 (탐구·전공기반 사고 과정 중심)	• 학생의 탐구 과정과 문제 해결 사고 흐름 확인 • 전공 적합성·사고 구조·비판적 사고 등 질적 평가	• 구조화 면접 원칙 적용 • 교육과정 기반 질문만 허용 • 포트폴리오·학생부 연계 필수 • 문제풀이형·논술 대체형 면접 금지
프로젝트· 포트폴리오형 평가	• 고교 단계의 탐구 활동·연구 설계·산출물 기반 종합 평가 • 학생의 실제 탐구 역량과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 확인	• 교육과정 내 수행 결과만 인정 • 학교 수행평가·동아리·탐구활동 연계 자료 활용 • 과제·보고서·산출물 평가 기준 국가 표준화
AI 보조 평가 (교수자 판단 보완용)	• 디지털 포트폴리오 분석·문항 반응 패턴 분석 등 보조적 활용 • 평가의 일관성·객관성 확보에 기여	• 교수자·교사 판단 대체 금지 • 국가 인증·표준 검증 영역에서만 제한적 사용 • 우회적 자동 변별 도구로 활용 불가

넷째, 대학의 전형 요소 활용 자율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대학의 전형 운영 자율성은 학생부 중심 평가체계가 실질적으로 작동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다. 국가는 학생부와 졸업자격시험이라는 기본 평가틀을 제시하되, 각 대학은 모

집단위의 학문적 특성, 교육목표, 전공별 요구 역량을 고려하여 전형 요소를 자율적으로 구성하고 그 반영 비중을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대학은 학생부-졸업자격시험-면접·프로젝트형 평가 요소 등을 필요에 따라 조합·구성하고 반영 비율을 자율적으로 설정하며, 국가 수준에서는 이를 책임 기반 자율체제 속에서 투명하게 관리·모니터링하는 구조가 필요하다. 이는 싱가포르, 핀란드, 프랑스 등에서 확인되는 '국가 기준 + 대학 자율성' 결합 모델과 구조적으로 유사하며, 대학의 선발 전문성과 공공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방향이다. 또한 이는 교원 및 전문가 인식 조사에서 제기된 '획일적 전형 기준에 대한 피로감'과 '대학의 전공 특성 반영 요구'를 동시에 반영한 접근이기도 하다.

다섯째, 고교 교육과정 성취 중심으로 대학의 평가 기준과 루브릭을 체계적으로 맞춰 나갈 필요가 있다.

대학이 학생을 평가할 때 사용하는 기준은 고교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성취기준, 그리고 학교 현장에서 실제로 사용되는 평가 언어와 자연스럽게 연결되어야 한다. 단순히 고교 성취기준을 '참고'하는 수준을 넘어서, 서로의 평가 체계가 같은 방향을 바라보도록 정밀하게 정렬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고교 성취기준과 대학의 평가준거가 어떤 방식으로 연결되는지 구조적인 대응 관계를 분명히 해야 한다. 또한 학생부, 졸업자격시험, 면접 등 다양한 평가 장면에서 사용되는 평가 언어와 기준이 서로 다르게 해석되지 않도록 일관성을 확보해야 한다. 모집단위별로 요구되는 역량 역시 고교 교육과정의 성취기준과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도록 표준화된 루브릭을 개발하고 적용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더불어 평가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루브릭 해석 기준과 실제 사례를 함께 공유하여 교사와 대학이 같은 기준으로 학생의 역량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정렬 작업은 문서만 고쳐 적는 수준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고교-대학 간 공동연수, 평가 협의체 운영, 교과별 연계 프로그램 등 실제 협력 구조를 통해 지속적으로 추진될 때 효과가 나타난다. 이러한 과정이 자리 잡으면, 고교에서 학생이 경험한 배움이 대학에서도 같은 의미로 이해되고 평가된다는 신뢰가 형성된다. 동시에 교사들도 대학의 평가 기준과 방향을 더욱 명확히 파악할 수 있어, 수업과 평가를 설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여섯째, A/B/C형 전형 구조는 대학의 평가 방식과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2033학년도부터 적용되는 학생부 중심형(A형), 학생부 플러스형(B형), 미래역량형(C형) 전형은 각각의 평가 목적과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대학의 평가체계 역시 이에 맞게 정렬될 필요가 있다.

〈표 Ⅵ-9〉 2033학년도 전형 예시(안)

전형 유형	구성 요소	대학 평가의 초점	기능
A형 학생부 중심형	학생부 전면 활용	과정·성장·탐구 기반 심층 해석	전통적 학생부 중심 선발의 고도화
B형 학생부 플러스형	학생부 + 대학입학소양시험 (자격검증형)	기초학업역량의 보완 검증	공정성·예측 가능성 강화
C형 미래역량형	학생부 + 대학입학소양시험(성장형) + 면접·프로젝트 등	고차적 사고·창의·전공탐구력 중심	대학별 특성 기반의 심층 선발

세 전형은 초기에는 나란히 운영되지만, 장기적으로는 학교 기반 성취 평가와 국가 표준 정보(졸업자격시험·소양시험)를 중심으로 한 학생부 중심 체제로 점차 정리되는 방향을 목표로 한다. 특히 대학입학소양시험은 어디까지나 '자격고사'로 운영되며, 반영 비중은 30% 이하로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소양시험이 '학교 평가를 보완하는 역할'에 머물고, 대입의 중심은 학생부와 대학의 책무성 기반 평가가 담당하도록 하기 위한 설계이다.

이러한 전환이 이루어지면, 지금까지의 외부시험 중심 구조는 학교 기반 성장 평가 중심 구조로 바뀌게 되고, 고교-대학-국가가 함께 연결되는 '학업 성취-역량-성장'의 선순환 체제가 본격적으로 작동하게 된다.

결국, 대학별 평가 및 고교-대학 연계 강화는 단일 제도의 도입만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학생부 중심 대입제도를 안정적으로 지탱하기 위한 종합적 설계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미다. 학생부의 깊이 있는 해석, 졸업자격시험이라는 표준화된 국가 인증 정보, 대학의 책임 기반 자율평가, 고교-대학 간 평가 기준 정렬이 서로 맞물릴 때, 대입은 외부시험 위주의 변별 구조에서 벗어나 학생의 성취와 역량, 성장의 흐름을

함께 살피는 미래 지향적 선발 체제로 자리 잡게 된다.

이러한 구조에서 고교는 교육과정 편성과 평가 운영에 대한 자율성과 책임을 동시에 강화할 수 있고, 대학은 각 전공에 적합한 학생을 보다 정확하게 선발할 수 있다. 나아가 국가는 고교-대학-대입 체계 전반을 하나의 평가 생태계로 연결함으로써, 교육 전체가 신뢰성과 정합성을 기반으로 한 선순환 체제로 전환되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

〈표 Ⅵ-10〉 대학별 평가 및 연계 강화

구분	개선 방향	주요 내용	기대 효과
학생부 활용 중심 선발체계 고도화	정성·정량 통합 해석 기반의 종합평가	교과성취·세특·탐구기록·성장과정 등 학생부 기록을 맥락적으로 분석하여 전공적합성·학업 지속가능성·탐구역량을 심층 평가 + 학생부 성취정보가 대학뿐 아니라 전문대·폴리텍·성인재진학 등 다양한 학업 경로에서 공통 인증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체계 확장	고교 교육과정 성취의 정당한 반영, 학생별 학업경로의 공정한 인정
졸업자격시험 연계	국가 표준 기반 학업준비도 검증	문제은행식 졸업자격시험 성취정보를 학생부와 결합하여 기초학업역량·전공기초역량을 객관적으로 검증 + 대학 외 고등직업교육·전문대·성인재진학 경로에서도 표준 인증자료로 활용되도록 연계체계 구축	평가의 신뢰성·예측가능성 제고, 학교 간 평가 편차 보완, 다경로 진학 구조에서의 학업 역량 인증 체계 확립
대학 자율형 평가요소 운영	논술·면접·프로젝트·AI 등 미래형 평가요소 선택	탐구력·논증력·창의력·표현력 등 고차적 역량을 구조화된 방식으로 평가하여 학생부·졸업자격시험의 한계를 보완	대학별 전문성 강화, 전공 특성 기반의 심층 선발 가능
전형 요소 활용 자율성 보장	학생부-졸업자격시험-면접 등이 조합된 대학별 전형 설계	대학이 학문·전공 특성에 따라 전형 요소 구성과 반영 비중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며, 국가표준과 대학 자율의 균형을 확보	책임 기반 자율체제 확립, 대학의 교육목표·전공 적합성에 맞는 다원적 선발 가능
학교 교육과정 성취 중심 평가 고도화	고교-대학 간 평가준거·루브릭 정렬	고교 성취기준과 연계된 표준화 루브릭 적용, 평가 언어·준거의 일관성 확보	학업준비도 진단의 정밀성 향상, 고교-대학 학업 연속성 강화
A/B/C형 전형 구조와의 정합적 연계	유형별 평가 체계의 구조적 정렬	A형-학생부 심층, B형-학생부+자격검증, C형-고차적 역량 기반 심층평가의 일관된 설계	학생부 중심 단일체제로의 통합 기반 마련, 대입-교육과정 연계 강화

바. 미래형 평가 인프라 구축

대학별 평가 및 고교-대학 연계가 질적으로 심화되는 과정이 '평가 내용의 고도화'라면, 미래형 평가 인프라 구축은 이러한 변화를 학교-대학-국가 전반에서 안정적으로 지탱하는 제도적·기술적 기반을 구축하는 단계이다. 내신 절대평가, 서·논술형 평가 확대, 학생부 중심 전형의 정착, 졸업자격시험 운영 등 개편된 평가 구조는 현장에서 일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때에만 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미래형 평가 인프라는 단순한 보조체계가 아니라, 평가 품질관리-교원 전문성 지원-데이터 기반 피드백을 통합하는 종합 지원 플랫폼으로 작동하며, 미래형 대입제도 전환의 실질적 실행 기반을 형성한다.

특히 본 연구의 교원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절대평가 및 서·논술형 평가 확대에 대해 다수 교원이 "평가 기준 불일치와 학교 간 편차가 가장 큰 부담 요인"이라고 응답하였으며, 전문가 협의 과정에서도 "제도 개편보다 평가 인프라가 먼저 구축되지 않으면 현장은 감당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반복적으로 제기되었다. 또한 해외 사례 질적 비교 분석에서도 평가 인프라의 제도화 여부가 고교-대학 연계 구조의 안정성을 좌우하는 핵심 조건 중 하나로 확인되었다.

첫째, 교육과정·평가지원센터를 설립·운영해야 한다.

국가 및 시도 단위에 교육과정·평가지원센터를 설립하여 평가의 전문성과 일관성을 제도적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다. 해당 센터는 성취기준 기반 평가기준 및 평가언어·루브릭 정비, 문항 개발 및 검증, 학교·지역 맞춤 컨설팅과 교사 연수, 평가 품질관리 및 모니터링 체계 운영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이는 학교 간 평가 격차, 기준 불일치, 정성평가의 안정성 부족 문제를 구조적으로 보완하는 핵심 장치로서, 절대평가 및 서·논술형 평가가 정착되는 전환기에 표준화·검증 기능을 담당하는 중추 인프라로 기능하게 된다.

실제로 교원 설문 결과, "학교 간 평가 기준 격차"를 가장 큰 부담 요인으로 지적한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전문가 협의에서도 "국가 차원의 평가 지원 조직 없이는 서·논술형 평가 확대는 오히려 불신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 반복되었다. 해외 사례에서도 독일·핀란드·프랑스는 국가 또는 준국가 차원의 평가 지원 기관을 통해 평가 기준을 정합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이는 해외사례 분석에서 고교-대학 연계 안정성의 핵심 조건 중 하나로 도출되었다.

둘째, AI 기반 서·논술형 평가 지원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AI 기반 서·논술형 평가 지원 시스템은 학교 단위 평가 전반을 지원하는 범용 인프라로서, 국가 단위 시험(대학입학소양시험·졸업자격시험)에 적용되는 AI 채점 모듈과는 구분되어 운영되어야 한다. 이 시스템은 서·논술형 문항 자동 채점 및 키워드 기반 오류 탐지, 전문가 검증과 표준 루브릭 연계, 학교별 채점 편차 분석 및 피드백, 학생·학교 단위 평가 결과의 실시간 데이터화 등의 기능을 포함한다. 이는 본 연구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된 교사 채점 부담, 정성평가의 신뢰성 문제, 학교 간 평가 편차 우려를 기술적·구조적으로 보완하는 장치이며, 내신 절대평가 및 서·논술형 평가 확대가 안정적으로 작동하기 위한 필수 기반으로 기능한다.

특히 전문가 인식 조사에서 다수의 응답자가 “AI는 교사를 대체하는 도구가 아니라, 평가의 일관성과 검증을 보조하는 수단이어야 한다”고 응답한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는 AI를 ‘보조적·검증적 도구’로 한정하는 설계 원칙을 채택하였다. 해외 사례에서도 미국 일부 주, 핀란드의 디지털 평가 체계는 AI를 전면 자동화가 아니라 교사 판단 보조 장치로 활용하고 있으며, 이는 정보 투명성과 평가 공정성을 강화하는 조건으로 해외사례 분석에서 확인되었다.

셋째, 데이터 기반 평가–피드백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평가 결과와 학습 이력을 결합한 데이터 기반 분석 체계를 구축하여 학생의 학업 성취 흐름을 진단하고, 맞춤형 피드백과 학습 조정을 가능하게 해야 한다. 이를 통해 성취 수준과 성장 경로에 대한 시계열 분석, 학습결손 진단 및 자동 추천 지원, 개인별 학습 프로파일 및 학습 경로 제시, 학교 단위 교육과정 운영 진단 등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이 체계는 단순한 평가자료 축적을 넘어 ‘평가–진단–피드백–성장’의 순환 구조를 제도화함으로써 학생 중심 학습과 학교의 피드백 문화를 강화하는 기반이 된다.

교원 설문에서도 “평가 결과가 수업 및 지도 개선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전문가 협의에서도 “평가는 점수가 아니라 성장 경로를 추적하기 위한 도구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 제기되었다. 해외 분석 결과에서도 핀란드와 프랑스의 경우, 국가 차원의 학습이력 관리 시스템을 통해 학생의 성장 데이터를 누적·관리하며, 이는 진학 경로 다양성과 교수·학습 연계를 강화하는 핵심 조건으로 확인되었다.

아울러, 이러한 데이터 기반 체계는 학교 내부의 진단·피드백 수준을 넘어, 국가 차원의 통합 대입정보 시스템과 연계되어야 한다. 내신·졸업자격시험·대학입학소양시험 결과와 대학별 전형 요소, 평가 기준, 선발 결과 등을 한곳에서 제공하는 통합 플랫폼을 구축함으로써, 수험생과 학부모·교사는 전형 구조와 평가 기준을 쉽게 이해할 수 있고, 학교는 자교 학생의 학업 성취와 진학 경향 데이터를 바탕으로 진로·진학 지도를 체계적으로 설계할 수 있다. 대학 역시 공통 데이터에 기반하여 전형 운영의 효과성과 형평성을 점검하고, 사회적 책무성을 강화할 수 있다. 이는 프랑스의 Parcoursup, 핀란드의 Studyinfo와 같이 국가가 대입정보를 일괄 제공·관리하는 체제와 구조적으로 유사한 방향이며, 정보 비대칭을 완화하고 전형 운영의 예측 가능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된다.

넷째, 교원의 평가 전문성에 대한 상시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미래형 평가 인프라의 성패는 교원의 평가 전문성에 달려 있으므로, 단기·일회성 연수를 넘어 상시적·체계적·지원형 전문성 강화 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교차평가 및 공동채점의 정례화, 표준 루브릭 기반 사례 검토와 교원학습공동체 운영, 문항 설계–채점–검증–피드백이 연계된 학습형 지원 구조 제공, 평가지원센터를 통한 상시 컨설팅 및 자료 제공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교원 설문조사에서 평가 역량에 대한 자기효능감이 학교급별·경력별로 큰 편차를 보인 점, 전문가 협의에서 “제도만 바뀌고 교사 지원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현장 저항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점은 이러한 상시 지원 체계의 필요성을 뒷받침한다. 해외 사례에서도 싱가포르와 핀란드는 교원의 평가 전문성을 국가 차원의 지속연수 체계로 관리하고 있으며, 이는 평가 개혁 성공의 공통 조건으로 해외사례 분석에서 확인되었다.

종합하면, 미래형 평가 인프라 구축은 단순한 기술·절차 개선이 아니라 평가체계 개편을 지속가능하게 운영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다. 특히 ① 교육과정·평가지원센터 구축, ② AI 기반 서·논술형 평가 지원, ③ 데이터 기반 평가–피드백 체계, ④ 교원 전문성 상시 지원 체계라는 네 축이 상호 보완적으로 작동할 때, 평가체제는 실제 학교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구현될 수 있다.

이러한 인프라 설계 방향은 본 연구의 교원 설문조사와 전문가 협의 결과에서 확인된 현장의 요구뿐 아니라, 일본·싱가포르·미국·독일·핀란드·프랑스 6개국 질적 비교 분석에서 도출된 '진학 경로 다양성–연계 프로그램–교육 선택권 보장–정보 투명성'이라는 선순환 조건과도 논리적으로 정합성을 이룬다. 즉, 네 가지 인프라 축은 고교 내신–졸업 인증–학생부 중심 전형–대학 평가–국가 표준을 하나의 평가 생태계로 정렬시키는 구조적 장치 및 국가 통합 대입정보 시스템 구축 방향과도 정합성을 이룬다. 이를 통해 미래형 대입제도 전환은 개별 제도의 수정이 아니라, 교육과정–평가–진학이 연계된 지속가능한 평가 체제 전환으로 완결될 수 있다.

〈표 Ⅵ-11〉 미래형 평가 인프라 구축

구분	개선 방향	주요 내용	기대 효과
교육과정·평가지원센터 설립·운영	국가·시도 단위 평가 지원체계 구축	평가 기준 정비, 연수·컨설팅, 평가 도구 개발, 품질관리 체계 운영	평가 신뢰도 제고, 일관성 확보, 교원 부담 완화
AI 기반 서·논술형 평가 지원 시스템	자동채점·루브릭·편차 관리 체계 구축	AI 1차 채점 → 전문가 검증 → 표준 루브릭 연계, 결과 데이터화	채점 공정성·일관성 강화, 실시간 피드백 가능
데이터 기반 평가–피드백 체계	학업·성장 정보의 통합 분석	학생 성취·학습 이력 분석, 개별 맞춤형 피드백 및 지원, 학교 교육과정 운영 진단 + 국가 통합 대입정보 플랫폼 구축(전형 기준·평가 요소·합격 결과·지원 현황 통합 제공)	성장 중심 학습 촉진, 학습격차 진단·지원 고도화
교원 전문성 지원	상시적·체계적 연수 및 지원	평가 전문성 강화, 교차평가·사례 공유, 상시 지원 체계	평가 품질 향상, 절대평가·서논술형 정착 기반 강화

사. 고교체제 개편 및 학업경로 연속성 강화

미래형 대입제도의 성공적 정착은 고교체제의 구조 개선과 긴밀히 연동되어야 한다. 고교체제 개편은 내신체제 개선, 대입전형 구조 개편, 미래형 평가 인프라 구축과 병렬적으로 작동하는 핵심 기반이며, 학교 간 자원과 평가환경의 불균형이 해소되지 않는다

면 절대평가·서·논술형 평가·학생부 중심 전형 등 모든 개편 방향은 현장에서 공정하게 작동하기 어렵다.

실제로 본 연구의 교원 설문조사 및 전문가 협의 결과에서도, 고교 유형과 지역·학교 간 자원 격차가 내신 평가 신뢰도와 학생부 활용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인식이 다수 확인되었다. 또한 해외 6개국(일본·싱가포르·미국·독일·핀란드·프랑스) 사례에 대한 분석 결과에서도, 고교체제의 구조적 불균형이 존재할 경우 고교-대학 간 선순환 구조가 안정적으로 작동하기 어렵다는 점이 공통적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고교체제 전반을 단순화하고, 학교 간 연계와 공동교육과정 운영을 강화하며, 고교-대학 간 교육적 연속성을 제도적으로 확립하는 것은 평가·전형 개편의 실효성을 담보하는 필수 단계라 할 수 있다. 이는 고교학점제가 지향하는 '교육과정-평가-진학'의 연속체계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근본적 인프라에 해당한다.

첫째, 고교 유형은 단순화되고 서열 구조는 완화되어야 한다.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일반계 전환은 고교 간 서열 구조를 완화하고, 교육과정 접근성과 평가환경의 격차를 줄이는 핵심 정책이다. 본 연구의 전문가 의견에서도 반복적으로 확인된 바와 같이, 현재의 고교 유형 구조는 과목 개설 여건, 교원 배치, 평가 운영 역량에서 구조적 차이를 발생시키며, 이는 절대평가 및 학생부 중심 전형이 추구하는 공정성과 신뢰도 확보에 근본적 제약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이러한 맥락에서 고교 유형 단순화는 단순히 학교 종류를 줄이는 행정조치가 아니라, 고교학점제가 지향하는 학생 선택 중심 교육과정을 실질적으로 구현하고, 교육의 공공성과 형평성을 강화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다. 학생이 어떤 학교에 진학했는지가 아닌, 어떤 학습 경험을 하고 어떤 성취를 쌓았는지가 진학과 평가의 중심이 되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는 학교 간 교육 여건 격차가 먼저 완화되어야 한다. 고교 유형 단순화는 바로 이러한 '교육의 출발선 공정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과정이며, 장기적으로 대학 입학 단계에서 평가 연계 구조가 왜곡되지 않도록 하는 기반이 된다.

둘째, 공동교육과정과 연합형 선택과정, 그리고 학교 간 연계 체계는 실질적으로 강화되어야 한다.

공동교육과정과 연합형 선택과정, 그리고 학교 간 연계 체제는 단순히 운영 규모를

늘리는 방식의 '형식적 확대'가 아니라, 학생에게 실제 선택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실질적 강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고교 유형 단순화가 교육기회의 구조적 기반을 마련하는 정책이라면, 공동교육과정과 연합형 선택과정은 그 기반 위에서 학생이 실제로 다양한 과목과 학습 경험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실행 단계의 정책이라는 점에서 성격이 다르다.

본 연구의 교원 설문과 전문가 협의 결과에서도, 고교학점제 도입 이후 학교 간 선택과목 개설 격차가 그대로 유지될 경우 학생 간 진로 선택 기회 불평등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반복적으로 제기되었다. 이는 단순히 부족한 과목을 일부 보완하거나 특정 학교만 추가 개설하는 방식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지역 단위에서 안정적으로 작동하는 구조적 교육 기회 보장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의미한다.

따라서 학교 간 연계 체제는 지역 대학·지자체와의 공동 운영, 지역 교육 생태계 확장, 학교 간 공통 평가 기준의 수렴 및 공유, 지속 가능한 교육과정 운영 구조 구축 등 보다 폭넓은 지역 기반 플랫폼 기능으로 확장될 필요가 있다. 즉, 공동교육과정과 연합형 선택과정은 특정 학교 여건에 따라 제공 여부가 달라지는 '보조 프로그램'이 아니라, 모든 학생이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는 지역 단위 공공 인프라로 자리 잡아야 한다.

셋째, 고교-대학 연계형 교육과정 운영 기반이 제도적으로 구축되어야 한다.

고교-대학 간 교육 연속성을 강화하기 위한 연계형 교육과정은 미래형 대입 구조의 또 다른 핵심 축이다. 대학과 고교가 함께 개발·운영하는 심화과목, 전공탐색 프로그램, 연구 기반 프로젝트 등은 학생에게 실제 전공 적합성과 탐구 역량을 기를 수 있는 학습 기회를 제공한다. 이는 단순한 조기대학이수나 진로체험이 아니라, 고교학점제의 선택·심화 구조와 자연스럽게 맞물리고, 학생부 중심 평가체제의 핵심 자료로 활용되며, 대학의 전공 교육과정과 직접 연결되는 '연속적 학업 경로'를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전문가 의견에서도, 대입 이후 전공 부적응 문제, 기초 학업 역량 부족, 학생부 기록의 형식화 문제가 반복적으로 지적되었다. 고교-대학 연계형 교육과정은 이러한 문제를 구조적으로 완화할 수 있는 대안으로 제시되었다. 해외 사례 또한 같은 흐름을 보인다. 독일의 고교-대학 이행 프로그램, 프랑스의 고교 심화과정, 싱가포르의 전공 준비 프로그램 등은 고교에서 대학으로 이어지는 학습 경험의 단절을 줄이는 핵심 장치로 기능하고 있으며, 본 연구의 해외사례 분석에서도 학업 경로의 연속성은 고교-

대학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핵심 조건으로 확인되었다. 이와 같은 연계 구조가 갖춰질 때 대학은 고교 단계에서 이미 검증된 역량 정보를 토대로 보다 정밀한 선발이 가능해지고, 고교는 대학과 연계된 교육과정을 운영하면서 교육의 질을 확장할 수 있다.

나아가, 학업 경로의 연속성은 4년제 대학 진학을 전제로 한 단일 구조로 한정되어서는 안 된다. 해외 주요국 사례에서도 확인되듯이, 전문대학·폴리텍·고등직업교육기관, 직업계고-전문학사-학사 전환 경로, 성인 학습자의 재진학 경로 등 다양한 이동 경로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학업 연속성의 핵심 요건이다. 독일의 듀얼시스템, 핀란드·싱가포르의 고등직업교육-학사 전환 구조, 미국 커뮤니티컬리지의 2+2 전환 체계는 모두 고교 단계의 성취 기록과 기초역량 인증을 기반으로 학습자가 여러 경로를 오가며 재도전할 수 있는 구조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고교-대학 연계형 교육과정을 넘어, 고교-전문대·폴리텍-성인재진학으로 이어지는 다경로 학습 경로를 제도적으로 설계하여, 학생부·졸업자격시험·소양시험 등 표준화된 성취 정보를 다양한 고등교육 단계에서 공통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통해 학생은 자신의 진로와 속도에 맞는 경로를 선택하면서도, 필요할 때 언제든 다른 경로로 전환할 수 있는 '중단 없는 학습 체제'를 경험하게 되고, 고교-대학-고등직업교육 간의 교육적 연속성은 한층 강화된다.

종합하면, 고교체제 개편과 고교-대학 연계 강화는 미래형 대입제도가 구조적으로 정착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다. 즉, 고교 유형 단순화는 교육 접근성·평가환경 격차를 줄여 공정성 기반을 마련하고, 공동교육과정·연합형 선택과정 강화는 학생의 실제 학습 선택권을 넓히며 지역 간 자원 불평등을 완화하고, 고교-대학 연계형 교육과정 구축은 학생이 고교에서 대학으로 이어지는 학업 경로를 끊김없이 이어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만든다.

이 세 요소는 따로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상호 보완적으로 작동하여 고교학점제-내신 개편-대입전형-대학 교육이 하나의 연계된 생태계로 통합되는 구조를 만들어낸다. 이는 본 연구의 교원 설문, 전문가 협의, 해외 6개국 비교 분석 결과에서 공통적으로 확인된 '진로 경로 다양성-연계 프로그램-교육 선택권 보장'이라는 조건과도 일치한다.

결국 이러한 연계 구조가 구축될 때 학생은 '중단 없는 학습 경로' 속에서 성장할 수

있고, 학교는 교육과정 중심 운영을 안정적으로 정착시킬 수 있으며, 대학은 전공 특성에 맞는 학생을 보다 신뢰성 있게 선발할 수 있다. 따라서 고교체제 개편은 공정성·형평성·연계성이라는 세 가지 원칙을 토대로 미래형 교육 생태계를 완성하는 핵심 전략으로 기능하게 된다.

〈표 Ⅵ-12〉 고교체제 개편 및 고교-대학 연계 강화

구분	개선 방향	주요 내용	기대 효과
고교 유형 단순화 및 서열 구조 완화	자사고·외고·국제고 일반계 전환	교육과정 접근성·평가환경 격차 완화, 공정한 평가 기반 조성	서열 구조 완화, 공정성·형평성 강화
공동교육과정·연합형 선택 강화	학교 간 연계 및 자원 공유 확대	지역 단위 연합형 선택과정 운영, 학생 선택권·진로 탐색 기회 확대	학습 기회 확장, 지역 간 자원 격차 완화, 지속가능한 교육 생태계 구축
고교-대학 연계형 교육과정 운영 기반	대학-고교 협력 프로그램 운영	심화과목·전공탐색·연구 프로젝트 공동 운영	학업 경로 연속성 강화, 학생부 실효성 제고, 전공 적합성 기반 선발 강화

VII

결론 및 제언

1. 결론
2. 제언

Ⅶ 결론 및 제언

1 결론

본 연구는 그동안 고교 교육과 대학입시가 서로 따로 움직여 온 구조를 넘어서, 학교 교육이 제 역할을 하고 학생의 성장을 중심에 두는 방향으로 대입제도를 새롭게 설계함으로써 고교-대학-사회가 서로 연결되는 선순환 체제를 만드는 데 목적이 있었다. 학령인구 감소, 학생 특성의 다양화,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 디지털·AI 기반 학습 환경의 빠른 변화는 지금의 선발 중심 입시 구조만으로는 미래 인재를 길러내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준다. 교원 인식 조사, 정책 및 해외 사례 분석, 전문가 의견 역시 한목소리로 “평가 구조와 대입전형이 달라지지 않으면 고교 교육의 질적 변화는 어렵다”는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었다.

이러한 진단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내신 평가체제 개선, 대학입학소양시험 도입 및 단계적 폐지, 대입전형 구조 개편이라는 세 축을 중심에 두고 미래형 대입제도 개선안을 설계하였다. 이 세 가지는 각각 따로 떨어진 정책이 아니라, 고교 교육과정 운영-평가 방식-대학 선발 구조를 함께 묶어 변화시키는 연동 구조로 설정되었다.

첫째, 내신 평가는 성취기준 기반 절대평가와 서·논술형 평가 확대로 전환된다. 이는 단순히 평가 방식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과정 중심 수업을 확산시키고 고교학점제를 실제로 정착시키기 위한 핵심 장치다. 다시 말해, 학교 교육을 시험 대비 중심이 아니라 교육과정 중심으로 회복시키는 구조적 변화의 출발점이다.

둘째, 현행 수능은 ‘대학입학소양시험’으로 전환되어 학생의 기초학업역량과 대학 수학 준비도를 확인하는 역할을 맡는다. 장기적으로는 문제은행 방식의 졸업자격시험과 통합되어 국가 차원의 표준 학업 성취 검증 체제로 재구조화된다. 이 체계는 과도한 변별 경쟁을 완화하고, 내신 절대평가·서논술형 평가와 함께 성취 중심 평가 생태계를 만드는 데 기여한다.

셋째, 수시·정시 이원 구조는 학생부 중심 단일 통합 전형으로 재편된다. 단기적으로는 고3 2학기 성취평가 종료 후(11~12월)에 통합 전형을 운영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대

학 전형 시기를 졸업 이후로 충분히 이연하여 고교 교육과정 이수 결과가 제대로 반영되도록 한다. 이와 함께 고3 2학기 교육과정을 '진로·진학 연계 교육과정'으로 바꿔 전공 탐색, 학업 심화, 대학·지역사회 연계 프로젝트 등이 가능하도록 하여 수업-평가-전형 간 정합성을 확보한다. 대학에는 모집단위 특성에 따른 자율성을 보장하되, 지역균형·기회균형 선발 확대를 통해 교육 기회 형평성도 함께 강화한다.

또한 평가 인프라 구축과 고교체제 개편은 별개의 과제가 아니라, 전체 교육 생태계를 전환하기 위한 기본 조건으로 제시된다. 교육과정·평가지원센터 설립, AI 기반 서·논술형 평가 지원 시스템 구축, 교원의 평가 전문성 강화는 새로운 평가 체제가 학교에서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는 핵심 기반이다. 더불어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일반고 전환을 통한 고교체제 단순화는 평가 공정성과 교육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필수 조건으로 확인되었다.

이와 같은 변화는 단기간에 완성될 성격이 아니며, 학교의 준비 수준, 학생·학부모의 수용도, 대학의 참여 구조 등을 고려한 단계적 이행 전략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2028~2032년 과도기 안정화 단계 → 2033~2039년 성장형 평가체제 본격화 단계 → 2040년 이후 미래형 연계·성장형 체제 정착 단계의 3단계 실행 로드맵을 제시하였다. 이는 새로운 제도와 기존 제도가 혼재하는 전환기 동안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장기 방향을 흔들림 없이 유지하기 위한 설계 장치다.

결국 앞으로의 대입제도는 단순히 학생을 선발하는 절차를 넘어, 학생의 배움과 성장을 촉진하는 평가-기록-전형의 통합 시스템이 되어야 한다. 본 연구가 제시한 개편 방향은 경쟁 중심 구조에서 성장 중심 구조로, 단절된 구조에서 연계된 구조로, 평가 불신 구조에서 신뢰 기반 평가 체제로의 전환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체제가 자리 잡으면 고교는 교육 본연의 역할을 회복하고, 대학은 학생의 잠재력과 전공 적합성을 더 정밀하게 평가할 수 있으며, 사회는 공정성과 포용성을 바탕으로 미래 인재를 길러낼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미래형 대입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하려면 제도 개편만으로는 부족하다. 지속적인 모니터링, 일관된 질 관리, 교사-대학-학생 간 신뢰 회복, 이해관계자 간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앞으로의 정책 과정에서는 지역·학교 유형·학생 특성에 따른 실행 전략을 더 정교하게 마련하고, 평가 인프라의 기술적·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며, 대학의 역할 재정립과 사회적 합의를 넓혀 가야 한다.

본 연구는 최종 답안을 제시하기보다는, 미래형 교육체제로 나아가기 위한 방향과 틀을 제시하는 출발점에 가깝다. 제도 개편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때 비로소 고교-대학-사회가 연결된 실질적 선순환 체제가 구축되고, 교육의 미래는 더욱 균형적이고 포용적이며 성장지향적으로 재편될 것이다.

2 제언

이번 연구에서 제시한 미래 대입제도가 학교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려면, 단순한 제도 변경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학교가 실제로 움직일 수 있도록 단계적 준비, 충분한 지원, 현실적인 운영 기준이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 특히 이번 개편은 내신, 대학입학소양시험, 평가 방식, 전형 구조가 서로 긴밀하게 연동되는 구조적 전환이라는 점에서, 2028년 전환 준비기-2033년 성장형 본격화-2040년 이후 연계·성장형 체제 완성으로 이어지는 단계적 이행 경로를 전제로 관리되지 않으면 제도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본 연구는 이러한 중장기 이행 구조를 전제로 다음과 같은 정책적 제언을 제시한다.

가. 국가 차원의 제도 이행을 위한 정책 과제

첫째, 단계적 실행을 뒷받침하는 정책 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미래형 대입제도는 교육부-시도교육청-대학-학교를 연결하는 다층적 거버넌스를 전제로 하며, 2028~2032년 전환 준비기, 2033~2039년 성장형 본격화기, 2040년 이후 연계·성장형 체제 완성기에 각각 요구되는 정책 과제, 점검 지표, 위험 요인을 단계별로 구조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제도 전환 초기에는 지역과 학교마다 준비 수준의 격차가 불가피하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준비도를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조기에 보완할 수 있는 대응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이는 형식적 협력 구조가 아니라, 정책 집행 과정에서 실제로 작동하는 협력 거버넌스로 설계되어야 한다.

둘째, 평가 신뢰도 확보를 위한 질 관리와 전문성 지원 체계를 정교화해야 한다.

절대평가, 서·논술형 평가, AI 기반 채점 등 새로운 평가 방식이 현장에 안정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교원의 평가 전문성 제고와 평가 품질 관리 체계가 동시에 작동해야 한다. 이를 위해 표준 루브릭과 성취기준의 구체화, 다중 채점 및 교차 검증 체계의 제도화, AI 기반 채점·검증의 준거 마련이 요구된다. 아울러 교육과정·평가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평가 도구 개발, 연구학교 운영, 교사 컨설팅 및 피드백 연수를 연계한 지원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학교 평가의 공공성과 신뢰도를 실질적으로 제고할 필요가 있다. 이는 2033년 이후 학교 기반 평가가 대입의 중심축으로 이동하는 구조를 제도적으로 떠받치는 핵심 조건에 해당한다.

셋째, 고교-대학뿐 아니라 전문대·폴리텍·직업계·성인학습으로 이어지는 다경로 학업 연속성 기반을 구조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미래형 대입제도의 핵심은 고교 단계에서 형성된 학업 경험이 다양한 상급학습 경로에서 동일하게 인정되고 해석되는 평가 언어를 갖추는 데 있다. 이를 위해 고교-대학-전문대-폴리텍 간의 성취 기준, 평가 준거, 역량 요소를 단계적으로 정렬하고, 고교 학업 기록(학생부·졸업자격시험·성취수준)이 여러 진학 체제에서 공통 인증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와 함께 대학을 포함한 상급학교의 학생부 활용 역량을 강화하고, 고교-고등직업교육-대학 간 평가 언어와 기준을 공유·표준화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지역 단위의 공동 평가 모델, 고교-대학·전문대 협력형 전형 운영, 전공·직무 기반 역량 협의체 운영 등을 통해 고교 수업-평가-기록이 다양한 상급교육 경로와 실질적으로 연결되는 구조를 형성해야 한다. 이는 2040년 이후 학교 기반 성취-국가 학업인증-상급학교 선발·배치가 하나의 연속적 구조로 완성되기 위한 필수 조건이다.

넷째, 미래형 대입제도와 정합성을 갖춘 국가교육과정 기반을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미래형 대입제도가 안정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고교학점제, 절대평가, 서·논술형 평가, 졸업자격시험, 대학입학소양시험 등 새로운 평가·기록 체계가 교육과정과 긴밀한 정합성을 이루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의 2022 개정 교육과정만으로는 향후 단계별로 도입될 평가 체제와의 일관된 정렬을 충분히 보장하기 어렵다. 특히 앞서 제안한 고3 2학기를 '진로·진학 연계 교육과정'으로 운영하려는 개편 방향을 고려하면, 학교 현장

에서 참고할 수 있는 국가 수준의 명확한 교육과정 모델이 필요하다.

또한 고교학점제 기반 교육과정은 대학뿐 아니라 전문대·폴리텍·직업계 교육과정과도 정합성을 이루도록 재구조화되어야 하며, 학업 경로의 다변화에 대응하는 계열별·직무별 연계 교육과정 모델이 국가 수준에서 제시될 필요가 있다. 이는 고교 단계의 학습 경험이 다양한 상급학교에서 일관된 방식으로 해석·인정될 수 있도록 하는 필수적 기반이다.

따라서 후속 연구를 통해 성취기준과 평가준거의 구조적 정렬 기준 마련, 공통·선택·심화과목의 계열별 재구조화, 과정 중심·성장 중심 평가 운영 기준 구체화, 전공탐색-전공준비-대학 초년도 교육으로 이어지는 연계형 교육과정의 표준 모델 개발, 고3 2학기 진로-진학 연계 교육과정의 국가 표준 구조 설계(예: 탐구·프로젝트 기반 심화과정, 대학 연계 교육과정, 전공 기반 역량 요소의 단계적 배치 등)와 같은 과제를 제도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기반은 고교-대학 간 평가 언어의 통일성과 학업 경로의 연속성을 제도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필수적 조건이다. 더 나아가 2040년 이후 도입될 졸업자격 국가인증 체제, 대학입학소양시험의 단계적 기능 조정, 학교기반 성장 평가 중심 대입 체제로의 전환과도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중기 과제다.

이와 함께, 미래형 대입제도가 안정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다섯째, 이해관계자 소통과 사회적 합의 기반을 공고히 해야 한다.**

대입제도 개편의 성공 여부는 교사, 학생, 학부모 등 교육 주체들이 제도의 취지와 방향을 얼마나 이해하고 신뢰하느냐에 크게 좌우된다. 따라서 제도 변화의 배경, 방향, 적용 시기에 대해 일관되고 명확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특히 2033년 대학입학소양시험의 보조적 도입, 2040년 이후 해당 시험의 단계적 폐지와 졸업자격 국가인증 체제로의 전환과 같이 사회적 파급력이 큰 변화에 대해서는 사전 설명과 근거 제시를 기반으로 불필요한 불안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전략적 커뮤니케이션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여섯째, 지역·학교 여건에 따른 격차 완화를 위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대입제도 개편은 자칫 지역 간, 학교 간 새로운 격차를 야기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기회균형·지역균형 선발 확대와 함께 취약 지역 및 소규모 학교

를 대상으로 한 교육과정·평가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특히 평가 인프라, 교사 전문성, 디지털 평가 환경 구축에서 지역·학교별 격차가 확대되지 않도록 중장기 단계에 맞춘 맞춤형 재정·인력 지원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일곱째, 평가 인프라와 기술 기반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해야 한다.

AI 기반 평가 시스템, 문제은행 방식의 졸업자격시험, 디지털 평가 플랫폼은 미래형 대입제도의 핵심 인프라이다. 이러한 기술 기반이 실질적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AI 편향·오류 검증 체계, 문제은행의 상시 업데이트 체계, 보안성과 안정성을 갖춘 디지털 평가 환경이 병행되어야 한다. 특히 2033~2039년 과도기에는 소양시험이 보조적 인증 기능을 수행하고, 2040년 이후에는 소양시험이 폐지되며 내신 기반 졸업자격 국가인증 체제가 유일한 국가 인증 장치로 전환되는 점을 고려하여, 기술 인프라 역시 단계별 역할 변화에 맞게 설계·전환되어야 한다.

여덟째, 미래형 대입제도의 공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 통합 대입·진학정보 플랫폼(Parcoursup형)[17]을 구축해야 한다.

평가·기술 인프라가 제도 운영의 '작동 기반'을 제공한다면, 통합 정보 플랫폼은 제도 운영의 '신뢰 기반'을 형성하는 핵심 장치이다. 이 플랫폼은 전형 기준, 평가 요소, 채점 기준, 모집단위별 요구 역량, 합격·충원 통계 등 대입 관련 정보를 일관된 구조 속에서 제공함으로써 학생·교사·학부모의 정보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다. 나아가 대학뿐 아니라 전문대·폴리텍·직업계·성인학습 경로까지 아우르는 국가 단위의 통합 정보 체계로 구축하여, 다양한 학업 경로를 선택하는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진학 경로를 예측 가능하게 설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는 미래형 대입제도가 지향하는 다경로 학업 체제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정보 인프라가 될 것이다.

종합하면, 미래형 대입제도의 성공은 제도 자체의 변경보다 2028년 전환 준비기-

17) 프랑스의 "Parcoursup"은 국가가 운영하는 대학입학 통합지원 플랫폼으로, 모든 대학·학과의 전형 기준, 평가 요소, 지원 가능 인원, 충원율, 전년도 합격자 분포 등을 한곳에서 제공하고, 학생의 지원·선호·대기 순위를 투명한 절차에 따라 조정·배치하는 국가단위 정보·매칭 시스템이다.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고 전형 예측 가능성을 높이며, 학교·대학·학생 간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공공 플랫폼으로 평가된다. 본 연구에서 말하는 'Parcoursup형'은 이러한 구조를 한국의 대입 환경에 맞게 적용한 국가 통합 대입정보 시스템을 의미한다.

2033년 성장형 본격화기-2040년 연계·성장형 체제 완성기로 이어지는 단계적 이행 구조를 얼마나 정밀하게 관리하느냐에 달려 있다. 특히 대학입학소양시험은 중간 단계에서는 최소 학업 준비도를 보정하는 보조 장치로 기능하다가, 장기적으로는 내신 기반 졸업자격 국가인증 체제가 완성되면서 폐지되는 구조로 설계되어야 한다. 이러한 전환 과정에서 변화 속도와 범위가 학교 현장의 수용 가능 범위를 초과하지 않도록 조율하면서, 고교 교육과 대학 선발이 상호 보완적으로 작동하는 구조로 제도를 안착시키는 것이 핵심 과제라 할 수 있다.

나. 시·도교육청 차원의 실천 과제

다만 이러한 개선안은 국가 차원의 제도 개편을 전제로 하고 있어 시·도교육청 단위에서 즉각적으로 모두 반영하기에는 구조적 제약이 존재한다. 그러나 제도는 결국 지역 교육행정 단위에서 구체적으로 구현된다는 점에서, 서울특별시교육청 역시 미래형 대입 제도의 현장 안착을 선제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교육청 차원에서 현실적으로 추진 가능한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첫째, 교육과정·평가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학교 평가 지원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해야 한다.

이를 통해 절대평가와 성장 중심 평가가 학교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단위학교의 평가 운영에 대한 교육청 차원의 지원과 조정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평가 신뢰도의 공공성을 제고해야 한다.

둘째, 서·논술형 평가 체제로의 단계적 전환과 AI 기반 평가 환경 구축을 병행 추진해야 한다.

이는 평가 방식의 변화를 단순한 도구 변화가 아니라, 서울 학교 교육의 수업 문화와 학습 경험 구조 자체를 변화시키는 계기로 작동하도록 하기 위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셋째, 고교 유형 단순화를 통해 학교 간 위계 구조를 완화해야 한다.

이는 모든 일반고에서 질 높은 교육과정이 운영될 수 있는 구조를 구축하는 기반 조건이며, 학교 교육과정 중심 대입체제를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필수 과제이다. 아

울러 고교 유형 단순화는 일반고-특성화고-직업계고 간 학습 이동성과 상급학습 연계성을 확대하는 구조적 기반이 되며, 서울 지역 전문대·폴리텍과의 연계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하는 전제 조건이 된다. 이러한 정렬은 학업 경로의 다변화에 대응하는 미래형 학습체제를 구축하는 데 핵심적으로 기여한다.

넷째, 교원의 평가 전문성을 학교의 핵심 역량으로 재정립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교사는 제도 변화의 수동적 대상이 아니라 평가 혁신의 주체로 설정되어야 하며, 이러한 인식 전환은 향후 제도 수용성과 안정성 확보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다섯째, 서울 지역 대학뿐 아니라 전문대, 폴리텍과의 협력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

이를 통해 고교 교육과 대입 전형 간 연계를 촉진하고, 학교 중심 평가 체제가 대학입학 전형에서도 신뢰받는 구조로 점진적으로 전환되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서울형 고교-대학 연계 평가 지원 체계 구축, 서울형 평가 전문성 강화 프로그램 운영, 디지털 평가 인프라 선도 구축, 지역·학교 간 격차 완화 지원 강화 등은 이러한 방향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핵심 과제로서, 서울시교육청이 국가 정책 변화 이전에도 선제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영역이라 할 수 있다.

다. 후속 연구 과제

마지막으로, 미래형 대입제도의 전환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제도 설계와 별도로, 학교 현장에서 실제 작동 가능성을 검증하고 핵심 기반을 미리 구축하는 후속 연구가 병행되어야 한다. 특히 2028년 전환 준비기 이전에 추진되어야 하는 시급 과제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절대평가 및 서·논술형 평가 모델의 현장 적용 가능성을 검증하는 실행 연구가 필요하다.

미래형 대입제도의 중심축이 학교 기반 평가로 이동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절대평가 5단계 성취수준과 서·논술형 평가가 실제 학교에서 신뢰도 있게 운영될 수 있는지가 제도 성공의 출발점이 된다. 채점 신뢰도 확보, 수행평가 운영 방식, 교사 업무 부담,

학부모 민원 가능성 등은 제도 설계만으로 해결될 수 없는 영역이므로, 시범학교 운영, 공동채점 연구, 파일럿 채점 실험 등 구체적 실행 연구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국가 문제은행·표준 문항·평가 보안 체계 구축을 위한 기술·운영 연구가 필요하다.

절대평가와 졸업자격시험의 공정성을 뒷받침하려면, 국가 차원의 문항 개발-검증-보안-배포 체계가 안정적으로 작동해야 한다. 이는 미래형 대입제도의 평가 신뢰도를 떠받치는 핵심 인프라로, 문제은행 구축, 출제 기준 정교화, 보안 시스템 설계 등 기술·운영 연구를 통해 전 주기 관리 모델을 사전에 마련해야 한다.

셋째, 학생부 기록 체계 개편(선택적 기재 전환)에 따른 영향 분석 연구가 필요하다.

학생부가 대입 평가의 중심 자료로 활용되는 구조에서는, 기록 방식의 변화가 교사 업무 부담, 학생의 학습·성장 정보, 대학 평가의 정합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기록 항목의 간소화가 실제로 어떤 효과와 한계를 가지는지, 대학이 요구하는 정보와 현장의 기록 가능 범위가 일치하는지에 대한 실증적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넷째, 졸업자격시험의 도입을 위한 시범 운영 및 제도 검증 연구가 필수적이다.

2040년 이후 국가 인증 기능을 담당하게 될 졸업자격시험은 평가 체제의 전환과 직결되는 만큼, 미인증 학생 관리, 재시험 운영 기준, 국가-교육청-학교 간 공동 책임 구조 등 핵심 쟁점에 대한 세밀한 설계가 필요하다. 시험 운영의 적정 난이도, 성취 기준 설정 방식, 학교 평가와의 연계 방식 등을 검증하기 위한 시뮬레이션과 정책 실험이 제도 시행 이전 단계에서 반드시 수행되어야 한다.

다섯째, 졸업자격시험이 안정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이를 다양한 학업 경로(대학·전문대·폴리텍·성인재진학)에서 공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국가 학업·역량 인증 체계로 확장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졸업자격시험·학생부·전형 정보가 유기적으로 연동되는 국가 통합 진학정보 플랫폼(Parcoursup형)의 설계와 파일럿 연구가 병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기반은 학습자들이 어떤 경로를 선택하더라도 학업 성취와 역량이 일관된 기준으로 인정·활용되는 미래형 평가 생태계를 정착시키기 위한 핵심 조건이 된다.

종합하면, 이러한 시급한 후속 연구 과제는 미래형 대입제도의 큰 방향을 실제 학교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작동하는 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필수 기반이다. 절대평가·서·논술형 평가, 졸업자격시험, 고교-대학·전문대·폴리텍·성인학습으로 이어지는 다경로 학업 연계 체계, 그리고 국가 통합 진학정보 플랫폼(Parcoursup형) 마련까지 모두 정책 설계-파일럿 운영-효과 분석-모델 정착으로 이어지는 연속적 검증 구조 속에서 단계적으로 완성되어야 한다. 이러한 구조가 갖춰질 때, 2028년 전환 준비기에서 2033년 성장형 본격화기, 나아가 2040년 연계·성장형 체제 완성기로 이어지는 정책 이행 경로가 제도적 안정성을 확보하며 실행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대입제도가 단순한 선발 체계를 넘어, 학습자의 다양한 경로를 인정하고 성장 가능성을 확장하는 미래형 교육생태계로 자리 잡도록 하는 핵심 조건이다.

참고문헌

강태중 (2024). '2028 대학 입시 제도 개편안'의 본질적인 일탈. 오늘의 교육, (78), 31-43.

고영빈, 지은림 (2022). 고교학점제와 성취평가 도입에 따른 진로선택과목 운영 및 이수에 대한 고교생의 인식.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2(22), 1085-1102.

교육부 (2017). 고교학점제 추진방향 및 연구학교 운영계획 발표. 교육부 보도자료.

교육부 (2018). 대학입시제도 국가교육회의 이송안. 교육부 보도자료.

교육부 (2021).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적용을 위한 단계적 이행 계획(안)(2022-2024).

교육부 (2021, 8월 23일).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적용을 위한 단계적 이행 계획(안)(2022~2024). 교육부 고교교육혁신과.

교육부 (2022). 2022 개정 초·중등학교 및 특수교육 교육과정 확정·발표. 교육부 보도자료.

교육부 (2023a). 미래 사회를 대비하는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 시안.

교육부 (2023b). 2028학년도 대입 개편 방안 발표(보도자료).

교육부 (2023c). 2028 대학입학제도 개편 확정안.

교육부 (2023, 6월 21일). 공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 교육부 책임교육정책실.

교육부 (2023, 12월 27일). 2028학년도 대입 개편 방안 발표(보도자료) 및 2028 대학입학제도 개편 확정안. https://www.korea.kr/briefing/policyBriefingView.do?newsId=156607888

교육부 (2024, 2월 16일). 포용과 성장의 고교 교육 구현을 위한 고교학점제 종합 추진계획. 교육부 고교교육혁신과.

국가통계포털 (2025). 주요 연령계층별 추계인구(생산연령인구, 고령인구 등).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sso=ok&returnurl=https%3A%2F%2Fkosis.kr%3A443%2FstatHtml%2FstatHtml.do%3Flist_id%3D%26obj_var_id%3D%26seqNo%3D%26docId%3D0383760298%26tblId%3DDT_1BPA003%26vw_cd%3DMT_ZTITLE%26orgId%3D101%26conn_path%3DE1%26markType%3DS%26itm_id%3D%26lang_mode%3Dko%26scrId%3D%26itmNm%3D%EC%A0%84%EA%B5%AD%26

김경태 (2024). 학교 현장에서 살펴본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 시안. 좋은교사, 통권 281호, 38-45.

김미란, 정광희, 박상규, 임진택 (2010). 고교-대학 연계를 위한 대입전형 연구 (Ⅶ): 입학사정관제 성과분석 모델 개발 및 운영보완 방안 탐색. 연구보고 RR, 21-2.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김용 (2024). 공정한 대입 제도와 불공정한 교육의 제도화: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안을 바라보는 하나의 시각. 대학: 담론과 쟁점, (1), 58-74.

김재훈 (2023). 대학입시 학교생활기록부 생성에 대한 교사들의 문제의식 고찰. 융합교육연구, 9(2), 79-101.

김재희, 배식한 (2023). 지능 자동화 시대, 탈-노동의 의미와 교양교육의 가치. 교양 교육 연구, 17(5), 25-37.

김지은, 김경아 (2023). 디지털 대전환 시대 대학생의 디지털 시민성 교육요구도 분석. 교약 교육 연구, 17(1), 211-226.

김지혜 (2020). 고교학점제에 따른 국어교육의 과제: 대학입시제도와의 연계성을 중심으로. 국어교육학연구, 55(3), 101-130.

김진훈 (2024). 학교 현장에서 살펴본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 시안. 좋은교사, 통권 281호, 38-45.

김현수 (2020). 현행 입시 및 각종 시험의 공정성 확보와 부패방지. 부패방지법연구, 3(2), 69-96.

문경호 (2023).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 시안에 대한 비판적 고찰과 도덕과의 과제. 倫理硏究, 143, 71-95.

박제남 (2008). 대학 수시모집은 수능 이후에 해야. 대학교육, 115-116.

박종임, 정미경, 한경희, 전보라, 송민호, 이희정, 정선아 (2022). 컴퓨터 기반 서·논술형 평가의 자동채점 방안 설계(1).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박종임, 송민호, 전보라, 정미경, 정선아, 한경희 (2023). 컴퓨터 기반 서·논술형 평가의 자동채점 방안 설계(2).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서울대학교 교수회 (2024.8.1.). 대한민국 교육개혁 제안.

서울특별시교육청 (2025). 2025 서울교육 주요업무. 서울특별시교육청.

송민호, 박종임, 정선아, 김지혜, 김영수 (2024). 교과 서술형 평가 자동채점을 위한 인공지능 모델 적용 방안 탐색.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신승한 (2025). 인공지능 시대의 중등교육 및 대입제도 개혁. 청소년문화포럼, 153-163.

안정희 (2020). 고교학점제 실행을 위한 대입제도 개선방안 제언.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0(19), 1193-1213.

연합뉴스 (2024. 12. 02.). 서울시교육감, “12월 수능 치르자” “고교 2학기에 대입 반영 제안”.

우선영 (2021). 고교학점제 선도지구를 통한 협력적 교육체제 구축의 가능성 탐색. 제15회 청람교육포럼 ‘미래교육과정의 방향과 고교학점제의 효과적 운영’ 자료집.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연구원.

우선영, 민윤경 (2022). 고교학점제의 대학 연계 공동교육과정을 통한 교육적 효과 탐색. 교육과학연구, 53(3), 301-326.

우원재 (2019). 직업계고등학교 고교학점제 도입에 관한 교과 담당 교사의 인식조사. 대한공업교육학회지, 44(2), 65-85.

유동훈, 김은수, 모영민 (2020). 고교학점제 현장 정착을 위한 학교 사례 연구: 학생 선택형 교육과정 운영 교사들의 인식을 중심으로. 교육정치학연구, 27(4), 419-449.

윤종혁 (2014). 한국의 교육발전과 미래 교육혁신 전망. (CP 2014-08-09).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정책네트워크 이슈페이퍼

이상수 (2024).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 무엇이 달라지는가? 대한민국 교육트렌드 2025. 에듀니티(편), 269-294.

이은미, 이은국, 고기동 (2014). 질적비교분석(QCA) 방법에 의한 제한된 다양성 (limited diversity) 문제로의 접근-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채택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보, 23(4), 311-334.

이인영 (2022). 대입제도의 공정성 담론 분석: 2017~2019 대입제도 개편 과정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이정림, 배정윤, 박해정, 안광훈, 김하연, 진하경, 백은영, 장현경, 장자현, 장윤지 (2024). [자율-공동연구] 2028 대입전형 설계를 위한 기초 연구.

이혜진 (2024). 인구감소에 대응하는 학교 교육정책의 방향 및 새로운 교육모델 탐색. 교육비평, (56), 8-36.

임종헌, 유경훈, 김병찬 (2017). 4차 산업혁명사회에서 교육의 방향과 교원의 역량에 관한 탐색적 연구. 한국교육, 44(2), 5-32.

임진택, 조민경, 권영신, 김단영, 박정선, 이다정, 차정민, 신재희 (2024).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에 따른 전형 개선 연구(2024-KHU-01호). 경희대학교.

정양순, 이예슬 (2021). 공교육정상화 정책의 패러독스. 교육행정학연구, 39(3), 121-160.

주영효, 김상철 (2017). 학생부종합전형 정책 분석 및 개선 방안. 교육행정학연구, 35(1), 141-168.

지은림 (2021). 해외 대학입시 개혁의 특징 및 시사점: 중국, 일본, 프랑스 사례 중심. 비교교육연구, 31(6), 29-55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24.5.2.). 2026학년도 대입입학전형시행계획. https://www.kcue.or.kr/news/sub02/sub01.php?at=view&idx=27632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2024.5.30.). 2026학년도 전문대학 입학전형 시행계획. https://www.kcce.or.kr/web/board/1485.do?mode=view&idx=54973

황규호, 소경희, 백남진, 유영식, 손미현, 장은경, 홍은표, 이승미, 김종훈, 손민호, 온정덕, 정혜승, 맹은경, 김선희, 차조일, 신영준 (2021).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주요 사항 설정 연구. 교육부 정책연구.

홍원표, 이광우, 임유나 (2022). 2022 개정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남은 쟁점과 과제: 교육과정 담당 교원들의 의견을 중심으로. 교육과정연구, 40(1), 157-183.

홍후조 (2018). 고교학점제 도입의 문제와 과제.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8(1), 699-724.

Kelly, F. S., McCain, T., & Jukes, I.(2009). Teaching the digital generation: No more Cookie-cutter high schools. Califonia: Corwin Press

【일본】

Kamiya, N. (2024). Is the Common Test for University Admissions in Japan enough to measure students' general English proficiency? The case of the TOEIC Bridge. Language Testing in Asia, 14(1), Article 2. https://doi.org/10.1186/s40468-024-00272-6

Kuramoto, N. (2018). Current issues in large-scale educational assessment in Japan. International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89, 32-41.

Mainichi Japan. (2021, September 3). Japan college admission English exam reforms stunted by economic, regional disparities. https://mainichi.jp/english/articles/20210903/p2a/00m/0na/029000c

MEXT(일본문부과학성): https://www.mext.go.jp/

Nippon.com. (2019, December 5). Japan to introduce new university entrance exam in 2021. https://www.nippon.com/en/japan-data/h00596/japan-to-introduce-new-university-entrance-exam-in-2021.html

Yonezawa, A. (2023). Japan's Higher Education Policies under Global Challenges. Asia Pacific Education Review. https://doi.org/10.1111/aepr.12421

Yoshinaga, K. (2024). Vocationalization of Higher Education in Japan. Issues in Higher Education, 45(1), 15-29.

【싱가포르】

MOE(싱가포르 교육부): https://www.moe.gov.sg/

Singapore Examinations and Assessment Board. (2024). Journey with eExaminations: Updates for 2024. https://www.seab.gov.sg/seab-link-issue-1-2025/journey-with-eexaminations-updates-for-2024/

The Learning Lab. (2024). New changes in English O- and A-Level syllabus. https://www.thelearninglab.com.sg/blog/tll-shares/new-changes-english-o-and-a-level-syllabus

Today Online. (2024, February 1). MOE to change A-Level score from 2026. https://www.todayonline.com/singapore/moe-change-level-score-2026-2116231

【미국】

Business Insider. (2024, March 5). Harvard brings back SAT/ACT requirement. https://www.businessinsider.com/harvard-sat-act-standardized-testing-back-ivy-league-2024-4

Crimson Education. (2024). Test-optional colleges 2024-2025. https://www.crimsoneducation.org/us/blog/test-optional-colleges/

Fair Test. (2024). Overwhelming majority of U.S. colleges and universities remain ACT/SAT-optional or test-free for fall 2025. https://fairtest.org/overwhelming-majority-of-u-s-colleges-and-universities-remain-act-sat-optional-or-test-blind-score-free-for-fall-2025/

https://nypost.com/2025/04/04/us-news/texas-university-argues-college-admissions-policies-are-unjust/?utm_source=chatgpt.com

Reuters. (2024, February 22). Yale University reinstates standardized test requirement. https://www.reuters.com/world/us/yale-university-reinstates-standardized-test-requirement-2024-02-22/

U.S. Department of Education(미국 교육부): https://www.ed.gov/

【독일】

Federal Ministry of Research, Technology and Space(독일 교육부): https://www.bmbf.de/DE/Home/home_node.html

Georgi, V. B. (2024). Migration & the Quest for Educational Equity in Germany. Dædalus, 153(4), 184-205.

Higher Education Compass(독일 고등교육기관): https://www.hochschulkompass.de/en/study-in-germany.html

https://www.welt.de/regionales/hamburg/article256406048/abitur-jeder-dritte-mit-einser-schnitt-doch-in-deutsch-haperts.html?utm_source=chatgpt.com

Standing Conference of the Ministers of Education and Cultural Affairs of the Länder in the Federal Republic of Germany(독일 교육제도):https://www.kmk.org/zab/central-office-for-foreign-education/education-system-in-germany.html

Universität Hohenheim. (n.d.). Study without Abitur. https://www.uni-hohenheim.de/en/study-without-abitur

Welt. (2023, June 21). Abiturnoten: Jeder Dritte mit Einser-Schnitt – doch in Deutsch hapert's. https://www.welt.de/regionales/hamburg/article256406048

【핀란드】

Eurydice. (2024, April 2). Finland: English language option in general upper secondary education launching 2026. https://eurydice.eacea.ec.europa.eu/news/finland-english-language-option-general-upper-secondary-education-launching-2026

Finnish Matriculation Examination Board. (2024). Matriculation examination board begins advance implementation of arts and sports subjects. https://www.ylioppilastutkinto.fi/en/current/matriculation-examination-board-begins-advance-implementation-matriculation-examinations

https://eurydice.eacea.ec.europa.eu/news/finland-english-language-option-general-upper-secondary-education-launching-2026?utm_source=chatgpt.com

https://www.ylioppilastutkinto.fi/en/current/matriculation-examination-board-begins-advance-implementation-matriculation-examinations?utm_source=chatgpt.com

Metsämuuronen, J., & Lehikko, A. (2023). Challenges and possibilities of educational equity and equality in the post-COVID-19 realm in the Nordic countries. Scandinavian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67(7), 1100-1121.

Opetus- ja kulttuuriministeriö(핀란드 교육부): https://www.oph.fi/en

YLE News. (2024, March 12). Finland to offer matriculation exam in English. https://yle.fi/a/74-20151562

【프랑스】

French Ministry of Education. (2021). Réforme du baccalauréat général et technologique et réforme du lycée. https://fr.wikipedia.org/wiki/R%C3%A9forme_du_baccalaur%C3%A9at_g%C3%A9n%C3%A9ral_et_technologique_et_r%C3%A9forme_du_lyc%C3%A9e

Giret, J. F., Guegnard, C., & Michot, C. (2011). The vocationalisation of university programmes in France: Its consequences for employability and mobility. In Employability and Mobility of Bachelor Graduates in Europe: Key Results of the Bologna Process (pp. 111-128). Rotterdam, The Netherlands: Sense Publishers.

https://www.education.gouv.fr/

https://www.thetimes.com/world/europe/article/all-french-school-leavers-must-sit-shock-of-knowledge-maths-test-rksxnp6dr?utm_source=chatgpt.com&region=global

Ministère de l'Éducation nationale et de la Jeunesse(프랑스 교육부): https://www.education.gouv.fr/

The Times. (2024, November 10). All French school leavers must sit 'shock of knowledge' maths test. https://www.thetimes.co.uk/article/all-french-school-leavers-must-sit-shock-of-knowledge-maths-test-rksxnp6dr

[부록] 대입제도에 관한 학교 교원 인식조사 문항

안녕하세요.

이 설문조사는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 교육정책연구소에서 수행 중인 2025년 자체연구 '고교교육과 대입의 선순환 체제 구축을 위한 미래형 대학입시제도 방안 연구'의 일환으로 대입제도에 관한 현장 교원의 인식을 파악하는 조사입니다. 응답해 주신 내용은 미래형 대학입시제도 방안을 마련하는 데 의미 있는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본 설문조사의 응답내용 및 개인 정보는 통계법 제33조 및 제34조에 의해 철저히 비밀이 보장되며, 연구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는 절대 사용되지 않음을 약속드립니다. 소중한 의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5년 6월 서울교육정책연구소

연구책임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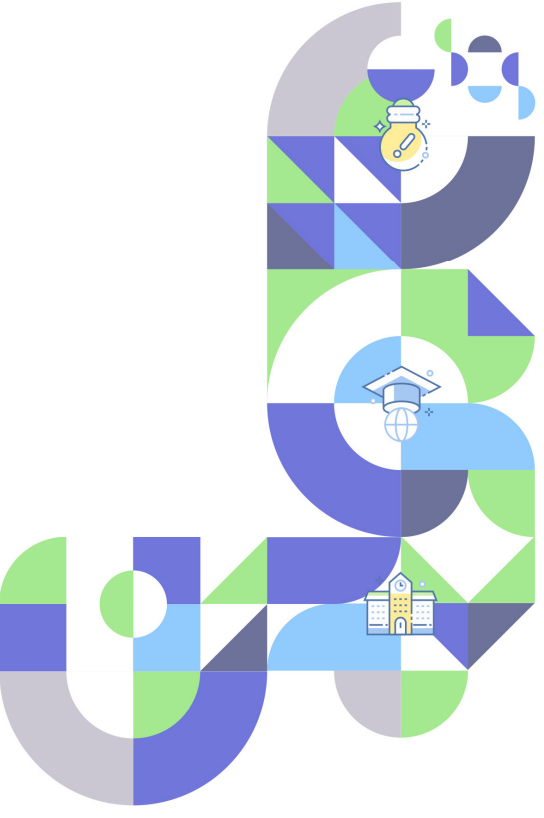
구분	하위영역	세부 문항
1	2028 대입 확정안에 대한 인식	(2028 대입 개편) 교육부가 2023년 발표한 **2028학년도 대학입시제도 개편 확정안**에 따르면 내신등급제 개편(9등급→5등급), 절대평가(A~E)와 상대평가(1~5등급) 병용, 수능 선택과목 폐지 등이 실시될 예정입니다. 1-1. 이번 2028 대입 확정안이 수업이나 학사 운영 등과 관련하여 **고등학교의 교육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데** 끼치는 영향은 어떠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② 약간은 도움이 될 것이다 ③ 별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④ 약간은 저해할 것이다 ⑤ 크게 저해할 것이다 1-2. 이번 2028 대입 확정안이 2022 개정 교육과정, 특히 **고교학점제운영에 끼치는 영향**은 어떠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② 약간은 도움이 될 것이다 ③ 별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④ 약간은 저해할 것이다 ⑤ 크게 저해할 것이다 1-3. 대입에서 **수능의 영향력**은 현재에 비해 어떠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현재보다 크게 증가해야 한다 ② 현재보다 약간은 증가해야 한다 ③ 현재와 비슷해야 한다 ④ 현재보다 약간은 감소해야 한다 ⑤ 현재보다 크게 감소해야 한다 1-4. 이번 2028 대입 확정안대로라면, 대입에서 수능의 영향력이 현재에 비해 어떠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현재보다 크게 증가할 것이다 ② 현재보다 약간은 증가할 것이다 ③ 현재와 비슷할 것이다 ④ 현재보다 약간은 감소할 것이다 ⑤ 현재보다 크게 감소할 것이다 1-5. 추가로 2028 대입 제도에 관해 의견이 있으시면, 자유로이 기술해 주십시오.

<table>
<tr><th>구분</th><th>하위영역</th><th>세부 문항</th></tr>
<tr><td rowspan="2"></td><td>대입이 추구해야 할 가치</td><td>1-6. 대학입시제도가 추구해야 될 가치는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우선순위 3개 선택)
<table>
<tr><th>변화(안)</th><th>1 순위</th><th>2 순위</th><th>3 순위</th></tr>
<tr><td>① 선발의 공정성</td><td></td><td></td><td></td></tr>
<tr><td>② 변별</td><td></td><td></td><td></td></tr>
<tr><td>③ 대학교육의 적격자 선발</td><td></td><td></td><td></td></tr>
<tr><td>④ 단편적인 성적이 아닌 역량의 평가, 또는 성장 가능성의 평가</td><td></td><td></td><td></td></tr>
<tr><td>⑤ 학생 각자의 경험과 진로 존중</td><td></td><td></td><td></td></tr>
<tr><td>⑥ 초중고 교육과정 이수 및 성취도 확인</td><td></td><td></td><td></td></tr>
<tr><td>⑦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통합</td><td></td><td></td><td></td></tr>
<tr><td>⑧ 기타의견(　　)</td><td></td><td></td><td></td></tr>
</table></td></tr>
<tr><td>개편 필요성</td><td>1-7. 학생 수 급감 등 미래전망에 비추어 볼 때, 2028 대입 이후의 대입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전혀 필요하지 않음
② 필요하지 않음
③ 현행 유지
④ 필요함
⑤ 매우 필요함</td></tr>
<tr><td>2</td><td>수시정시 통합</td><td>2-1. 고교 교육과정의 정상적 운영을 위한 수시정시통합 및 시기조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전혀 적합하지 않음
② 적합하지 않음
③ 보통
④ 적합함
⑤ 매우 적합함</td></tr>
<tr><td rowspan="2">3</td><td rowspan="2">2032년 대입& 내신</td><td>(배경) 교육부 2028 대입 수능안은 공통수능으로 실시될 예정이지만, 2022개정 교육과정은 선택형 교육과정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2032년 학생 수) 대학진학대상(18세) 학생 수는 현재보다 감소하나('25년 46만명, '32년 43만명), 입시경쟁을 해소할 정도의 변화는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td></tr>
<tr><td>3-1. 고교 교육과정과 2032년 학생 수 급감 전망에 비추어 볼 때, 아래 보기에서 제시한 2032년 이후 대입과 내신의 변화(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td></tr>
</table>

<table>
<tr><th>구분</th><th>하위영역</th><th>세부 문항</th></tr>
<tr><td></td><td></td><td>
<table>
<tr><th>변화(안)</th><th>① 전혀 동의 하지 않음</th><th>② 동의 하지 않음</th><th>③ 보통</th><th>④ 동의함</th><th>⑤ 매우 동의함</th></tr>
<tr><td>① 수능을 초중고 교육과정을 제대로 이수했는지 확인하는 자격시험으로 전환</td><td></td><td></td><td></td><td></td><td></td></tr>
<tr><td>② 수능을 서논술평가로 전환</td><td></td><td></td><td></td><td></td><td></td></tr>
<tr><td>③ 수능을 절대평가로 전환</td><td></td><td></td><td></td><td></td><td></td></tr>
<tr><td>④ 내신을 절대평가로만 표기</td><td></td><td></td><td></td><td></td><td></td></tr>
<tr><td>⑤ 내신 서논술평가 확대</td><td></td><td></td><td></td><td></td><td></td></tr>
<tr><td>⑥ 수 · 정시통합(고3-2학기 종료 후)</td><td></td><td></td><td></td><td></td><td></td></tr>
<tr><td>⑦ 대입에서 내신 비교과 영역 반영 폐지하고, 교과 성취도와 교과세부능력 특기사항, 교육과정 이수 이력 등으로 질적 평가 보완</td><td></td><td></td><td></td><td></td><td></td></tr>
<tr><td>⑧ 대입은 절대평가화된 수능과 내신, 면접을 통해 진행</td><td></td><td></td><td></td><td></td><td></td></tr>
<tr><td>⑨ 기타 의견</td><td colspan="5"></td></tr>
</table>
3-2. 서논술형 수능으로 전환한다고 가정할 경우, 서논술형 수능 시행 방안은 어떠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이원화(서술형 수능, 논술형 수능 등)
② 단일화
③ 특정 교과만 시행
④ 기타 의견( )
</td></tr>
<tr><td></td><td>2039년 대입& 내신</td><td>(2039년 학생 수) 대학진학대상(18세) 학생 수가 급감('25년 46만명, '39년 27만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3-3. 2039년 학생 수 급감 전망에 비추어 볼 때, 아래 보기에서 제시한 대입과 내신의 변화(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td></tr>
</table>

<table>
<tr><th>구분</th><th>하위영역</th><th>세부 문항</th></tr>
<tr><td></td><td></td><td>
<table>
<tr><th>변화(안)</th><th>① 전혀 동의 하지 않음</th><th>② 동의 하지 않음</th><th>③ 보통</th><th>④ 동의함</th><th>⑤ 매우 동의함</th></tr>
<tr><td>① 수능을 초중고 교육과정을 제대로 이수했는지 확인하는 자격시험으로 전환</td><td></td><td></td><td></td><td></td><td></td></tr>
<tr><td>② 수능을 서논술평가로 전환</td><td></td><td></td><td></td><td></td><td></td></tr>
<tr><td>③ 수능을 절대평가로 전환</td><td></td><td></td><td></td><td></td><td></td></tr>
<tr><td>④ 내신을 절대평가로만 표기</td><td></td><td></td><td></td><td></td><td></td></tr>
<tr><td>⑤ 내신 서논술평가 확대</td><td></td><td></td><td></td><td></td><td></td></tr>
<tr><td>⑥ 수 · 정시통합(고3-2학기 종료 후)</td><td></td><td></td><td></td><td></td><td></td></tr>
<tr><td>⑦ 대입에서 내신 비교과 영역 반영 폐지하고, 교과 성취도와 교과세부능력 특기사항, 교육과정 이수 이력 등으로 질적 평가 보완</td><td></td><td></td><td></td><td></td><td></td></tr>
<tr><td>⑧ 대입은 절대평가화된 수능과 내신, 면접을 통해 진행</td><td></td><td></td><td></td><td></td><td></td></tr>
<tr><td>⑨ 기타 의견</td><td colspan="5"></td></tr>
</table>
</td></tr>
<tr><td>4</td><td>정책적 제도적 조건</td><td>
4-1. 고교 교육과 대입의 선순환을 위해 전제되어야 할 초중등교육 및 대학에서의 정책적, 제도적 조건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선순위 3개 선택)
<table>
<tr><th>변화(안)</th><th>1 순위</th><th>2 순위</th><th>3 순위</th></tr>
<tr><td>① 특목고(과학고, 예체능고 제외), 자사고, 영재학교를 일반고로 전환</td><td></td><td></td><td></td></tr>
<tr><td>② 국가교육과정 개정</td><td></td><td></td><td></td></tr>
<tr><td>③ 내신 절대평가 전환</td><td></td><td></td><td></td></tr>
<tr><td>④ 서논술형 내신평가로의 중장기적 전환 필요</td><td></td><td></td><td></td></tr>
<tr><td>⑤ 내신 평가 공정성 확보 방안 마련</td><td></td><td></td><td></td></tr>
<tr><td>⑥ 내신 평가에 교과 성취도와 교과세부능력 특기사항, 교육과정 이수 이력 등을 포함하여 질적 평가 강화</td><td></td><td></td><td></td></tr>
<tr><td>⑦ 대학의 학생선발 자율권 보장</td><td></td><td></td><td></td></tr>
<tr><td>⑧ 대학 서열화 완화</td><td></td><td></td><td></td></tr>
<tr><td colspan="4">⑨ 기타 의견(　　)</td></tr>
</table>
</td></tr>
</table>



고교교육과 대입의 선순환 체제 구축을 위한 미래형 대학입시제도 방안 연구

인 쇄 일 : 2025년 12월 31일

발 행 일 : 2025년 12월 31일

발 행 처 :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

인 쇄 처 : (주)경인디앤피 (02-741-5941~5)